연구보고 2021-2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근진·유해미·조혜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저 자 김근진, 유해미, 조혜주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 혜 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박상희
발 행 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 화 02) 398-7700
팩 스 02) 398-7798
홈 페 이 지 https://kicce.re.kr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 6948-965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04-6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육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종합적 관점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만 4년을 경과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2021년은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과 더불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육아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다. 5년 연속과제로 진행되는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2018~2022)」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2020~2021년의 육아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육아정책의 범주는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유아교육, 보육, 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을 포괄한다. 부처별로 제시한 정책의 계획과 연도별 목표 대비 달성도에 의한 협의의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추진된 정책의 목표와 계획의 이행이 부모, 현장 교직원,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육아의 과정과 환경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모, 육아정책 전문가, 현장 교직원 대상 조사 결과를 통해 육아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고, 아직 미비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해야 지점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아동수당,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등 주요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에 도움을 주신 각계 전문가와 육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교직원, 그리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23
3. 연구방법 24
4. 연구의 배경 35
5. 육아정책의 주요 변화와 함의 43

Ⅱ.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성과지표 59
1. 육아정책의 범주 61
2. 육아정책의 성과지표 67

Ⅲ. 육아정책의 부문별 성과 평가 87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89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103
3. 자녀돌봄 시간 지원 198
4. 총괄 평가 228

Ⅳ.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성과 평가 243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별 성과 평가 245
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부문별 성과 평가 247

Ⅴ. 육아정책 국정과제 종합평가 287
1. 육아정책 세부 국정과제 평가 289
2. 육아정책 국정과제 총괄 평가 305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311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313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 315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319
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 320
5. 육아정책 국정과제 ····· 321

참고문헌 327

Abstract 333

부록 335

부록 1. 설문조사지(부모) ····· 335
부록 2. 유치원교사용 설문지(원장 포함) ····· 350
부록 3. 어린이집 보육교사용 설문지(원장 포함) ····· 358
부록 4. 전문가용 설문지 ····· 368

표 목차

〈표 Ⅰ-3- 1〉 면담조사 개요 ····· 26
〈표 Ⅰ-3- 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 26
〈표 Ⅰ-3- 3〉 설문조사 개요 ····· 28
〈표 Ⅰ-3- 4〉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29
〈표 Ⅰ-3- 5〉 어린이집 응답자특성 ····· 30
〈표 Ⅰ-3- 6〉 유치원 응답자특성 ····· 31
〈표 Ⅰ-3- 7〉 1~3차년도 설문조사 비교 ····· 32
〈표 Ⅰ-4- 1〉 선행연구 ····· 36
〈표 Ⅰ-4- 2〉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평가 지표 내 저출산·육아정책 관련 지표 ····· 37
〈표 Ⅰ-4-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에 대응하는 해외지표 목록 (저출산·육아정책 관련 지표) ····· 38
〈표 Ⅰ-4- 4〉 '2010-2015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 39
〈표 Ⅰ-4- 5〉 3차년도 과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 2019~2020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성과지표 ····· 41
〈표 Ⅰ-4- 6〉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1~3차년도 연구 요약 ···· 42
〈표 Ⅰ-5- 1〉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 47
〈표 Ⅰ-5-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필수 의료·방역인력 ····· 57
〈표 Ⅱ-1- 1〉 1-2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 ····· 62
〈표 Ⅱ-1- 2〉 10대 핵심정책과제 목록 및 중요도 결과 ····· 63
〈표 Ⅱ-1- 3〉 본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 ····· 64
〈표 Ⅱ-1- 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범주 ····· 65
〈표 Ⅱ-1- 5〉 국정과제 및 육아정책 목록 ····· 65
〈표 Ⅱ-2- 1〉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0) ····· 67
〈표 Ⅱ-2- 2〉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 70
〈표 Ⅱ-2- 3〉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 70
〈표 Ⅱ-2-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육아정책 관련 지표(2020) ····· 71
〈표 Ⅱ-2- 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 74

〈표 Ⅱ-2- 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및 목표치 ····· 75
〈표 Ⅱ-2- 7〉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 76
〈표 Ⅱ-2- 8〉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 77
〈표 Ⅱ-2- 9〉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 80
〈표 Ⅱ-2-10〉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 81
〈표 Ⅱ-2-1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 ····· 84
〈표 Ⅱ-2-1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별 산식 (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 84
〈표 Ⅲ-1- 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현금 및 의료비 지원) ····· 92
〈표 Ⅲ-1- 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만족도(2020년/2021년) ····· 94
〈표 Ⅲ-1- 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아동수당)에 불만족한 이유 ····· 94
〈표 Ⅲ-1- 4〉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의료비 및 건강 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 95
〈표 Ⅲ-1- 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 95
〈표 Ⅲ-1- 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 97
〈표 Ⅲ-1- 7〉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 98
〈표 Ⅲ-1- 8〉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 (2020년/2021년 조사) ····· 99
〈표 Ⅲ-1- 9〉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 100
〈표 Ⅲ-1-10〉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 ····· 101
〈표 Ⅲ-1-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 101
〈표 Ⅲ-2- 1〉 유아교육 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103
〈표 Ⅲ-2- 2〉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 ····· 104
〈표 Ⅲ-2- 3〉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 (1순위) ····· 105
〈표 Ⅲ-2- 4〉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 (2순위) ····· 106
〈표 Ⅲ-2- 5〉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1+2순위) ····· 107

〈표 Ⅲ-2- 6〉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 (1순위) · 108
〈표 Ⅲ-2- 7〉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 (2순위) · 109
〈표 Ⅲ-2- 8〉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 (1+2순위) ····· 110
〈표 Ⅲ-2- 9〉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 (1순위) ····· 111
〈표 Ⅲ-2-10〉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1/2) ····· 112
〈표 Ⅲ-2-11〉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2/2) ····· 112
〈표 Ⅲ-2-12〉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1/2) ····· 113
〈표 Ⅲ-2-13〉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2/2) ····· 114
〈표 Ⅲ-2-14〉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1/2) ····· 115
〈표 Ⅲ-2-15〉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2/2) ····· 115
〈표 Ⅲ-2-16〉 유아교육 정책 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119
〈표 Ⅲ-2-17〉 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 120
〈표 Ⅲ-2-18〉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어려움 ····· 121
〈표 Ⅲ-2-19〉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되어 어린이집 재정여건 개선 ····· 122
〈표 Ⅲ-2-20〉 유아교육 정책 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123
〈표 Ⅲ-2-21〉 육아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124
〈표 Ⅲ-2-22〉 유아교육 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125
〈표 Ⅲ-2-23〉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 (1순위) ····· 126
〈표 Ⅲ-2-24〉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 (2순위) ····· 127

〈표 Ⅲ-2-25〉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 (1+2순위) ····· 128
〈표 Ⅲ-2-26〉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 ····· 129
〈표 Ⅲ-2-27〉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 (1순위) ····· 130
〈표 Ⅲ-2-28〉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 (2순위) ····· 131
〈표 Ⅲ-2-29〉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 (1+2순위) ····· 132
〈표 Ⅲ-2-30〉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 (1순위) ····· 133
〈표 Ⅲ-2-31〉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 136
〈표 Ⅲ-2-32〉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 137
〈표 Ⅲ-2-33〉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 ····· 138
〈표 Ⅲ-2-34〉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 139
〈표 Ⅲ-2-35〉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 전념 ····· 140
〈표 Ⅲ-2-36〉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 ····· 141
〈표 Ⅲ-2-37〉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 145
〈표 Ⅲ-2-38〉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146
〈표 Ⅲ-2-39〉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8)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질 제고 ····· 147
〈표 Ⅲ-2-40〉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달성을 위한 필요사항 (1순위) ····· 148
〈표 Ⅲ-2-41〉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현황(2020년 5월말 기준) ····· 150
〈표 Ⅲ-2-42〉 지역특성별 연장반 구성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현황 (2020년 5월말 기준) ····· 151
〈표 Ⅲ-2-43〉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보육지원체계 개편 ····· 152
〈표 Ⅲ-2-44〉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 연장보육 실시로 기본반 담임교사의 초과근로 감소 ····· 153
〈표 Ⅲ-2-45〉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 연장보육 실시로 초과근로 시간 감소 ····· 154

〈표 Ⅲ-2-46〉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 연장보육 실시로 근무여건 개선 ····· 155
〈표 Ⅲ-2-47〉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 연장보육 실시로 오후 4시 이후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 ··· 156
〈표 Ⅲ-2-48〉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 연장보육 실시로 업무 부담 감소 ····· 157
〈표 Ⅲ-2-49〉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 연장보육 실시로 보육준비 시간 증가 ····· 158
〈표 Ⅲ-2-50〉 연장보육 운영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1순위) ····· 159
〈표 Ⅲ-2-51〉 초등돌봄 서비스 필요 인원(2020년 11월 기준, 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 166
〈표 Ⅲ-2-52〉 초등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 167
〈표 Ⅲ-2-53〉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 있는 학부모] 운영 시간 확대 시
희망시간 ····· 167
〈표 Ⅲ-2-54〉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 없는 학부모] 자녀가 돌봄에 참여
한다면 원하는 시간 ····· 167
〈표 Ⅲ-2-55〉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168
〈표 Ⅲ-2-56〉 초등돌봄전담사 주당 근무시간 현황(2020년 9월 기준) ····· 169
〈표 Ⅲ-2-57〉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내 관련 행정업무 사용시간 ····· 169
〈표 Ⅲ-2-58〉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담당에 관한 교사-돌봄전담사 간의
인식차 ····· 170
〈표 Ⅲ-2-5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 171
〈표 Ⅲ-2-60〉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0년/2021년 조사) ·· 177
〈표 Ⅲ-2-61〉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 ····· 177
〈표 Ⅲ-2-62〉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2020년/2021년 조사) ·· 179
〈표 Ⅲ-2-63〉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 179
〈표 Ⅲ-2-64〉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 180
〈표 Ⅲ-2-65〉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 만족도 ····· 181
〈표 Ⅲ-2-66〉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만족하는 이유 ····· 182
〈표 Ⅲ-2-67〉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불만족하는 이유 ····· 183
〈표 Ⅲ-2-68〉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0년/2021년 조사) ····· 184
〈표 Ⅲ-2-69〉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 ····· 185

〈표 Ⅲ-2-70〉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만족도(2020년/2021년 조사) ····· 186
〈표 Ⅲ-2-71〉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 186
〈표 Ⅲ-2-72〉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인지도 ····· 187
〈표 Ⅲ-2-73〉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 188
〈표 Ⅲ-2-74〉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 189
〈표 Ⅲ-2-75〉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 191
〈표 Ⅲ-2-76〉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 (2020년/2021년 조사) ····· 192
〈표 Ⅲ-2-77〉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 194
〈표 Ⅲ-2-78〉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 ·· 195
〈표 Ⅲ-2-79〉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 197
〈표 Ⅲ-3- 1〉 전체 육아휴직자 수 ····· 199
〈표 Ⅲ-3- 2〉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 199
〈표 Ⅲ-3- 3〉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 200
〈표 Ⅲ-3- 4〉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 201
〈표 Ⅲ-3- 5〉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 202
〈표 Ⅲ-3- 6〉 전체 육아휴직자 소속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 ····· 203
〈표 Ⅲ-3- 7〉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 204
〈표 Ⅲ-3- 8〉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 ····· 205
〈표 Ⅲ-3- 9〉 육아휴직제도 활용 못하는 이유 ····· 206
〈표 Ⅲ-3-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및 사용률 ····· 207
〈표 Ⅲ-3-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 ····· 208
〈표 Ⅲ-3-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 ····· 209
〈표 Ⅲ-3-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못하는 이유 ····· 210
〈표 Ⅲ-3-14〉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가능 현황 ····· 211
〈표 Ⅲ-3-15〉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못하는 이유 ····· 212
〈표 Ⅲ-3-16〉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 ····· 213
〈표 Ⅲ-3-17〉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 214
〈표 Ⅲ-3-18〉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복수응답) ····· 215

〈표 Ⅲ-3-19〉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216
〈표 Ⅲ-3-20〉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유연근무제) ····· 217
〈표 Ⅲ-3-2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2020년/2021년) ····· 219
〈표 Ⅲ-3-22〉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자녀돌봄 시간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 220
〈표 Ⅲ-3-2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 221
〈표 Ⅲ-3-24〉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 222
〈표 Ⅲ-3-25〉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 223
〈표 Ⅲ-3-26〉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2020년/2021년 조사) ····· 224
〈표 Ⅲ-3-27〉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 225
〈표 Ⅲ-3-28〉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 226
〈표 Ⅲ-3-29〉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 227
〈표 Ⅲ-4- 1〉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 228
〈표 Ⅲ-4- 2〉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 231
〈표 Ⅲ-4- 3〉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 233
〈표 Ⅲ-4- 4〉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 236
〈표 Ⅲ-4- 5〉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 238
〈표 Ⅲ-4- 6〉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 241
〈표 Ⅳ-2-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 ····· 248
〈표 Ⅳ-2- 2〉 긴급돌봄 이용 이유 ····· 249
〈표 Ⅳ-2- 3〉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 ····· 251
〈표 Ⅳ-2- 4〉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 만족도 ····· 252
〈표 Ⅳ-2- 5〉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에 불만족한 이유 ····· 252
〈표 Ⅳ-2- 6〉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불만족한 이유 ····· 253

〈표 Ⅳ-2- 7〉 가족돌봄휴가에 불만족한 이유 ····· 253
〈표 Ⅳ-2- 8〉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제도 ····· 254
〈표 Ⅳ-2- 9〉 (초등부모)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 255
〈표 Ⅳ-2-10〉 (초등부모)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불만족한 이유 ····· 256
〈표 Ⅳ-2-11〉 (영유아 부모)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보육, 등원수업 등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 257
〈표 Ⅳ-2-12〉 (초등 부모)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원격수업 확대가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 258
〈표 Ⅳ-2-13〉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 ····· 259
〈표 Ⅳ-2-1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 260
〈표 Ⅳ-2-15〉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 261
〈표 Ⅳ-2-16〉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 262
〈표 Ⅳ-2-17〉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 264
〈표 Ⅳ-2-18〉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 과제 ····· 265
〈표 Ⅳ-2-19〉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 266
〈표 Ⅳ-2-20〉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 266
〈표 Ⅳ-2-21〉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원장) ····· 268
〈표 Ⅳ-2-22〉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1/2) ····· 268
〈표 Ⅳ-2-23〉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2/2) ····· 269
〈표 Ⅳ-2-24〉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1/2) ····· 270
〈표 Ⅳ-2-25〉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2/2) ····· 271
〈표 Ⅳ-2-26〉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1/2) ···· 272
〈표 Ⅳ-2-27〉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2/2) ···· 272
〈표 Ⅳ-2-28〉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원장) ····· 277
〈표 Ⅳ-2-29〉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 278

〈표 Ⅳ-2-30〉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 279
〈표 Ⅳ-2-31〉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 280
〈표 Ⅳ-2-32〉 코로나19로 인한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의 영향 정도 ····· 281
〈표 Ⅳ-2-33〉 코로나19로 인해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에 미친 영향 ····· 282
〈표 Ⅳ-2-34〉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 (1순위) ··· 283
〈표 Ⅳ-2-35〉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 (2순위) ··· 284
〈표 Ⅳ-2-36〉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
(1+2순위) ····· 285
〈표 Ⅴ-1- 1〉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 292
〈표 Ⅴ-1- 2〉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
(OLS, 고정효과모형) ····· 292
〈표 Ⅴ-1- 3〉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
(동적패널모형) ····· 293
〈표 Ⅴ-1- 4〉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주택매매가격의 영향
(OLS, 고정효과모형) ····· 294
〈표 Ⅴ-1- 5〉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주택매매가격의 영향
(동적패널모형) ····· 294
〈표 Ⅴ-1- 6〉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출산지원금의 영향
(OLS, 고정효과모형) ····· 296
〈표 Ⅴ-1- 7〉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출산지원금의 영향
(동적패널모형) ····· 296
〈표 Ⅴ-1- 8〉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계획 ····· 300
〈표 Ⅴ-1- 9〉 2021년 2학기 온종일 돌봄 시설 현황 ····· 301
〈표 Ⅴ-1-10〉 2021년 학교돌봄터 운영 현황 ····· 301
〈표 Ⅴ-1-11〉 2021년 중앙부처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예산 ····· 302
〈표 Ⅴ-1-12〉 학교-지자체 협력모델 사업비(안) ····· 303
〈표 Ⅴ-2- 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2020년/2021년 조사) ····· 306
〈표 Ⅴ-2- 2〉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 306
〈표 Ⅴ-2- 3〉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우수 ····· 307
〈표 Ⅴ-2- 4〉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 ····· 310

그림 목차

[그림 Ⅰ-2- 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도별 연구 내용 ····· 24
[그림 Ⅰ-3- 1] 2021년 연구 진행 절차 ····· 34
[그림 Ⅰ-5- 1] 코로나 장기화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의 개편 방안 ····· 52
[그림 Ⅰ-5- 2] 온종일 돌봄 체계 내 그림 상반기 초등돌봄 참여 추이 (2020.3-2020. 8) ····· 55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1년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 4년이 경과하는 중반 이후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 실행력을 제고해야할 시점이다. 또한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긴급돌봄, 가족돌봄휴가 등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육아지원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는 시기임.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수행하는 연속과제로,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본 과제는 5년 연속과제 중 4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써, 3차년도(2020년)에 적용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여 2020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무엇이며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2020년 육아정책의 주요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도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정책 목표를 확인하며 신규 도입된 제도 및 사업 등을 포괄하여 4차년도 연구의 성과 지표를 수정, 보완함.

□ 육아정책의 성과를 주요 지원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함.

□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정책의 성과를 심층분석함.

□ 육아정책 지원 부문별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 및 개선과제를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전문가 자문회의

□ 계량 분석

□ 면담조사

□ 설문조사

- 부모조사: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1-3학년) 부모 200명 대상 조사
- 전문가 조사: 관련 분야(저출산, 아동, 가족, 복지, 교육, 보육, 경제, 고용 정책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 조사
- 어린이집 조사: 어린이집 원장 133명, 어린이집 교사 1141명 대상 조사
- 유치원 조사: 유치원 원장 46명, 유치원 교사 152명 대상 조사

라. 연구의 배경

□ 유아교육, 보육, 저출산정책 성과분석 선행연구

□ 성과지표 선행연구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1~3차년도 연구 요약

마. 육아정책의 주요 변화와 함의

□ 육아정책의 방향성 및 전략

□ 신규 도입 또는 강화된 육아정책

□ 긴급보육·돌봄지원

2.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성과지표

가. 육아정책의 범주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3차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

□ 본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자녀돌봄 시간 지원: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및 시차출퇴근)
-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가족돌봄휴가

나. 육아정책의 성과지표

□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성과지표

□ 본 연구의 성과지표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 자녀돌봄 시간 지원
-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3. 육아정책의 부문별 성과 평가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아동수당 지급액 월 평균 10만원은 2020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58.9만원의 약 17%, 2021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65.7만원의 약 15.2%에 해당함.

□ 2020년에는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게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되었음(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에게는 아동돌봄특별지원금 20만원만 지급).

□ 아동양육한시지원금 60만원은 월 평균으로는 5만원이므로 2020년 기준으로는 아동수당을 50% 증액하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수당과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합치면 2020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58.9만원의 약 25.5%를 충당하는 금액이 됨.

□ 이러한 현금지원은 2020년 취학 전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본 연구의 2021년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부문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아동수당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아동수당에 대한 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줌.

□ 향후 중점과제로는 아동수당제도가 가장 높은 수요를 보여 그간 돌봄서비스 부문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 투자가 미흡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줌.

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달성도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잘 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가

39.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8.3%보다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이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36.4%, '연수 및 컨설팅' 32.3%, '누리과정 시범운영 및 자료 공유' 35.9%, '홍보자료(학부모 지원자료 등) 개발 및 보급' 44.9%, '누리과정 포털 및 운영' 36.4%로 관련 정책 모두에서 긍정비율(만족함+매우 만족함)보다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이 54.0%로 과반수를 차지함.
- 놀이중심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만 3세가 4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만 5세 43.5%로 나타났다. 만 4세는 7.6%로 가장 낮았음.

□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17년 24.8%에서 2020년 29.8%로 증가하였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91), 2021년 4월 기준 30.4%이다(2021년 교육통계).
-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입학가능 비율로는 2020년 39%를 달성하였으나, 실제 취원율은 2021년 4월 기준 30.4%이므로 아직 취원율 40% 목표에는 미달함.
- 현재 저출산 추세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조만간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은 2019년 12월 기준 28.2%(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5)이고, 2020년 12월 기준 32%임(보건복지부, 2021g: 35).
- 공보육 이용률은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2019년 12월 기준 공보육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울은 46.6%인 반면, 가장 낮은 울산은 19.2%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5).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달성도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48.5%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18.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에듀파인 전담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이 75.6%로 나타나 대다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에듀파인 전담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이 어린이집 재정여건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는 21.8%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7.6%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2020년 및 2021년의 누리과정 지원단가 상향조정 정도는 어린이집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줌.
-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단설 및 공립병설은 긍정비율이 각각 61.5%, 65.6%로 긍정비율이 높은 반면, 사립사인은 긍정비율이 36.0%, 부정비율 34.8%로 긍정비율과 부정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은 51.9%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16.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은 54.%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1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줌.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이 43.2%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2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원장과 교사를 구분한 응답을 보면 원장은 긍정비율이 31.6%로 부정비율 26.3%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는 긍정비율이 21.8%로 부정비율 45.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원장보다 교사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국공립 및 법인 외는 긍정비율 30.8%, 부정비율 32.4%로 나타났고, 가정은 긍정비율 28.1%, 부정비율 30.3%로 나타났으나, 민간은 긍정비율 20.9%, 부정비율 45.2%로 민간이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음.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76.2%로 대다수를 차지함.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을 응답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만 0세가 3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 1세 21.2%, 만 3세 19.8%의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53.4%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16.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42.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5.6%보다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41.4%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0.3%보다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24.5%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49.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과 달리 현재의 보조교사 지원 정도가 휴게시간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나타냄.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 전념'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28.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40.8%보다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과 달리 현재의 보조교사 지원 정도가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냄.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29.0%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9.9%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과 달리 현재의 대체교사 지원 정도가 담임교사의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냄.

□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달성도 인식을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3.3%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9.0%보다 높게 나타남.
- 원장과 교사 응답을 구분하면 원장은 긍정비율 52.6%, 부정비율 20.3%로 긍정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교사는 긍정비율 31.0%, 부정비율 30.1%로 비슷하게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기본반 담임교사의 초과근로 감소'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57.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15.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초과근로 시간 감소'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5.4%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3.8%와 비슷하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연장보육 실시로 인해 초과근로 시간 감소 여부에 대해 원장과 교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근무여건 개선'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7.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3.1%보다 차이가 크지 않음.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오후 4시 이후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52.6%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1.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업무부담 감소'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3.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8.6%보다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설립유형별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국공립 및 법인은 긍정비율 46.5%, 부정비율 27.5%이고 가정은 긍정비율 44.2%, 부정비율 34.9%로 긍정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은 긍정비율 31.6%, 부정비율 40.4%로 부정비율이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보육준비 시간 증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2.6%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3.8%보다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설립유형별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국공립 및 법인은 긍정비율 45.8%, 부정비율 20.4%로 긍정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고, 가정은 긍정비율 37.2%, 부정비율 34.9%로 긍정비율과 부정비율이 비슷한 반면, 민간은 긍정비율 30.4%, 부정비율 35.8%로 부정비율이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운영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질문한 결과 '기본반 아동의 하원 시각을 오후 4시로 명시해야 함'이 3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원활하도록 정부에서 인력풀을 제공해야 함' 22.4%, '연장반 전담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등)' 13.7%, '연장보육료가 오후 4시(현재 오후 5시)부터 산정되어야 함' 13.5%의 순으로 나타남.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은 보육반 수를 기준으로 2015년 237개, 2016년 382개, 2017년 437개, 2018년 443개, 2019년 490개, 2020년 681개, 2021년 3월 70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함(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현황).
- 어린이집 개소수 대 시간제 보육반 수를 보면, 2015년 0.67%(어린이집 개소수 42,517)에서 2020년 1.6%(어린이집 개소수 35,332)로 크게 증가함(보건복지부, 2021h: 2).
- 그러나 어린이집 개소수에 비해 시간제 보육반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돌봄체계 중 학교돌봄인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자 수는 2018년 261,287명, 2019년 290,358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은 256, 213명으로 감소하였는데, 2020년 이용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정됨(교육부, 2021b: 1).
- 초등돌봄교실 수는 2018년 12,398실, 2019년 13,910실, 2020년 14,278실로 증가함.(교육부, 2021b: 1).
- 현재 온종돌봄체계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 2020년 9월 기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전일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는 전체의 16.0%에 불과함.
- 다시 말해서 전체 초등돌봄전담사는 84%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일 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돌봄전담사는 전체의 56.4%로 과반수의 돌봄전담사가 일 6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음.
- 일 근무시간이 6시간 미만인 돌봄전담사가 과반수인 관계로 17시 이후 돌봄 수요를 초등돌봄교실에서 반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교육부, 2021b: 7).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정부 지원 비율을 2021년에 일반가정 기준으로 시간제 나형 취학전은 55%에서 60%로, 영아종일제 가형은 80%에서 85%로, 질병감염아동 나형(취학전)은 55%에서 60%로 상향함(여성가족부, 2021d: 1).

-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 기준으로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함(여성가족부, 2021d: 1).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2020년 11월 13일 기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29개 시군구 중 70개 시군구에 배치되었고, 202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229개 시군구 중 169개에 배치됨.
- 2021년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 배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 기준 539명(81.2%)이 배치됨(복지부, 2021f: 2).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0년 76개소, 2021년 105개소, 2022년 140개소, 2025년 240개소 목표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1f: 23).
- 2021년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에 따라(복지부, 2021f: 11)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021년 87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1년 275억원) 예산이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되며, 2022년 정부 예산안부터 적용됨(복지부, 2021f: 11).
-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자녀돌봄 시간 지원

□ 육아휴직 제도

-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0년 72,769명에서 2019년 159,1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0년 2.7%에서 2019년 19.9%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동이 출생한 당해연도에 부모가 얼마나 육아휴직을 하는지 파악하는 개념인데(정재훈 외, 2020: 109),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11.5%에서 2019년 21.6%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2019년 1.8%로 여성의 63.6%와 비교하면 여성의 1/3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임.

- 이는 자녀가 출생한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하는 아버지 비율이 100중 1.8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므로(정재훈 외, 2020: 110),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여전히 성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줌.
-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을 보기 위해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중을 살펴보았는데, 출산 전 360일을 기준으로 취업비중은 2015년 47.3%에서 2019년 51.8%로 증가하였고, 출산 후 360일을 기준으로 취업비중은 2015년 36.1%에서 2018년 40.7%로 증가함.
- 2018년 기준으로 출산 전 360일 취업 비중이 50.2%이나, 출산 후 360일 취업 비중은 40.7%로 약 10%가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명 이상 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67.6%, 50~299명은 10.8%, 5~9명은 15.4%, 4명 이하 4.9%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3 이상이 300명 이상의 기업에 소속된 경우임.
- 2019년에도 300명 이상 63.4%, 50~299명 13.7%, 5~49명 17,2%, 4명 이하 5.0%로 2012년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도 육아휴직 사용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조사에서도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로는 '육아휴직제도'가 63%의 응답률을 보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12년 0.44%에서 2019년 6.71%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8.41%로 증가함.
- 남성의 경우도 2012년 0.02%에서 2019년 1.01%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31%로 증가함.

-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처하기 위함으로 생각됨.
-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조사에서도 자녀돌봄 지원 부문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지목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가능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응답은 2017년 39.0%에서 2019년 57.9%로 20% 가까이 크게 증가함.
- 종사자 규모별로는 '필요한 사람은 모두 활용 가능' 응답은 2019년 기준 5~9인 57.9%, 300인 이상 85.2%로 종사자 규모별 편차는 있으나 육아휴직 사용에 비해서는 편차가 작게 나타남.

□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및 시차출퇴근)

- 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2019년 기준 재택근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10.7%이고,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기업은 16.5%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재택근로 도입은 5~9인 7.2%인 반면 300인 이상은 32.8%였고, 시차출퇴근 도입은 5~9인 13.9%, 300인 이상 37.7%로 종사자 규모별 편차가 크게 나연근무타남.

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성과 평가

□ 부모조사에서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에 대하여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만족 응답 비율은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이 7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이 69.3%로 나타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긴급돌봄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음

□ 그 다음으로,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쿠폰 20만원)이 68.0%로 나타났고, 모 가족돌봄휴가(65.1%)와 부 가족돌봄휴가(66.3%)는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불만족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48.4%), 유치원(35.3%), 초등학교(35.0%)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의 낮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모 가족돌봄휴가는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가 42.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부 가족돌봄휴가는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조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현금지원(아동양육한시지원금) 25.0%, 긴급돌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21.7%, 유연근로제(재택근로) 18.1%의 순으로 나타남.

□ 초등부모 중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불만족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격수업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학부모 부담 증가'가 21.9%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부담 증가' 19.5%,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연' 13.9%, '자녀의 미디어 의존 증가' 8.6%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이 41.8%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이 24.7%로 그 뒤를 이었음.

□ 부모조사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가족돌봄휴가'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5. 육아정책 국정과제 종합평가

□ 국가통계포털의 2009-2019 시군구 데이터를 사용한 동적패널모형 분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확대가 합계출산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가 출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쳐서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주거 및 일자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지만, 간접지원 정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과 구분되는 별도의 보편적 사회보장정책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직접지원 정책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정재훈, 2018)이 저출산 대응의 전문성과 관리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국회예산정책처, 2021: 102).

□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는 2020년 조사에 이어 2021년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집행 및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재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해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을 포함하였으나 실제로 추진된 내용은 없음. 그 이유로는 해당 국정과제가 교육부 담당 국정과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육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에 관심이 있으나 해당 국정과제가 교육부 담당 국정과제이므로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유보통합 정책을 포함하여 동일 연령 아동에 대한 출발선 평등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초등돌봄에서 학교돌봄인 초등돌봄교실은 양적인 확충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마을돌봄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간확보 등의 어려움에 따라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2018)에서 제시한 이용자 수 확충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고 있음.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인 학교돌봄터 사업도 2021년 기준으로는 달성도가 매우 저조함.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동이 출생한 당해연도에 부모가 얼마나 육아휴직을 하는지 파악하는 개념인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11.5%에서 2019년 21.6%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2019년 1.8%로 여성의 63.6%와 비교하면 여성의 1/3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임(정재훈 외, 2020: 109).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6.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한국은 서비스 지원 예산은 OECD 평균과 비슷하나, 현금지원 예산이 비중이 크게 부족하므로, 앞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감축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연령이 낮은 만 3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 공보육 이용률 확대는 총량의 측면 뿐 아니라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도 접근해야 하며, 향후 공보육 이용률 확충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부모조사 및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조사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만0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것으로 제시됨.

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은 '육아휴직제도'로 나타났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남에 따라,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녀연령 및 가구 여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순차적으로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직장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 집단휴원으로 인한 자녀돌봄의 사각지대가 초래되지 않도록 안전한 기관 긴급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녀를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경우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의 평가가 높게 나왔는데, 코로나19 대응 현금지원은 지원 금액 수준 뿐 아니라 지원 횟수 역시 요구된다는 점을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마. 육아정책 국정과제

□ 전문가 조사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에서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는 2020년 조사에 이어 2021년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집행 및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재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2021년 기준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예산이 저출산 대응 예산의 61.0%를 차지하는데(국회예산정책처, 2021: 56),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간접지원 예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직접지원 예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접지원 예산의 증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직접지원 정책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정재훈, 2018)이 저출산 대응의 전문성과 관리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국회예산정책처, 2021: 102).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해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을 포함하였으나(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실제로 추진된 내용은 없으며, 유보통합 정책을 포함하여 동일 연령 아동에 대한 출발선 평등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온종일 돌봄체계 중 가장 많은 초등학생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아직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또한 온종일 돌봄체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온종일 돌봄체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연계·협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됨.

□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은 육아휴직제도로 나타남.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상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남. 현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04 연구의 배경
05 육아정책의 주요 변화와 함의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2019년 0.92명보다 더 떨어지고, 2020년 출생아 수가 약 27만명에 그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기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추세이다(통계청, 2021:4).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기피와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비혼과 비출산이 젊은 세대에 합리적인 선택과 가치관으로 그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지원 확대 요구,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의 확충 필요성, 부모의 육아권 보장을 위한 시간지원 확대 요구,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의 행복감과 이에 따른 놀이시간 증대 필요성 등 당면한 많은 정책 이슈가 계속 제시되고 있다.

2021년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 4년이 경과하는 중반 이후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 실행력을 제고해야할 시점이다. 또한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긴급돌봄, 가족돌봄휴가 등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육아지원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는 시기이다.

정부의 육아정책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여 부모의 노동권과 육아권을 비롯하여 아동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육아정책은 저출산의 패러다임 전환, 아동수당의 도입 및 지급대상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등 큰 틀에서의 제도적 구축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여 왔으며, 정책 실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2018~2022년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는 2018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매년 수행하는 5개년 연속과제의 4

년차 연구이다. 본 연속과제는 현 정부의 육아정책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8년 1년차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를 유아교육과 보육 위주에서 확대하여 일·가정양립의 저출산 정책을 포괄하여 분석하였다(이윤진·양미선·김문정, 2018).

2019년 2년차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지속, 2019년 정책 수행의 시점에서 육아정책의 범주를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를 구성,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아동, 돌봄, 유아교육과 보육의 영역에서 정책의 설계와 수행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

2020년 3년차 연구에서는 2년차 연구에서 개발한 성과평가의 틀과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저출산, 아동, 돌봄, 유아교육, 보육 등 육아정책의 각 영역에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주요 현안, 성과가 부진한 정책 및 신규 도입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개선 방향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김근진·박창현·김희수, 2020).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정책 수행을 중심으로 현재의 육아정책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년차에 접어든 정부의 육아정책의 추진을 성과 위주로 점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현황 대비 추진이 미약한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 및 육아정책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년 연속과제 중 4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써, 3차년도(2020년)에 적용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여 2020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무엇이며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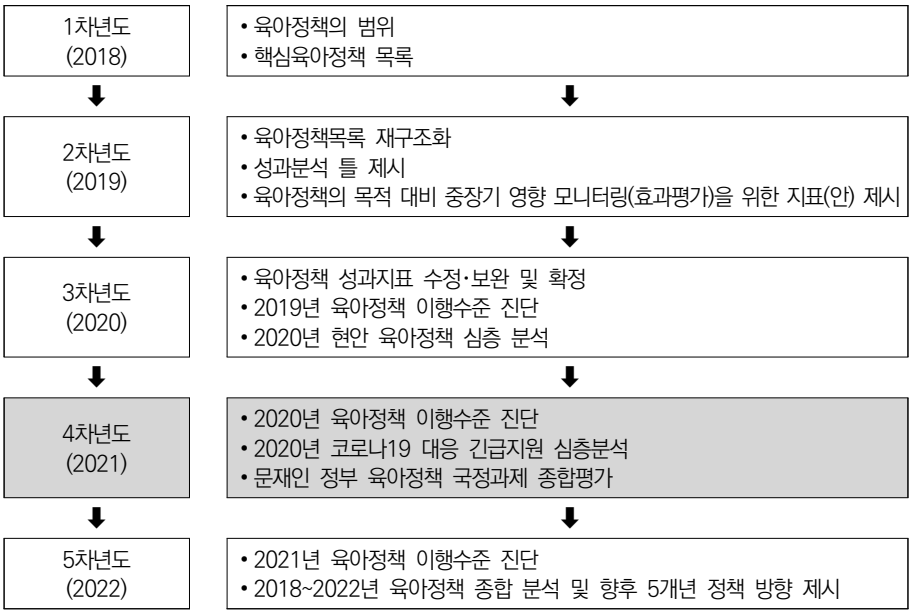
첫째, 2020년 육아정책의 주요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도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정책 목표를 확인하며 신규 도입된 제도 및 사업 등을 포괄하여 4차년도 연구의 성과 지표를 수정, 보완한다.

둘째, 육아정책의 성과를 주요 지원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육아정책의 부문을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아동수당,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3) 자녀돌봄 시간 지원(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확대(재택근로, 시차출퇴근))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세부사업 및 제도의 2020년 추진 현황을 통해 전년 대비 그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정책의 성과를 심층분석한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정책은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한다.

넷째, 육아정책 지원 부문별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 및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내년도 2022년에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정부의 4년여에 걸친 육아정책 국정과제를 다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종합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Ⅰ-2-1]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개년 연도별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육아정책에 관한 평가와 성과분석을 다룬 국내외 연구와 정부보고서를 고찰하여 정책 성과분석에 필요한 정책 범주,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위해 통계자료, 법령, 정부발간자료(각 부처 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보고서, 보도자료 등)를 분석한다. 1~3차년도 과제를 분석하여 과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성과지표 보완 및 새로 필요한 지표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 방안에 대해 자문한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1~3차년도에 개발한 성과지표 보완 및 새로 필요한 정책 지표 논의를 위해 정책 분석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운영한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설문문항 검토 및 정책 방안 자문을 수행한다.

라. 계량 분석

육아정책에 대한 통계자료를 계량 분석함으로써 육아정책의 추세 및 효과성을 추정하고 현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가통계포털(KOIS) 및 각 기관의 행정자료 등이 분석에 포함된다. 제5장 육아정책 국정과제 종합평가 중 저출산 정책 성과분석에서 다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마. 면담조사

전년 대비 2020년 육아지원에 대해 주요 부문별로 그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제도 및 사업의 수혜자 및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의 경험, 내용 및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육아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제점, 개선점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2020년 신설)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시차출퇴근)를 경험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 제도들의 실제 사용에 따른 이용 만족도, 이용 시 애로사항, 그리고 개선요구를 파악한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을 수행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 초등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의 수행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에 대해 파악한다.

〈표 Ⅰ-3-1〉 면담조사 개요

조사대상 / 규모	주요 조사내용
영유아 자녀(만 0~5세) 부모 / 5인	· 코로나19에 의한 자녀돌봄의 공백 및 대응, 애로사항 · 어린이집/유치원의 긴급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개선요구 ·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의 활용처 및 도움 정도 인식, 개선 요구 ·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과 만족도, 개선요구 ·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과 만족도, 개선요구
초등 저학년(1-3학년) 부모 / 5인	· 코로나19에 의한 자녀돌봄의 공백 및 대응, 애로사항 · 초등돌봄교실 등 초등방과후돌봄 이용 경험 및 개선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 6인 유치원 원장 / 3인 다함게돌봄센터 센터장 / 4인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의 수행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 · 2020년 육아정책에 대한 평가

〈표 Ⅰ-3-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지역	성별	면담 일시	대상
영유아 부모	서울	여	2021.10.12	만0세 부모
영유아 부모	경기	여	2021.10.12	만2세 부모
영유아 부모	서울	여	2021.10.12	만3세 부모
영유아 부모	서울	여	2021.10.12	만5세 부모
영유아 부모	경기	여	2021.10.12	만5세 부모
초등 부모	경기	여	2021.5.28.	초등2학년 학부모
초등 부모	경기	여	2021.5.28.	초등2학년 학부모
초등 부모	서울	여	2021.5.28.	초등3학년 학부모
초등 부모	서울	여	2021.5.28.	초등3학년 학부모
초등 부모	서울	여	2021.5.28.	초등3학년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경기	여	2021.8.18.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	서울	여	2021.8.18.	민간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	서울	여	2021.8.18.	가정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	경기	여	2021.10.16.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교사	서울	여	2021.10.16.	민간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교사	서울	여	2021.10.16.	가정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원장	서울	여	2021.8.19.	사립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장	서울	여	2021.8.19.	사립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장	서울	남	2021.8.19.	사립유치원 원장

구분	지역	성별	면담 일시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서울	여	2021.11.9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서울	여	2021.11.9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경남	여	2021.11.9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강원	남	2021.11.9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바.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우선 2020년에 수행한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저출산, 아동, 가족, 복지, 교육, 보육, 경제, 고용 정책 등) 전문가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 및 초등 저학년(만6-8세) 자녀를 둔 학부모 2,000명 및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약 1200명,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문조사에서는 2020년에 추진한 육아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해 조사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양육 및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성과분석에 필요한 문항 등 양적·질적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한다.

유치원 조사는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및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조사는 이에 추가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어린이집 조사의 샘플이 확대되었다.

설문 문항은 부록에 수록하였으며, 유치원 조사의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관련 문항은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의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인식 조사: 원장(감)용 F.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요구. 문2, 문4(p.352) 및 교사용 설문지 G.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요구 문1.문2(pp.374~375)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표 Ⅰ-3-3〉 설문조사 개요

구분	전문가 조사	학부모 조사	교사(원장) 조사
대상	육아정책 관련 전문가 100명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만6-8세) 자녀를 둔 학부모 약 2,000명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약 1200명,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약 200명
조사 목적	2020년에 추진한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2020년에 추진한 육아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 파악	2020년에 추진한 육아정책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파악
조사 내용	· 국정과제 성과 평가 ·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	· 육아관련 교육,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이용경험, 인지도, 만족도, 이용의향 ·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돌봄 및 지원별 이용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확인	· 육아정책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및 개선사항 ·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돌봄 수행 관련 애로점 및 개선요구

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00명은 분야별로 유아교육 35명, 보육 40명, 사회복지·경제·행정 등 25명으로 구성하였다.

부모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000명 중 남성이 60.3%, 여성이 39.8%이었다. 지역은 대도시 40.9%, 중소도시 46.1%, 읍면은 13.1% 이었다. 연령은 30대가 5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0대로 42.5% 순이었다. 자녀는 1명인 경우가 59.0%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첫째 자녀 연령은 영아 29.5%, 유아 33.9, 초등저학년 36.7%로 비슷하였다. 응답자 최종학력은 대졸이 78.4%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중이라는 응답이 83.3%, 배우자도 취업중이라는 응답이 64.7% 이었다. 근무 형태는 전일제 근로자가 95.7%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부모 합산 전체 가구 소득은 351만원-500만원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601만원 이상이 28.5%이었다. 월 평균소득은 532.4만원,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은 80.2만원이었다.

〈표 Ⅰ-3-4〉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2000)			
성별			응답자 최종학력		
남성	60.3	(1205)	초졸이하	0.2	(4)
여성	39.8	(795)	고졸	7.7	(154)
지역 구분			대졸	78.4	(1568)
대도시	40.9	(817)	대학원졸	13.7	(274)
중소도시	46.1	(922)	취업 여부		
읍면	13.1	(261)	취업	83.3	(1666)
연령			휴직 중	4.7	(94)
20대	5.3	(105)	학업 중	0.3	(6)
30대	52.3	(1045)	구직 중	3.7	(74)
40대	42.5	(850)	미취업	8.0	(160)
자녀명수			배우자 취업 여부		
1명	59.0	(1179)	취업	64.7	(1261)
2명	38.5	(769)	휴직 중	8.5	(166)
3명 이상	2.5	(52)	학업 중	0.3	(6)
첫째 자녀 연령			구직 중	3.9	(76)
영아	29.5	(590)	미취업	22.6	(440)
유아	33.9	(677)	경제활동상태		
초등저학년	36.7	(733)	전일제 근로자	95.7	(1596)
동거가족구성원(중복응답)			시간제 근로자	4.3	(72)
부	98.7	(1974)	배우자 경제활동상태		
모	98.5	(1970)	전일제 근로자	90.6	(1142)
부의 형제자매	0.9	(1800)	시간제 근로자	9.4	(119)
모의 형제자매	1.4	(2800)	기초생활수급여부		
조부	1.7	(3400)	예	0.7	(14)
조모	3.5	(7000)	아니오	96.2	(1924)
외조부	1.7	(3400)	수급경험있음	2.4	(48)
외조모	2.4	(480)	모름	0.7	(14)
기타친인척	0.3	(600)	차상위수급여부		
다문화 여부			예	1.2	(24)
다문화	1.6	(32)	아니오	91.6	(1832)
다문화 아님	98.4	(1968)	수급경험있음	2.1	(42)
한부모 여부			모름	5.1	(102)
한부모	2.6	(52)	전체 소득		
한부모 아님	97.4	(1948)	250만원 이하	8.0	(160)
전체 월평균소득	532.4만원		251~350만원	16.8	(336)
전체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80.2만원		351~500만원	30.6	(612)
			501~600만원	16.2	(324)
			601만원 이상	28.5	(570)

〈표 Ⅰ-3-5〉 어린이집 응답자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274)	100.0	전체	(1274)	100.0
원장/교사 구분			원장 경력		
원장	(133)	10.4	5~10년 미만	(8)	6.0
교사	(1141)	89.6	10년~20년 미만	(60)	45.1
설립유형			20년 이상	(65)	48.9
국공립 및 법인 외	(182)	14.3	교사 경력		
민간	(1003)	78.7	5년 미만	(276)	24.2
가정	(89)	7.0	5~10년 미만	(429)	37.6
지역 구분			10년~20년 미만	(409)	35.8
대도시	(804)	63.1	20년 이상	(27)	2.4
중소도시	(426)	33.4	최종 학력		
읍면	(44)	3.5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6)	11.5
기관 규모(원아 현원)			전문대(2~3년제) 졸업	(602)	47.3
40인 미만	(465)	36.5	대학교(4년제) 졸업	(416)	32.7
40~100명 미만	(602)	47.3	대학원 졸업 이상	(110)	8.6
100인 이상	(207)	16.2	전공		
기관 규모(원아 정원)			유아교육학	(433)	34.0
40인 미만	(387)	30.4	아동(가족)학	(184)	14.4
40~100명 미만	(640)	50.2	아동(사회)복지학	(194)	15.2
100인 이상	(247)	19.4	교육학	(34)	2.7
기관 규모(교직원 수)			초등교육학	(1)	0.1
10인 미만	(396)	31.1	특수교육학	(7)	0.5
10~30명 미만	(855)	67.1	가정(관리)학	(23)	1.8
30인 이상	(23)	1.8	보육학	(194)	15.2
연령			기타	(204)	16.0
20대	(117)	9.2	성별		
30대	(237)	18.6	(1258)	98.7	
40대	(538)	42.2	(16)	1.3	
50대 이상	(382)	30.0			

〈표 Ⅰ-3-6〉 유치원 응답자특성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98)	100.0			
원장/교사 구분			원장 경력		
원장	(46)	23.2	10년~20년 미만	(9)	19.6
교사	(152)	76.8	20년 이상	(37)	80.4
설립유형			교사 경력		
공립단설	(13)	6.6	5년 미만	(56)	36.8
공립병설	(90)	45.5	5~10년 미만	(57)	37.5
사립사인	(89)	44.9	10년~20년 미만	(36)	23.7
사립법인	(6)	3.0	20년 이상	(3)	2.0
지역 구분			최종학력		
대도시	(71)	35.9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	14.6
중소도시	(121)	61.1	전문대(2~3년제) 졸업	(109)	55.1
읍면	(6)	3.0	대학교(4년제) 졸업	(60)	30.3
기관 규모(원아 현원)			전공		
40인 미만	(50)	25.3	유아교육학	(177)	89.4
40~100명 미만	(66)	33.3	아동(가족)학	(7)	3.5
100인 이상	(82)	41.4	아동(사회)복지학	(4)	2.0
기관 규모(원아 정원)			교육학	(8)	4.0
40인 미만	(32)	16.2	특수교육학	(1)	0.5
40~100명 미만	(65)	32.8	기타	(1)	0.5
100인 이상	(101)	51.0	연령		
기관 규모(교직원 수)			20대	(50)	25.3
10인 미만	(90)	45.5	30대	(75)	37.9
10~30명 미만	(89)	44.9	40대	(29)	14.6
30인 이상	(19)	9.6	50대 이상	(43)	21.7
성별			무응답	(1)	0.5
여자	(187)	94.4			
남자	(11)	5.6			

1~3차년도 연구의 설문조사를 연차별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Ⅰ-3-7〉 1~3차년도 설문조사 비교

<table>
<tr><th></th><th>1차년도(2018)</th><th>2차년도(2019)</th><th>3차년도(2020)</th></tr>
<tr><td rowspan="3">전문가</td><td rowspan="3">Ⅰ.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각성 정도
Ⅱ.「복합·혁신과제 :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관련
•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평가
• 3개 중목표 상대적 중요도
• 8개 세부목표 상대적 중요도

Ⅲ. 복합·혁신과제 중 세부 목표별 정책 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강화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주거 공공성 강화
• 일·가정 양립 일상화
• 성평등 문화 정책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Ⅳ.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정책과제 추가 선정을 위한 질문
• 유아교육 혁신방안 5개년 계획 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정책과제별 상대적 중요도</td><td>Ⅰ. 육아정책의 범주/내용구성
• 육아정책 범주와 분류의 적절성 평가</td><td>• 현 정부 육아정책(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돌봄, 아동정책)의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의 달성도 평가</td></tr>
<tr><td colspan="2">Ⅱ. 국정과제 성과평가-육아정책 전반 및 범주별 평가
• 육아정책 관련 정부 국정과제 성과 평가
• 중요한 항목
• 실행이 가장 잘되었다고 평가하는 항목
• 실행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항목
• 국정과제 수립, 실행, 성과 관련 전반적 평가
• 육아정책별(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아동정책) 추진 목표 달성도 평가
• 성과가 가장 큰 과제
•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
•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정책</td></tr>
<tr><td>Ⅲ.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 정책의 계획-실행-수행체계-산출-성과에 대한 평가
•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육아정책 전반, 육아정책 실행 및 추진, 구체적 정책 설계, 정책의제평가, 수행 및 전달 체계)
• 정책 투입 요소 평가, 정책 집행 평가, 정책 성과 평가, 평가요소별 평가
•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국가-부모-아동-기관 수준별)
• 육아정책에서 조정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 및 해당 전략</td><td>Ⅲ.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
• 정책의 계획-실행-수행 체계-산출-성과에 대한 평가
• 각각의 육아정책(저출산, 유아교육, 보육, 돌봄,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요소별(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포괄성, 노력, 대응성, 추진체계,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평가</td></tr>
<tr><td rowspan="2">부모 및 수요자</td><td rowspan="2">〈영유아 부모〉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 사교육 이용 현황
• 현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영유아 가구 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예:아동수당,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등)</td><td>Ⅱ. 육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인지도, 만족도
• 영유아 대상 서비스
• 초등학교 아동 대상 서비스
• 부모 대상 서비스</td><td>Ⅱ. 육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영유아 부모〉
•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td></tr>
<tr><td>Ⅱ. 육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인지도, 만족도</td><td>Ⅱ. 육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td></tr>
</table>

<table>
<tr><th></th><th>1차년도(2018)</th><th>2차년도(2019)</th><th>3차년도(2020)</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3">〈초등 부모〉
•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하교 후 주 양육자
• 방과후 돌봄 이용 현황
• 사교육 현황
• 현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초등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예: 온종일돌봄정책, 하교시간 늦추는 정책,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등)

〈자녀가 없는 성인〉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계획 등</td><td>• 영유아 대상 서비스
• 초등학교 아동 대상 서비스
• 부모 대상 서비스
• 추가 출산 계획 및 출산 지원 이용 의향
• 육아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이용 계획 변동 유무</td><td>〈영유아 부모〉
•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변경 인지도 및 등
• 공영형 유치원 인지도 및 만족도 등
• 매입형 유치원 인지도 및 만족도 등

〈초등 부모〉
•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인지도 등

〈모든 부모〉
•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이용 경험 등</td></tr>
<tr><td colspan="2">Ⅲ.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질문
• 육아정책별(저출산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아동정책) 추진 목표 달성도 (체감) 평가
• 정부의 육아정책에서 가장 잘 된 부분, 미흡한 부분, 가장 중요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td></tr>
<tr><td>• 국정과제 관련 정부 수행정도 체감 평가
• 성과가 가장 우수한 육아정책
•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실행과 성과 평가
• 육아정책 중 인지도, 성과 수준, 내용과 구성, 의제 반영 정도, 서비스 산출 정도 평가
• 항목별 육아정책 실행이 기여한 정도
• 정책 효과평가–정책의 중장기 영향 평가(국가–부모–아동–기관 수준)</td><td>• 육아정책의현 육아정책 이슈와 문제, 부모의 요구를 반영 정도
• 정책 관련 서비스의 성과
• 현 정부의 육아정책 효과의 전반적 평가</td></tr>
<tr><td>교사/원장</td><td>• 저출산의 심각성, 원인, 대응책
•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선정한 육아정책에 대한 중요도
•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선정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중요도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 운영시간 등</td><td></td><td>〈유치원〉
• 정부의 유아교육정책과제 항목별 추진 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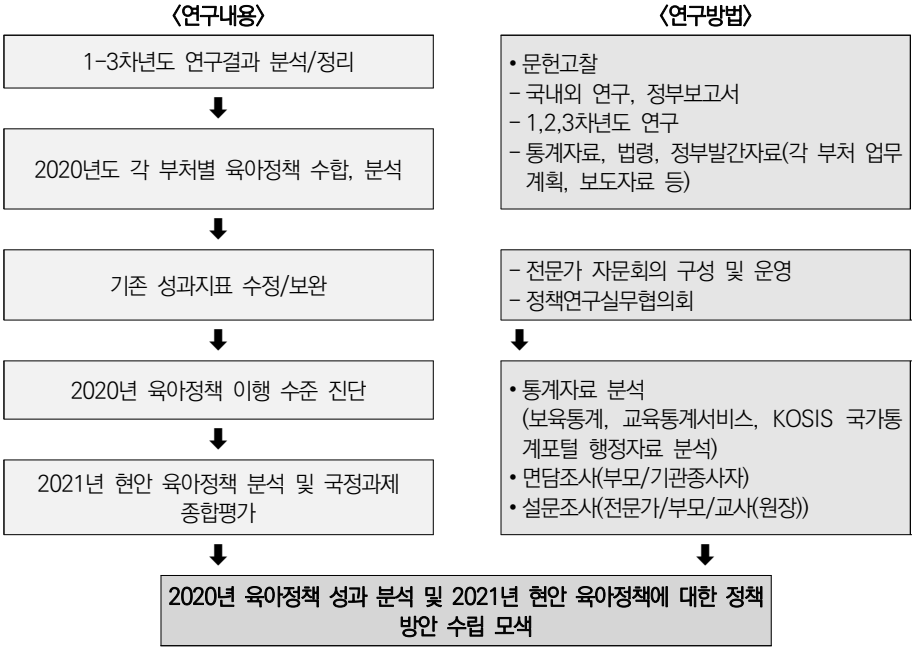
• 각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해 필한 한 것
• 현 유아교육의 현안</td></tr>
</table>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 (어린이집) 현 정부 육아정책 중에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보장에 대한 의견조사		**〈어린이집〉** **• 정부의 보육정책 과제 항목별 추진 목표 달성도** **• 각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해 필한 한 것** **• 현 보육의 현안**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3)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지금까지 제시한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3-1] 2021년 연구 진행 절차



4. 연구의 배경[1)]

가. 유아교육, 보육, 저출산정책 성과분석 선행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2011년 누리과정 정책 도입 후 2014년까지 꾸준하게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성과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왔다.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연구에서는 보육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보육서비스 접근성, 양육(이용)비용, 보육의 질, 정책효과를 핵심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의 성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유아교육의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보고서의 차별화를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는 누리과정 정책 성과 지표를 BSC 모델 적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고객, 재무,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영유아 관련 돌봄과 복지, 저출산 정책에 정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일·가정 양립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출산율과 보육료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연구되었다. 김승권·김태완·김유경·신현웅·김연우(2012)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현금지원, 보육지원, 육아휴직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김은정·이혜숙(2016)는 전국보육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보육비 및 교육비의 영향, 여성의 경제활동,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모성보호제도 이용여부, 모성보호제도의 휴가 및 휴직 기간이 출산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살펴보았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는 이영욱 외(2018) 연구와 박종서·이소영·황남희·장인수(2019)가 대표적이다. 이용욱 외(2018)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평가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소영 외(2019) 연구는 2018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나타난 13개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1) 본 연구 연구배경은 4차년도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요약·발췌함.

〈표 Ⅰ-4-1〉 선행연구

구분	연구 명(연도)	주요 결과
유아교육·보육정책 성과연구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2015, 유해미, 강은진, 조아라)[1]	- 보육서비스 접근성, 양육(이용) 비용, 보육의 질, 보육지원의 성과 분석 - 부모 만족도 조사 - 시간제 보육, 열린어린이집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2015, 최은영, 이진화, 김승진)[2]	-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
	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2016, 이윤진, 김지현, 이민경)[3]	- BSC모델 적용 누리과정 정책 성과 지표 개발(고객, 재무,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성과 분석)
영유아 돌봄, 복지, 저출산정책 성과 연구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2012, 김승권·김태완·김유경·신현웅·김연우) -제11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4]	- 현금 지원 및 보육 지원 - 육아 휴직 정책
	영유아 보육(돌봄)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2016, 김은정 외)[5]	- 가계 보육비 및 교육비에 미친 영향 -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 출산에 미친 영향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2016, 박종서·김문길·임지영)[6]	-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부가 추가자녀 출산 이행에 미치는 효과 - 모성보호제도의 휴가 및 휴직 기간이 추가자녀 출산 이행에 미치는 효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체계 개편 연구(2018, 이영욱·김도형·하진욱 외)[7]	- 저출산고령사회 평가체계 분석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2019, 박종서·이소영·황남희·장인수)[8]	- 2018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에 대하여 각각 추진과정과 추진 성과를 평가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3개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에 대하여 평가

자료: 1) 유해미, 강은진, 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 최은영, 이진화, 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3) 이윤진, 김지현, 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4) 김승권·김태완·김유경·신현웅·김연우(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박종서·이소영·황남희·장인수(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이영욱·김도형·하진욱 외(20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체계 개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출처: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39 〈표 Ⅰ-4-1〉, p. 40〈표 Ⅰ-4-2〉 요약·발췌함.

나. 성과지표 선행연구

1) 저출산 관련 지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총 13개의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세부과제들의 효율성을 위해 핵심성과지표와 지표별 최종 목표치를 설정하여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총 13개의 지표 중, 육아 및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는 전체 휴직자 중 남성비율,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율, 사교육비 부담, 여성교용률, 4개 지표로 정리될 수 있다.

〈표 Ⅰ-4-2〉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평가 지표 내 저출산·육아정책 관련 지표

성과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목표(2020	출처	설정근거	측정방법	관련 과제
전체 휴직자 중 남성비율	5.0% ('15.7)	-	8.58%	13.4%	17.8%	15%	고용부 고용보험 D/B	최근 증가세, 정책효과 반영	- 남성육아휴직자/전체 육아휴직자*100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율	26%	-	22.8%	23.7%	26.3%	37% ('25년까지 45%)	복지부 보육정책 D/B	정책 목표치	- 평균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평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사교육비 부담	18.2조	18조 원	18조 원	18조 원	19조 원	17조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매년 2천억 이상 감소	- 초·중·고생 총 사교육비(명목)	- 사교육 경감 - 공교육 정상화 - 능력중심사회 구현
여성고용률	55.4%	55.7%	56.2%	50.8%	50.9%	62%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 평균 수준 도달	- 15~64세 여성 고용률	- 여성 재취업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자료: 1)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p. 44.
2) 박종서 외(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7, 220, 223, 228, 231, 237, 247.

출처: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48 〈표 Ⅱ-2-1〉, 요약·발췌함.

박종서 외(2019)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주요 핵심성과를 국제지표와 비교 분석하였다. 저출산·육아정책과 관련된 해외지표는 전체 휴직자 중 남성 비율,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율, 사교육비 부담, 여성고용률의 4개 지표로 확인되었다.

〈표 Ⅰ-4-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에 대응하는 해외지표 목록(저출산·육아정책 관련 지표)

구분	해외지표명	해외지표와의 부합성
전체 휴직자 중 남성비율	Number of users/recipients per 100 live births (출생아 100명 당 남성 육아휴직자 수)	△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비율	Participation rates for 0-to-2-year-olds in formal childcare and preschool 취학 전 0~2세 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OECD)	○
사교육비 부담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OECD)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
여성고용률	Employment/population ratio, women(OECD)	○

자료: 박종서 외(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54.
출처: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49 〈표 Ⅱ-2-2〉, 요약·발췌함.

2)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2010년~2015년)」의 성과지표

2010-2015년까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분석 연구에서 사용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평가영역을 보육비용, 서비스, 부모의 선택권 보장, 공급 및 이용률, 평가인증, 교사 근무환경 등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매년 평가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2010-2011년에는 유아교육 재정과 유치원 이용률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로 활용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 유아 학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사용되었다.

〈표 Ⅰ-4-4〉 '2010-2015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내 주요 성과 지표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수행연도
보육	보육비용 지원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 전체 보육료 지원 아동, 보육료 소득대비 비율		2010~2014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비율, 가정양육수당 지원액		
	보육재정	GDP 대비 국고지원금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재정 비율, GDP 대비 총 보육·유아교육재정 비율, 아동 1인당 보육예산		
	공급 및 이용	어린이집 공급률, 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 보육아동 비율		
	평가인증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평가인증 어린이집 유지율		
	교사 근무환경	월 수당액(농어촌), 수당 지급 교사비율, 교사 수 대비 대체교사 비율, 근무환경개선비(0-4세), 누리과정 수당(5세)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 아동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2015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재정 투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재정 투입, 공급·이용아동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정 투입, 공급·이용 현황, 서비스 접근성 인식 및 만족도	
	양육비용 부담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부모 양육비 부담 인식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자녀 양육시 도움 정도	
	서비스 질 제고	평가인증제도	평가인증 통과 시설 비율, 평가인증 유지율	
		부모모니터링단	제도 도입 및 추진 현황, 부모 인지도/도움 정도	
		정보공시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열린어린이집		
		교직원 양성 관리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증 발급 건수, 보육교사 배치 현황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대비 대체인력 비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준	
	부모 선택권 보장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율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실시 기관수, 부모인지도/도움정도	
		장애아 보육지원	장애아 보육 기관수/아동수	
		다문화가족 보육지원	다문화 영유아 기관수/아동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기타	가정양육수당의 선택권 보장 수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유아교육	유아교육 학비지원	5세 무상교육비지원 유아비율, 학비지원 유아비율		2010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수행연도
	유아교육 재정	총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재정 비율, 유아1인당 유아교육예산	
	유치원 이용	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종일제 이용률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수, 국공립 유치원 이용 유아 비율	2011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치원 학비 정부 분담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예산,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규모	
	교육비 지원	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 비율	
	종일제 운영	종일제 운영 유치원 비율, 종일제 교육 유아 비율, 특성화 프로그램 활용 비율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 참여 비율	
	교사 근무환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 교사 처우 개선 수당 지급 교사 비율	
	기타 인프라	유아교육 진흥원 수,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비율,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수, 학급 수, 유치원 이용률(만3, 4, 5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교사 1인당 유아 수	2012 ~2015
	유아교육 재정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총 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	
	유아 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율, 3, 4세 유아학비 지원율	
	교사 근무환경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교사 급여(공립,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사립교사 처우 개선수당 지급 교사 비율	
	방과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방과후 과정 이용률	
	유치원 평가	유치원평가 참여 비율	
	유아교육지원 체계	유아교육 진흥원 수, 체험교육원 수,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참여 유치원 비율	

자료: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 57, pp. 58-59

재인용 문헌: 1)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60
2)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72.
3)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03.
4)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61
5)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69-70.
6)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 pp. 21~22.
7)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42.
8)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90.
9)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147.
10)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5-76.
11)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73-74.
12)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p. 57-58.

출처: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49-51 〈표 Ⅱ-2-3〉, 〈표 Ⅱ-2-4〉, 요약·발췌함.

3)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성과지표

본 연구의 전년도 과제인 3차년도 과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Ⅰ-4-5〉 3차년도 과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성과지표

단계	지표	내용
집행 (input & process)	재정 (투입의 충분성)	- 예산충분성 - 예산의 안정성 - GDP 대비 육아정책 재정 비율
	전달체계	- 법적 근거 - 전달체계의 통일성 * 예시: 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미비, 온종일돌봄체계의 연계성 부족, 유보통합 추진 답보 상태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인력관리	- 종사자 직업 안정성 - 종사자 자격관리 및 양성체계 - 종사자 전문성 관리 및 지원체계(보수교육)
	접근성 (access, diversity)	- 서비스 접근성(시간, 거리, 비용적 측면) - 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편차 * 예시: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급률의 지역 간 차이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공공성 (publicness)	- 국공립기관 비율 - 국공립기관 이용률 - 사립/민간기관의 경우 공적 예산 투입 증대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성 확보 여부 * 예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 비율
산출 (output)	수급자 범위	-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 서비스 이용률 - 아동수당 수급율 - 지원의 사각지대 및 형평성(equity) * 예시: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치중(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사용 어려움), 초등돌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비중 낮음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원의 충분성	- 부모 및 기관의 비용 부담 경감 정도 -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원 여부 * 예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수준 - 아동수당의 충분성
	만족도 (서비스의 질)	-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여부

단계	지표	내용
성과 (outcome)	목표 대비 성과 달성 정도	- 각 부처가 제시한 성과 달성 목표의 사전 제시 여부 및 성과 달성 정도
	파급 효과	-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간접적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미친 영향 - 현금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 특정정책이 미치는 영향 분석 * 예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등돌봄교실 확충이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 방임/방과후 방치 비율 감소 - 아동빈곤율 감소 - 영유아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
	중장기 영향	육아정책이 아동 및 부모 삶의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

출처: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69-70 〈표 Ⅱ-3-1〉.

다.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1~3차년도 연구 요약[2)]

1~3차년도 연구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결과,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4-6〉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1~3차년도 연구 요약

구분	1차년(이윤진 외, 2018)	2차년(최윤경 외, 2019)	3차년도(김근진 외, 2020)
연구 목적	육아정책 선정, 정책수요자들의 의견 및 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2018년의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중점과제와 현황 대비 추진이 미약한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부의 육아정책 실행력 제고에 기여	2차년도(2019년)에 개발한 육아정책 성과지표를 수정·보완 후 적용하여 2019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면담조사(영유아/초등 부모, 무자녀 성인, 어린이집 원장교사) · 전문가 의견조사(AHP기법) · 설문조사(일반국민조사, 원장·교사조사)	· 문헌 분석 · 심층면담(부모, 기관 원장) · 설문조사(전문가, 수요자) · 정책분석, 성과평가	· 문헌 연구 · 통계자료에 기반한 계량분석 · 면담조사(부모, 기관종사자) · 설문조사(전문가, 부모, 현장종사자) · 정책분석, 성과평가
주요 결과	· 5년간 다룰 육아정책 과제 도출 - 복합·혁신 육아정책 10대 과제 선정 - 5개년 유아교육·보육 정책 5대 과제 선정 - 15대 핵심 육아정책 선정	· 1차년도에서 도출한 육아정책 재범주화 · 육아정책 분석 및 평가 틀 제시 · 육아정책의 목적 대비 중장비 영향 모니터링(효과평가)을 위한 지표 제시	· 2차년도 성과분석 지표 수정·보완 · 육아정책 정량적, 정성적 접근 진단 · 2019년 성과와 함께 당면 현안과제를 심층분석하여 정책방안 수립 모색

2) 본 연구는 4차년도 연속과제로 김근진, 박창현, 김희수(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내용 중 3차년도 보고서 내용을 추가하여 요약·발췌함.

구분	1차년(이윤진 외, 2018)	2차년(최윤경 외, 2019)	3차년도(김근진 외, 2020)
정책 제언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 - 육아정책 목표의 명료화 - 육아정책 다양한 수요자들의 유목화 - 유목화에 따라 기존 육아정책 재정비 ・추진방안 제시 - 복합·혁신 육아정책 재조직화 - 선정한 육아정책 별 추진방안 제시 ・중장기 육아연구 기반으로 육아정책 수립	・국정과제 성과평가 근거한 제언 - 시간지원의 실행력 강화-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보완 - 현금지원의 효과성 검증 및 후속정책 설계 - 초등시기 다양한 수요 충족과 양질의 프로그램/환경 구성 - 육아정책 새로운 비전과 어젠다 설정 ・정책 단계와 요소를 고려한 정책분석 결과에 근거한 제언 - 저출산정책의 재구조화 - 온종일돌봄체계 및 국공립기관 확대 추진방식에 대한 재고 - 육아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소프트파워 강화 - 포용정책 성과를 위한 정책대상집단의 확대 - 지역간 격차, 사교육 이용, 인프라 문제를 적극 고려하는 육아정책의 과정	・저출산 정책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필요 -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제도가 실제 사용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 초등돌봄정책 법적 근거 마련 - 초등돌봄정책의 지자체 직영 운영과 중앙정부 재정 지원 확대 - 연장보육료 예산 확보, 시간 조정 필요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후속조치 - 유보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양성·체계 개편 ・아동정책 - 아동학대 대응 정책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3)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5. 육아정책의 주요 변화와 함의

2020년과 2021년에 걸친 육아정책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해당년도에 새롭게 주목할 육아정책의 방향 및 전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신규 도입된 제도와 강화된 육아지원 내용을 파악하고 그 함의를 모색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보육·돌봄지원이 추진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가. 육아정책의 방향성 및 전략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21~2025)」 (이하 저출산 계획)에 의하면, 육아정책의 방향성으로는 성평등한 돌봄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강조된다(대한민국정부, 2020: 41). 동 계획에서는 육아정책의 한계점으로

서비스에 비해 현금지원 수준이 낮고, 양육비용 부담이 여전하며,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대한민국정부, 2020: 33-34).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로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아동이 행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대한민국정부, 2020: 41). 구체적으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을 조성하며, 임금노동자와 여성 위주로 활용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추구한다고 제시된다. 또한 아동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영아수당이 도입될 예정이다(대한민국정부, 2020: 50-51).

또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서는 앞서 저출산 계획에서 제기된 성평등한 돌봄과 일·생활 균형 지원의 강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외에도 지역사회 돌봄 확대가 강조된다(여성가족부, 2021b: 8). 해당 세부 과제로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와 초등온종일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이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21b: 66). 이는 가족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돌봄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강화가 강조된다(여성가족부, 2021b: 67). 즉, 자자체와 학교가 서로 연계 협력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돌봄 모델을 확산하고, 틈새돌봄의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된다(여성가족부, 2021b: 67).

한편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21년에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과제로는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2) 보육지원체계 지원 강화,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4) 부모의 양육지원 확대가 제시된다(보건복지부, 2021e: 9-11). 구체적으로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늘리고,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보조·연장대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4개소 확충하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충하여 2021년에는 890개반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e: 9-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육아정책의 방향으로는 성평등한 돌봄과 아동의 중심

성이 보다 강조되고, 세부적으로 영유아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며, 가정내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확충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신규 도입 또는 강화된 육아정책

1) 2020~2021년 신규 도입된 육아정책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새롭게 도입되어 운영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최대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을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subList.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1, 2021. 3. 15 인출).

2) 2020~2021년 강화된 육아정책

2020~2021년에 강화된 육아지원으로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유치원의 급식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 설치를 통한 초등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 및 업무 여건 개선을 들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연장보육이 도입되어 종일제보육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기본보육(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 휴원 으로 긴급보육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41.9%(49만 8,958명)가 1회 이상 연장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20b: 2).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처우개선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1e: 3). 2020년에

보조·연장교사 5.2만 명, 대체교사 3,436명 였으나, 2021년에는 보조·연장교사 5.8만 명, 대체교사 4,136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집 연장교사를 지원 받으려면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과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을 모두 총족하고, 전자출결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이나 영아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고 정원충족률이 50% 이상 여야 한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subList.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1, 2021. 3. 15 인출). 2020년 1월 부터는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1).

또한 2021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년대비 유아 한명당 월 2만원씩 인상하여 국공립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subList.do?c 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1, 2021. 3. 15 인출).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년에 전국적으로 4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내 돌봄공간을 조성하여 초등학생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이다. 동 시설의 돌봄인력으로는 상근 2인(관리자, 돌봄 선생님 각 1인)이 배치되며, 돌봄선생님은 지역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교육부 홈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subList.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1, 2021. 3. 15 인출).

아이돌봄서비스는 2021년부터 정부지원 시간을 당초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하였다. 영아종일제 '가'형(소득기준 75% 이하)는 기존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기존 55%에서 60%,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 이하)는 기존 75~85%에서 80~90%,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돌봄은 기존 85%에서 90%. 초등자녀의 시간제 돌봄은 기존 75%에서 80%로 각각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1a: 1-2).

다. 긴급보육·돌봄지원

1) 전반: 범부처 추진사항

2020년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범부처에 걸친 긴급돌봄 지원이 추진되었다. 즉,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아동 돌봄의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하와 같이 부처별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휴원 및 휴교 기간에 긴급돌봄을 위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긴급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1-3). 즉, 긴급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위한 추진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1-3).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참여 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3).

〈표 Ⅰ-5-1〉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기본원칙) 유아와 초등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긴급돌봄 제공(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 동행 및 학교 내 안전확보)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지역여건 및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 ▸(학급구성) 감염증 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학급당 10명 내외 권장) ▸(담당인력) 학교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협력 ▸(안전관리) 방역, 소독 실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우선 지원(학교 비치용과 별도로 확보), 학생, 교직원 대상 감염병 관련 지도 및 교육 실시

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2020a). 보도자료: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p. 3.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을 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3-4). 긴급보육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되,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3).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4).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4-5).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4). 또한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4).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4). 그 밖에도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3]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연근무 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10점/1000점)을 부여하는 조치도 마련하였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5).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우선 개학연기 기간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아이돌보미와 이용

3) 기업이 수립·실시한 근무혁신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함(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5).

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6-7). 또한 수요 증가 대비 공급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6). 한편 서비스 이용 이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먼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6). 이와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아이돌보미 대상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6).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하는 조치도 마련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a: 7).

한편 지난해 9월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시행으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하여 기관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1). 우선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1). 특히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2).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2).

또한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4]을 시행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3).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가정내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2). 아울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여[5]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3).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계속 지원하고, 추가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3).

나아가 2020년 11월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0c: 1). 세부적으로는 ①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②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③ 가정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를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c: 1). 아동돌봄 관련 내용으로는 특히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2020c: 4).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하였다(보건복지부, 2020c: 4).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6]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원격학

4)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계획 우선 승인함(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3).

5) 세부내용은 (지원수준)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 원→60만 원,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40만 원, ▲ (지원요건) 근속기간 완화(6개월→1개월), 사용기간 완화(2주 이상→폐지), 제도요건 완화(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 근태관리 완화(전자기계적 방식→최초 1개월 수기 인정) 등임(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2020b: 3).

6) 교육청·지자체 협력(3만 명), 교육부 예산(약 200억 원, 1만 명)을 통해 약 4만 명 배치 추진함보건복지부, 2020c: 4).

습을 지원하고,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며,[7]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2020c: 4).

또한 가정내돌봄 지원 방안으로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20c: 8). 그 밖에도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0c: 9).

한편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 계획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돌봄체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코로나 장기화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계점으로 그간 코로나19 대응 돌봄으로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및 서비스 격차 누적, 파생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2). 특히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미비하여, 돌봄서비스 종사자 확진이나, 가족 내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등 다양한 긴급돌봄 필요 상황에 대한 대응시스템 및 매뉴얼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아동의 경우는 (아동) 가족 양육부담 및 돌봄 공백 발생, 활동 비대면 속 교육 불평등 심화, 아동학대 위험 증가 및 피해아동 발견에 제약이 있었다고 진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2).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정상 제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되, 거리두기 단계별·지역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하고, 감염, 자가격리 등 긴급한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며,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시설 위주 돌봄 서비스에서 재가 돌봄 서비스로 다변화, 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3).

7) '홈 운동 키트'에는 후프, 고무공, 고무줄, 유아용 매트, 라켓 등이 속함(보건복지부, 2020c: 4).

[그림 Ⅰ-5-1] 코로나 장기화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의 개편 방안

목표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정책 방향	◇ 코로나19 공존(With-Corona) 시대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및 격차 해소

추진 전략	10대 추진과제
코로나 공존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1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 대응
	2 감염·격리시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3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선제적 대응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
재가 돌봄 및 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1 (아동) 서비스 확대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 해소
	2 (노인) 비대면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3 (장애인) 가정 내 고립 방지를 위한 활동지원 강화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	1 가족 돌봄 지원 확대
	2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 양육자 정서 지원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편방안. p. 3.

아동돌봄 분야의 핵심과제를 위주로 살펴보면,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 대응의 일환으로 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하고, 돌봄시설 폐쇄 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연계 및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5-7)(그림 Ⅱ-1-1 참조). 다음으로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및 비율 단계적 확대하고(관계부처 합동, 2020: 9),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홈(Home) 운동 키트*' 지원(~'21.4월),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200여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9). 가정내 돌봄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하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임산

부 보호 및 자녀 돌봄지원의 강화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15).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가정 돌봄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지원 및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15-16). 이와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16-17).

2) 세부사업 및 제도별 지원내용

가) 아동돌봄구폰 지급

아동돌봄쿠폰은 2020년 3월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 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급되었다(보건복지부, 2020c).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하였다(보건복지부, 2020c: 1).

해당 쿠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하였다(보건복지부, 2020d: 2).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하여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조치하였다(보건복지부, 2020d: 3).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돌봄 지원

(1) 어린이집

그간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요령을 안내(1.28)하였다(보건복지부, 2020d: 1).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되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2.3)하고 대응요령 준수 여부 및 일시폐쇄·휴원 현황 등을 관리하였다(보건복지부, 2020d: 1).

또한,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였다(보건복지부, 2020d: 2).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0d: 2).

(2) 유치원

유치원에서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하였고,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소독지침(2.14) 및 방역강화 대책(2.17) 등을 통해 소독 실시주기 및 소독 범위, 유아 대상 개인위생 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등을 안내하였다(보건복지부, 2020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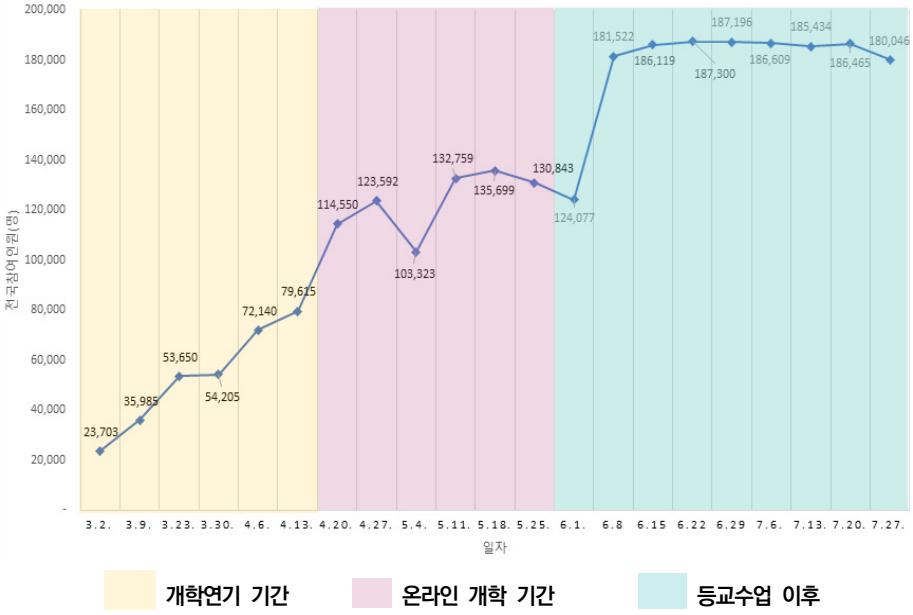
또한 유치원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시 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등원을 희망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 안내하였다(보건복지부, 2020d: 2).

다) 초등자녀 긴급돌봄 지원

교육부에서는 2020년 8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20b). 이는 원격·등교수업 병행으로, 미등교일의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해 참여 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개학연기 기간과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나, 등교수업 운영(6월초) 시점에 참여 인원이 대폭 증가한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 2020b: 5-6).

[그림 Ⅰ-5-2] 온종일 돌봄 체계 내 그림 상반기 초등돌봄 참여 추이(2020.3-2020. 8)

단위: 명



자료: 교육부(2020b). 보도자료: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p. 6.

한편 전교생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을 활용하여 원격학습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일상 소독, 발열 체크 등 돌봄교실 운영을 돕도록 하였다(교육부, 2020b: 2). 또한 단위 학교 내 공간 확보를 위해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확보하

거나 재배치하며, 학생 수용 범위를 초과 시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에 배정하고 고학년은 도서관 등 특별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교육부, 2020b: 2).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 교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소인원으로 분산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하고, 소독·방역·위생을 철저히 하며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등)도 우선적으로 비축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0b: 2). 또한,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교에서는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받는 돌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20b: 3). 이에 덧붙여 추후에는 특히 저학년 맞벌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 활용 및 필요 시 지자체와 연계하는 등 추가 확보하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교육부, 2020b: 7).

라)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대 돌봄체계 재정비 방안으로 비대면 방식과 더불어 재가 방식의 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 중요도가 보다 부각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여성가족부, 2021a: 2). 이에 앞서 2020년 1월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에 따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21a: 1-2). 2021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추가지원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하여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1a: 2).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2). 즉 시간당 평균 40% (4,016원) 자부담 완화효과 발생가 발생하도록 조치하였다(여성가족부, 2021a: 2).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21a: 2).

그 밖에도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21c). 이때 정부지원은 코로나19 대응하여 ①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21c: 1).

〈표 Ⅰ-5-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필수 의료·방역인력

구분		비고
보건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
지원인력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자료: 여성가족부(2021c).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p. 1.

Ⅱ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성과지표

01 육아정책의 범주

02 육아정책의 성과지표

Ⅱ. 육아정책의 범주 및 성과지표

1. 육아정책의 범주[8)]

가.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1-3차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

1차년도 연구(이윤진·양미선·김문정, 2018: 24)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육아정책 부문을 선정하였다.

2차년도 연구(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는 2018년 정부의 정책 수행을 기반으로 정책 계획, 목표 대비 산출(혹은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핵심으로 논의하였고, 중장기 정책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있다(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 13; 김근진·박창현·김희수, 2020: 46 재인용). 1차년도에서 제시한 1) 저출산 정책 2) 유아교육정책 3) 보육정책으로 구성된 육아정책 목록을, 1) 저출산 2) 유아교육·보육·돌봄 3) 아동정책으로 재구조화 하여 범주의 내용을 확대하였다(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 187; 김근진·박창현·김희수, 2020: 46 재인용). 3차년도 연구 역시 2차년도 연구의 육아정책 분야를 유지하고, 범주에 속한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수행되었다.

8) 본 연구 육아정책의 범주는 4차년도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김근진, 박창현, 김희수(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요약·발췌함.

〈표 Ⅱ-1-1〉 1-2차년도 연구에서 선정한 핵심육아정책 목록

구분	분야		핵심 육아정책 범주
2018년 (1차년도)	복합·혁신 10대 과제	저출산 정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4.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6.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7.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9.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10.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유아교육·보육정책 5대 과제	유아교육	11.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12.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보육정책	13.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14.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15.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2019년 (2차년도)	저출산정책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3.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4. 출산·양육 세제 개선 5. 의료비 제로화 6. 기타지원: 난임, 다자녀지원 등 7. 포용적 가족: 한부모양육지원, 출생등록제등 8. 초등교육 혁신 9. 양육지원체계 개편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10.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12.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강화 1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14. 보육교사 전문성강화(자격) 및 처우개선 15.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관리체계 16.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서비스 17.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제 도입
	아동정책		18.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19.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20. 아동권리보장(4영역:보호, 참여, 건강, 놀이)
2020년 (3차년도)	저출산정책		1.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2.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의료비경감 등) 3. 기타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 4.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포용적 가족정책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7.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8.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0.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 12.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3.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구분	분야	핵심 육아정책 범주
		14.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5.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16.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등 다양한서비스 17.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아동정책	19.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20.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21.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

자료: 1)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89 〈표Ⅲ-1-10〉.
2) 최윤경 외(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65 〈표Ⅱ-1-6〉.
출처: 김근진, 박창현, 김희수(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45 〈표 Ⅱ-1-1〉, p. 47 〈표 Ⅱ-1-3〉

1차년도 연구에서는 10대 핵심 육아정책 부분의 중요도에 대해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일반국민, 원장·교사가 선정한 상위 3위권 과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이었다.

〈표 Ⅱ-1-2〉 10대 핵심정책과제 목록 및 중요도 결과

중목표	세부목표	핵심정책과제
1.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1. 일·가정 양립 일상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가정 양립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2.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4.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5.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
2.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3.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투자 확대	6.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7. 만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8. 출산·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4.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9.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10. 공공보육 이동 아동비율 40% 달성

주: 음영색은 각 응답에서 1순위로 나온 과제임.
자료: 이윤진 외(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p.125 〈표Ⅲ-4-1〉.
출처: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46 〈표 Ⅱ-1-2〉,

나. 본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는 다음 표와 같다. 4차년도의 육아정책 범주는 지원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3차년도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와 비교하면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었던 현금 및 의료비 지원과 자녀돌봄 시간 지원을 별도의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육아정책에서 육아휴직 등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현금지원과 시간지원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정책에 포함되었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교육·보육·돌봄 지원에 포함시켰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책인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긴급돌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족돌봄휴가를 각각의 범주에 추가하였다.

〈표 Ⅱ-1-3〉 본 연구의 육아정책 범주

분야	육아정책 범주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8.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10.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 지원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표 Ⅱ-1-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범주

분야	육아정책 범주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3. 가족돌봄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별 계획과 2020년 육아정책 목록을 연결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5〉 국정과제 및 육아정책 목록

범주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별 계획	2020년 육아정책 목록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100대 국정과제) -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4대 복합·혁신과제)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 시스템 구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아동수당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100대 국정과제)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 시스템 구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100대 국정과제)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교육부)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 방향) -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100대 국정과제)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00대 국정과제) -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4대 복합·혁신과제)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교육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00대 국정과제)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00대 국정과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범주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별 계획	2020년 육아정책 목록
	-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100대 국정과제)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00대 국정과제)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 시스템 구현(4대 복합·혁신과제)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100대 국정과제) - 포용국가 아동정책(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100대 국정과제) -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100대 국정과제 과제목표) -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4대 복합·혁신과제) - 일·가정 양립 일상화(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 시스템 구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정책의 성과지표

가.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성과지표

부처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관리과제를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년도 상반기에 결과보고서를 통해 평가 등급을 발표한다.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 자체평가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육아정책은 저출산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올해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육아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성과목표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개의 성과목표 내 10개 관리과제와 관련이 있다.

'저출산·임신·출산지원 강화' 성과목표에는 저출산, 임신 출산 지원, 돌봄체계, 아동 수당 관련 과제가 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성과목표에는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 보호대상 아동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성과목표에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지원 등의 관리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표 Ⅱ-2-1〉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20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여부
	임신·출산 건강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대상자 만족도(%)	만족률=만족도 평가점수/만족도 총점(20점)×100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이용도(건)	센터 상담 건수
		고위험 임산부 수혜율	(고위험 임산부 지원자수/전체 입원진료 고위험 임산부수)×100
		미숙아 진료비 지원율	(미숙아등 지원자수/미숙아등 환아수)x10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개소 수	연도말 기준 다함께돌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개소 수	'20년말 기준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개소 수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만족도 점수
		아동수당 지급률	아동수당 지원아동수/주민등록인구통계 상 0-6세 아동수(연도말 기준)x100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아동인권 증진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점)	사후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의 합/설문조사 대상자 수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점)	국민의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 연령·성·학력·거주지·문항배치방식 등 고려한 무작위 표본추출 온라인 설문조사
	보호대상아동 치료재활, 자립지원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시설아동 문제행동 치료율(%)	k-CBCL 정상범위 아동수/사업참여자수 ×100
		보호대상 아동자립률(%)	(퇴소 아동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수)/당해연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100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행복감(점)(공통)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재학대 발생률(%) *하향지표	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던 건수/당해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100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 대상자: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아동 현황(18세 미만 아동) - 측정산식: 가족인계자 수/실종아동 발생자 수×100
		아동안전사고예방교육 만족도(%)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만족도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보육료 지원 만족도(점)	6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리커드 5점 척도)의 평균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어린이집 이용의 자녀 발달 기여도	5개 영역의 자녀발달 기여도 조사결과(리커드 5점 척도)의 평균 수치
		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평균 이용건수(건)	(월별 총이용건수/월별 시간제 보육반수) 연간 합계/12
		시간제 보육 연간 이용아동비율	시간제보육 연간 이용아동 수/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자 수 x100
		시간제보육 국민참여 및 소통건수	수요자 조사 실적+간담회 실적+대국민 홍보 실적+정보제공 실적 합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어린이집 평가등급 A·B 등급 비율	어린이집 평가 A·B등급 어린이집 비율(평가결과 A·B등급 어린이집 수/평가실시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개소 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또는 측정산식)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비중	측정산식 =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x100 (조사시기) 12월 말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공공형 어린이집 현원/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x 100
		보수교육이수자의 교육이수역량(점)	보수교육(승급교육) 이수자의 평균 성적(점수)
		보조교사 배치율(%)	측정산식=보조교사 수/영아반 수×10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분석방법: 빈도분석 - 측정대상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약 1, 500명 - 조사시기: 12월말 - 측정문항: 콘텐츠 만족, 상담 만족 등 * 만족 100점, 대체로 만족 75점, 보통 50점, 대체로 불만족 25점, 불만족 0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 측정산식=(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수

자료: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pp. 502-506.

2) 교육부

교육부의 성과목표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유초등고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조한 성과목표 하에 출발선 평등과 유치원 투명성,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의 관리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운영은 사회정책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변화 창출이라는 성과목표 아래 있는 관리과제이며, 성과지표는 초등돌봄, 온종일 돌봄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Ⅱ-2-2〉 교육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유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공공 유치원 취원아 수 / 전체 유치원 취원아 수 × 100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율(%)	(K-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수)÷(사립유치원 수)
	방과후 돌봄 정책 활성화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만명)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조사('20.4.)
사회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창출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초등돌봄 이용 학생수(만명)	부처별 초등돌봄 이용실적 조사
		초등돌봄 사업 중 취약계층 고려 사업비율(%)	사업별 지침에 취약계층 고려 유무 조사
		온종일 돌봄 시설(교실) 수 증가분(개소 수)	부처별 초등돌봄기관 확충실적 조사

자료: 교육부(2020a). 2020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pp. 456-457.

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의 6개 관리과제에 대해 〈표 Ⅱ-2-3〉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Ⅱ-2-3〉 여성가족부의 육아정책 성과지표 현황

관리과제	성과지표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 인증 유효 기업 수
	가족친화 컨설팅 수혜 기업 수
	가족돌봄 휴가 이용
	인증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개최
자녀 돌봄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수
	아이돌보미 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수
가족정책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지원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만족도
	양육비 이행률

관리과제	성과지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가족기능 향상률
다문화가족 자립 및 자녀양육 체계적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만족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인원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

자료: 여성가족부(2021f).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pp. 30-37.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육아정책 관련 성과지표

2021년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된 성과목표 중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일·가정 양립, 돌봄 서비스, 돌봄 노동자, 돌봄기관, 초등교육, 아동수당, 영아기 투자, 임신, 출산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등 넓은 범위의 성과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직장 내 육아지원 정책에 초점을 둔 관리과제가 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돌봄 노동자,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 지원 등 돌봄정책 전반에 걸친 관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임신,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 지원까지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을 직접 수혜지로 인식하는 지원으로 아동수당 확대, 영아기 집중 투자 등이 있다.

〈표 Ⅱ-2-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육아정책 관련 지표(20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표
일·가정양립	- 육아휴직 권리 확대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부모 모두 육아휴직 확산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 육아휴직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 공제 지원 - 육아휴직 복귀 지원 - 육아휴직 통계 개발·공표 - 육아휴직 취약 사업장 집중 지원 지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적용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 - 3+3 육아휴직제 실시 - '25년 육아휴직자 수: 20만명 목표 - 남성 육아휴직자 수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 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인원(한국고용정보원)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지원 - 육아휴직 직장복권 프로그램 마련 - 6종 지표별 육아휴직통계 작성·공표 - 고용평등 근로감독 사업장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명)(한국고용정보원 자료)
	-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사업장 지도(21년도 지도대상 사업장 900개소의 지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표
	-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도·점검 여부, 전산(노사누리) 시스템)
	- 출산전후휴가	-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 지원인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유연근무 활성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수(명) - 매년 지원 순인원 산출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활동 아이돌보미 인원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및 책무성 강화, 안정적 서비스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 국공립 등 공공보육 이용률 - 보육료 지원 만족도 - 직장 어린이집 개소 - 국공립유치원 취원 가능 비율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서비스 격차해소-지역별 균등한 서비스 강화, 서비스 질 제고	-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및 현장담당자 간담회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국비 지원 실적 - 보육실태 조사 실시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업장(개소)
	긴급돌봄 체계화	긴급돌봄 실시여부(지역아동센터 등 코로나19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 실시 여부)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시간제보육 확대, 보완적 서비스 확대-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간제 보육 제공 지자체 수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단위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 아이돌보미 전문교육 실시 인원비율(%)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족도(점)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수(연인원, 천명)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교육운영 혁신	- 창의교육 프로그램 수업 학생 만족도(점) - 창의교육 선도모형 프로그램 적용 학교수(교)
	교육시간 확대, 유·초 연계 교육과정 시범운영	학생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지원(초등학교 수 대비 교육과정 컨설팅 학교 비율,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수요자 중심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초등돌봄교실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 확대 현황(초등돌봄 및 마을돌봄 이용자 수, 이용현황 조사)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수(개소) - 학교돌봄터 운영 교실 수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이용아동 만족도 실적보고 자료
영아기 집중투자	영아수당 도입	영아수당 지원근거 마련(아동수당법 개정 여부, 아동수당법 개정안)
	첫 만남 꾸러미 Ⅰ-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임신 시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첫 만남 꾸러미 Ⅱ-생애초기 200만원	첫 만남 꾸러미 Ⅱ 바우처 신청률

성과목표	관리과제	지표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아동수당 확대	- 아동수당 만족도(점) - 아동수당 신청률(%)
아동학대로 부터의 보호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심리치료 효과성 -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 실적(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보호아동 정보 공유·연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시스템 구축 단계 측정)
	원가정 복귀 개선	원가정 회복 수혜자 수(운영기관 별 서비스 참여 연인원의 합)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건강한 임신 지원	건강 임신 준비 프로그램 실시(계획 실시 유무)
	고위험 지원 확대	모성사망률(%): 통계청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
	임산부, 영아 건강 관리-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참여자 만족도(점)(사업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임산부, 영아 건강 관리-산모·신생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율(%) - 사업 참여자(이용자) 만족도(점)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안전한 시술, 정보제공·상담	-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만족도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난임치료휴가 확대	실태조사 실시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취약지 지원-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	분만취약 가임인구율(%)
	취약지 지원-분만취약지 지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 분만취약지 임산부 지원(%) - 재택의료시스템 구축(%)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도분야별 시행계획. pp. 3-250.

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

정책 평가는 그 집행 과정(input & process), 산출(output), 성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김근진 외, 2020: 4), 특히 성과 평가는 정책의 최종적인 달성 정도로서 정책의 효과성을 의미하고, 이는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영향을 국민에게 미쳤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박종서 외, 2019: 277 재인용). 또한 정책 성과의 평가는 그 산출 정도를 파악하고, 해당 수준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산출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추진한 실적을 의미하므로 단기간에 평가가 가능하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된다(박종서 외, 2019: 277).

이 연구는 2020년에 추진된 육아정책의 성과 즉, 특정 년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이를 위한 평가 지표는 관련 산출 위주로 설정하되, 육아정책의 주요

목표의 달성 정도 즉, 정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이전 년도 연구(1~3차 년도)와 다년간의 산출에 대한 추이 분석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위주로 제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2020년도 육아정책의 목표 및 지원 부문별로 평가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육아지원으로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들 수 있으며, 가구 또는 아동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및 제도를 위주로 성과지표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Ⅱ-2-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지표
자녀양육 및 임신·출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의 기본권 보장	- 아동수당 지급액의 충분성 - 아동수당 지급의 포괄성 - 아동수당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비 지원 금액의 충분성 - 의료비 지원의 포괄성 - 의료비 지원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건강관리 비용 부담 완화	- 건강 지원 금액의 충분성 - 건강 지원의 포괄성 - 건강 지원 만족도 (도움 정도 인식)

우선 현금지원 부문의 세부 사업으로는 2018년부터 도입되어 2019년에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된 아동수당이 포함된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부모의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는 생계비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이 자녀가 없는 가구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제1조에서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 6. 11. 인출). 다른 한편 가정양육수당은 0~5세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 이용비용이 지원되나, 해당 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가구에게 지원되므로 급여수준의 충분성을 점검함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수준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은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포함되고, 건강 지원은 난임 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포함된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Ⅱ-2-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및 목표치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액의 충분성(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정도)	- 아동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 중 아동수당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 -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액과의 비교(국가별 소득수준 고려)	- 아동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관련 선행연구 - OECD 아동수당 관련 데이터
	아동수당 지급의 포괄성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의 비교	OECD 아동수당 관련 데이터
	아동수당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아동수당 만족도(도움 인식 정도):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아동수당 문항(5점 척도)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결과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금액의 충분성	임신·출산 관련 모와 자녀의 의료비 지출 비용 중 의료비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임신·출산 관련 모와 자녀의 의료비 지출 비용 관련 선행연구
	의료비 지원의 포괄성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출산모수×1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출산모수×10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난임 환자 수×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 -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불임 환자수 및 진료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만족도(도움 인식 정도):	「2020-2021 육아성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의료비 지원 문항(5점 척도)	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결과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건강 지원 금액의 충분성	임신·출산 관련 모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출 비용 중 건강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임신·출산 관련 모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출 비용 관련 선행연구
	건강 지원의 포괄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출산모수×10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난임 환자 수×100(%)	-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 불임 환자수 및 진료비
	건강 지원 만족도(도움 인식 정도)	건강 지원 만족도(도움 인식 정도):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비 지원 문항(5점 척도)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결과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에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사립·민간 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포함된다.

교육·보육·돌봄 지원 부문의 세부 목표와 성과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Ⅱ-2-7〉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지표
아동의 성장·발달 및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실현 - 유아의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보급 및 운영 컨설팅 -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사교육 확대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만족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공공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취원율 제고	- 국공립유치원 등 공공 유치원 취원율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취원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에듀파인 도입 등)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충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부모 및 기관의 비용 부담 경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및 시설기준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양성체계 차이 완화 여부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지표
		차이 완화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차이 완화 여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개선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 보조·대체교사 인력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의 안정화	- 연장보육교사 인력 확대 - 보육지원체계 개편 만족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를 통한 단시간 보육 수요 대응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
	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충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연도별 초등돌봄 인원 확충 - 온종일돌봄체계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 온종일돌봄체계의 연계성 향상 -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 온종일돌봄체계 만족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율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확대 -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 아동학대 대응 예산 안정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Ⅱ-2-8〉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보급 및 운영 컨설팅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보급 및 운영 컨설팅 시행 현황	교육부, 복지부,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자료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사교육 확대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사교육 시행 현황	교육부, 복지부, 시·도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자료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부모 및	「2020-2021 육아성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정 만족도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 만족도	책 성과분석」 부모 및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교사 설문조사 / 면담조사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국공립유치원 등 공공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공공 유치원 취원아수/전체 유치원 재취원아 수×10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취원율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국공립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수(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전체 어린이집 아용 아동 수×100(%)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에 따른 성과 및 개선사항: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2020/2021년 유아학비·보육료 인상	교육부 각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자격양성체계 차이 완화 여부	유치원-어린이집 자격양성체계 차이 현황	관련 정책 자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차이 완화 여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차이 현황	관련 정책 자료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상담 지원	- 보건복지부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어린이집 원장·교사 설문조사 / 면담조사
	보조·대체교사 인력 확대	- 보조·대체교사 인력 확대 - 보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연장보육교사 인력 확대	- 연장보육교사 인력 확대 -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육지원체계 개편 만족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 만족도 및 개선사항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 설문조사 / 면담조사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 사업 확대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자 수 대비 연간 전국 시간제 보육반 수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학교-지자체	연도별 초등돌봄 인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	- 방과후학교포털시스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확충	동센터 이용자 수	템(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교육부 온종일돌봄 시설 현황
	온종일돌봄체계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여부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온종일돌봄체계의 연계성 향상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연계·협력 증진 여부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초등돌봄 현장종사자 면담조사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종사자 자격요건 및 보수교육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초등돌봄 현장종사자 면담조사
	온종일돌봄체계 만족도	온종일돌봄체계에 대한 부모 및 초등돌봄 현장종사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및 설문조사 / 부모 및 초등돌봄 현장종사자 면담조사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율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지원 비율 2019년 대비 확대 정도 및 이용자 부담 완화 정도	- 여성가족부 각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확대	2019년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변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아이돌봄 사업현황)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제재 강화 등 근거규정 마련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아이돌봄서비스 문항(5점 척도)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 시군구 수 / 전체 시군구 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지자체 배치 현황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	관련 정책자료
	아동학대 대응 예산 안정성	아동학대 대응 예산(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의 안정성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일하는 부모들이 특히 어린 자녀를 직접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을 지원하려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야기되었으므로 유연근무제도 즉, 재택근무제도와 시차출퇴근제도를 포괄하여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때 이들 제도의 사용률은 형평성 측면에서 사각지대의 해소와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부모권은 모든 자녀를 둔 부모에게 보장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도를 이용할 자격은 있으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위주의 제도 이용으로 젠더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남성의 제도 이용률은 성과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에 대한 점검은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무제를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정재훈·김수완·김영미, 2017: 131), 이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 전반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 밖에도 육아휴직 이후 여성이 경력단절이 야기되지 않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도 추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통계청, 2019: 23). 즉,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해당 제도가 일·가정 양립의 도움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의 세부 목표와 성과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Ⅱ-2-9〉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지표
부모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 보장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 - 육아휴직제도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 육아휴직 사용률/이용가능성 - 전체 제도 이용 중 남성 비율 - 성별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육아휴직 급여의 충분성 - 육아휴직자의 고용복귀률 -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제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성별 이용률 차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이용가능성 - 전체 제도 이용 중 남성 비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각지대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지표
		완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각지대 해소	해소 현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제고 - 배우자 출산휴가 사각지대 해소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이용가능성 - 배우자 출산휴가 사각지대 해소 현황
	유연근무제 확대 1: 재택근로	- 재택근로 이용률 제고 - 재택근로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재택근로 사각지대 해소	- 재택근로 사용률/이용가능성 - 성별 재택근로 사용률
	유연근무제 확대 2: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제도 이용률 제고 - 시차출퇴근제도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시차출퇴근제도 사각지대 해소	- 시차출퇴근제도 사용률 - 성별 시차출퇴근제도 사용률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Ⅱ-2-10〉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세부 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육아휴직 사용률/이용가능성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100(%) -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출생아 수×100(%) -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자 사용자 수=출생아 부모 중 전 기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출생아 수×100(%) -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현황(KOSIS) - 육아휴직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육아휴직 이용 문항(5점 척도)	-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KOSIS): 매년 12월 - KOSIS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현황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전체 제도 이용	- 전체 육아휴직자 수 중 남성 비율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세부 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중 남성 비율	- 위의 육아휴직 사용률 지표의 남성 이용 비율	(KOSIS): 매년 12월
	육아휴직 급여의 충분성	- 육아휴직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 육아휴직 급여의 충분성: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육아휴직 급여 문항(5점 척도)	- 관련 정책자료 -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 - 출산 전후 모의 취업 비중: 출산전 360일까지, 출산후 720일까지(30일 배수) 모의 취업 비중(%)	- e나라지표 -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KOSIS): 매년 12월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현황	- 위의 육아휴직 사용률 지표의 소속 기업체 규모별 사용률 현황 - 육아휴직제도 인지도/활용실적 비율(%)	-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KOSIS): 매년 12월 - KOSIS 육아휴직제도인지도/활용실적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이용가능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산전후휴가자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현황(KOSIS)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문항(5점 척도)	- e나라지표 - KOSI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현황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중 남성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중 남성 비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성 사용자 수/산전후휴가자수×100(%)	e나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각지대 해소 현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활용실적 비율(%)	- KOSI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활용실적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이용가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현황(KOSIS)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배우자 출	- KOSIS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현황(고용노동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세부 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능성	산휴가 이용 문항(5점 척도)	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부모 설문조사
	배우자 출산휴가 사각지대 해소 현황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활용실적 비율(%)	- KOSIS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활용실적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유연근무제 확대 1: 재택근무	재택근무 사용률/이용가능성	-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비율(재택 및 원격근무제)(경제활동인구조사) - 유연근로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도입 여부(KOSIS) - 재택근무 이용가능성:「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부모 설문조사 재택근무 이용 문항(5점 척도)	-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KOSIS 유연근로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도입 여부(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부모 설문조사
	성별 재택근로 사용률	- 성별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비율(재택 및 원격근무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유연근무제 확대 2: 시차출퇴근	시차출퇴근도 사용률/이용가능성	-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비율(시차출퇴근제)(경제활동인구조사) -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제) 도입 여부(KOSIS) - 시차출퇴근제 이용가능성:「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부모 설문조사 시차출퇴근제 이용 문항(5점 척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KOSIS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제) 도입 여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부모 설문조사
	성별 시차출퇴근제도 사용률	- 성별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 비율(시차출퇴근제)(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은 2020년에 코로나 19로 인해 도입된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가족돌봄휴가제도가 포함된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지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이 장기화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의 부담과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감소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아동의 성장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양육비용과 가구소득의 감소 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표 Ⅱ-2-1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

목표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세부 목표	성과지표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양육 비용 부담 완화 - 가구소득 보전	-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의 충분성(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정도) -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의 포괄성 -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의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코로나19 대응 긴급 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의 양적 확충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의 질적 수준 제고	- 긴급돌봄 이용률 - 긴급돌봄 만족도
	가족돌봄휴가 도입	- 가족돌봄휴가 이용률 제고 - 가족돌봄휴가 성별 이용률 차이 완화 - 가족돌봄휴가 사각지대 해소	- 가족돌봄휴가 이용률/이용가능성 - 성별 가족돌봄휴가 이용율 - 성별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 가족돌봄휴가 사각지대 현황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Ⅱ-2-1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성과지표별 산식(측정방법) 및 이용자료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세부 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의 충분성	- 아동 1인당 연간 지출 비용 중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	- 아동 1인당 연간 지출 비용관련 선행연구

관련 정책과제 및 사업	성과지표 (세부 지표)	산식(측정방법)	이용자료
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정도)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의 포괄성	해당 연령에서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원받는 비율	- 관련 정책자료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의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아동양육한시지원금 만족도(도움 인식 정도):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아동양육한시지원금 문항(5점 척도)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 현황	관련 정책자료
	긴급돌봄 만족도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에 대한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교사, 초등돌봄전담사 만족도 및 개선사항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교사, 초등돌봄전담사 설문조사 / 면담조사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수/이용가능성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용자 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가능성: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가족돌봄휴가 이용 문항(5점 척도)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현황 -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성별 가족돌봄휴가 이용률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수 성별 비율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현황
	가족돌봄휴가 사각지대 현황	가족돌봄휴가 사각지대: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가족돌봄휴가 이용 문항(5점 척도)	「2020-2021 육아성책 성과분석」 부모 설문조사

Ⅲ

육아정책의 부문별 성과 평가

0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0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03 자녀돌봄 시간 지원

04 총괄 평가

Ⅲ. 육아정책의 부문별 성과 평가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별 성과평가

1) 아동수당

가) 아동수당 지급액의 충분성(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정도)

본 연구의 2021년 부모 설문조사 결과 부모 합산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32.4만원,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65.7만원, 취학 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74.8만원, 전체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80.2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50.6만원,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58.9만원, 취학 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64.0만원, 전체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70.5만원이었다. 2020년과 2021년 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가구 월 평균 소득은 비슷했으나, 2021년의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약 10만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 지급액 월 평균 10만원(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2020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58.9만원의 약 17%, 2021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65.7만원의 약 1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나) 아동수당 지급의 포괄성

아동수당 지급은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1). 아동수당 지급은 소득기준에 따른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포괄성은 높은 수준이다.

다) 아동수당 만족도(도움 정도 인식)

본 연구의 2021년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부문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아동수당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수당에 대한 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가) 의료비 지원 금액의 충분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게 지원되는 진료비로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이 지원되며(보건복지부, 2021d: 157), 분만취약지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d: 15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일태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태아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40만원씩 인상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38).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금액의 충분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나) 의료비 지원의 포괄성

2020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는 33만건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3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사용범위는 2021년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이 포함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3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사용범위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될 예정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38). 또한, 사용기간도 2021년 현재 신청일부터 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38).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현재보다 의료비 지원의 포괄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 건강 지원 금액의 충분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1b: 93). 2019년까지는 지원 금액을 시술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2020년에는 종류별로 상이한 본인부담을 고려하여 최대지원금을 30만-110만원으로 차등화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243).

나) 건강 지원의 포괄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2018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하였으나, 2019년에는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b: 95-9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추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1c: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16-2018년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19년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0년은 기준중위소득 120%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234-235).

이에 따라 건강 지원사업의 포괄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별 성과평가

1) 부모의 정책 이용률, 만족도 및 효과성 인식

가) 부모의 정책 이용률 및 만족도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시간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이용률을 조사하였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이용률이 90.4%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69.0%, 건강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은 28.8% 이었다. 아동수당은 남녀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의료비 지원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건강지원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이용률이 높았다. 첫째아 기준 영아, 유아부모는 아동수당 이용률이 초등부모보다 높았으며, 의료비와 건강지원은 영아부모가 유아, 초등부모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이용률이 높았다. 소득수준이나 지역규모별로는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이용률에 뚜렷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현금 및 의료비 지원)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계(수)	
전체	90.4	69.0	28.8	100.0	(2000)
성별					
남성	90.3	67.4	31.8	100.0	(1205)
여성	90.4	71.3	24.3	100.0	(795)
$x^2(df)$	0.392(2)	3.753(2)	15.032**(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94.4	80.3	39.5	100.0	(590)
유아부모	95.6	69.7	27.6	100.0	(677)
초등부모	82.3	59.1	21.3	100.0	(733)
$x^2(df)$	92.038***(4)	72.421***(4)	75.01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88.6	68.4	29.1	100.0	(998)
외벌이	92.5	70.3	28.5	100.0	(888)

구분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계(수)	
해당없음	89.5	63.2	28.9	100.0	(114)
$x^2(df)$	9.899*(4)	2.810(4)	0.290(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91.2	67.9	28.9	100.0	(159)
251~350만원	95.6	74.3	34.3	100.0	(338)
351~500만원	89.0	68.6	24.9	100.0	(611)
501~600만원	88.5	66.6	32.8	100.0	(323)
601만원 이상	89.5	67.8	27.4	100.0	(569)
$x^2(df)$	17.546*(8)	17.931*(8)	23.054**(8)		
지역구분					
대도시	89.0	69.6	29.6	100.0	(817)
중소도시	91.8	68.3	28.3	100.0	(922)
읍면	89.7	69.0	28.0	100.0	(261)
$x^2(df)$	6.298(4)	4.630(4)	1.79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의 만족도를 보면 아동수당은 만족비율이 2020년 부모조사에서 61.1%에서 2021년 부모조사에서는 63.6%로 상승하였다.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만족비율은 2020년 부모조사에서는 75.0%이었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64.2%로 하락하였다. 건강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의 만족비율은 2021년 부모조사에서는 63.7%로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만족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Ⅲ-1-2〉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 만족도(2020년/2021년)

단위: %(명), 점

구분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61.1	3.6	100.0 (1,633)	63.6	3.7	100.0 (1807)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75.0	3.9	100.0 (563)	64.2	3.7	100.0 (1379)
	3.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	- -	63.7	3.7	100.0 (576)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00.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현금지원 제도 중 아동수당에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현금 지원 수준이 낮아서'가 83.9%로 높게 응답하였다. 이 외에는 응답 비율이 낮았으며, '지원 대상 연령이 낮아서'가 6.1%,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가 3.9% 순이었다.

〈표 Ⅲ-1-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아동수당)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현금 지원 수준이 낮아서	지원 대상 연령이 낮아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기타	계(수)
아동수당	83.9	6.1	3.9	1.7	2.2	2.2	100.0 (100)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의료비 및 건강 지원 제도에 불만이라고 응답한 경우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비 지원과 건강 지원 모두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와 건강지원 모두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해서'가 각각 8.4%, 11.5%로 불만족한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Ⅲ-1-4〉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의료비 및 건강 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해서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1.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77.1	8.4	7.6	1.5	4.6	0.8	100.0 (131)
2.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75.4	11.5	4.9	3.3	3.3	1.6	100.0 (61)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나) 부모의 정책 효과성 인식

현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아동수당'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1-5〉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계(수)	
전체	80.2	14.8	5.1	100.0	(2000)
성별					
남성	81.0	13.5	5.5	100.0	(1205)
여성	79.0	16.6	4.4	100.0	(795)
$x^2(df)$			4.409(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76.6	16.8	6.6	100.0	(590)
유아부모	80.9	13.6	5.5	100.0	(677)
초등부모	82.4	14.2	3.4	100.0	(733)
$x^2(df)$			10.83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7	15.4	4.9	100.0	(998)

구분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계(수)	
외벌이	80.4	14.8	4.8	100.0	(888)
해당없음	83.3	8.8	7.9	100.0	(114)
$x^2(df)$			5.198(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83.6	12.6	3.8	100.0	(159)
251~350만원	84.0	11.8	4.1	100.0	(338)
351~500만원	81.2	14.7	4.1	100.0	(611)
501~600만원	78.3	16.7	5.0	100.0	(323)
601만원 이상	77.0	16.0	7.0	100.0	(569)
$x^2(df)$			12.302(8)		
지역구분					
대도시	78.0	16.0	6.0	100.0	(817)
중소도시	81.5	13.8	4.8	100.0	(922)
읍면	82.8	14.2	3.1	100.0	(261)
$x^2(df)$			6.09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현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민간 산후조리원 등의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공공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공급의 양적, 질적 수준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1-6〉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계(수)	
전체	9.2	37.3	53.6	100.0	(2000)
성별					
남성	9.1	39.6	51.3	100.0	(1205)
여성	9.2	33.8	57.0	100.0	(795)
$x^2(df)$			7.146*(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9.2	37.3	53.6	100.0	(590)
유아부모	8.4	37.4	54.2	100.0	(677)
초등부모	9.8	37.2	52.9	100.0	(733)
$x^2(df)$			0.866(4)		
맞벌이 여부					
맞벌이	9.5	35.2	55.3	100.0	(998)
외벌이	9.0	38.1	52.9	100.0	(888)
해당없음	7.0	50.0	43.0	100.0	(114)
$x^2(df)$			10.035*(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6.9	42.1	50.9	100.0	(159)
251~350만원	8.0	40.8	51.2	100.0	(338)
351~500만원	7.7	36.7	55.6	100.0	(611)
501~600만원	10.8	41.2	48.0	100.0	(323)
601만원 이상	11.1	32.3	56.6	100.0	(569)
$x^2(df)$			17.240*(8)		
지역구분					
대도시	9.3	35.7	55.0	100.0	(817)
중소도시	9.4	38.3	52.3	100.0	(922)
읍면	7.7	38.7	53.6	100.0	(261)
$x^2(df)$			2.22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현 정부의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아동수당'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1-7〉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계(수)	
전체	65.5	23.8	10.8	100.0	(2000)
성별					
남성	68.0	21.8	10.2	100.0	(1205)
여성	61.8	26.7	11.6	100.0	(795)
$x^2(df)$			8.373*(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64.7	23.7	11.5	100.0	(590)
유아부모	66.8	21.6	11.7	100.0	(677)
초등부모	64.9	25.8	9.3	100.0	(733)
$x^2(df)$			5.23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4.3	24.8	10.8	100.0	(998)
외벌이	65.9	23.5	10.6	100.0	(888)
해당없음	72.8	15.8	11.4	100.0	(114)
$x^2(df)$			4.797(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75.5	18.2	6.3	100.0	(159)
251~350만원	70.4	18.9	10.7	100.0	(338)
351~500만원	65.3	25.5	9.2	100.0	(611)
501~600만원	63.8	25.4	10.8	100.0	(323)
601만원 이상	61.0	25.3	13.7	100.0	(569)
$x^2(df)$			21.685**(8)		
지역구분					
대도시	67.6	22.8	9.7	100.0	(817)
중소도시	65.0	23.4	11.6	100.0	(922)
읍면	60.9	28.0	11.1	100.0	(261)
$x^2(df)$			5.28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2) 전문가의 정책성과 평가[9)]

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의 수행 달성도 평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수행 달성도는 이외 부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인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긍정비율(7점 척도, ⑤~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를 합한 비율)은 8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3%, '아동수당' 80% 순으로 평가되었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세부과제 모두에서 그 수행 달성도에 대한 긍정비율이 상승하였으며, 가장 높게 평가된 '의료비 지원'의 해당 비율도 4%p 상승하였다.

〈표 Ⅲ-1-8〉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2020년/2021년 조사)

단위: %(명), 점

정책과제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비율	7점 평균	계(수)
(1) 아동수당	78.0	5.3	100.0 (100)	80.0	5.63	100.0 (10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81.0	5.4	100.0 (100)	85.0	5.60	100.0 (10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8.0	5.4	100.0 (100)	83.0	5.63	100.0 (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12.

아동수당의 수행 달성도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을 점차 늘려왔으며, 아동의 기본권 측면에서 보편적 지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9) 이하 각 부문 및 세부과제에 대한 수행 달성도 및 성과 평가는 문재인 정부 이후(2017년 5월) 최근(2020~2021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임.

나)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의 성과 평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는 '아동수당제도'가 6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 24.0%, '건강지원' 10.0% 순으로 평가되었다.

〈표 Ⅲ-1-9〉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1) 아동수당	66.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4.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아동수당'의 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보편적 지원으로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의 모든 가구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어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권이 강화된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영유아의 건강권이 강화되고, 아동수당 액보다 지원수준이 높고, 목적 없는 지출이 아니라 필수욕구(need)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연계된 지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건강하게 태어날 아동의 권리를 실천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건강지원'은 난임부부가 크게 증가하여 이들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대상을 지원하는 것이 합계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는 난임부부와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이 포함된 '건강지원'이 5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동수당'과 '의료비 지원'은 공히 22.0%의 응답자가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표 Ⅲ-1-10〉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1) 아동수당	22.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2.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6.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의 향후 중점과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는 '아동수당'이 52.0%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인신·출산 의료비 지원)' 27%, '건강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1.0% 순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아동수당제도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한 이유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범위와 금액 등을 확대하고, 기존의 양육수당 및 보육지원과의 통합 추진 등을 강조하였다.

〈표 Ⅲ-1-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단위: %(명)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1) 아동수당	52.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7.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1.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한편 이상의 과제 이외에 추가과제로는 의료비 및 건강관리 지원 부문에서 어린이 병원 확대, 자녀가 아픈 경우 병원 돌봄(병원 내원 및 처방 등)을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 환아 대상의 교육기회를 보장 제도(개별 학습기회의 보장 또는 의료기관 내 교육과정 운영 등) 등이 제기되었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현금 및 의료비 지원의 목표 달성도와 성과평가, 그리고 중점과제에 관한 인식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과 '의료비 지원'은 그 성과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반면, '건강지원' 부문은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중점과제로는 아동수당제도가 가장 높은 수요를 보여 그간 돌봄서비스 부문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 투자가 미흡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즉, 아동수당제도는 도입 당시 소득기준을 보편화하고,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도 확대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그 대상범위를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재 10만원인 수당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거나 대상별로 차등화하는 등 제도 발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조사대상의 범위에 속한 사업의 대상이 영유아에 한정되고, 건강관리의 경우도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지원에 한정되어 그 대상범위를 확장할 시에는 관련 수요가 보다 늘어날 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의 대상범위는 현재의 신생아 및 영유아에서 확장하여 학령기 전반을 포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므로 향후 신생아 및 영유아의 소득기준의 확대 적용과 더불어 지원대상 연령범위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밖에도 질병감염아동의 경우는 물론, 이외 질병이나 외상 등 자녀가 아픈 경우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질병감염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이외에 의료기관내 돌봄시설 등 환아를 위한 돌봄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정책별 성과 평가

1)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달성도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잘 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가 39.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8.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 유아교육 정책 국정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달성도 인식 평가: (1)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0.6	17.7	30.3	22.2	17.7	1.5	28.3	39.9	100.0	(198)	3.19
원장/교사 구분											
원장	10.9	17.4	37.0	21.7	13.0	0.0	28.3	34.8	100.0	(46)	3.09
교사	10.5	17.8	28.3	22.4	19.1	2.0	28.3	41.4	100.0	(152)	3.22
$x^2(df)/T$					1.585(4)						-0.6
설립유형											
공립단설	0.0	15.4	46.2	15.4	23.1	0.0	15.4	38.5	100.0	(13)	3.46
공립병설	11.1	20.0	34.4	22.2	10.0	2.2	31.1	32.2	100.0	(90)	3.00
사립사인	10.1	15.7	24.7	24.7	23.6	1.1	25.8	48.3	100.0	(89)	3.36
사립법인	33.3	16.7	16.7	0.0	33.3	0.0	50.0	33.3	100.0	(6)	2.83
$x^2(df)/F$					15.266(12)						1.7
지역 구분											
대도시	15.5	21.1	29.6	16.9	16.9	0.0	36.6	33.8	100.0	(71)	2.99
중소도시	8.3	15.7	29.8	25.6	18.2	2.5	24.0	43.8	100.0	(121)	3.31
읍면	0.0	16.7	50.0	16.7	16.7	0.0	16.7	33.3	100.0	(6)	3.33
$x^2(df)/F$					5.981(8)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이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36.4%, '연수 및 컨설팅' 32.3%, '누리과정 시범운영 및 자료 공유' 35.9%, '홍보자료(학부모 지원자료 등) 개발 및 보급' 44.9%, '누리과정 포털 및 운영' 36.4%로 관련 정책 모두에서 긍정비율(만족함+매우 만족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

단위: %(명), 점

관련 정책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만족함	해당 사항 없음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1.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14.1	22.2	35.4	17.7	9.6	1.0	36.4	27.3	100.0 (198)	2.86
2. 연수 및 컨설팅	12.1	20.2	38.9	17.7	10.1	1.0	32.3	27.8	100.0 (198)	2.93
3. 누리과정 시범운영 및 자료 공유	14.1	21.7	36.4	19.7	7.1	1.0	35.9	26.8	100.0 (198)	2.84
4. 홍보자료(학부모 지원자료 등) 개발 및 보급	18.2	26.8	33.3	13.1	7.6	1.0	44.9	20.7	100.0 (198)	2.65
5. 누리과정 포털 개발 및 운영	13.1	23.2	34.8	19.2	8.6	1.0	36.4	27.8	100.0 (198)	2.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이 54.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표 Ⅲ-2-3〉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놀이에 대한 이해 부족	추가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물리적 환경의 미비	학부모의 이해 부족 (학습에 대한 요구 등)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 부족	문서 작성 관리 (계획안, 평가 등)	기타	계(수)
전체	54.0	10.1	10.1	8.6	7.6	5.6	3.0	1.0	100.0 (198)
원장/교사 구분									
원장	19.6	19.6	17.4	13.0	17.4	6.5	6.5	0.0	100.0 (46)
교사	64.5	7.2	7.9	7.2	4.6	5.3	2.0	1.3	100.0 (152)
$x^2(df)$	33.769(7)***								
설립유형									
공립단설	84.6	0.0	7.7	0.0	0.0	0.0	7.7	0.0	100.0 (13)
공립병설	70.0	3.3	7.8	7.8	5.6	4.4	0.0	1.1	100.0 (90)
사립사인	34.8	16.9	13.5	10.1	11.2	6.7	5.6	1.1	100.0 (89)
사립법인	33.3	33.3	0.0	16.7	0.0	16.7	0.0	0.0	100.0 (6)
$x^2(df)$	41.713(21)**								
지역 구분									
대도시	47.9	14.1	9.9	12.7	9.9	4.2	0.0	1.4	100.0 (71)
중소도시	56.2	8.3	9.9	6.6	6.6	6.6	5.0	0.8	100.0 (121)
읍면	83.3	0.0	16.7	0.0	0.0	0.0	0.0	0.0	100.0 (6)
$x^2(df)$	12.317(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p < .05$, $^{**}p < .01$. $^{***}p < .001$.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순위 기준으로 '추가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서 작성 관리(계획안, 평가 등)' 14.6%, '학부모의 이해 부족(학습에 대한 요구 등)' 14.1%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4〉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 (2순위)

단위: %(명)

구분	추가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문서 작성 관리 (계획안, 평가 등)	학부모의 이해 부족(학습에 대한 요구 등)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물리적 환경의 미비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 부족	놀이에 대한 이해 부족	기타	계(수)
전체	35.4	14.6	14.1	13.6	10.1	8.1	3.5	0.5	100.0 (198)
원장/교사 구분									
원장	26.1	19.6	19.6	13.0	4.3	13.0	4.3	0.0	100.0 (46)
교사	38.2	13.2	12.5	13.8	11.8	6.6	3.3	0.7	100.0 (152)
$x^2(df)$					7.911(7)				
설립유형									
공립단설	46.2	15.4	23.1	0.0	0.0	7.7	0.0	7.7	100.0 (13)
공립병설	40.0	8.9	13.3	13.3	13.3	7.8	3.3	0.0	100.0 (90)
사립사인	31.5	19.1	13.5	14.6	7.9	9.0	4.5	0.0	100.0 (89)
사립법인	0.0	33.3	16.7	33.3	16.7	0.0	0.0	0.0	100.0 (6)
$x^2(df)$					31.210(21)				
지역 구분									
대도시	26.8	9.9	23.9	19.7	9.9	5.6	4.2	0.0	100.0 (71)
중소도시	39.7	17.4	8.3	10.7	9.9	9.9	3.3	0.8	100.0 (121)
읍면	50.0	16.7	16.7	0.0	16.7	0.0	0.0	0.0	100.0 (6)
$x^2(df)$					18.254(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이 6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추가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45.5%, '학부모의 이해 부족(학습에 대한 요구 등)' 21.7%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5〉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 어려움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추가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학부모의 이해 부족 (학습에 대한 요구 등)	물리적 환경의 미비	문서 작성 관리 (계획안, 평가 등)	놀이에 대한 이해 부족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 부족	기타
전체	67.7	45.5	21.7	18.7	17.7	13.6	13.6	1.5
원장/교사 구분								
원장	32.6	43.5	37.0	17.4	26.1	23.9	19.6	0.0
교사	78.3	46.1	17.1	19.1	15.1	10.5	11.8	2.0
설립유형								
공립단설	84.6	53.8	23.1	0.0	23.1	0.0	7.7	7.7
공립병설	83.3	47.8	18.9	21.1	8.9	6.7	12.2	1.1
사립사인	49.4	44.9	24.7	18.0	24.7	21.3	15.7	1.1
사립법인	66.7	0.0	16.7	33.3	33.3	33.3	16.7	0.0
지역 구분								
대도시	67.6	36.6	33.8	22.5	9.9	18.3	9.9	1.4
중소도시	66.9	49.6	14.9	16.5	22.3	11.6	16.5	1.7
읍면	83.3	66.7	16.7	16.7	16.7	0.0	0.0	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57.6%로 과반수로 나타났다.

〈표 Ⅲ-2-6〉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보조 인력 지원	교사 연수 강화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누리과정 포털(i-누리) 활성화	놀이중심 누리과정 홍보 강화	기타	계(수)
전체	57.6	13.1	9.1	8.1	6.1	2.0	2.0	1.5	0.5	100.0 (198)
원장/교사 구분										
원장	15.2	30.4	13.0	10.9	13.0	6.5	6.5	4.3	0.0	100.0 (46)
교사	70.4	7.9	7.9	7.2	3.9	0.7	0.7	0.7	0.7	100.0 (152)
$x^2(df)$					54.260(8)***					
설립유형										
공립단설	92.3	7.7	0.0	0.0	0.0	0.0	0.0	0.0	0.0	100.0 (13)
공립병설	82.2	7.8	3.3	4.4	1.1	0.0	0.0	0.0	1.1	100.0 (90)
사립사인	30.3	18.0	14.6	13.5	11.2	4.5	4.5	3.4	0.0	100.0 (89)
사립법인	16.7	33.3	33.3	0.0	16.7	0.0	0.0	0.0	0.0	100.0 (6)
$x^2(df)$					72.834(24)***					
지역 구분										
대도시	50.7	18.3	11.3	7.0	5.6	4.2	1.4	1.4	0.0	100.0 (71)
중소도시	60.3	10.7	8.3	8.3	6.6	0.8	2.5	1.7	0.8	100.0 (121)
읍면	83.3	0.0	0.0	16.7	0.0	0.0	0.0	0.0	0.0	100.0 (6)
$x^2(df)$					10.106(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순위 기준으로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가 3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조 인력 지원'이 26.3%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7〉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 (2순위)

단위: %(명)

구분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보조 인력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놀이중심 누리과정 홍보 강화	교사 연수 강화	누리과정포털(i-누리) 활성화	기타	계(수)
전체	34.3	26.3	11.6	8.6	7.6	5.1	3.5	1.5	1.5	100.0 (198)
원장/교사 구분										
원장	23.9	39.1	15.2	8.7	6.5	2.2	4.3	0.0	0.0	100.0 (46)
교사	37.5	22.4	10.5	8.6	7.9	5.9	3.3	2.0	2.0	100.0 (152)
$x^2(df)$	9.343(8)									
설립유형										
공립단설	53.8	23.1	0.0	0.0	0.0	15.4	0.0	0.0	7.7	100.0 (13)
공립병설	46.7	18.9	12.2	10.0	2.2	4.4	3.3	0.0	2.2	100.0 (90)
사립사인	21.3	33.7	13.5	6.7	13.5	4.5	4.5	2.2	0.0	100.0 (89)
사립법인	0.0	33.3	0.0	33.3	16.7	0.0	0.0	16.7	0.0	100.0 (6)
$x^2(df)$	53.429(24)***									
지역 구분										
대도시	31.0	29.6	14.1	9.9	7.0	4.2	1.4	1.4	1.4	100.0 (71)
중소도시	34.7	25.6	9.9	8.3	8.3	5.8	5.0	1.7	0.8	100.0 (121)
읍면	66.7	0.0	16.7	0.0	0.0	0.0	0.0	0.0	16.7	100.0 (6)
$x^2(df)$	17.909(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p < .05$; $^{**}p < .01$. $^{***}p < .001$.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66.2%로 가장 높았고,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47.5%, '보조 인력 지원' 34.3%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8〉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선 정책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보조 인력 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교사 연수 강화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놀이중심 누리과정 홍보 강화	누리과정 포털(i-누리) 활성화	기타
전체	66.2	47.5	34.3	20.7	9.6	9.6	6.6	3.5	2.0
원장/교사 구분									
원장	23.9	54.3	50.0	28.3	17.4	13.0	6.5	6.5	0.0
교사	78.9	45.4	29.6	18.4	7.2	8.6	6.6	2.6	2.6
설립유형									
공립단설	92.3	61.5	23.1	0.0	0.0	0.0	15.4	0.0	7.7
공립병설	92.2	54.4	23.3	15.6	4.4	2.2	4.4	0.0	3.3
사립사인	37.1	39.3	47.2	28.1	15.7	18.0	7.9	6.7	0.0
사립법인	50.0	33.3	33.3	33.3	16.7	16.7	0.0	16.7	0.0
지역 구분									
대도시	60.6	49.3	36.6	25.4	7.0	11.3	5.6	2.8	1.4
중소도시	68.6	45.5	33.9	18.2	11.6	9.1	7.4	4.1	1.7
읍면	83.3	66.7	16.7	16.7	0.0	0.0	0.0	0.0	1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놀이중심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만 3세가 4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만 5세 43.5%로 나타났다. 만 4세는 7.6%로 가장 낮았다.

〈표 Ⅲ-2-9〉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 (1순위)

단위: %(명)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수)	
전체	48.9	7.6	43.5	100.0	(131)
원장/교사 구분					
원장	81.8	0.0	18.2	100.0	(11)
교사	45.8	8.3	45.8	100.0	(120)
$x^2(df)$			5.358(2)		
설립유형					
공립단설	41.7	8.3	50.0	100.0	(12)
공립병설	45.8	4.8	49.4	100.0	(83)
사립사인	54.5	15.2	30.3	100.0	(33)
사립법인	100.0	0.0	0.0	100.0	(3)
$x^2(df)$			9.059(6)		
지역 구분					
대도시	46.5	4.7	48.8	100.0	(43)
중소도시	50.6	9.6	39.8	100.0	(83)
읍면	40.0	0.0	60.0	100.0	(5)
$x^2(df)$			2.36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p < .05$; $^{**}p < .01$. $^{***}p < .00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가 2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개선' 21.0%,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실사례 중심으로(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제작·배포'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0〉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1/2)

단위: %(명)

구분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개선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실사례 중심으로(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제작·배포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교육 강화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 놀이참여 활동 교육 및 놀이자료 제작·배포
전체	21.4	21.0	19.2	15.0	10.0
원장/교사 구분					
원장	14.3	7.5	18.8	24.8	13.5
교사	22.3	22.5	19.3	13.8	9.6
$x^2(df)$			42.345(7)***		
설립유형	22.3	22.5	19.3	13.8	9.6
국공립 및 법인 외	17.0	19.8	16.5	11.5	14.3
민간	22.1	21.9	19.8	15.1	9.0
가정	22.5	12.4	18.0	21.3	12.4
$x^2(df)$			30.797(14)**		
지역 구분	22.5	12.4	18.0	21.3	12.4
대도시	21.4	20.8	20.8	13.3	10.7
중소도시	19.7	20.7	16.7	19.0	9.2
읍면	38.6	27.3	15.9	6.8	4.5
$x^2(df)$			22.853(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Ⅲ-2-11〉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2/2)

단위: %(명

구분	지역사회 연계 강화(바깥놀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강화 등)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 확대	기타	계(수)
전체	6.0	4.7	2.7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6.8	6.8	7.5	100.0 (133)
교사	6.0	4.5	2.1	100.0 (1141)
$x^2(df)$		42.345(7)***		

구분	지역사회 연계 강화(바깥놀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강화 등)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 확대	기타	계(수)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6.6	8.2	6.0	100.0 (182)
민간	6.0	4.1	2.0	100.0 (1003)
가정	5.6	4.5	3.4	100.0 (89)
$x^2(df)$		30.797(14)**		
지역 구분				
대도시	6.1	4.5	2.5	100.0 (804)
중소도시	6.3	5.4	3.1	100.0 (426)
읍면	2.3	2.3	2.3	100.0 (44)
$x^2(df)$		22.853(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순위 기준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가 2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실사례 중심으로(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제작·배포' 19.8%,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 놀이참여 활동 교육 및 놀이자료 제작·배포' 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2〉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1/2)

단위: %(명)

구분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개선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실사례 중심으로(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제작·배포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 놀이참여 활동 교육 및 놀이자료 제작·배포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교육 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바깥놀이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강화 등)
전체	21.1	19.8	16.6	13.3	10.4
원장/교사 구분					
원장	9.8	22.6	20.3	13.5	14.3
교사	22.4	19.5	16.1	13.2	10.0
$x^2(df)$			16.233(7)*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14.8	20.9	20.9	13.7	10.4

구분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개선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실사례 중심으로(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제작·배포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 놀이참여 활동 교육 및 놀이자료 제작·배포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교육 강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바깥놀이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강화 등)
민간	22.2	18.7	15.8	13.5	10.6
가정	21.3	29.2	16.9	10.1	9.0
$x^2(df)$			17.506(14)		
지역 구분					
대도시	23.3	18.7	16.3	12.6	10.6
중소도시	17.1	21.8	17.1	13.4	10.1
읍면	20.5	20.5	15.9	25.0	11.4
$x^2(df)$			16.434(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표 Ⅲ-2-13〉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2/2)

단위: %(명)

구분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 확대	기타	계(수)
전체	9.2	7.8	1.8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6.8	11.3	1.5	100.0 (133)
교사	9.5	7.4	1.8	100.0 (1141)
$x^2(df)$		16.233(7)*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7.1	10.4	1.6	100.0 (182)
민간	9.8	7.5	2.0	100.0 (1003)
가정	6.7	6.7	0.0	100.0 (89)
$x^2(df)$		17.506(14)		
지역 구분				
대도시	9.2	7.5	2.0	100.0 (804)
중소도시	9.6	9.2	1.6	100.0 (426)
읍면	4.5	2.3	0.0	100.0 (44)
$x^2(df)$		16.434(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순위 기준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개

선'이 4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실사례 중심으로(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제작·배포' 39.0%,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4〉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1/2)

단위: %(명)

구분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개선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실사례 중심으로(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제작·배포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교육 강화
전체	42.1	39.0	30.6	28.3
원장/교사 구분				
원장	17.3	41.4	21.1	38.3
교사	45.0	38.7	31.7	27.1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34.6	37.4	24.2	25.3
민간	44.2	38.6	31.9	28.5
가정	33.7	47.2	29.2	31.5
지역 구분				
대도시	44.0	39.4	30.6	25.9
중소도시	37.8	38.5	29.3	32.4
읍면	47.7	36.4	43.2	3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표 Ⅲ-2-15〉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2/2)

단위: %(명)

구분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 놀이참여 활동 교육 및 놀이자료 제작·배포	지역사회 연계 강화(바깥놀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강화 등)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 확대	기타
전체	26.5	16.5	12.6	4.5
원장/교사 구분				
원장	33.8	21.1	18.0	9.0
교사	25.7	16.0	11.9	3.9
설립유형				

구분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 놀이참여 활동 교육 및 놀이자료 제작·배포	지역사회 연계 강화(바깥놀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강화 등)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 확대	기타
국공립 및 법인 외	35.2	17.0	18.7	7.7
민간	24.7	16.6	11.6	4.0
가정	29.2	14.6	11.2	3.4
지역 구분				
대도시	27.0	16.7	11.9	4.5
중소도시	26.3	16.4	14.6	4.7
읍면	20.5	13.6	4.5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17년 24.8%에서 2020년 29.8%로 증가하였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91), 2021년 4월 기준 30.4%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입학가능 비율(국공립유치원 정원/전체 유치원 취원아)은 2018년 32%, 2019년 36%, 2020년 39%로 증가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91).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입학가능 비율로는 2020년 39%를 달성하였으나, 실제 취원율은 2021년 4월 기준 30.4%이므로 아직 취원율 40%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 확충 실적은 2018년 501학급, 2019년 966학급, 2020년 885학급을 확충하였고, 2021년에는 500학급 이상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91-92).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후 학급 수를 2019년 9,005개, 2020년 9,915개, 2021년 10,46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92). 현재 저출산 추세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조만간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취원율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보육 이용률을 인건비 등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 보육서비스를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 영유아 대비 이용 아동수로 정의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4). 이에 따라 공보육 이용률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직장어린이집 이용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률의 합계로 구성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4). 공보육 이용률은 2019년 12월 기준 28.2%(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5)이고, 2020년 12월 기준 32%이다(보건복지부, 2021g: 35). 보건복지부는 공보육 이용률 목표를 2021년 35.7%, 2022년 40.0%, 2025년 50.0%로 잡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8). 그러나 공보육 이용률은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2019년 12월 기준 공보육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울은 46.6%인 반면, 가장 낮은 울산은 19.2%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5). 이외에 경기 19.6%, 인천 20.3%, 경남 22.4%, 충남 23.1%, 경북 24.8%, 대전 24.8%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5), 서울의 공보육 이용률이 46% 이상으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이외의 시도는 25%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때 특히 영유아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추가적인 인프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기존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원의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원장 A와 보육교사 B가 지적한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에서 현원이 급격하게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운영비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원장 A: 저희 지역에서도 출산이 아예 없는 지역이라서 정원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실 하나가 비워지기 시작했고 인제 그거에 대해서 불가항력인 거죠. 근데 국공립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보면 반 정원의 60%, 70%는 있어야 그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만 3세 같은 경우는 15명 정원에 8명은 있어야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간당간당한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리고 인원이 적지만 인원에 맞춰서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 교사의 인건비 주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분들, 그 쪽 지역, 국공립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 농어촌 지역에 대하 인건비 지원은 인원 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은 어떻게 보면 100% 인건비 지원이 돼야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B: 농어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어떨까. 왜냐면 자꾸만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적어지고 해서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은 아니고 저희 군에 속한 국공립에도 교사를 계속 퇴직을 시켜야 되는 원장님의 마음 아픔을 토로하시는 본 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처음에 아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에만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교사의 실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들이 없어도 어느 정도 교사의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구요.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3월에는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였고(교육부, 2019: 1), 2020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었다(교육부, 2020c: 1). 사립유치원에 도입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5개 회계기능(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과 3개의 편의 기능(세무관리, 재정분석, 클린재정)으로 구성된다(교육부, 2020c: 2). 편의기능 중 재정분석은 유치원 집행실적, 예산(본예산, 최종예산) 현황, 납입금 수납실적, 현금출납부 및 회계모니터링(미결재 및 원인행위별 지출 여부) 등을 통해 유치원 재정현황을 분석 및 출력하는 기능이고, 클린재정은 회계 이력 모니터링 및 비정상적인 사용패턴을 확인하는 기능이다(교육부, 2020c: 2). 에듀파인의 정착을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능 상시교육을 약 900회 이상 실시하였다(교육부, 2020c: 3).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전면 도입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의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달성도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48.5%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18.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6〉 유아교육 정책 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4.5	14.1	26.8	20.7	27.8	6.1	18.7	48.5	100.0 (198)	3.56
원장/교사 구분										
원장	2.2	21.7	21.7	10.9	43.5	0.0	23.9	54.3	100.0 (46)	3.72
교사	5.3	11.8	28.3	23.7	23.0	7.9	17.1	46.7	100.0 (152)	3.51
$x^2(df)/T$					11.150(4)*					1.0
설립유형										
공립단설	7.7	0.0	23.1	38.5	15.4	15.4	7.7	53.8	100.0 (13)	3.64
공립병설	5.6	18.9	28.9	24.4	12.2	10.0	24.4	36.7	100.0 (90)	3.21
사립사인	2.2	11.2	25.8	15.7	43.8	1.1	13.5	59.6	100.0 (89)	3.89
사립법인	16.7	16.7	16.7	0.0	50.0	0.0	33.3	50.0	100.0 (6)	3.50
$x^2(df)/F$					30.168(12)**					4.8**
지역 구분										
대도시	1.4	22.5	32.4	18.3	23.9	1.4	23.9	42.3	100.0 (71)	3.41
중소도시	6.6	9.9	23.1	22.3	29.8	8.3	16.5	52.1	100.0 (121)	3.64
읍면	0.0	0.0	33.3	16.7	33.3	16.7	0.0	50.0	100.0 (6)	4.00
$x^2(df)/F$					11.046(8)					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에듀파인 전담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이 75.6%로 나타나 대다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에듀파인 전담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17〉 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명)

구분	에듀파인 전담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에듀파인 사용 컨설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75.6	13.3	4.4	6.7	100.0	(45)
원장/교사 구분						
원장	75.6	13.3	4.4	6.7	100.0	(45)
설립유형						
사립사인	76.7	11.6	4.7	7.0	100.0	(43)
사립법인	50.0	50.0	0.0	0.0	100.0	(2)
$x^2(df)$			2.524(3)			
지역 구분						
대도시	81.0	19.0	0.0	0.0	100.0	(21)
중소도시	68.2	9.1	9.1	13.6	100.0	(22)
읍면	100.0	0.0	0.0	0.0	100.0	(2)
$x^2(df)$			6.70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20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원아 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고 있다(학교급식법 제4조제1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학교급식법의 사립유치원 적용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련 인건비 부담'이 64.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영양교사의 채용'이 26.7%로 그 뒤를 이었다. '급식시설 확충'은 8.9%로 나타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시설보다는 급식 관련 인건비 부담 및 영양교사 채용을 더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2-18〉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련 인건비 부담	영양교사의 채용	급식시설 확충	계(수)	
전체	64.4	26.7	8.9	100.0	(45)
원장/교사 구분					
원장	64.4	26.7	8.9	100.0	(45)
설립유형					
사립사인	62.8	27.9	9.3	100.0	(43)
사립법인	100.0	0.0	0.0	100.0	(2)
$x^2(df)$			1.155(2)		
지역 구분					
대도시	52.4	33.3	14.3	100.0	(21)
중소도시	72.7	22.7	4.5	100.0	(22)
읍면	100.0	0.0	0.0	100.0	(2)
$x^2(df)$			3.44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4)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3년 누리과정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전체에 확대되었을 당시 유아학비·보육료 22만원,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운영지원비 7만원으로 7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교육부, 2020d: 1). 그러나 2020년 유아학비·보육료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고, 2021년 유아학비·보육료 26만원으로 다시 2만원이 인상되었다(교육부, 2020d: 1).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이 어린이집 재정여건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는 21.8%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7.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2020년 및 2021년의 누리과정 지원단가 상향조정 정도는 어린이집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Ⅲ-2-19〉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되어 어린이집 재정여건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비율 (①+②)	긍정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9.5	18.0	32.3	20.3	1.5	8.3	37.6	21.8	100.0	(133)	2.63
원장/교사 구분											
원장	19.5	18.0	32.3	20.3	1.5	8.3	37.6	21.8	100.0	(133)	2.63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12.5	12.5	40.0	25.0	2.5	7.5	25.0	27.5	100.0	(40)	2.92
민간	34.0	25.5	21.3	17.0	0.0	2.1	59.6	17.0	100.0	(47)	2.22
가정	10.9	15.2	37.0	19.6	2.2	15.2	26.1	21.7	100.0	(46)	2.85
$x^2(df)/F$					13.945(8)						5.7**
지역 구분											
대도시	22.6	17.7	33.9	16.1	3.2	6.5	40.3	19.4	100.0	(62)	2.57
중소도시	17.2	17.2	29.7	25.0	0.0	10.9	34.4	25.0	100.0	(64)	2.70
읍면	14.3	28.6	42.9	14.3	0.0	0.0	42.9	14.3	100.0	(7)	2.57
$x^2(df)/F$					4.915(8)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1$.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의 수행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51.5%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장과 교사를 구분하여 살펴본 응답을 보면, 원장은 긍정비율이 21.7%, 부정비율 56.5%로 부정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는 긍정비율 60.5%, 부정비율 9.9%로 긍정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이 교사에 비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단설 및 공립병설은 긍정비율이 각각 61.5%, 65.6%로 긍정비율이 높은 반면, 사립사인은 긍정비율이 36.0%, 부정비율 34.8%로 긍정비율과 부정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2-20〉 유아교육 정책 과제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7.6	13.1	24.2	25.3	26.3	3.5	20.7	51.5	100.0 (198)	3.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28.3	28.3	21.7	17.4	4.3	0.0	56.5	21.7	100.0 (46)	2.41
교사	1.3	8.6	25.0	27.6	32.9	4.6	9.9	60.5	100.0 (152)	3.86
$x^2(df)/T$					55.396(4)***					-7.9***
설립유형										
공립단설	0.0	0.0	23.1	15.4	46.2	15.4	0.0	61.5	100.0 (13)	4.27
공립병설	0.0	8.9	22.2	34.4	31.1	3.3	8.9	65.6	100.0 (90)	3.91
사립사인	15.7	19.1	27.0	18.0	18.0	2.2	34.8	36.0	100.0 (89)	3.03
사립법인	16.7	16.7	16.7	16.7	33.3	0.0	33.3	50.0	100.0 (6)	3.33
$x^2(df)/F$					33.238(12)***					9.8***
지역 구분										
대도시	7.0	19.7	26.8	25.4	18.3	2.8	26.8	43.7	100.0 (71)	3.29
중소도시	7.4	9.1	24.0	24.8	30.6	4.1	16.5	55.4	100.0 (121)	3.65
읍면	16.7	16.7	0.0	33.3	33.3	0.0	33.3	66.7	100.0 (6)	3.50
$x^2(df)/F$					8.965(8)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 $p < .001$.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는 이용기관에 따른 서비스 질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고 할수 있다. 특히 교사의 양성과정 및 처우격차는 서비스 질과 직결되고, 보육교육의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필수시설 위주로 그 최소기준을 일원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과정이 통합되어 3~5세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차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유아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은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급여 등 처우도 기관유형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은 51.9%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16.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1〉 육아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 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30.3	21.6	30.0	10.2	6.2	1.7	51.9	16.4	100.0	(1274)	2.39
원장/교사 구분											
원장	46.6	21.1	18.0	7.5	5.3	1.5	67.7	12.8	100.0	(133)	2.02
교사	28.4	21.6	31.4	10.5	6.3	1.8	50.0	16.8	100.0	(1141)	2.44
$x^2(df)/T$					21.347(4)***						-38***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29.1	16.5	31.3	11.0	8.2	3.8	45.6	19.2	100.0	(182)	2.51
민간	30.3	22.5	29.8	10.4	5.8	1.2	52.8	16.2	100.0	(1003)	2.38
가정	32.6	21.3	29.2	6.7	6.7	3.4	53.9	13.5	100.0	(89)	2.31
$x^2(df)/F$					5.677(8)						1.1
지역 구분											
대도시	28.4	23.3	31.1	9.3	6.2	1.7	51.6	15.5	100.0	(804)	2.41
중소도시	34.3	19.2	27.5	11.5	5.9	1.6	53.5	17.4	100.0	(426)	2.34
읍면	27.3	13.6	34.1	13.6	9.1	2.3	40.9	22.7	100.0	(44)	2.63
$x^2(df)/F$					10.735(8)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은 54.0%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1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2-22〉 유아교육 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인식 평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31.3	22.7	21.2	9.6	5.6	9.6	54.0	15.2	100.0	(198)	2.28
원장/교사 구분											
원장	43.5	28.3	21.7	4.3	0.0	2.2	71.7	4.3	100.0	(46)	1.87
교사	27.6	21.1	21.1	11.2	7.2	11.8	48.7	18.4	100.0	(152)	2.43
$x^2(df)/T$					7.895(4)						-3.2**
설립유형											
공립단설	38.5	23.1	15.4	7.7	0.0	15.4	61.5	7.7	100.0	(13)	1.91
공립병설	36.7	23.3	18.9	7.8	1.1	12.2	60.0	8.9	100.0	(90)	2.01
사립사인	25.8	23.6	23.6	11.2	9.0	6.7	49.4	20.2	100.0	(89)	2.51
사립법인	16.7	0.0	33.3	16.7	33.3	0.0	16.7	50.0	100.0	(6)	3.50
$x^2(df)/F$					18.686(12)						4.9**
지역 구분											
대도시	36.6	23.9	18.3	12.7	1.4	7.0	60.6	14.1	100.0	(71)	2.12
중소도시	28.1	21.5	22.3	8.3	8.3	11.6	49.6	16.5	100.0	(121)	2.40
읍면	33.3	33.3	33.3	0.0	0.0	0.0	66.7	0.0	100.0	(6)	2.00
$x^2(df)/F$					7.500(8)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 $p < .0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과정 차이를 인한 전문성과 처우의 격차 이외에도 교사 A는 기관의 운영시간의 기준이 달라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차이가 나는 점도 언급하였다. 즉, 3~5세 누리과정의 일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유치원에 비해 길어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돌봄이 통합되어 적용되어야 함을 감안하면, 교육을 위한 누리과정의 적용시간 일원화에서 나아가 이외 돌봄서비스 운영시간에 대한 기준의 일원화에 대한 모색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 교사A: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5세에서 7세 과정들은 누리과정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질적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게 교사의 수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유치원에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보육현장에서는 케어가 거기에 또 추가가 되다 보니 저희한테는 정말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같은 걸 하라고 하니까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이 3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함' 22.5%, '유아 담당교사의 양성과정(자격)을 일원화해야 함'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3〉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줄여야 함	유아 담당교사의 양성과정(자격)을 일원화해야 함	관할 행정부서를 일원화해야 함	유아 담당교사 보수교육 및 연수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누리과정 지원 장학 또는 컨설팅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37.2	22.5	16.0	15.6	5.8	2.3	0.5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24.1	18.0	23.3	29.3	3.0	2.3	0.0	100.0	(133)
교사	38.7	23.0	15.2	14.0	6.1	2.3	0.6	100.0	(1141)
$x^2(df)$	33.833(6)***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27.5	19.2	17.0	27.5	6.0	2.7	0.0	100.0	(182)
민간	39.3	22.8	15.7	13.7	5.8	2.2	0.6	100.0	(1003)
가정	33.7	25.8	18.0	13.5	5.6	2.2	1.1	100.0	(89)
$x^2(df)$	28.764(12)**								
지역 구분									
대도시	38.1	21.9	15.7	15.9	5.5	2.4	0.6	100.0	(804)
중소도시	37.3	23.2	16.0	15.0	6.3	1.6	0.5	100.0	(426)
읍면	20.5	27.3	22.7	15.9	6.8	6.8	0.0	100.0	(44)
$x^2(df)$	11.173(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순위 기준으로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함'이 27.7%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 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 24.3%, '관할 행정부서를 일원화해야 함'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4〉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 (2순위)

단위: %(명)

구분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함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	관할 행정부서를 일원화해야 함	유아 담당교사의 보수교육 및 연수 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유아 담당교사의 양성과정(자격)을 일원화해야 함	누리과정 지원 관련 장학 또는 컨설팅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27.7	24.3	14.9	13.7	13.0	5.6	0.8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13.5	18.0	22.6	16.5	18.8	9.8	0.8	100.0	(133)
교사	29.4	25.0	14.0	13.4	12.4	5.1	0.8	100.0	(1141)
$x^2(df)$	28.292(6)***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21.4	22.0	17.0	15.9	17.0	6.0	0.5	100.0	(182)
민간	29.1	24.7	14.6	13.3	12.3	5.2	0.9	100.0	(1003)
가정	24.7	23.6	14.6	14.6	13.5	9.0	0.0	100.0	(89)
$x^2(df)$	11.483(12)								
지역 구분									
대도시	28.6	23.3	14.6	12.9	14.2	5.5	1.0	100.0	(804)
중소도시	26.8	23.9	16.4	15.7	11.5	5.4	0.2	100.0	(426)
읍면	20.5	45.5	6.8	9.1	6.8	9.1	2.3	100.0	(44)
$x^2(df)$	21.897(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순위 기준으로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이 6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함' 50.2%, '관할 행정부서를 일원화해야 함' 3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5〉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한 우선 추진사항 (1+2순위)

단위: %(명)

구분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 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함	관할 행정부서를 일원화해야 함	유아 담당교사의 양성과정(자격)을 일원화해야 함	유아 담당교사의 보수교육 및 연수 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누리과정 지원 관련 장학 또는 컨설팅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기타
전체	61.5	50.2	30.5	29.0	19.5	7.8	1.3
원장/교사 구분							
원장	42.1	31.6	51.9	42.1	19.5	12.0	0.8
교사	63.7	52.4	28.0	27.5	19.5	7.4	1.4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49.5	40.7	44.5	34.1	22.0	8.8	0.5
민간	64.0	51.9	28.2	27.9	19.0	7.4	1.5
가정	57.3	50.6	28.1	31.5	20.2	11.2	1.1
지역 구분							
대도시	61.3	50.5	30.5	29.9	18.4	7.8	1.6
중소도시	61.3	50.0	31.5	27.5	22.1	7.0	0.7
읍면	65.9	47.7	22.7	29.5	15.9	15.9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며,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수립된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서 해당 과제가 제시된다(보건복지부, 2021e). 세부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도 계속하여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e: 2-3).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이 43.2%로 긍정비율(달

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2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원장과 교사를 구분한 응답을 보면 원장은 긍정비율이 31.6%로 부정비율 26.3%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는 긍정비율이 21.8%로 부정비율 45.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보다 교사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공립 및 법인 외는 긍정비율 30.8%, 부정비율 32.4%로 나타났고, 가정은 긍정비율 28.1%, 부정비율 30.3%로 나타났으나, 민간은 긍정비율 20.9%, 부정비율 46.4%로 민간이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표 Ⅲ-2-26〉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7.0	26.3	32.7	14.9	7.9	1.2	43.2	22.8	100.0	(1274)	2.70
원장/교사 구분											
원장	12.0	14.3	41.4	24.8	6.8	0.8	26.3	31.6	100.0	(133)	3.00
교사	17.5	27.7	31.7	13.8	8.1	1.2	45.2	21.8	100.0	(1141)	2.67
$x^2(df)/T$					23.558(4)***						3.3**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11.5	20.9	34.6	24.2	6.6	2.2	32.4	30.8	100.0	(182)	2.93
민간	18.4	27.9	31.6	13.1	7.9	1.1	46.4	20.9	100.0	(1003)	2.64
가정	11.2	19.1	41.6	16.9	11.2	0.0	30.3	28.1	100.0	(89)	2.98
$x^2(df)/F$					28.369(8)***						7.8***
지역 구분											
대도시	15.5	26.6	33.1	15.8	8.0	1.0	42.2	23.8	100.0	(804)	2.74
중소도시	19.5	26.1	31.7	13.4	8.0	1.4	45.5	21.4	100.0	(426)	2.64
읍면	18.2	22.7	36.4	13.6	6.8	2.3	40.9	20.5	100.0	(44)	2.67
$x^2(df)/F$					4.397(8)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76.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Ⅲ-2-27〉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	교사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문서 양식의 통합 등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대체교사/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교사 보수교육 확대 등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및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확보	교사가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76.2	10.5	4.1	3.5	2.8	2.5	0.3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76.7	6.8	6.0	2.3	3.0	4.5	0.8	100.0	(133)
교사	76.2	11.0	3.9	3.7	2.8	2.3	0.3	100.0	(1141)
$x^2(df)$					7.324(6)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81.3	6.0	5.5	2.2	1.6	2.7	0.5	100.0	(182)
민간	75.8	11.2	4.0	3.8	3.0	2.0	0.3	100.0	(1003)
가정	70.8	12.4	2.2	3.4	3.4	7.9	0.0	100.0	(89)
$x^2(df)$					20.856(12)				
지역 구분									
대도시	77.6	10.3	4.2	2.6	2.0	2.9	0.4	100.0	(804)
중소도시	73.5	11.3	4.2	5.4	3.5	1.9	0.2	100.0	(426)
읍면	77.3	6.8	0.0	2.3	11.4	2.3	0.0	100.0	(44)
$x^2(df)$					25.111(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순위 기준으로 '교사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어야 함'이 3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체교사/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이 23.9%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28〉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 (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대체교사/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문서 양식의 통합 등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교사가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	교사 보수교육 확대 등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및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확보	기타	계(수)
전체	34.1	23.9	16.5	10.1	8.0	6.8	0.6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22.6	24.8	18.8	15.8	6.0	9.8	2.3	100.0 (133)
교사	35.5	23.8	16.2	9.5	8.2	6.4	0.4	100.0 (1141)
$x^2(df)$				20.096(6)**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33.0	25.3	15.9	12.1	9.3	3.8	0.5	100.0 (182)
민간	34.9	23.2	16.2	10.3	7.7	7.3	0.5	100.0 (1003)
가정	28.1	28.1	21.3	4.5	9.0	6.7	2.2	100.0 (89)
$x^2(df)$				14.397(12)				
지역 구분								
대도시	34.3	21.8	18.0	9.6	8.2	7.5	0.6	100.0 (804)
중소도시	33.6	26.8	14.8	10.8	7.7	5.9	0.5	100.0 (426)
읍면	36.4	34.1	4.5	13.6	6.8	2.3	2.3	100.0 (44)
$x^2(df)$				16.33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8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사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44.7%, '대체교사/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9〉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우선 필요사항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	교사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대체교사/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문서 양식의 통합 등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교사가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교사 보수교육 확대 등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및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확보	기타
전체	84.2	44.7	27.4	20.6	12.6	9.6	0.9
원장/교사 구분							
원장	82.7	29.3	27.1	24.8	20.3	12.8	3.0
교사	84.4	46.5	27.4	20.1	11.7	9.2	0.7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90.7	39.0	27.5	21.4	14.8	5.5	1.1
민간	83.4	46.1	27.0	20.1	12.3	10.3	0.8
가정	79.8	40.4	31.5	23.6	12.4	10.1	2.2
지역 구분							
대도시	85.8	44.7	24.4	22.3	12.4	9.5	1.0
중소도시	81.2	44.8	32.2	19.0	12.7	9.4	0.7
읍면	84.1	43.2	36.4	4.5	15.9	13.6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을 응답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만 0세가 3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 1세 21.2%, 만 3세 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30〉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 (1순위)

단위: %(명)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4세 이상	계(수)
전체	36.0	21.2	13.3	19.8	9.8	100.0 (1073)
원장/교사 구분						
원장	44.5	9.1	9.1	27.3	10.0	100.0 (110)
교사	35.0	22.5	13.8	18.9	9.8	100.0 (963)
$x^2(df)$	16.096(4)**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21.8	21.8	14.5	27.3	14.5	100.0 (165)
민간	35.5	21.5	14.0	19.6	9.4	100.0 (837)
가정	74.6	15.5	2.8	4.2	2.8	100.0 (71)
$x^2(df)$	67.104(8)***					
지역 구분						
대도시	38.6	21.7	13.8	17.2	8.7	100.0 (690)
중소도시	32.9	21.1	12.4	22.0	11.6	100.0 (346)
읍면	16.2	10.8	13.5	45.9	13.5	100.0 (37)
$x^2(df)$	26.84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원장 C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교사 지원이 확대되고 승급교육이나 직무교육 시에 1순위로 공급되어 교육의 기회가 증진되었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원장 B는 해당 교육이 2년 또는 3년 단위로 실시되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교육을 위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이 현재 수준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보육교사 A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재교육이 휴일이나 주말이 아니라, 근무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원장 C: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승급교육이나 직무교육이나 이런 때는 1순위이기 때문에, 순위 자체가, 배정해 주는 순위 자체가 1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배정을 해서 선생님들이 승급, 직무교육은 다 갈 수 있게 마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장 B: 승급이나 직무 교육이 매 3년, 2년마다 있다 할지라도 3년마다 2년은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 교육의 재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교사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여건, 그리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A: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에 있는 교육 등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업 준비나 아이들 관찰평가나 이런 것들 쓰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들인데 좀 프로그램들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힐링 프로그램도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힐링이 말이 힐링이지 저희가 쉴 수 있는 힐링이 아닙니다. 쉴 수 있는 게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교사가 근무시간에만 일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가족과 정말로 온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보육교사 면담에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조장이 일차적인 과제로 지목되었으며, 급여수준의 격차 해소, 시간외 근무수당 보장, 호봉제 적용, 영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강화, 휴게시간 보장의 현실화 등이 제기되었다.

먼저, 아동 대 교사 비율의 조정에 대해 교사 C는 0세아의 경우 현재 3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교사C: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일단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 저는 제일 일단 그게 줄어야, 일단 줄어야 내 손도 남고, 내 손도 남고 내 눈도 아이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개선 요구로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지적하고, 해당 기관을 기피하여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시간외 수당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운영 여건이 나은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A에서 제기되어 전체 어린이집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육교사에게 호봉에 따른 급여 책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낮은 급여수준은 물론, 교사 C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호봉이 높은 교사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을 야기하여 이직률을 높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어렵게 하며, 교사의 직무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된다. 그 밖에도 교사 A가 언

급한 유아반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영아반 교사의 수당은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교사B: 국공립보다 민간어린이집이 기본급이 2,30 정도 더 낮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런지 원장님들이 질 좋은 선생님들을 좀 뽑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월급 체계예요. 보수가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다 서울형이나 국공립을 가려고 하지 민간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봤을 때 선생님들의 질도 너무나 좋고 아이들을 향한 그런 교육열이나 또 아동학대 그런 것도 없구요.

교사A: 다른 직장은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발생하지만 어린이집 이쪽은 시간 외 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나 업무를 원장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주셔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 왜 퇴근을 안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야근을 안 시켰어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교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고 해야 되는 지원들이면 당당히 저희도 시간 외 근무 시 시간 외 수당을 지급을 받으면 저희도 기분 좋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구요.

교사A: 저희는 사실 국공립 시설이기는 한데 유아반에 비해서 수당이 적은 영아반 교사에 대한 동등한 수당 지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누리, 처우개선비와 누리비랑 저희가 영아쪽이랑은 수당 지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사 간에 조금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동등에 대한, 동등하게 지원이 필요한 것 같구요.

교사C: 보육교사가 제일 단점이 이직률이 높다는 거죠. 이직률이 높은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호봉 수가 높으면 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라고 해서 이직률이 되게 높은 건데. 호봉 수가 높아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일할 수 없어서 이직률이 높은 건데.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호봉이, 되게 월급이 많아서, 보육교사들이 월급이 많아서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9호봉, 10호봉 이렇게 돼도 실질적으로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교사A: 호봉이 높아질수록, 내가 전문적인 능력이 생길수록 더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자격급수별이랑 학력별 그리고 직책별 호봉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러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좀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사B: 정말 점심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후루룩 하거나 아이들 먹는 거 다 먹고 나서 뒤치다꺼리하고 잠깐 식은 밥 잠깐 먹거나 그런 거는 어느 선생님이나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나) 보조·대체교사 지원 확대

2019년 보조교사 배치율(보조교사 수/영아반 담임교사 수)은 23.1%이고, 2020년 보조교사 배치율 목표치는 23.3%이다(보건복지부, 2020a: 451).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의 면담조사에서 보육교사들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영아반의 경우 반별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별 보조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 배치율이 현재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감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조교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53.4%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16.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Ⅲ-2-31〉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6.8	9.8	29.3	32.3	21.1	0.8	16.5	53.4	100.0	(133)	3.52
원장/교사 구분											
원장	6.8	9.8	29.3	32.3	21.1	0.8	16.5	53.4	100.0	(133)	3.52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7.5	7.5	32.5	35.0	15.0	2.5	15.0	50.0	100.0	(40)	3.44
민간	10.6	14.9	31.9	25.5	17.0	0.0	25.5	42.6	100.0	(47)	3.23
가정	2.2	6.5	23.9	37.0	30.4	0.0	8.7	67.4	100.0	(46)	3.87
$x^2(df)/F$					9.170(8)						3.9*
지역 구분											
대도시	6.5	8.1	32.3	32.3	19.4	1.6	14.5	51.6	100.0	(62)	3.51
중소도시	4.7	12.5	25.0	35.9	21.9	0.0	17.2	57.8	100.0	(64)	3.58
읍면	28.6	0.0	42.9	0.0	28.6	0.0	28.6	28.6	100.0	(7)	3.00
$x^2(df)/F$					10.453(8)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42.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32〉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0.5	15.0	30.8	22.6	20.3	0.8	25.6	42.9	100.0	(133)	3.27
원장/교사 구분											
원장	10.5	15.0	30.8	22.6	20.3	0.8	25.6	42.9	100.0	(133)	3.27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7.5	17.5	30.0	20.0	22.5	2.5	25.0	42.5	100.0	(40)	3.33
민간	14.9	21.3	31.9	19.1	12.8	0.0	36.2	31.9	100.0	(47)	2.94
가정	8.7	6.5	30.4	28.3	26.1	0.0	15.2	54.3	100.0	(46)	3.57
$x^2(df)/F$					8.101(8)						3.1*
지역 구분											
대도시	9.7	17.7	33.9	27.4	9.7	1.6	27.4	37.1	100.0	(62)	3.10
중소도시	10.9	12.5	28.1	20.3	28.1	0.0	23.4	48.4	100.0	(64)	3.42
읍면	14.3	14.3	28.6	0.0	42.9	0.0	28.6	42.9	100.0	(7)	3.43
$x^2(df)/F$					10.564(8)						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41.4%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33〉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6.8	13.5	36.1	24.8	16.5	2.3	20.3	41.4	100.0 (133)	3.32
원장/교사 구분										
원장	6.8	13.5	36.1	24.8	16.5	2.3	20.3	41.4	100.0 (133)	3.32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7.5	22.5	35.0	15.0	17.5	2.5	30.0	32.5	100.0 (40)	3.13
민간	8.5	14.9	44.7	21.3	6.4	4.3	23.4	27.7	100.0 (47)	3.02
가정	4.3	4.3	28.3	37.0	26.1	0.0	8.7	63.0	100.0 (46)	3.76
$x^2(df)/F$					17.565(8)*					6.2**
지역 구분										
대도시	3.2	9.7	41.9	24.2	19.4	1.6	12.9	43.5	100.0 (62)	3.48
중소도시	7.8	15.6	31.3	28.1	14.1	3.1	23.4	42.2	100.0 (64)	3.26
읍면	28.6	28.6	28.6	0.0	14.3	0.0	57.1	14.3	100.0 (7)	2.43
$x^2(df)/F$					11.728(8)					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24.5%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49.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과 달리 현재의 보조교사 지원 정도가 휴게시간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Ⅲ-2-34〉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32.7	16.5	25.2	13.3	11.1	1.2	49.2	24.5	100.0 (1141)	2.53
원장/교사 구분										
교사	32.7	16.5	25.2	13.3	11.1	1.2	49.2	24.5	100.0 (1141)	2.53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18.3	13.4	28.9	20.4	17.6	1.4	31.7	38.0	100.0 (142)	3.06
민간	35.0	17.2	24.3	12.2	10.0	1.3	52.2	22.3	100.0 (956)	2.44
가정	27.9	11.6	32.6	14.0	14.0	0.0	39.5	27.9	100.0 (43)	2.74
$x^2(df)/F$					27.535(8)***					13.2***
지역 구분										
대도시	30.5	17.0	26.4	13.7	11.2	1.2	47.4	24.9	100.0 (742)	2.58
중소도시	37.0	15.2	23.2	12.4	10.8	1.4	52.2	23.2	100.0 (362)	2.44
읍면	35.1	18.9	18.9	13.5	13.5	0.0	54.1	27.0	100.0 (37)	2.51
$x^2(df)/F$					6.005(8)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 전념'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28.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40.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과 달리 현재의 보조교사 지원 정도가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Ⅲ-2-35〉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 전념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20.6	20.2	29.0	15.8	13.1	1.2	40.8	28.9	100.0	(1141)	2.80
원장/교사 구분											
교사	20.6	20.2	29.0	15.8	13.1	1.2	40.8	28.9	100.0	(1141)	2.80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12.0	16.9	26.8	24.6	19.0	0.7	28.9	43.7	100.0	(142)	3.22
민간	22.2	20.8	29.0	14.4	12.2	1.4	43.0	26.7	100.0	(956)	2.73
가정	14.0	18.6	37.2	16.3	14.0	0.0	32.6	30.2	100.0	(43)	2.98
$x^2(df)/F$					21.846(8)**						9.1***
지역 구분											
대도시	18.7	19.9	30.7	15.9	13.7	0.9	38.7	29.6	100.0	(742)	2.86
중소도시	23.8	20.4	26.5	15.7	11.6	1.9	44.2	27.3	100.0	(362)	2.70
읍면	27.0	24.3	18.9	13.5	16.2	0.0	51.4	29.7	100.0	(37)	2.68
$x^2(df)/F$					8.127(8)						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29.0%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9.9%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과 달리 현재의 대체교사 지원 정도가 담임교사의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Ⅲ-2-36〉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22.0	17.9	29.5	15.7	13.3	1.6	39.9	29.0	100.0	(1141)	2.80
원장/교사 구분											
교사	22.0	17.9	29.5	15.7	13.3	1.6	39.9	29.0	100.0	(1141)	2.80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9.9	16.2	31.0	26.1	15.5	1.4	26.1	41.5	100.0	(142)	3.21
민간	24.4	17.7	29.1	14.5	12.7	1.7	42.1	27.2	100.0	(956)	2.73
가정	9.3	27.9	34.9	7.0	20.9	0.0	37.2	27.9	100.0	(43)	3.02
$x^2(df)/F$					33.465(8)***						9.0***
지역 구분											
대도시	19.3	17.5	30.5	16.7	14.8	1.2	36.8	31.5	100.0	(742)	2.90
중소도시	27.1	18.0	29.0	14.1	9.7	2.2	45.0	23.8	100.0	(362)	2.60
읍면	27.0	24.3	16.2	10.8	18.9	2.7	51.4	29.7	100.0	(37)	2.69
$x^2(df)/F$					18.021(8)*						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p 〈 .05, ** p 〈 .01. *** p 〈 .001.

보조교사 지원 확대는 전반적으로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원장 C는 보조교사 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부담이 우려되어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조교사 여부가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교사 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지원수준을 현행 30% 수준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모든 기관에 일괄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사 A는 영아반에 보조교사가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그 공간 규모의 제약으로 다수의 교사가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본적으로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의 조정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원장 C: 연장반 선생님의 4대 지원 30% 사용자 부담금이 지원되는데 마찬가지로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로 4대 그거의 사용자 부담금이 30%밖에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시군구에서 연장반이나 아니면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운영이 안돼서 그 4대 보험을 부담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은 일부러 구인을 하고 쓰지 않고 있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시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또한 30%, 사용자 부담금 3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상향되는 개선 요구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원장 C: 8시간 근무될 수 있는 보조교사가 지원되면 효율적으로 특히 분명히 유아반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가정어린이집에 0에서 2세,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가정어린이집 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가 온종일 근무할 수 있는, 반을 맡지 않고 여기 저기 이 반, 저 반 손이 필요한 곳에 보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구요.

교사 A: 보조교사는 저희가 오전 시간대에도 원활하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행사나 보육지원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구요.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도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각 반별로 보조교사가 1명이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영아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사가 아이들 기저귀를 갈러 간다든가 귀가나 등원지도를 할 때 손이 없어요 (중략)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관찰일지나 관찰기록을 하는 부분, 왜냐면 (영아반) 아이들을 보다 보면 저희가 머릿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아반 선생님들은 특히 더 그렇고. 공통업무도 있고. 그런 부분 지원, 환경구성이라든가 청소 및 소독 그런 부분, 또 배변 도움이나 낮잠 지도, 식사 지도, 귀가 시 교실에 교사가 부재일 때도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혼자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요.

다음으로 대체교사 지원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최대 10일이 지원되어 연가 일수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원장 B), 교사 C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필요시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체교사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이때 특히 원장 A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체교사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의 효율화도 요구된다. 또한 이때 원장 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공급되는 대체교사 인력풀을 별도로 구축하여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장 B: 대체교사는 지원 일수가 최대 현재 10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연도에 교사가 입사를 하게 될 경우 그 교사는 연차가 11일이 발생되고 2년차에는 최소 15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저희는 보육교사들한테는 최대 1년에 25개까지 연월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체교사는 최대 10일밖에 지원이 안되는 현재 정책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이게 노동법에 맞추어져서 대체교사도 이 교사의 연차수만큼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교사 최대 지원일 수가 교사 연차에 맞을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 C: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날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번도 저희 어린이집에 연차를 신청해서 선생님들이 휴가를 간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일부터 10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0일까지 그 다음 달에 쓸 대체교사 선생님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신청해도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체교사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육아종에 대체교사를 더 충원인력을 늘린다든지 아까 긴급하게 누가 돌아가시거나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긴급상황으로 보낼 수 있는 대체교사 아니면 일반으로 연차나 승급이나 직무나 요렇게 구분해서 조금 구분이 되어서 인력을 확보해 놓으면 저희가 선생님들 연차를 드리고 사용하는데 매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장 A: 특히 7,8월달에 휴가 많이 갈 때는 정말 (대체교사) 배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3,4,5월에는 조금 교사들이 휴가를 안 가는 시즌이어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용을 할 때 배정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7,8월달, 12월달, 1월달 이때에는 이 때 한 성수기만이더라도 대체교사들을 조금 더 확보해 놓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A: 교사 병가나 휴가, 그리고 신입 적응 시에도 아이들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도 지금은 조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육아휴직 등 대체교사 지원이 좀 많이 확대가 된다면 활성화가 되고 교사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자리를 비우는 데 대한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 이런 것들 좀 덜어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을 때 더욱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C: 대체교사 못 쓰는 거예요. 신청하면 맨날 안된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휴가는 다 100% 써야 되니까 원장님들이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날짜를 잡아서 비수기에 1주일씩 통으로 잡으세요. 그러고 가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휴가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써야 되는데. 사실 원장님들의 애로점도 있죠. 휴가가 남아있으면 안되고 그것을 몇 %, 100% 소진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알지만 그래도 휴가가 뭐예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휴가고 필요할 때 쓰는 게 휴가인데 그렇지 않고 운영에 맞춰서 쉬어야 되는 게 휴가가 되어 버린 거죠.

다)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어린이집 평가제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모든 어린이집 지표(4개 영역, 18개 지표, 59개 평가항목)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평가과정을 수행하여 평가 등급(A, B, C, D)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_정책_보육, http://www.mohw.[10]. 해당 제도는 2006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2017년 통합지표 시행을 거쳐,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용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_정책_보육, http://www.mohw.go.kr, 2021년 11월 3일 인출). 평가주기는 A, B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는 3년, C, D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2년이며, 신규개원이나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에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후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_정책_보육, http://www.mohw.go.kr, 2021년 11월 3일 인출).

나아가 2021년의 제3차 중장기보육계획의 세부 과제에서는 어린이집 평가 관리 체계의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 2021e: 3). 구체적으로는 평가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비대면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평가를 도입하고,[11] 셀프모니터링(반응형 웹 기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21e: 3).

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1년 11월 3일 인출,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304&PAGE=4&topTitle=%EC%96%B4%EB%A6%B0%EC%9D%B4%EC%A7%91%20%ED%8F%89%EA%B0%80%EC%A0%9C

11) 해당 예시로는 어린이집 운영일지, 보육일지 등을 서류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등이 제시된다(보건복지부, 2021e: 3).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의 달성도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7.2%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37〉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 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7.5	10.7	41.1	20.5	16.7	3.6	18.1	37.2	100.0	(1274)	3.29
원장/교사 구분											
원장	6.8	9.0	32.3	22.6	26.3	3.0	15.8	48.9	100.0	(133)	3.54
교사	7.5	10.9	42.1	20.2	15.6	3.7	18.4	35.8	100.0	(1141)	3.26
$x^2(df)/T$					11.647(4)*						2.5*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8.2	5.5	37.9	24.7	18.1	5.5	13.7	42.9	100.0	(182)	3.41
민간	7.4	12.0	42.5	19.1	15.8	3.3	19.3	34.9	100.0	(1003)	3.25
가정	6.7	6.7	31.5	27.0	24.7	3.4	13.5	51.7	100.0	(89)	3.58
x^2(df)/F					19.087(8)*						4.7**
지역 구분											
대도시	6.5	10.2	42.9	21.0	16.2	3.2	16.7	37.2	100.0	(804)	3.31
중소도시	9.4	11.5	37.6	19.2	18.1	4.2	20.9	37.3	100.0	(426)	3.26
읍면	6.8	11.4	40.9	22.7	13.6	4.5	18.2	36.4	100.0	(44)	3.26
$x^2(df)/F$					7.013(8)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42.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1.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2-38〉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9.0	12.8	32.3	24.1	18.8	3.0	21.8	42.9	100.0	(133)	3.32
원장/교사 구분											
원장	9.0	12.8	32.3	24.1	18.8	3.0	21.8	42.9	100.0	(133)	3.32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2.5	20.0	40.0	22.5	7.5	7.5	22.5	30.0	100.0	(40)	3.14
민간	17.0	10.6	36.2	14.9	19.1	2.1	27.7	34.0	100.0	(47)	3.09
가정	6.5	8.7	21.7	34.8	28.3	0.0	15.2	63.0	100.0	(46)	3.70
$x^2(df)/F$					19.218(8)*						3.7*
지역 구분											
대도시	12.9	8.1	33.9	21.0	19.4	4.8	21.0	40.3	100.0	(62)	3.27
중소도시	6.3	14.1	29.7	28.1	20.3	1.6	20.3	48.4	100.0	(64)	3.43
읍면	0.0	42.9	42.9	14.3	0.0	0.0	42.9	14.3	100.0	(7)	2.71
$x^2(df)/F$					10.881(8)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26.8%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4.7%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 및 법인 외는 긍정비율 35.9%, 부정비율 21.8%이고, 가정은 긍정비율 32.6%, 부정비율 30.2%인데 비해, 민간은 긍정비율 25.2%, 부정비율 36.8%로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9〉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8)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질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 겠다	부정 비율 (①+ ②)	긍정 비율 (④+ 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8.1	16.7	36.0	17.0	9.8	2.5	34.7	26.8	100.0	(1141)	2.83
원장/교사 구분											
교사	18.1	16.7	36.0	17.0	9.8	2.5	34.7	26.8	100.0	(1141)	2.83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12.0	9.9	38.0	23.2	12.7	4.2	21.8	35.9	100.0	(142)	3.15
민간	18.9	17.9	35.7	16.1	9.1	2.3	36.8	25.2	100.0	(956)	2.78
가정	18.6	11.6	37.2	16.3	16.3	0.0	30.2	32.6	100.0	(43)	3.00
$x^2(df)/F$					16.291(8)*						6.2**
지역 구분											
대도시	16.2	17.0	37.3	17.1	10.2	2.2	33.2	27.4	100.0	(742)	2.88
중소도시	21.5	16.9	32.9	17.1	8.3	3.3	38.4	25.4	100.0	(362)	2.73
읍면	21.6	8.1	40.5	13.5	16.2	0.0	29.7	29.7	100.0	(37)	2.95
$x^2(df)/F$					10.098(8)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어린이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함'이 5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함(평가지표 내용 간소화 등)'이 25.5%로 그 뒤를 있었다.

〈표 Ⅲ-2-40〉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달성을 위한 필요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함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함 (평가지표 내용 간소화 등)	평가 결과가 실제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평가 항목에 대한 비율을 조정해야 함 (서면평가, 관찰평가 비율 등)	평가 결과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함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돼야 함	평가지표의 자질을 제고해야 함	기타	계
전체	50.1	25.5	9.6	5.3	4.9	2.4	1.8	0.5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36.1	24.1	14.3	6.8	9.8	2.3	5.3	1.5	100.0 (133)
교사	51.7	25.7	9.0	5.1	4.3	2.4	1.4	0.4	100.0 (1141)
$x^2(df)$					29.660(7)***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48.9	25.8	10.4	6.0	3.3	3.3	1.6	0.5	100.0 (182)
민간	50.8	25.3	9.1	5.0	5.2	2.2	1.8	0.6	100.0 (1003)
가정	43.8	27.0	13.5	6.7	4.5	2.2	2.2	0.0	100.0 (89)
$x^2(df)$					6.124(14)				
지역 구분									
대도시	51.0	26.5	8.3	4.9	4.7	2.2	1.7	0.6	100.0 (804)
중소도시	48.6	23.2	11.3	6.1	5.4	2.8	2.1	0.5	100.0 (426)
읍면	47.7	29.5	15.9	4.5	2.3	0.0	0.0	0.0	100.0 (44)
$x^2(df)$					10.866(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원장 및 교사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서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요구로서 다음이 제시되었다. 즉, 평가인증 관련 컨설팅을 기관의 여건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원장 A), 이때 평가인증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교사 C), 중복서류 등은 간소화(교사 A, 교사 C)하는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원장 A: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과도한 자율성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서식이,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교사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자칫 만점 받은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공유받게 되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니까 공통서식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더라구요. (중략)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평가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 C: 평가제 자체도, 저도 평가제를 1차, 2차 다 계속 거치면서 있는데, 지금 마지막 평가제에 왔는데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는데 평가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지라든지 관찰일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되게 커요. 무조건 일지에 다 남겨야 되고 평가제 교육을 받으면 관찰일지, 무조건, 일지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일지, 관찰일지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디테일하게 쓰면 된다고 보거든요. 일지도 관찰일지처럼 쓰고 관찰일지도 일지처럼 디테일하게 쓰고 그게 두 개가 중복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게 의미가 무의미한 거죠. 일만 과중하게 하는 거고 서류만 늘게 하는 거니까 일지를 굳이 써야 되나, 일지를 정말 하루 일지처럼 체크하고 특이사항을 잘 기록만 하게끔 간단한 일지로 바꾸고 평가인증을 관찰일지에 비중을 둔다든가 아니면 관찰일지를 없애고 관찰일지도 그냥. 둘 중에 하나라도 간소화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 관찰일지랑 일지랑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교사 A: 저희도 의무평가제를 100% 시행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 항상 따라가는 게 서류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을 위해서 저는 좀 필요한 게 원장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평가서식에 맞추고 평가서식을 주시잖아요. 평가서식에 맞추면 된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 원장님들은 각 원들하고 비교를 해서 필요 없는 서류마저도 다 채워넣으려고 하세요.

교사 C: 평가인증하러 나오시는 선생님, 그 분들마다 저희는 지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이 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식단표를 키즈노트도 올리고 운영일지도 쓰고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서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맞지 않고 이거하고 이쪽하도고 맞지 않고 서류가 맞춰야 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중략) 나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그 명확한 기준의 지표가 없다는 거죠. 지표는 나와 있어요. 정확한 지표는 책자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 지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분들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구요.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육아종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러고. 사실은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교육을 신청하고 듣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식, 교수님이라고 무조건 그거에 대한 지식이 100% 있는 건 아니거든요.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2020년 3월 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기본보육(~16시)과 연장보육(오후 4~7시 30분)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보호자는 눈치보지 않고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어린이집은 장시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7시 부터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보복지부, 2020b: 2-5). 또한 해당 개편을 통해 보육교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며, 기본보육 이후에 수업준비 시간 등을 확보하여 보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이른 하원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보육 기간이었던 5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41.9%(49만 8958명)가 1회 이상 연장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20b: 2). 또한 전국 어린이집 중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68.5%로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78.2%, 직장 70.9%, 민간 66.4%, 가정 68.2%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b: 3).

〈표 Ⅲ-2-41〉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현황(2020년 5월말 기준)

단위: 개소, %

어린이집 유형	전체 어린이집 수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	연장반 운영 비율(%)
합계	35,671	24,423	68.5
국공립	4,598	3,595	78.2
사회복지법인	1,325	799	60.3
법인단체등	677	404	59.7
민간	11,872	7,883	66.4
가정	15,867	10,814	68.2
협동	150	90	60.0
직장	1,182	838	70.9

자료: 보건복지부(2020b). 보도자료: 어린이집 99% 안심등하원 자동알리미 설치, 약 3만명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p, 3.

전체 연장보육 전담교사 2만 9187명 중 보조교사 겸임 등을 제외하고 신규 채용된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17,773명이다(보건복지부, 2020b: 3). 이중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했던 교사는 9,068명(51.0%), 최근 2년 내 휴직 후 재취업자는 4,085명(23.0%), 신규 유입 사례(장기 미 종사자, 신규 자격자)는 4,620명(26.0%)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20b: 3). 그런데 이때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채용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연장보육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적 격차가 우려된다.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연장반 중 전담교사가 맡고 있는 비율은 대도시는 70.5%, 중소도시는 68.3%, 농어촌은 62.9%이다(보건복지부, 2020b: 4).

〈표 Ⅲ-2-42〉 지역특성별 연장반 구성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현황(2020년 5월말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연장반	연장보육 전담교사(명)	담임교사 겸임
합계	42,956 (100%)	29,187 (67.9%)	13,769 (32.1%)
대도시	15,140 (100%)	10,678 (70.5%)	4,462 (29.5%)
중소도시	18,727 (100%)	12,793 (68.3%)	5,934 (31.7%)
농어촌	9,089 (100%)	5,716 (62.9%)	3,373 (37.1%)

자료: 보건복지부(2020b). 보도자료: 어린이집 99% 안심등하원 자동알리미 설치, 약 3만명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p, 4.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달성도 인식을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3.3%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장과 교사 응답을 구분하면 원장은 긍정비율 52.6%, 부정비율 20.3%로 긍정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교사는 긍정비율 31.0%, 부정비율 30.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Ⅲ-2-43〉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보육지원체계 개편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1.6	17.4	36.4	19.5	13.7	1.3	29.0	33.3	100.0	(1274)	3.06
원장/교사 구분											
원장	7.5	12.8	26.3	28.6	24.1	0.8	20.3	52.6	100.0	(133)	3.49
교사	12.1	18.0	37.6	18.5	12.5	1.3	30.1	31.0	100.0	(1141)	3.01
$x^2(df)/T$					25.742(4)***						4.3***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9.3	11.0	36.3	23.6	18.1	1.6	20.3	41.8	100.0	(182)	3.31
민간	12.3	18.8	37.7	18.4	11.6	1.2	31.1	30.0	100.0	(1003)	2.98
가정	9.0	14.6	22.5	23.6	29.2	1.1	23.6	52.8	100.0	(89)	3.50
$x^2(df)/F$					37.231(8)***						12.4***
지역 구분											
대도시	10.2	16.9	38.3	19.4	13.9	1.2	27.1	33.3	100.0	(804)	3.10
중소도시	14.1	19.0	32.6	20.0	13.1	1.2	33.1	33.1	100.0	(426)	2.99
읍면	13.6	11.4	38.6	18.2	15.9	2.3	25.0	34.1	100.0	(44)	3.12
$x^2(df)/F$					8.344(8)						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기본반 담임교사의 초과근로 감소'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57.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15.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Ⅲ-2-44〉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연장보육 실시로 기본반 담임교사의 초과근로 감소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비율 (①+②)	긍정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6.8	9.0	25.6	24.1	33.8	0.8	15.8	57.9	100.0	(133)	3.70
원장/교사 구분											
원장	6.8	9.0	25.6	24.1	33.8	0.8	15.8	57.9	100.0	(133)	3.70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5.0	5.0	27.5	30.0	30.0	2.5	10.0	60.0	100.0	(40)	3.77
민간	4.3	17.0	29.8	14.9	34.0	0.0	21.3	48.9	100.0	(47)	3.57
가정	10.9	4.3	19.6	28.3	37.0	0.0	15.2	65.2	100.0	(46)	3.76
$x^2(df)/F$					10.782(8)						0.4
지역 구분											
대도시	8.1	4.8	27.4	24.2	33.9	1.6	12.9	58.1	100.0	(62)	3.72
중소도시	4.7	12.5	21.9	26.6	34.4	0.0	17.2	60.9	100.0	(64)	3.73
읍면	14.3	14.3	42.9	0.0	28.6	0.0	28.6	28.6	100.0	(7)	3.14
$x^2(df)/F$					6.546(8)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초과근로 시간 감소'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5.4%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3.8%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장보육 실시로 인해 초과근로 시간 감소 여부에 대해 원장과 교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2-45〉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연장보육 실시로 초과근로 시간 감소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7.5	16.3	29.4	17.8	17.6	1.4	33.8	35.4	100.0	(1141)	3.02
원장/교사 구분											
교사	17.5	16.3	29.4	17.8	17.6	1.4	33.8	35.4	100.0	(1141)	3.02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9.9	14.1	23.2	28.9	22.5	1.4	23.9	51.4	100.0	(142)	3.41
민간	18.5	16.8	30.1	16.6	16.4	1.5	35.4	33.1	100.0	(956)	2.96
가정	20.9	11.6	32.6	7.0	27.9	0.0	32.6	34.9	100.0	(43)	3.09
$x^2(df)/F$					27.470(8)***						7.2***
지역 구분											
대도시	15.4	16.2	29.4	18.7	19.1	1.2	31.5	37.9	100.0	(742)	3.10
중소도시	20.2	16.6	29.6	17.1	14.6	1.9	36.7	31.8	100.0	(362)	2.89
읍면	35.1	16.2	27.0	5.4	16.2	0.0	51.4	21.6	100.0	(37)	2.51
$x^2(df)/F$					16.400(8)*						5.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근무여건 개선'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7.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3.1%보다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Ⅲ-2-46〉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연장보육 실시로 근무여건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7.3	15.9	28.0	20.8	17.2	1.0	33.1	37.9	100.0	(1141)	3.05
원장/교사 구분											
교사	17.3	15.9	28.0	20.8	17.2	1.0	33.1	37.9	100.0	(1141)	3.05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9.2	9.9	23.9	29.6	26.8	0.7	19.0	56.3	100.0	(142)	3.55
민간	18.4	16.8	29.0	19.5	15.3	1.0	35.3	34.7	100.0	(956)	2.96
가정	18.6	14.0	18.6	20.9	27.9	0.0	32.6	48.8	100.0	(43)	3.26
$x^2(df)/F$					31.089(8)***						13.0***
지역 구분											
대도시	15.4	15.1	29.4	21.7	17.8	0.7	30.5	39.5	100.0	(742)	3.12
중소도시	20.2	18.0	26.2	18.8	15.5	1.4	38.1	34.3	100.0	(362)	2.91
읍면	27.0	10.8	16.2	21.6	21.6	2.7	37.8	43.2	100.0	(37)	3.00
$x^2(df)/F$					12.256(8)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오후 4시 이후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52.6%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21.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Ⅲ-2-47〉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원장): 연장보육 실시로 오후 4시 이후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비율 (①+②)	긍정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9.8	11.3	25.6	24.1	28.6	0.8	21.1	52.6	100.0	(133)	3.51
원장/교사 구분											
원장	9.8	11.3	25.6	24.1	28.6	0.8	21.1	52.6	100.0	(133)	3.51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7.5	12.5	30.0	22.5	25.0	2.5	20.0	47.5	100.0	(40)	3.46
민간	12.8	10.6	34.0	17.0	25.5	0.0	23.4	42.6	100.0	(47)	3.32
가정	8.7	10.9	13.0	32.6	34.8	0.0	19.6	67.4	100.0	(46)	3.74
$x^2(df)/F$					8.519(8)						1.3
지역 구분											
대도시	9.7	11.3	27.4	22.6	27.4	1.6	21.0	50.0	100.0	(62)	3.48
중소도시	9.4	9.4	23.4	28.1	29.7	0.0	18.8	57.8	100.0	(64)	3.59
읍면	14.3	28.6	28.6	0.0	28.6	0.0	42.9	28.6	100.0	(7)	3.00
$x^2(df)/F$					4.636(8)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업무부담 감소'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3.9%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8.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유형별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국공립 및 법인 외는 긍정비율 46.5%, 부정비율 27.5%이고 가정은 긍정비율 44.2%, 부정비율 34.9%로 긍정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은 긍정비율 31.6%, 부정비율 40.4%로 부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48〉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연장보육 실시로 업무 부담 감소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9.3	19.3	26.4	17.7	16.2	1.1	38.6	33.9	100.0	(1141)	2.92
원장/교사 구분											
교사	19.3	19.3	26.4	17.7	16.2	1.1	38.6	33.9	100.0	(1141)	2.92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14.1	13.4	24.6	25.4	21.1	1.4	27.5	46.5	100.0	(142)	3.26
민간	20.2	20.2	26.9	16.5	15.1	1.2	40.4	31.6	100.0	(956)	2.86
가정	16.3	18.6	20.9	18.6	25.6	0.0	34.9	44.2	100.0	(43)	3.19
$x^2(df)/F$					16.990(8)*						6.5**
지역 구분											
대도시	16.2	18.2	29.0	18.7	16.8	1.1	34.4	35.6	100.0	(742)	3.02
중소도시	23.8	22.4	22.4	15.2	14.9	1.4	46.1	30.1	100.0	(362)	2.75
읍면	37.8	10.8	13.5	21.6	16.2	0.0	48.6	37.8	100.0	(37)	2.68
$x^2(df)/F$					26.637(8)***						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보육준비 시간 증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이 32.6%로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 33.8%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유형별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국공립 및 법인 외는 긍정비율 45.8%, 부정비율 20.4%로 긍정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고, 가정은 긍정비율 37.2%, 부정비율 34.9%로 긍정비율과 부정비율이 비슷한 반면, 민간은 긍정비율 30.4%, 부정비율 35.8%로 부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49〉 보육 세부 정책 수행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교사): 연장보육 실시로 보육준비 시간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6.7	17.2	32.6	19.1	13.5	1.0	33.8	32.6	100.0	(1141)	2.96
원장/교사 구분											
교사	16.7	17.2	32.6	19.1	13.5	1.0	33.8	32.6	100.0	(1141)	2.96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7.7	12.7	32.4	27.5	18.3	1.4	20.4	45.8	100.0	(142)	3.36
민간	18.0	17.8	32.8	18.3	12.1	0.9	35.8	30.4	100.0	(956)	2.89
가정	16.3	18.6	27.9	9.3	27.9	0.0	34.9	37.2	100.0	(43)	3.14
$x^2(df)/F$					28.059(8)***						9.4***
지역 구분											
대도시	13.7	17.4	34.4	19.4	14.6	0.5	31.1	34.0	100.0	(742)	3.04
중소도시	21.0	16.9	30.7	18.5	11.0	1.9	37.8	29.6	100.0	(362)	2.81
읍면	32.4	16.2	16.2	18.9	16.2	0.0	48.6	35.1	100.0	(37)	2.70
$x^2(df)/F$					20.059(8)*						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운영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질문한 결과 '기본반 아동의 하원 시각을 오후 4시로 명시해야 함'이 3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원활하도록 정부에서 인력풀을 제공해야 함' 22.4%, '연장반 전담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등)' 13.7%, '연장보육료가 오후 4시(현재 오후 5시)부터 산정되어야 함'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50〉 연장보육 운영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기본반 아동의 하원 시간을 오후 4시로 명시해야 함	연장반 전담 교사 채용이 원활하도록 정부에서 인력풀을 제공해야 함	연장반 전담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 (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등)	연장보육료가 오후 4시 (현재 오후 5시) 부터 산정되어야 함	연장반의 교사대 아동 비율이 개선되어야 함	연장반에 전담 교사 외에 보조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연장반 교사의 근무 시간 유연제를 시행하여야 함	연장보육 운영 지침이 구체화되어야 함	연장반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기타	계(수)	
전체	32.8	22.4	13.7	13.5	6.0	4.6	2.7	2.4	1.4	0.4	100.0	(1274)
원장/교사 구분												
원장	26.3	21.1	6.0	28.6	2.3	4.5	6.0	3.0	0.8	1.5	100.0	(133)
교사	33.6	22.6	14.6	11.7	6.4	4.6	2.4	2.4	1.5	0.3	100.0	(1141)
$x^2(df)$						47.998(9)***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36.3	18.7	14.3	15.4	5.5	4.4	2.7	1.1	0.5	1.1	100.0	(182)
민간	32.5	23.1	13.7	12.1	6.5	5.0	2.5	2.8	1.6	0.3	100.0	(1003)
가정	29.2	22.5	13.5	25.8	1.1	0.0	5.6	1.1	1.1	0.0	100.0	(89)
$x^2(df)$						32.518(18)*						
지역 구분												
대도시	35.3	19.8	13.8	12.9	5.2	5.1	3.2	2.4	1.7	0.5	100.0	(804)
중소도시	28.9	25.6	14.1	14.8	7.7	3.5	1.9	2.6	0.7	0.2	100.0	(426)
읍면	25.0	40.9	9.1	11.4	2.3	4.5	2.3	2.3	2.3	0.0	100.0	(44)
$x^2(df)$						27.602(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개선효과로서 부모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되었고(원장 B, 원장 C),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수업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후 통합보육으로 인한 초과근로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원장 B) 등을 언급하여 제도 개편에 따른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장 B: 예년에는 영아반에 대해서 그리고 좀 늦게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영아반 부모님들이 좀 계셨다면 지금은 적응 기간 이후에는 연장반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상담하며 입학하는 친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2,30% 정도는 증가했어요

원장 C: 부모님들도 사실은 부담 없이 굉장히 옛날에는 늦게 혼자만 아이가 남아있다 그러면 얘만 하나 남아 있어요 어떡해요, 그래도 되게 어머니 괜찮아요 얘기를 해도 부모님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귀가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편안하게 어린이집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원장 B: 영아반인 경우에는. 그리고 연장반의 가장 큰 효과는 저희는 일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정담임 선생님들이 보육을 준비하고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실에서 정담임 선생님들이 휴식시간의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연장반이 운영이 되어지면서 휴게시간도 반반 나누어 운영하기가 수월한 부분도 큰 장점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장 A: 연장보육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는 4시 이후에 당직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 시간 동안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나도 좋은 제도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선과제로는 연장반 전담교사의 구인의 어려움이 강조된다. 원장과 교사 모두에서 연장반 교사의 채용이 어려워서 연장반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는 앞서 언급한 기존의 오후통합보육을 지속해야 하므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연장반 교사를 개별 어린이집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인력풀을 제공하여 원활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 정보에는 연장반을 희망하는 교사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연장반 교사 구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원장 B: 연장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연장반 교사 구인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연장반 인건비 지원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두 세 달 동안 연장반 전담 교사 구인이 안되는 상황이었구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본반 원아 하원 시간이 4시까지인데 사실 어머님들이 5시까지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원 시간이 지연되고 정담임 교사의 하원까지 업무량이 좀 과중되는 상황이 좀 있구요. 그리고 기본반 연장보육료는 또 연장반이 운영되는 4시서부터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5시부터 지금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교사C: (연장반 교사) 구인이 되도 저희가 지금 연장반이 실질적으로 4시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4시부터 운영인데 연장반 결제는 5시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4시부

터 5시 그 유예시간을 왜 주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은 100% 이용해서 4시 50분, 4시 59분에 데리러 가, 5시 그 시간을 딱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과 중 제일 바쁜 시간이 그 시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원장 C: 교사 구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어린이집 원장, 원 운영의 입장에서 아 이렇게 인력을 구할 때도 좀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적정 연령대고 있을 거고 이런데 이런 거, 이런 거 상관 없이 무조건 이력서가 들어오면 그 분을 뽑아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 같은 경우도 나이대가 거의 59, 60이셨는데 그분을 어쩔 수 없이 뽑았어요. 그런데 일단 한 달을 하시더니 그만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략) 그런데 정말 고를 겨를도 없이 아예 이력서조차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

원장 C: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장반 선생님을 구인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선생님들이 휴게시간이라든이 아니면 오후에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장시간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케이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 선생님이 빨리 구인이 되었으면 하는 굉장히 바램인데 이 또한 어린이집에다가만 구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인프라를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해서 교사들을 구인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오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면서 오후 저녁에 혼자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면서 조금 더 저희 원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장 B: 인력뱅크는 기본적으로 늘 육종에 이렇게 팁으로 있었던 거였는데 저희가 구인광고를 올릴 때 사실 연장반 교사가 구직을 하는, 연장반 교사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다 근본적으로 연장반 교사의 공급은 곧 연장반 교사의 처우와 직결되므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우개선 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원장 A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기본반 담임교사에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반 교사에는 지급되지 않는 등 동등한 담임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는 개선을 모색하여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원장 A: 오후 연장반에 대해서 효과성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담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후 연장반 교사는 보조선생님이 아니시잖아요. 담임이시고 담임수당을 받으시는데 그 금액이 물론 근무하는 시간대에 비하면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담임 교사의 처우가 조금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처우 개선비도 일반 교사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또 저희 지역이 농어촌이다 보니 농어촌 수당들

을 담임교사들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선생님들은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니까 조금 그런 게 담임으로서에 대한 처우가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오후 연장반에 대한 근무 선호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C: 그냥 일단 다른 보조 선생님이랑 시간이 다 같은데 거의 담임 형태로 잠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중이, 그 업무 뭐라고 해야 되지, 부담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부담감이 너무 높아서, 부담감 높은 대신 조건도 그닥 좋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 같아요. 구인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기본반의 하원시각이 오후 4시가 준수되어야 연장보육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원장 A는 오후 4시부터 연장보육료가 책정되는 오후 5시 사이에 보육에 혼선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반 이용아동이 오후 4시에 맞추어 하원할 수 있도록 부모 인식 제고와 더불어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 C도 마찬가지로 오후 4시에 기본반 아동이 하원하지 않고 이후 시간까지 머물게 될 경우에는 연장반에 기본반 담임교사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되어 근로시간 측면에서 개선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의 책정 기준을 오후 4시로 당기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기본반 아동의 하원시각 준수와 별개로 연장반 이용아동의 하원시각이 당겨지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장 A: 하원을 4시고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본반 친구들은 4시부터 5시까지 하원시간입니다 하지 말고 4시로 딱 규정을 해 줘야 깔끔하게 기본반 친구들은 4시에 가고 반 편성이 가능한데 4시부터 5시까지가 굉장히 애매한 시간인 거예요. 갈 건데 그 반에 들어가게 되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조금 넘치게 된다거나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또 아니면 그 기본반을 봐야 되는 일반 담임선생님의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면 기본반 아이들은 4시에 꼭 갈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장반 아이들은 4시부터 이용을 하는데 5시부터 연장보육료가 적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4시로 적용을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한 현행 연장반 구성 기준의 적절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된다. 연장반에는 기본보육과는 달리 보조교사의 투입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특히 연장반이 1개반에 불과한 경우에는 한명의 연장반 교사가 아동을 보육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도 있으므로 아동안전 등 서비스 질의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시간대의 인력 상황을 검토하여 개선책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교사C: 연장반 반 구성도 영아들은 5명이 기준이기는 한데 0세가 끼면, 0세가 2명 이상 들어가면 3명이 1반이기는 하나 0세가 1명만 끼면 1명은 5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0세가 끼어 버리면 0세를 전담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니까 0세랑 1,2세랑 기본보육이, 보육할 때 섞이지 말라고 일단 공지는 줬는데 연장반은 괜찮다 그 자체도 모순이구요. 저희는 그래서 0세가 일단 끼어 있는데, 0세가 연장보육반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늘 연장보육시간에 있어서 늘 교사가 한 명이 더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처럼 이렇게 없다가 생기고 없다가 생기고 이런 식이니까 아이들이 낯갈이를 너무 많이 해서 연장보육 선생님한테 전담으로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예요. 그래서 늘 담임 선생님이 붙어 있던가

연장반 운영에 따른 비용 관련해서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연장보육료가 편성되지 못해서 수요에 맞게 연장반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원장 A, 원장 C), 원장 C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연장반 교사의 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등 추가운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지원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원장 A: 작년보다는 예산이 저희도 조금은 더 확보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서는 교사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작년에 지원해 주지 못한 어린이집 순서대로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해 주셨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교사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저희는 사실 네 명을 지원받아야 되는 어린이집인데 한 명을 정말 사정사정해서 한 명 꼭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은 느끼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조금은 여유있게 지원이 된 부분은 느끼고 있으나 충분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 C: 연장보육교사에게 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30%를 지원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30%가 아닌, 연장보육교사 사용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100%를 같이, 인건비랑 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연장보육교사나 뒤에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가 나오지만 이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일부 어린이집 운영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4대 보험,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원에서 부담하는 그 부담 비용이 굉장히 부담돼서 그 분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경우를 봤거든요.

원장 A: 지금 오후 연장반 선생님 3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예요. 시간연장 선생님 투입까지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만약에 오후 연장반 교사를 채용하게 될 때 백프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뭔가 매년 너희 어린이집에서는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하냐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런 수요조사와는 별개로 각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서 교사의 편성이나 교사의 채용이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채용을 하게 되면 지원이 또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연장반이 실수요자 위주로 구성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건이므로 연장반 신청자격을 면밀하게 적용하는 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A: (시범사업 때 와는 달리) 지금은 (기본반 하원시각은)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모습인데 하나 단지 좀 저희가 올해부터는 유아반 같은 경우는 연장반이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연장반 신청을 하는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기본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교사A: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아니어도 사실은 그냥 좀 오랜 기간 어린이집에서 머무르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더 어린이집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깊이 박혀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시원한 곳에서 더 놀다 와라,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더 놀다 와라, 집에서는 요즘 부모님들이 키즈카페도 못 데리고 가시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더 그러신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연장반 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연장보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사A: 연장반 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채용이 되시거나 초임, 그리고 정년 연령 이후대 교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요즘 보육의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거나 귀가시간 부모님들과의 적절하지 못한 귀가방식, 그리고 옛날방식대로 막 얘가 뭐했어요, 조금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있어서 저희 조금 소통의 문제, 담임 선생님들은 귀가하는 거는 기본반 친구들이고 연장반 선생님은 연장반 친구들을 귀가를 시키는데 부모님은 그 연장반 선생님이 오후에 하신 말씀을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교사가 매일 매일 부모님께 전달을 드려서 안내를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조금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B: 아침에 등원할 때 좀 불만을 표시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연장반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를 케어해 주는지도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고 부탁을 드리지만 그게 정확치도 않구요 (중략) (부모님이) 아침에 등원할 때 좀 불만을 표시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연장반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를 케어해 주는지도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고 부탁을 드리지만 그게 정확치도 않구요. 저희가 연장반 선생님들 덕분에 당직근무를 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놓고 연장반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런 게 좀 저희 교사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제 보육 사업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시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 3). 시간제 보육 사업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 3).시간제 보육의 지원 시간은 월 80시간이고, 보육료 이용 단가는 시간당 4천원(정부지원 3천원, 부모부담 1천원)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 13).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은 보육반 수를 기준으로 2015년 237개, 2016년 382개, 2017년 437개, 2018년 443개, 2019년 490개, 2020년 681개, 2021년 3월 70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현황,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4.do, 2021년 11월 3일 인출). 2020년 보육통계의 연도별 어린이집 개소수(보건복지부, 2021h: 2)와 위의 시간제 보육 현황에 기반하여, 어린이집 개소수 대 시간제 보육반 수를 보면, 2015년 0.67%(어린이집 개소수 42,517)에서 2020년 1.6%(어린이집 개소수 35,33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개소수에 비해 시간제 보육반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9)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가) 연도별 초등돌봄 이용자 확충

온종일돌봄체계 중 학교돌봄인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자 수는 2018년 261,287명, 2019년 290,358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은 256, 213명으로 감소하였는데, 2020년 이용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정된다(교육부, 2021b: 1).

초등돌봄교실 수는 2018년 12,398실, 2019년 13,910실, 2020년 14,278실로 증가하였다(교육부, 2021b: 1).

2020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256,213명으로 학년별로 구분하면, 1학년 120,795명(47.2%), 2학년 99,405명(38.8%), 3학년 18,354명(7.2%), 4학년 8,798명(3.4%), 5학년 4,771명(1.8%), 6학년 4,090명(1.6%)로(교육부, 2021b: 5) 1·2학년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시간대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오후돌봄교실(방과후~17:00) 참여 학생 수는 256,213명이고, 오후연장형 및 저녁돌봄(17:00~22:00) 참여 학생 수는 4,205명으로(교육부, 2021b: 7), 17시 이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는 17시 이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의 1.64%에 불과하다. 이는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의 98% 이상이 17시 이전에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실당 인원도 17시 이전은 실당 17.9명이지만, 17시 이후는 실당 2.7명에 불과하다(교육부, 2021b: 7). 교실 수 기준으로도 17시 이전 운영 교실 수는 14,278교실이나, 17시 이후 운영 교실 수는 1,581교실로 전체 돌봄교실의 88.9%가 17시 이전 운영 교실이고, 17시 이후 운영 교실 수는 11.1%에 불과하다(교육부, 2021b: 6).

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돌봄 필요 인원은 47.4만명(전체 응답자 중 45.2%)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b: 2).

〈표 Ⅲ-2-51〉 초등돌봄 서비스 필요 인원(2020년 11월 기준, 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구분	신입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계
전체 응답인원(명)	136,050	214,600	215,962	183,173	162,376	137,446	1,049,607
돌봄 필요 응답인원(명)	95,972	123,225	112,546	72,220	44,336	26,260	474,559
비율(%)	70.5	57.4	52.1	39.4	27.3	19.1	45.2

자료: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p.2.

같은 조사에서 초등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은 오후 1~5시가 66.3%로 가장 높았으나, 오후 5~7시도 17.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2021b: 2).

〈표 Ⅲ-2-52〉 초등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구분	수업 시간 전	오후 1~5시	오후 5~7시	오후 7시 이후	비고
응답자수(명)	88,614	427,375	113,541	14,868	중복답변 가능
비율(%)	13.8	66.3	17.6	2.3	

자료: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p.2.

같은 조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시간 확대 시 희망시간을 조사한 결과 17~18시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2021b: 3).

〈표 Ⅲ-2-53〉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 있는 학부모] 운영 시간 확대 시 희망시간

구분	수업 시작 전	17~18시	18~19시	19시 이후	계
응답 비율(%)	21.3	64.7	11.9	2.1	100

자료: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p.3.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에 관한 학부모 요구조사 결과(2021년 1월 기준).

같은 조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돌봄에 참여한다면 원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교후 15시까지가 29.4%로 가장 높았고, 하교후 17시까지가 22.9%로 그 뒤를 이었다(교육부, 2021b: 3).

〈표 Ⅲ-2-54〉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 없는 학부모] 자녀가 돌봄에 참여한다면 원하는 시간

구분	수업 시작 전	하교후 -15시	하교후 -16시	하교후 -17시	하교후 -18시	하교후 -19시	하교후 -19시 이후	계
응답 비율(%)	4.8	29.4	18.7	22.9	13.6	7.2	3.4	100

자료: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p.3.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에 관한 학부모 요구조사 결과(2021년 1월 기준).

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휘(2019)의 조사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한 결과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이 3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31.6%,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휘, 2019: 173; 교육부, 2021b: 3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학교 내 돌봄 개선요구가 전체 학부모의 80.2%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2-55〉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순위	내용	응답 비율(%)
1순위	학교 내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질 개선	32.3%
2순위	학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31.6%
3순위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교실 수 확대	16.3%
4순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 기관 확대	8.6%
5순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및 다양화	4.3%

자료: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p.3.
출처: 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휘(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73.

나) 온종일돌봄체계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온종돌봄체계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이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에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다.

초등돌봄교실 뿐 아니라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돌봄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수적이다(장명림 외, 2020: 73). 장명림 외(2020)에서는 현장 지자체 돌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관련 근거법 부재가 지적되었는데, 근거법이 없을 시 지자체 내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등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장명림 외, 2020: 73).

다) 초등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2020년 9월 기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 8시간 전일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는 전체의 16.0%에 불과하다(교육부, 2021b: 7). 다시 말해서 전체 초등돌봄전담사는 84%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일 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돌봄전담사는 전체의 56.4%로 과반수의 돌봄전담사가

일 6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다(교육부, 2021b: 7). 일 근무시간이 6시간 미만인 돌봄전담사가 과반수인 관계로 17시 이후 돌봄 수요를 초등돌봄교실에서 반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교육부, 2021b: 7).

〈표 Ⅲ-2-56〉 초등돌봄전담사 주당 근무시간 현황(2020년 9월 기준)

구분	주20시간 미만	주20~25시간 미만	주25~30시간 미만	주30~35시간 미만	주35~40시간 미만	주40시간	계
	일4시간 미만	일4~5시간 미만	일5~6시간 미만	일6~7시간 미만	일7~8시간 미만	일8시간	
인원(명)	224	4,145	2,362	2,980	297	1,910	11,918
비율(%)	1.9	34.7	19.8	25.1	2.5	16.0	100

자료: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p.7.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내 관련 행정업무 사용시간을 보면 주당 3~5시간 미만 34.1%, 주당 5시간 이상 25.3%로, 주당 3시간 이상이 59.4%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b: 8).

〈표 Ⅲ-2-57〉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내 관련 행정업무 사용시간

업무 소요 시간 / 해당 응답	주당 3시간 미만	주당 3~5시간 미만	주당 5시간 이상	기타	계
	일 30분 미만	일 30분~1시간 미만	일 1시간 이상		
응답 비율(%)	35.9	34.1	25.3	4.7	100

자료: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p.8.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담당에 관한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인식차를 보면 교사의 경우는 담당교사가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응답이 87.1%인 반면, 돌봄전담사의 경우는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나(교육부, 2021b: 9) 인식 차가 상당한 것을 보여준다.

〈표 Ⅲ-2-58〉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담당에 관한 교사-돌봄전담사 간의 인식차

구분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담당				계
		담당교사	돌봄전담사	같이	별도 인력	
교사 인식	명	17,237	1,301	1,194	61	19,793
	%	87.1	6.6	6.0	0.3	100
돌봄 전담사 인식	명	1,464	2,636	1,837	10	5,947
	%	24.6	44.3	30.9	0.2	100

자료: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p.9.

1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정부 지원 비율을 2021년에 일반가정 기준으로 시간제 나형 취학전은 55%에서 60%로, 영아종일제 가형은 80%에서 85%로, 질병감염아동 나형(취학전)은 55%에서 60%로 상향하였다(여성가족부, 2021d: 1).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 기준으로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21d: 1).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은 85%에서 90%로, 취학 시간제는 75%에서 80%로 상향)까지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a: 2).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5%p 상향함으로써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향은 85%에서 90%로, 취학 시간제는 75%에서 80%로 상향)까지 2021년 9월부터 상향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1e: 1).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정부지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이용가구 수는 2016년 61,221가구에서 2019년 70,485가구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59,663가구로 감소하였다. 2020년의 이용가구 수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가정 방문을 꺼리는 경향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시간제에 비해 종일제 이용은 2016년 5,263가구에서 2020년 3,138가구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고,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은 2016년 86.1시간에서 2020년 93.9시간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가구 수는 감소하였으나,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Ⅲ-2-5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연도	이용가구 계	시간제	종일제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
2016	61,221	55,998	5,263	86.1
2017	63,546	58,489	5,057	86.9
2018	64,591	60,053	4,538	88.5
2019	70,485	66,783	3,702	85.2
2020	59,663	56,525	3,138	93.9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2&MENU_SITE_ID=FRONT&SEQ=16, 2021년 11월 3일 인출

다)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2020년 5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제6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6조의2),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강화(제7조제2항), 건강진단(제10조의2)이 도입되었고,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제32조) 및 자격취소(제33조) 규정이 강화되었다.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율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2020년 11월 13일 기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29개 시군구 중 70개 시군구에 배치되었고, 202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229개 시군구 중 169개에 배치되었다. 2021년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 배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 기준 539명(81.2%)이 배치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a: 2).

나)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0년 76개소, 2021년 105개소, 2022년 140개소, 2025년 240개소 목표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a: 23).

다) 아동학대 대응 예산 안정성

2021년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복지부, 2021f: 11).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021년 87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1년 275억원) 예산이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되며, 2022년 정부 예산안부터 적용된다(보건복지부, 2021f: 11).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12) 소결

가)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달성도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연수 및 컨설팅', '누리과정 시범운영 및 자료 공유', '홍보자료(학부모 지원자료 등) 개발 및 보급', '누리과정 포털 및 운영' 등 관련 정책 모두에서 부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이 54.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놀이중심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만 3세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연령이 낮은 만3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실제 취원율은 2021년 4월 기준 아직 취원율 40%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91). 그러나 현재 저출산 추세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은 목표대로 달성하고 있으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5), 공보육 이용률은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의 공보육 이용률이 46% 이상으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이외의 시도는 25%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5). 공보육 이용률은 지자체의 정책 및 재정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공보육 이용률 확충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0년 3월에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된 에듀파인(교육부, 2020c: 1)에 기준으로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달성도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에듀파인 전담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이 75.6%로 나타나 에듀파인 전담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함을 보여준다.

라)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이 어린이집 재정여건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2020년 및 2021년의 누리과정 지원단가 상향조정 정도는 어린이집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은 51.9%로 긍정비율 16.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에서도 부정비율은 54.%로 긍정비율 1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함', '유아 담당교사의 양성과정(자격)을 일원화해야 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격차 완화는 교사 자격 및 처우, 시설 기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바)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이 43.2%로 긍정비율 2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원장과 교사를 구분한 응답을 보면 원장은 긍정비율이 31.6%로 부정비율 26.3%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는 긍정비율이 21.8%로 부정비율 45.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보다 교사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76.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을 응답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만 0세가 36.0%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만0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함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 전념',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이 긍정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의 효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보다 교사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의 달성도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이 37.2%로 부정비율 18.1%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긍정비율이 높았으나, 어린이집 교사는 부정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함',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함(평가지표 내용 간소화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달성도 인식을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이 33.3%로 부정비율 29.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원장과 교사 응답을 구분하면 원장은 긍정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교사는 긍정비율과 부정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효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보다 교사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기본반 담임교사의 초과근로 감소', '연장보육 실시로 오후 4시 이후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실시로 초과근로 시간 감소', '연장보육 실시로 근무여건 개선', '연장보육 실시로 업무부담 감소', '연장보육 실시로 보육준비 시간 증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이 긍정비율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효과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직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운영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질문한 결과 '기본반 아동의 하원 시각을 오후 4시로 명시해야 함'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원활하도록 정부에서 인력풀을 제공해야 함', '연장반 전담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등)', '연장보육료가 오후 4시(현재 오후 5시)부터 산정되어야 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반의 운영 시간이 오후 4시까지이지만 연장반 보육료 지급 기준은 오후 5시부터인 점에 대해 어린이집 현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부문별 성과 평가

1) 부모의 정책 이용률, 만족도 및 효과성 인식

가) 부모의 정책 이용률 및 만족도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7.6%가 어린이집을 이용해 본 것으로 응답하여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 다음은 유치원 43.3% 이었다. 아이돌보미와 시간제보육은 각각 20.4%, 11.4%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각 서비스별 이용률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표 Ⅲ-2-60〉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0년/2021년 조사)

단위: %(명)

구분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을		
	이용률	계(수)		이용률	계(수)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18.8	100.0	(1,731)	20.4	100.0	(2000)
2. 어린이집 이용	78.7	100.0	(1,731)	77.6	100.0	(2000)
3. 유치원 이용	41.4	100.0	(1,731)	43.3	100.0	(2000)
4. 시간제보육	20.2	100.0	(1,731)	11.4	100.0	(2000)

주: 각 서비스 이용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50.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의 이용률을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은 남녀별로 비슷하였다. 아이돌보미는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시간제보육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첫째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이용은 유아부모, 유치원과 아이돌보미는 초등부모, 시간제보육은 유아부모에서 가장 높았다.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보다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모든 서비스에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대도시에서 아이돌보미 이용률이 다소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치원 이용률, 아이돌보미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은 소득수준별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표 Ⅲ-2-61〉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 보육	계(수)	
전체	20.4	77.6	43.3	11.4	100.0	(2000)
성별						
남성	23.3	78.3	45.6	9.7	100.0	(1205)
여성	16.0	76.5	39.6	13.8	100.0	(795)
$x^2(df)$	15.912***(1)	0.871(1)	7.074**(1)	8.108**(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9.7	66.1	2.2	5.9	100.0	(590)
유아부모	18.0	89.7	58.2	15.2	100.0	(677)
초등부모	23.2	75.6	62.5	12.1	100.0	(733)

구분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시간제 보육	계(수)	
$x^2(df)$	6.078*(2)	103.079***(2)	577.100***(2)	27.71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7	82.1	44.3	13.4	100.0	(998)
외벌이	15.9	72.4	42.5	7.9	100.0	(888)
해당없음	17.5	78.1	40.4	20.2	100.0	(114)
$x^2(df)$	23.380***(2)	25.175***(2)	1.058(2)	23.712***(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0.8	73.0	37.1	15.1	100.0	(159)
251-350만원	13.0	71.9	36.4	5.3	100.0	(338)
351-500만원	19.5	77.9	45.5	10.8	100.0	(611)
501-600만원	20.4	76.8	42.1	9.9	100.0	(323)
601만원 이상	25.7	82.2	47.3	15.3	100.0	(569)
$x^2(df)$	21.369***(4)	15.512**(4)	14.113**(4)	24.037***(4)		
지역구분						
대도시	23.4	76.5	44.6	11.8	100.0	(817)
중소도시	17.7	78.2	42.5	11.2	100.0	(922)
읍면	20.7	78.5	41.8	10.7	100.0	(261)
$x^2(df)$	8.680*(2)	0.890(2)	1.003(2)	0.260(2)		

주: 각 서비스 이용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함. 차이검증은 각 서비스별 이용/미이용 간 차이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교육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긍정 응답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이 76.0%, 유치원 이용이 74.1%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이돌보미와 시간제보육은 각각 55.4%, 55.1%로 5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만족도 경향성은 비슷하였다.

〈표 Ⅲ-2-62〉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만족도(2020년/2021년 조사)

단위: %(명), 점

구분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52.0	3.4	100.0	(325)	55.4	3.6	100.0	(408)
2. 어린이집 이용	71.9	3.9	100.0	(1,362)	76.0	3.9	100.0	(1551)
3. 유치원 이용	69.6	3.8	100.0	(716)	74.1	3.9	100.0	(865)
4. 시간제 보육	54.4	3.5	100.0	(349)	55.1	3.6	100.0	(227)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53.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시간제보육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에서는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치원은 비용이 부담되어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0.4%로 다른 서비스 불만 사유에 비해 높았으며, 시간제보육은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0.0%로 가장 높은 불만족 이유로 나타났다.

〈표 Ⅲ-2-63〉 영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1.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37.8	10.8	8.1	5.4	13.5	8.1	13.5	2.7	100.0	(37)
5. 어린이집 이용	40.8	2.6	3.9	10.5	14.5	5.3	10.5	11.8	100.0	(76)
6. 유치원 이용	24.5	4.1	10.2	8.2	20.4	8.2	12.2	12.2	100.0	(49)
7. 시간제보육	12.0	16.0	8.0	16.0	16.0	4.0	20.0	8.0	100.0	(25)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37.6%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용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영아와 유아부모는 이용 비율이 40%대로 비슷하였다. 맞벌이가 이용하는 비율이 외벌이보다 1.5배 더 많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이 이용하는 경유가 30%후반으로 비슷하였다.

〈표 Ⅲ-2-64〉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37.6		62.4	100.0	(1,551)
성별					
남성	32.2		67.8	100.0	(943)
여성	45.9		54.1	100.0	(608)
$x^2(df)$		29.362***(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42.8		57.2	100.0	(390)
유아부모	42.0		58.0	100.0	(607)
초등부모	29.1		70.9	100.0	(554)
$x^2(df)$		26.78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5		52.5	100.0	(819)
외벌이	24.6		75.4	100.0	(643)
해당없음	40.4		59.6	100.0	(89)
$x^2(df)$		81.022***(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4.5		65.5	100.0	(116)
251~350만원	30.0		70.0	100.0	(243)
351~500만원	34.9		65.1	100.0	(476)
501~600만원	40.7		59.3	100.0	(248)
601만원 이상	43.4		56.6	100.0	(468)
$x^2(df)$		15.595***(4)			
지역구분					
대도시	36.3		63.7	100.0	(625)
중소도시	39.3		60.7	100.0	(721)
읍면	35.6		64.4	100.0	(205)
$x^2(df)$		1.62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 비율은 64.7%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보통이 26.2%, 불만족은 9.1%로 낮은 편이었다. 5점 척도로 환산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7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부특징에 큰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Ⅲ-2-65〉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	불만족	보통	계(수)	평균
전체	64.7	9.1	26.2	100.0 (583)	3. 7
성별					
남성	65.1	8.2	26.6	100.0 (304)	3.7
여성	64.2	10.0	25.8	100.0 (279)	3.7
$x^2(df)/t$		na			0.09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66.5	10.8	22.8	100.0 (167)	3.7
유아부모	64.7	9.0	26.3	100.0 (255)	3.7
초등부모	62.7	7.5	29.8	100.0 (161)	3.7
$x^2(df)/F$		5.628(8)			0.15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4	7.5	25.2	100.0 (389)	3.8
외벌이	58.2	13.3	28.5	100.0 (158)	3.5
해당없음	63.9	8.3	27.8	100.0 (36)	3.8
$x^2(df)/F$		14.450(8)			5.40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7.5	12.5	30.0	100.0 (40)	3.6
251~350만원	63.0	11.0	26.0	100.0 (73)	3.6
351~500만원	59.6	9.0	31.3	100.0 (166)	3.7
501~600만원	69.3	11.9	18.8	100.0 (101)	3.7
601만원 이상	68.5	6.4	25.1	100.0 (203)	3.8
$x^2(df)/F$		na			0.832
지역구분					
대도시	64.3	12.3	23.3	100.0 (227)	3.7
중소도시	64.7	7.8	27.6	100.0 (283)	3.7
읍면	65.8	4.1	30.1	100.0 (73)	3.8
$x^2(df)/F$		7.498(8)			0.894

주: 1)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 불만족비율은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2) 차이검증은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매우불만족~매우만족)평균에 따른 차이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377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85.7%로 높았다. 그 다음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가 10.9%, '비용 부담이 낮아지므로'가 3.4%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부특성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비용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영아부모보다는 유아나 초등부모가, 중소도시나 읍면보다는 대도시에서 만족하는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2-66〉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비용 부담이 낮아지므로	계(수)	
전체	85.7	10.9	3.4	100.0	(377)
성별					
남성	85.4	11.6	3.0	100.0	(198)
여성	86.0	10.1	3.9	100.0	(179)
$x^2(df)$		0.427(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89.2	9.9	0.9	100.0	(111)
유아부모	82.4	13.9	3.6	100.0	(165)
초등부모	87.1	6.9	5.9	100.0	(101)
$x^2(df)$		7.27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85.9	10.7	3.4	100.0	(262)
외벌이	83.7	12.0	4.3	100.0	(92)
해당없음	91.3	8.7	0.0	100.0	(23)
$x^2(df)$		1.345(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87.0	13.0	0.0	100.0	(23)
251~350만원	84.8	10.9	4.3	100.0	(46)
351~500만원	85.9	12.1	2.0	100.0	(99)
501~600만원	87.1	10.0	2.9	100.0	(70)
601만원 이상	84.9	10.1	5.0	100.0	(139)
$x^2(df)/F$		2.983(8)			
지역구분					
대도시	82.9	13.0	4.1	100.0	(146)
중소도시	88.5	7.7	3.8	100.0	(183)
읍면	83.3	16.7	0.0	100.0	(48)
$x^2(df)$		6.098(4)			

주: 보육시간 개편에 만족(만족+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377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기 어려워서' 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므로'가 34.0%, '비용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 18.9% 순이었다. 세부특징별로 살펴보면,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기 어려워서'라는 이유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영유아 부모보다는 초등부모, 도시보다는 읍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아나 초등부모보다는 영아부모가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비용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영아나 초등부모보다는 유아부모가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Ⅲ-2-67〉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기 어려워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므로	비용 부담이 높아지므로	기타	계(수)	
전체	41.5	34.0	18.9	5.7	100.0	(53)
성별						
남성	44.0	40.0	16.0	0.0	100.0	(25)
여성	39.3	28.6	21.4	10.7	100.0	(28)
$x^2(df)$			3.464(3)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33.3	44.4	16.7	5.6	100.0	(18)
유아부모	43.5	30.4	21.7	4.3	100.0	(23)
초등부모	50.0	25.0	16.7	8.3	100.0	(12)
$x^2(df)$			1.87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4	31.0	20.7	6.9	100.0	(29)
외벌이	47.6	33.3	14.3	4.8	100.0	(21)
해당없음	0.0	66.7	33.3	0.0	100.0	(3)
$x^2(df)$			3.350(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0.0	20.0	40.0	0.0	100.0	(5)
251~350만원	25.0	62.5	0.0	12.5	100.0	(8)
351~500만원	60.0	26.7	13.3	0.0	100.0	(15)
501~600만원	50.0	33.3	8.3	8.3	100.0	(12)
601만원 이상	23.1	30.8	38.5	7.7	100.0	(13)
$x^2(df)$			13.844(12)			

구분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기 어려워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므로	비용 부담이 높아지므로	기타	계(수)	
지역구분						
대도시	35.7	35.7	25.0	3.6	100.0	(28)
중소도시	45.5	36.4	9.1	9.1	100.0	(22)
읍면	66.7	0.0	33.3	0.0	100.0	(3)
$x^2(df)$			4.696(6)			

주: 보육시간 개편에 불만족(약간 불만족+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53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이용률이 6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이 42.6%, 지역아동센터 6.3%, 다함께돌봄센터가 3.7% 순이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각각 2.3%p, 6.9%p, 0.7%p 감소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은 2.6%p 증가하였다.

〈표 Ⅲ-2-68〉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2020년/2021년 조사)

단위: %(명)

구분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이용률	계(수)		이용률	계(수)	
1. 초등돌봄교실	44.9	100.0	(554)	42.6	100.0	(733)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69.9	100.0	(554)	63.0	100.0	(733)
3. 지역아동센터	7.0	100.0	(554)	6.3	100.0	(733)
4. 다함께돌봄센터	1.1	100.0	(554)	3.7	100.0	(733)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65.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가 외벌이보다는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높아지는 경향을 다함께돌봄센터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초등돌봄교실은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이용률이 다소 높았으며, 초등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이용률이 다소 높았다.

〈표 Ⅲ-2-69〉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초등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학교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계(수)	
전체	42.6	63.0	6.3	3.7	100.0	(733)
성별						
남성	37.8	63.6	4.7	3.1	100.0	(445)
여성	50.0	62.2	8.7	4.5	100.0	(288)
$x^2(df)$	10.727**(1)	0.156(1)	4.665*(1)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	-	-	-	100.0	(0)
유아부모	-	-	-	-	100.0	(0)
초등부모	42.6	63.0	6.3	3.7	100.0	(733)
$x^2(df)$	na	na	na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62.4	67.2	7.5	5.1	100.0	(372)
외벌이	20.5	58.4	5.3	1.9	100.0	(322)
해당없음	35.9	61.5	2.6	5.1	100.0	(39)
$x^2(df)$	124.512***(2)	5.800(2)	2.447(2)	5.363(2)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1.8	65.9	4.5	4.5	100.0	(44)
251~350만원	21.6	59.8	6.9	2.9	100.0	(102)
351~500만원	40.7	63.9	7.5	4.1	100.0	(241)
501~600만원	48.0	59.3	4.9	3.3	100.0	(123)
601만원 이상	53.4	65.0	5.8	3.6	100.0	(223)
$x^2(df)$	32.933***(4)	1.785(4)	1.351(4)	0.468(4)		
지역구분						
대도시	40.5	70.4	7.4	4.6	100.0	(284)
중소도시	43.7	56.0	5.8	2.0	100.0	(343)
읍면	44.3	66.0	4.7	6.6	100.0	(106)
$x^2(df)$	0.826(2)	14.395**(2)	1.157(2)	5.79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312명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만족'과 '매우만족'을 합한 긍정 응답 비율은 초등 방과후 학교가 72.7%, 초등돌봄교실이 65.7%로 높았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각각 58.7%, 51.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비율이 전년대비 18.5%p, 초등방과후학교는 11.4%p 상승하였다.

〈표 Ⅲ-2-70〉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만족도(2020년/2021년 조사)

단위: %(명), 점

구분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1. 초등돌봄교실	60.3	3.6	100.0	(249)	65.7	3.8	100.0	(312)
2. 초등방과후학교	61.3	3.7	100.0	(387)	72.7	3.8	100.0	(462)
3. 지역아동센터	53.8	3.7	100.0	(39)	58.7	3.7	100.0	(46)
4. 다함께돌봄센터	33.4	3.2	100.0	(6)	51.9	3.7	100.0	(27)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3) 표의 가독성을 위하여, 만족비율이 60% 이상인 항목에 음영 처리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67.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매우 불만족+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24명을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초등방과후학교는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다'와 '주위 가까이에 없어서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동일하게 응답되었다.

〈표 Ⅲ-2-71〉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이용 방법/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비용이 부담됨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오래 대기해야함)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만족스러움	기타	계(수)
1, 초등돌봄교실	66.7	0.0	0.0	4.2	4.2	0.0	12.5	4.2	4.2	4.2	100.0 (24)
2. 초등방과후학교	37.0	7.4	7.4	0.0	11.1	0.0	33.3	0.0	0.0	3.7	100.0 (27)
3. 지역아동센터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100.0 (2)
4. 다함께돌봄센터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7%(전년도 29.3%)[12]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44.3%로 전년도 48.3%[13] 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첫째자녀가 초등, 영아인 부모보다 유아인 부모가 본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외벌이보다 맞벌이 가구에서 인지도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2-72〉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인지도

단위: %(명), 점

구분	알고 있음	알지 못함	보통	계(수)	평균
전체	33.7	44.3	22.1	100.0 (2000)	2.8
성별					
남성	30.0	45.4	24.6	100.0 (1205)	2.8
여성	39.2	42.5	18.2	100.0 (795)	2.9
$x^2(df)t$		na			-3.09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33.7	45.6	20.7	100.0 (590)	2.8
유아부모	35.5	42.2	22.3	100.0 (677)	2.9
초등부모	32.1	45.0	22.9	100.0 (733)	2.8
$x2(df)/F$		10.072(8)			0.4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8	42.9	21.3	100.0 (998)	2.9
외벌이	31.6	45.5	22.9	100.0 (888)	2.8
해당없음	31.6	46.5	21.9	100.0 (114)	2.8
$x^2(df)/F$		4.310(8)			1.610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0.2	44.7	25.2	100.0 (159)	2.7
251~350만원	29.3	45.0	25.7	100.0 (338)	2.8
351~500만원	33.6	46.5	20.0	100.0 (611)	2.8
501~600만원	31.9	45.2	22.9	100.0 (323)	2.8
601만원 이상	38.5	40.8	20.7	100.0 (569)	2.9
$x^2(df)/F$		na			2.100
지역구분					
대도시	35.4	43.7	20.9	100.0 (817)	2.8
중소도시	31.3	46.1	22.6	100.0 (922)	2.8
읍면	36.8	39.5	23.8	100.0 (261)	2.9
$x^2(df)/F$		8.786(8)			1.930

주: 1) 알고 있음 비율은 약간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비율, 알지 못함 비율은 '거의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비율을 합친 결과임.
2) 차이검증은 인지도에 대한 5점 척도(전혀 알지 못함~알고 있음)평균에 따른 차이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12) 김근진 외, 2020: 168
13) 김근진 외, 2020: 168

나) 부모의 정책 효과성 인식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가 18.3%로 가장 높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가 16.1%로 그 뒤를 이었다.

첫째아 기준으로는 초등 부모의 33.4%가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를 선택하였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의 21.5%가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를 선택하였다.

〈표 Ⅲ-2-73〉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10.0	9.7	4.1	10.3	5.2	9.4	6.6	5.7	18.3	16.1	5.0	100.0	(2000)
성별													
남성	9.0	11.2	5.4	12.0	5.3	9.5	5.4	5.1	16.2	15.7	5.3	100.0	(1205)
여성	11.4	7.3	2.1	7.7	4.9	9.1	8.3	6.5	21.5	16.6	4.5	100.0	(795)
$x^2(df)$	48.060***(10)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2.0	12.2	2.7	8.8	5.1	9.0	11.0	7.3	7.6	17.8	6.4	100.0	(590)
유아부모	12.1	10.0	5.6	13.0	6.1	9.0	6.4	6.4	11.2	16.4	3.8	100.0	(677)
초등부모	6.3	7.2	3.8	8.9	4.4	10.0	3.1	3.7	33.4	14.3	4.9	100.0	(733)
$x^2(df)$	234.026***(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9.7	8.6	4.1	7.4	5.1	9.8	8.1	6.1	21.5	16.2	3.2	100.0	(998)
외벌이	9.6	10.9	4.4	13.4	5.1	9.0	4.7	5.1	15.1	15.8	7.0	100.0	(888)
해당없음	14.9	8.8	1.8	10.5	6.1	7.9	7.0	6.1	14.9	16.7	5.3	100.0	(114)
$x^2(df)$	58.858***(20)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4.5	10.1	3.1	10.1	3.8	10.7	7.5	3.8	13.2	19.5	3.8	100.0	(159)
251~350만원	9.5	10.7	3.0	13.6	5.0	7.7	5.3	5.9	15.4	16.9	7.1	100.0	(338)
351~500만원	9.3	9.7	4.9	10.8	6.2	9.0	7.0	6.1	17.0	14.9	5.1	100.0	(611)
501~600만원	10.2	7.1	2.8	9.9	5.9	9.9	5.6	4.3	21.7	17.0	5.6	100.0	(323)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601만원 이상	9.5	10.4	4.9	7.9	4.0	10.0	7.0	6.3	20.9	15.3	3.7	100.0	(569)
$x^2(df)$					44.557(40)								
지역구분													
대도시	10.3	10.6	5.6	10.9	5.4	9.4	5.3	5.6	15.3	16.8	4.8	100.0	(817)
중소도시	9.4	9.5	3.5	10.1	5.1	9.0	6.6	5.9	21.4	14.9	4.7	100.0	(922)
읍면	10.7	6.9	1.5	8.8	4.6	10.3	10.3	5.0	16.9	18.0	6.9	100.0	(261)
$x^2(df)$					35.692*(20)								

주: ①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②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③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④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⑥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⑦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⑧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⑨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⑪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가 15.9%로 가장 높았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 15.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2.2%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Ⅲ-2-74〉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5.8	8.8	10.4	6.4	12.2	15.0	5.4	7.2	6.2	7.0	15.9	100.0	(2000)
성별													
남성	5.5	9.4	10.4	7.0	12.0	15.3	5.3	8.0	5.6	7.2	14.4	100.0	(1205)
여성	6.2	7.8	10.3	5.4	12.5	14.5	5.5	6.0	7.0	6.7	18.1	100.0	(795)
$x^2(df)$						12.385(10)							
첫 째 아 기준													
영아부모	5.8	8.5	10.5	6.3	13.9	12.4	5.3	7.3	7.3	5.1	17.8	100.0	(590)
유아부모	6.5	9.2	11.1	5.0	11.8	15.2	5.2	7.1	5.3	6.8	16.8	100.0	(677)
초등부모	5.0	8.6	9.5	7.6	11.2	16.8	5.7	7.2	6.1	8.7	13.4	100.0	(733)
$x^2(df)$						25.681(20)							
맞벌이여부													
맞벌이	6.4	8.6	9.8	5.9	11.9	14.1	5.2	8.4	7.3	7.3	14.9	100.0	(998)
외벌이	5.1	9.1	10.6	7.2	12.5	16.3	5.6	5.5	4.8	6.5	16.7	100.0	(888)
해당없음	5.3	7.0	13.2	3.5	12.3	11.4	5.3	9.6	7.0	7.9	17.5	100.0	(114)
$x^2(df)$						21.788(2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8	6.9	10.7	6.3	15.7	13.8	7.5	6.9	4.4	6.9	17.0	100.0	(159)
251~350 만원	5.0	8.3	11.8	7.4	10.9	15.1	5.6	7.1	5.6	6.5	16.6	100.0	(338)
351~500 만원	5.6	9.2	11.1	5.4	11.3	15.4	5.9	6.9	6.2	6.5	16.5	100.0	(611)
501~600 만원	6.8	7.1	7.1	7.1	11.1	14.9	5.6	7.7	6.2	10.2	16.1	100.0	(323)
601만원 이상	6.3	10.0	10.4	6.3	13.5	14.8	4.0	7.4	7.0	6.0	14.2	100.0	(569)
$x^2(df)$					27.968(40)								
지역구분													
대도시	6.4	10.2	10.9	6.7	12.6	13.8	5.4	6.5	4.8	7.0	15.8	100.0	(817)
중소도시	5.2	7.8	9.8	6.1	12.6	16.4	5.5	7.4	6.5	7.5	15.3	100.0	(922)
읍면	5.7	7.7	10.7	6.1	9.6	13.4	5.0	8.8	9.6	5.4	18.0	100.0	(261)
$x^2(df)$					20.649(20)								

주: ①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②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③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④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⑥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⑦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⑧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⑨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⑪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19.5%로 가장 높았고,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이 15.9%로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21.1%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이 20.0%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는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이 19.4%로 가장 높았고, 외벌이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20.9%로 가장 높았다.

〈표 Ⅲ-2-75〉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5.7	8.9	4.7	7.7	5.1	19.5	4.9	4.4	15.9	13.5	9.9	100.0	(2000)
성별													
남성	5.6	10.9	5.7	9.0	4.7	21.1	4.9	4.3	13.1	12.4	8.2	100.0	(1205)
여성	5.9	5.9	3.0	5.7	5.7	17.1	4.9	4.4	20.0	15.1	12.3	100.0	(795)
$x^2(df)$						57.757***(10)							
첫째아기준													
영아부모	6.4	11.7	3.2	8.5	6.8	18.6	6.3	6.8	7.8	15.1	8.8	100.0	(590)
유아부모	7.7	8.7	6.5	10.6	4.6	17.6	5.0	3.4	12.4	12.9	10.6	100.0	(677)
초등부모	3.3	6.8	4.1	4.4	4.2	22.0	3.7	3.3	25.5	12.8	10.0	100.0	(733)
$x^2(df)$						147.614***(20)							
맞벌이여부													
맞벌이	4.6	7.8	3.9	6.8	5.8	18.9	4.8	4.1	19.4	14.4	9.3	100.0	(998)
외벌이	6.5	10.2	5.4	8.7	4.2	20.9	5.2	4.4	12.2	12.2	10.1	100.0	(888)
해당없음	8.8	7.9	5.3	7.9	6.1	13.2	3.5	6.1	13.2	15.8	12.3	100.0	(114)
$x^2(df)$						40.137**(20)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7.5	10.1	2.5	10.1	2.5	17.6	3.8	7.5	14.5	13.8	10.1	100.0	(159)
251~350 만원	5.3	10.4	3.8	9.8	5.0	19.8	6.2	4.4	11.8	13.3	10.1	100.0	(338)
351~500 만원	5.9	8.3	6.5	7.2	5.2	19.0	4.4	2.9	17.3	11.6	11.5	100.0	(611)
501~600 만원	6.2	7.4	4.6	8.4	6.8	17.0	5.6	4.6	15.5	16.1	7.7	100.0	(323)
601만원 이상	4.9	9.1	3.7	6.0	4.7	21.8	4.6	4.7	17.2	14.1	9.1	100.0	(569)
$x^2(df)$						45.455(40)							
지역구분													
대도시	5.5	9.3	4.4	8.6	5.8	20.8	5.9	4.3	14.1	12.1	9.3	100.0	(817)
중소도시	6.0	9.3	5.4	7.8	4.3	19.2	3.9	4.2	17.1	13.1	9.5	100.0	(922)
읍면	5.4	6.1	2.7	4.6	5.7	16.5	5.4	5.0	16.9	19.2	12.6	100.0	(261)
$x^2(df)$						30.715(20)							

주: ①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②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③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④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⑥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⑦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⑧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⑨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⑪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2) 전문가의 정책성과 평가

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는 앞서 다룬 현금 및 의료비 지원에 비해 세부과제별로 그 평가 수준의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74.0%,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72.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71.0% 순으로 긍정비율(7점 척도, ⑤~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 를 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43.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54.0% 순으로 그 달성 수준이 낮게 평가되었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달성도를 보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과 '초등돌봄 확대'는 그 평가가 상승하였다. 다른 한편 2020년에 낮은 평가를 보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의 경우는 긍정비율이 62%로 개선된 반면,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여전히 가장 낮은 평가에 머물렀다.

〈표 Ⅲ-2-76〉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수행 달성도 평가(2020년/2021년 조사)

단위: %(명), 점

정책과제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64.0	4.8	100.0	(100)	74.0	5.40	100.0	(10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40% 목표)	62.0	4.6	100.0	(100)	63.0	4.87	100.0	(10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3.0	4.0	100.0	(100)	62.0	5.03	100.0	(10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	-	-	72.0	5.18	100.0	(10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41.0	4.1	100.0	(100)	43.0	3.96	100.0	(10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56.0	4.6	100.0	(100)	58.0	4.41	100.0	(100)
(7)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61.0	4.7	100.0	(100)	69.0	5.02	100.0	(10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68.0	5.0	100.0	(100)	66.0	4.94	100.0	(1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64.0	4.8	100.0	(100)	69.0	5.43	100.0	(100)

정책과제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52.0	4.4	100.0 (100)	71.0	5.14	100.0 (10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45.0	4.4	100.0 (100)	68.0	5.15	100.0 (10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43.0	4.2	100.0 (100)	54.0	4.34	100.0 (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81.

각 과제별로 수행 달성도를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해서는 아동의 놀 권리에 부합함과 동시에 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실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을 목표대로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 점이 언급되었다.

'초등돌봄 확대'에 대해서는 돌봄 사각지대였던 초등돌봄을 확대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 점을 성과가 두드러진 이유로 제기하였다. 그 밖에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대면 보육 시간이 줄어서 보육 준비, 회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의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로 영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보편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기대할 수 있고, 평가지표에 아동권리 존중 강화, 안심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 등이 포함되어 서비스 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성과평가 순위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0%,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6.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5.0%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시간

제 보육서비스 제공'은 긍정응답율이 공히 1%에 그쳐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각 과제별로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3~5세 교육과정의 유보(유아교육과 보육)일원화의 실현의 연장선에 있으며, 유아가 놀이권 보장의 현장적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유아와 교사는 물론, 가정에서도 놀이 중심으로 교육 방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행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는 집 가까운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이 높아져서 접근성이 제고되었으며,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사립기관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연하게 목표 달성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초등돌봄 확대'는 영유아 돌봄에 집중된 서비스 지원에서 학교 수업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를 명료화 하고 해당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용한 점, 맞벌이 가정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이 제기되었다.

〈표 Ⅲ-2-77〉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단위: %(명)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6.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8.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8.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7.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8.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5.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0.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반면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9.0%, '보육서비스 질 제고' 17.0% 순으로 지목되었다.

낮은 평가를 보인 과제를 위주로 그 이유는 다음이 제기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였으나,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의 아동학대 의심에 대한 불안감, 고용 불안정, 심리적 위축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기준이 상이하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격차가 완화되지 않고, 서비스 운영시간과 근무시간 등의 격차도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처우개선 노력과 인성교육이 형식적인 데 그치고,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편이 추진되지 않는 점이 언급되었다.

그 밖에도 '초등돌봄 확대'의 성과가 낮은 이유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육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여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지원 중단 후 대부분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후속 모델에 대한 발굴과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점, 초등 고학년까지 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점, 단순한 영유아 보육의 연장선이나 초등학교 일과 후의 단순돌봄 성격의 프로그램을 벗어나 아동연령별로 욕구에 맞는 학습이 미진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표 Ⅲ-2-78〉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약한 과제

단위: %(명)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4.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5.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2.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9.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17.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1.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4.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5.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0.0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5.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서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 34%,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6.0%,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와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는 공히 13%,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7%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공통적으로 강조되며, 이때 양성과정의 개편은 물론이고 인성교육의 강화와 동시에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지원을 강화하는 등으로 아동학대 없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이용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 받아야 하나. 유치원에 비해 교사급여 지원, 근무시간 등 전반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므로 양성과정 일원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는 공공성 확보를 통한 효과성 제고의 측면에서 해당 비율이 최소 50%선을 달성해야 하고, 해당 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지적되었다.

'초등돌봄 확대'는 영유아 돌봄에 비해 초등돌봄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여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노력과 부처간 돌봄지원사업으로 인한 연계 추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지역 단위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도 제기되었다.

〈표 Ⅲ-2-79〉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단위: %(명)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4.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3.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2.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0.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16.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34.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7.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3.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8.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과제 이외에 추가될 과제로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경계성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유아학교(0학년) 도입, 지역별 보육, 교육의 질적 수준 격차에 대한 대처, 어린이집 비담임교사제도 도입, 유치원,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의 개선, 2부제 교사 순환근무제 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초등돌봄 정책에서는 초등돌봄의 모델 개발 또는 놀이 중심 초등방과후돌봄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지자체 단위에서 돌봄 부문을 총괄하는 부서의 신설, 어린이집 유휴공간의 초등돌봄센터 설치 등이 제기되었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목표 달성도와 성과평가, 그리고 중점과제에 관한 인식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3~5세 누리과정 관련 개선 즉,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과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중점과제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과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가 지목되어 서비스 질 개선의 한 필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으나, 그 추진 실적이 저조하여 전년 대비 가장 낮은 개선 정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 통합된 3~5세아 누리과정의 질적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는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었으나 아직은 그 효과가 미흡하여 낮은 평가를 보였다고 추측되므로 공적 아동보호체계 관련 제도의 안착이 요구된다.

이 같은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과 격차 해소와 더불어 인프라 확충도 여전히 강조된다. 즉, 영유아의 경우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등방과후 돌봄 인프라 공급 수준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자녀돌봄 시간 지원

가.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정책별 성과 평가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 관한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 및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수의 2020년 자료는 2021년 12월 이후에 공개되어 본 연구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1)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가) 육아휴직 사용률/이용가능성

(1) 전체 육아휴직자 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0년 72,769명에서 2019년 159,1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3).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0년 2.7%에서 2019년 19.9%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3).

〈표 Ⅲ-3-1〉 전체 육아휴직자 수

(단위: 명, %, %p)

	2010	2014	2017	2018	2019P	증감률	증감('19-'18)
전체 육아휴직자	72,769	124,593	140,531	152,241	159,153	4.5	6,912
부	1,962	6,213	18,126	24,987	31,665	26.7	6,678
(구 성 비)	2.7	5.0	12.9	16.4	19.9	-	3.5
모	70,807	118,380	122,405	127,254	127,488	0.2	234
(구 성 비)	97.3	95.0	87.1	83.6	80.1	-	-3.5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3.

(2)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동이 출생한 당해연도에 부모가 얼마나 육아휴직을 하는지 파악하는 개념이다(정재훈·최성은·백지선, 2020: 109).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11.5%에서 2019년 21.6%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15). 그러나 남성의 경우 2019년 1.8%로 여성의 63.6%와 비교하면 여성의 1/3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통계청, 2020: 15). 이는 자녀가 출생한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하는 아버지 비율이 100중 1.8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정재훈 외, 2020: 110).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여전히 성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3-2〉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p, 명)

	2010	2014	2017	2018	2019P	증감률	증감('19-'18)
육아휴직 사용률 (A/B*100)	11.5	16.8	19.9	20.7	21.6	4.3	0.9
부	0.2	0.3	1.2	1.5	1.8	20.0	0.3
모	41.0	56.8	62.0	62.9	63.6	1.1	0.7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A)	45,182	67,114	68,794	69,304	68,863	-0.6	-441
부	493	877	2,774	3,412	4,012	17.6	600
모	44,689	66,237	66,020	65,892	64,851	-1.6	-1,041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B)	391,546	398,366	345,147	335,241	319,101	-4.8	-16,140

		2010	2014	2017	2018	2019P	증감률	증감('19-'18)
	부	282,652	281,800	238,728	230,431	217,144	-5.8	-13,287
	모	108,894	116,566	106,419	104,810	101,957	-2.7	-2,853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15.

(3)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당해연도 출생아 부모 뿐 아니라 대상 자녀 연령을 충족하는 모든 부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정재훈 외, 2020: 111).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는 2010년 9.6명에서 2019년 2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계청, 2020: 7). 남성의 경우는 2019년 1.3명이나, 여성은 21.4명으로 성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0: 15). 이는 출생아 100명당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1.3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표 Ⅲ-3-3〉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단위: 명)

		2010	2014	2017	2018	2019P	증감('19-'18)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A/B*100)		9.6	15.4	19.2	21.2	22.8	1.6
	부	0.1	0.2	0.8	1.0	1.3	0.3
	모	9.5	15.2	18.5	20.2	21.4	1.2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A=C+D)		45,182	67,114	68,794	69,304	68,863	-441
	부(C)	493	877	2,774	3,412	4,012	600
	모(D)	44,689	66,237	66,020	65,892	64,851	-1,041
	부 & 모	126	312	1,358	1,782	2,182	400
출 생 아(B)		470,171	435,435	357,771	326,822	302,676	-24,146

*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계)의 이론적 최댓값은 200명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7.

(4)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0-8세) 육아휴직자 수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만0~8세)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간 동안 부모의 육아휴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정재훈 외, 2020: 112). 2010년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는 19.6명이고, 아버지는 1.8명, 어머니는 17.8명이다(통계청, 2020: 19). 이는 아동이 8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100명당 1.8명, 어머니 100명 17.8명이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 사용의 성별 편차가 크다는 것 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도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재훈 외, 2020: 113).

〈표 Ⅲ-3-4〉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단위: 명)

출생연도	출생아 100명당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A/B*100)			출생아 부모 중 전 기간 육아휴직자 수 (A)			출생아 수(B)
	계	부	모	계	부	모	
2010P	19.6	1.8	17.8	92,131	8,301	83,830	470,171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19.

나)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을 보기 위해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중을 살펴보았다.

출산 전 360일을 기준으로 취업비중은 2015년 47.3%에서 2019년 51.8%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21). 출산 후 360일을 기준으로 취업비중은 2015년 36.1%에서 2018년 40.7%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21). 2018년 기준으로 출산 전 360일 취업 비중이 50.2%이나, 출산 후 360일 취업 비중은 40.7%로 약 10%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2020: 21). 이러한 결과는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3-5〉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단위: %, %p)

	출산 전				출산일	출산 후			
	-360일	-270일	-180일	-90일		+180일	+360일	+540일	+720일
2015	47.3	46.0	41.5	38.2	35.9	35.1	36.1	35.1	36.9
증감	0.8	0.9	0.9	1.0	1.1	1.5	1.6	1.9	2.0
2016	47.9	46.7	42.4	39.1	36.8	36.0	37.2	36.5	38.4
증감	0.6	0.7	0.9	0.9	0.9	0.9	1.1	1.4	1.5
2017	49.0	47.9	43.6	40.4	38.1	37.5	38.7	38.2	40.1
증감	1.1	1.2	1.2	1.3	1.3	1.5	1.5	1.7	1.7
2018P	50.2	49.2	45.1	42.1	39.8	39.4	40.7	-	-
증감	1.2	1.3	1.5	1.7	1.7	1.9	2.0	-	-
2019P	51.8	50.9	46.9	43.9	41.7	-	-	-	-
증감	1.6	1.7	1.8	1.8	1.9	-	-	-	-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p.21.

다)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현황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명 이상 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67.6%, 50~299명은 10.8%, 5~49명은 15.4%, 4명 이하 4.9%로(국가통계포털, 전체 육아휴직자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 전체 육아휴직자의 2/3 이상이 300명 이상의 기업에 소속된 경우이다. 2019년에도 300명 이상 64.6%, 50~299명 13.8%, 5~49명 16.0%, 4명 이하 4.7%로(국가통계포털, 전체 육아휴직자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 2012년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도 육아휴직 사용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3-6〉 전체 육아휴직자 소속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

단위: %

기업체 규모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0명 이상	67.6	72.3	67.5	68.4	73.7	68.2	68.7	72.8	68.5	67.8	72.5	67.5	68.5	73.3	68.1	67.9	73.6	67.1	67.0	72.5	65.9	64.6	69.6	63.4
50~299명	10.8	9.7	10.8	11.1	9.8	11.2	11.6	10.7	11.6	12.3	12.5	12.3	12.4	12.1	12.4	13.0	12.3	13.1	13.3	13.3	13.3	13.8	14.1	13.7
5~49명	15.4	11.4	15.6	14.6	10.6	14.7	14.5	11.0	14.7	15.2	10.8	15.5	14.7	10.1	15.2	14.8	9.9	15.5	15.3	10.2	16.3	16.0	11.3	17.2
4명 이하	4.9	4.7	4.9	4.3	4.3	4.3	3.9	3.8	3.9	4.4	3.9	4.5	4.2	4.5	4.2	4.2	4.1	4.3	4.3	3.9	4.4	4.7	3.8	5.0
미상	1.3	1.9	1.3	1.6	1.6	1.6	1.3	1.6	1.2	0.2	0.2	0.2	0.1	0.1	0.1	0.1	0.1	0.1	0.1	0.2	0.1	0.8	1.1	0.8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체 육아휴직자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라) 육아휴직제도 인지도/활용실적 비율

육아휴직제도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31.3%에서 2019년 37.9%로 증가하였다(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그러나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기준 5~9인 기업은 34.3%인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88.5%로(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3-7〉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전체		31.3	25.5	20.1	23.1	32.0	27.6	24.4	16.0	37.9	27.1	21.5	13.5
종사자규모별	5~9인	24.6	23.4	23.5	28.6	25.0	25.5	28.2	21.3	34.3	25.0	23.9	16.7
	10~29인	37.5	26.2	16.7	19.6	37.3	33.4	19.5	9.8	35.1	32.3	21.2	11.4
	30~99인	47.0	39.2	11.8	2.0	56.5	26.4	15.2	1.9	65.8	25.3	8.9	0.0
	100~299인	68.2	23.7	7.7	0.4	63.1	20.0	16.6	0.3	71.2	21.8	7.0	0.0
	300인 이상	93.6	4.9	1.5	0.0	86.2	5.4	8.4	0.0	88.5	7.9	3.5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인지도(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2017년 기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44.1%, '활용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25.1%, '전혀 활용할 수 없음' 30.8%로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으로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45.4%, '활용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26.4%, '전혀 활용할 수 없음' 28.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 특히 종사자 규모별로는 '필요한 사람은 자유롭게 활용 가능' 응답은 2019년 기준 5~9인은 37.1%이나, 300인 이상은 87.1%로 나타나(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 종사자 규모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Ⅲ-3-8〉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전체		44.1	25.1	30.8	42.7	27.0	30.3	45.4	26.4	28.1
종사자규모별	5~9인	35.9	21.4	42.7	36.3	24.2	39.5	37.1	22.9	40.0
	10~29인	49.8	30.9	19.4	46.7	34.0	19.3	53.1	32.3	14.6
	30~99인	63.1	28.1	8.8	60.4	24.3	15.3	65.9	30.6	3.5
	100~299인	67.1	27.1	5.8	65.5	19.5	15.0	69.7	26.4	3.9
	300인 이상	88.5	11.2	0.4	85.4	8.8	5.8	87.1	9.8	3.1

자료: 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2019년 기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라는 응답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 이러한 응답은 종사자 규모별로는 5~9인은 74.7%인 반면, 300인 이상은 15.8%로(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3-9〉 육아휴직제도 활용 못하는 이유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사내에 제도로 모입되지 않아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직원의 연령대가 높음	제도 없음	대상자 없음	출산하지 않을 인원만 채용함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전체		79.8	6.6	5.3	8.3	7.1	3.7	4.9	11.4	17.7	37.8	13.1	4.4	17.9	2.6	9.9	69.6
종사자규모별	5~9인	79.7	5.5	6.1	8.7	6.7	2.7	3.4	12.5	16.8	38.5	14.3	5.0	16.9	1.4	7.0	74.7
	10~29인	79.4	11.2	2.5	7.0	8.1	5.0	9.5	7.4	24.0	34.0	9.6	2.4	23.1	6.8	25.2	44.9
	30~99인	82.6	7.8	3.2	6.4	2.8	10.5	4.6	8.9	8.0	49.3	11.7	4.3	18.6	30.3	13.1	38.0
	100~299인	82.8	0.5	8.7	7.9	35.9	21.3	24.9	15.6	0.0	2.3	0.0	0.0	18.6	12.9	4.6	63.9
	300인 이상	87.5	12.5	0.0	0.0	33.9	19.6	25.9	20.5	0.0	0.0	0.0	0.0	69.6	0.0	14.6	15.8

자료: 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이용가능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12년 0.44%에서 2019년 6.71%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8.41%로 증가하였다(e-나라지표.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고용노동부(2021): 8). 남성의 경우도 2012년 0.02%에서 2019년 1.01%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31%로 증가하였다(e-나라지표.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고용노동부(2021): 8).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처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표 Ⅲ-3-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및 사용률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37	736	1,116	2,061	2,761	2,821	3,820	5,660	14,698
남자	22	44	84	170	378	321	550	742	1,639
여자	415	692	1,032	1,891	2,383	2,500	3,270	4,918	13,059
출산전후 휴가자수	93,394	90,507	88,756	94,590	89,834	81,093	76,414	73,306	70,949
남성 비율	0.02	0.05	0.09	0.18	0.42	0.40	0.72	1.01	2.31
여성 비율	0.44	0.76	1.16	2.00	2.65	3.08	4.28	6.71	18.41

자료: e-나라지표.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고용노동부(2021). 보도자료: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p.8.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활용실적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21.5%에서 2019년 26.2%로 증가하였다(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 종사자 규모별로는 2019년 기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9인은 21.1%인 반면, 300인 이상은 76.5%로(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 종사자 규모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3-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전체		21.5	20.0	20.2	38.3	20.7	21.6	23.1	34.6	26.2	22.3	15.3	36.2
종사자 규모별	5~9인	15.2	17.8	21.0	46.0	14.8	18.1	24.5	42.6	21.1	21.2	15.4	42.3
	10-29인	24.4	23.1	19.8	32.7	24.5	26.7	22.0	26.8	26.2	24.0	16.2	33.6
	30-99인	45.4	23.8	17.8	13.0	41.8	29.8	18.2	10.1	54.5	24.9	12.3	8.2
	100~299인	57.5	26.9	14.3	1.4	49.3	23.7	25.5	1.5	61.4	23.6	11.3	3.8
	300인 이상	77.8	15.5	6.6	0.1	72.7	19.6	7.5	0.2	76.5	14.9	6.4	2.1

자료: 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응답은 2017년 33.3%에서 2019년 49.3%로 크게 증가하였다(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 2019년 기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응답은 종사자 규모별로는 5~9인 41.2%, 300인 이상 77.8%로(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 육아휴직 제도 사용에 비해 종사자 규모별 편차는 적은 편이다,

〈표 Ⅲ-3-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전체		33.3	40.6	26.1	40.7	38.3	21.0	49.3	26.9	23.8
종사자 규모별	5~9인	29.6	34.7	35.8	36.1	36.6	27.3	41.2	22.5	36.3
	10~29인	35.3	49.8	14.9	43.0	41.8	15.2	54.9	33.6	11.5
	30~99인	38.6	43.1	18.3	50.9	40.8	8.3	67.2	30.7	2.1
	100~299인	48.4	40.3	11.3	56.0	26.8	17.2	68.7	24.4	6.9
	300인 이상	70.4	25.6	4.0	67.7	21.1	11.1	77.8	21.3	1.0

자료: 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2019년 기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응답이 7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 종사자 규모별로는 5~9인이 80.4%, 300인 이상이 47.9%로(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 종사자 규모별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3-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못하는 이유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사내에 제도로 도입되지 않아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곤란해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곤란해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직원 연령대가 높아 사용자 없음	제도 없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곤란해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전체		75.2	7.7	4.7	7.9	4.5	6.2	5.8	5.9	3.2	0.7	20.5	57.8	5.1	6.6	7.2	7.3	73.7
종사자규모별	5~9인	74.5	6.6	4.0	9.8	5.1	5.5	3.9	4.8	2.1	0.8	23.3	59.6	2.6	5.5	6.3	5.1	80.4
	10~29인	74.5	13.0	6.0	2.6	3.9	6.6	11.3	8.3	5.6	0.7	16.3	51.3	16.6	13.6	10.3	20.9	38.6
	30~99인	80.8	6.2	8.8	3.3	0.8	9.6	9.7	13.2	8.7	0.0	4.8	53.8	38.4	3.4	22.0	0.0	36.2
	100~299인	90.4	0.8	0.0	5.1	3.6	5.5	0.0	1.8	1.3	0.0	9.4	82.0	13.7	2.6	17.9	0.0	65.9
	300인 이상	95.8	2.4	1.1	0.7	0.0	39.1	0.0	0.0	0.0	0.0	0.3	60.6	22.8	0.0	29.3	0.0	47.9

자료: 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3) 배우자 출산휴가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가능현황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가능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응답은 2017년 39.0%에서 2019년 57.9%로 20%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다(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 현황). 종사자 규모별로는 '필요한 사람은 모두 활용 가능' 응답은 2019년 기준 5~9인 54.5%, 300인 이상 85.2%로(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 현황) 종사자 규모별 편차는 있으나 육아휴직 사용에 비해서는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표 Ⅲ-3-14〉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가능 현황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전체		39.0	24.6	36.4	45.0	28.3	26.7	57.9	24.1	18.0
종사자규모별	5~9인	34.4	21.3	44.3	41.0	26.5	32.5	54.5	23.9	21.6
	10~29인	40.7	29.8	29.5	46.1	33.0	20.9	58.9	25.2	15.9
	30~99인	55.1	28.4	16.4	60.9	25.3	13.7	72.2	23.9	3.9
	100~299인	66.3	23.7	10.0	68.4	22.1	9.5	78.2	18.9	3.0
	300인 이상	82.1	14.8	3.2	76.5	17.8	5.6	85.2	12.6	2.2

자료: 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2019년 기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응답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 현황). 종사자 규모별로는 5~9인 71.9%인 반면, 300인 이상 11.4%로(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 현황) 종사자 규모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Ⅲ-3-15〉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못하는 이유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사내에 제도로 도입되지 않아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기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때문에	제도없음	대상자없음	여성 직원만 있음	직원의 연령대가 높음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때문에
전체		82.9	15.3	1.8	9.3	13.1	36.1	16.8	12.1	12.6	29.5	70.5
종사자 규모별	5~9인	83.9	14.5	1.6	9.4	12.2	36.4	18.8	11.2	12.0	28.1	71.9
	10~29인	82.9	15.5	1.6	9.6	15.8	33.4	13.0	13.7	14.5	33.9	66.1
	30~99인	67.2	26.7	6.0	5.7	12.0	42.4	7.2	20.4	12.4	22.4	77.6
	100~299인	77.4	22.6	0.0	10.3	22.5	51.5	11.5	0.6	3.7	38.7	61.3
	300인 이상	78.7	16.4	4.8	27.8	7.9	64.3	0.0	0.0	0.0	88.6	11.4

자료: 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활용실적 비율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 46.6%에서 2019년 45.0%로 별 차이가 없었다(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 2019년 기준 '잘 알고 있다' 응답은 5~9인 43.6%, 300인 이상 86.0%로(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 종사자 규모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Ⅲ-3-16〉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전체		46.6	25.7	18.9	8.8	43.8	26.3	20.5	9.3	45.0	27.2	18.7	9.1
종사자 규모별	5~9인	42.4	24.0	21.8	11.9	36.6	25.0	24.9	13.6	43.6	26.3	20.4	9.7
	10-29인	48.7	29.5	17.0	4.8	52.1	29.6	15.6	2.8	38.6	31.8	19.4	10.2
	30-99인	60.5	26.2	9.8	3.5	59.8	28.9	8.6	2.7	70.3	20.0	7.3	2.5
	100~299인	77.4	19.8	1.9	0.9	73.7	16.5	7.7	2.1	76.4	14.9	7.1	1.6
	300인 이상	92.2	7.2	0.2	0.4	87.1	9.1	3.8	0.0	86.0	9.7	3.2	1.1

자료: 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4) 유연근무제(재택근로 및 시차출퇴근)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2019년 기준 재택근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10.7%이고,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기업은 16.5%이다(국가통계포털,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종사자 규모별로는 재택근로 도입은 5~9인 7.2%인 반면 300인 이상은 32.8%였고, 시차출퇴근 도입은 5~9인 13.9%, 300인 이상 37.7%로(국가통계포털,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종사자 규모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Ⅲ-3-17〉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전체		13.9	15.3	8.9	7.4	3.6	4.4	13.4	17.2	8.7	7.6	3.5	4.5	13.2	16.5	8.6	7.0	4.4	6.3
종사자 규모별	5~9인	12.1	13.5	8.0	6.6	3.2	4.0	11.9	15.9	7.3	7.0	2.9	3.9	11.1	13.9	6.3	6.0	3.1	4.1
	10~29인	15.7	17.2	9.5	7.9	3.7	4.2	15.6	17.4	11.0	9.1	4.1	5.2	15.5	18.5	11.5	8.1	5.8	8.6
	30~99인	18.7	18.9	11.7	10.4	5.8	8.0	15.6	23.4	8.2	6.5	4.6	4.9	19.0	26.0	13.0	9.1	7.6	12.1
	100~299인	17.8	21.5	13.9	10.5	4.7	4.8	17.9	22.6	13.0	7.3	3.9	5.4	21.2	24.2	15.7	14.0	7.9	12.4
	300인 이상	25.1	36.8	21.7	6.8	4.5	8.5	23.5	36.2	28.4	14.1	10.0	12.5	25.5	37.7	26.2	11.8	12.4	20.4

자료: 국가통계포털.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복수응답)에 대한 조사에서 시차출퇴근제는 2015년 42.0%에서 2020년 31.2%로 감소한 반면, 재택 및 원격근무제는 2015년 7.3%에서 2020년 17.4%로 증가하였다(국가통계포털,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 특히 재택 및 원격근무제는 2020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로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3-18〉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복수응답)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	2015. 08	2016. 08	2017. 08	2018. 08	2019. 08	2020. 08
근로시간단축 근무제	0.4	7.8	9.9	15.1	17.1	13.1
시차출퇴근제	42.0	38.1	38.4	33.2	33.7	31.2
선택적 근무시간제	33.2	31.6	31.9	32.3	30.4	26.4
재택 및 원격근무제	7.3	7.3	5.6	4.7	4.3	17.4
탄력적 근무제	26.3	23.7	26.0	27.3	32.0	29.1
기타유형 (재량근무 등)	12.3	1.5	9.1	10.9	9.6	10.2

자료: 국가통계포털.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나. 자녀돌봄 시간 지원 부문별 성과 평가

1) 부모의 정책 이용률, 만족도 및 효과성 인식

가) 부모의 정책 이용률 및 만족도

시간지원 제도 중 자녀돌봄 시간 지원은 모 출산휴가 이용률이 47.9%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모 육아휴직도 40.2%이었다. 부 출산 휴가는 39.1%, 부 육아휴직은 9.7%로 어머니의 이용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모 근로시간 단축도 20.0%인 반면, 부 근로시간 단축은 6.4%로 이용률 차이가 컸다.

모 출산휴가, 부 출산휴가, 모 육아휴직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률이 높았으며, 부 육아휴직은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비슷하였다.

모 출산 휴가와 모 육아휴직은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이용률이 더 높았으며, 부 출산휴가는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 출산휴가와 모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부 육아휴직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자녀돌봄 시간 지원 이용률이 부 출산 휴가를 제외하고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9〉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단위: %(명)

구분	모 출산 휴가	부 출산 휴가	모 근로 시간 단축	부 근로 시간 단축	모 육아 휴직	부 육아 휴직	계(수)	
전체	47.9	39.1	20.0	6.4	40.2	9.7	100.0	(2000)
성별								
남성	44.8	43.7	18.8	7.3	38.6	11.4	100.0	(1205)
여성	52.5	31.9	21.6	4.9	42.5	7.0	100.0	(795)
$x^2(df)$	11.454**(2)	37.671***(2)	8.811*(2)	9.066*(2)	7.920*(2)	31.461***(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55.1	46.9	23.2	5.3	48.1	9.5	100.0	(590)
유아부모	48.9	39.3	21.3	6.5	40.0	9.9	100.0	(677)
초등부모	41.1	32.5	16.1	7.1	33.8	9.5	100.0	(733)
$x^2(df)$	28.028***(4)	33.740***(4)	19.268**(4)	13.827**(4)	31.028***(4)	11.79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6.2	37.8	30.1	7.2	54.1	9.9	100.0	(998)
외벌이	28.7	41.2	9.2	4.8	26.0	9.1	100.0	(888)
해당없음	36.0	33.3	14.9	10.5	28.1	11.4	100.0	(114)
$x^2(df)$	280.851***(4)	15.539**(4)	192.987***(4)	24.649***(4)	212.042***(4)	13.548**(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8.3	31.4	11.9	6.3	25.2	14.5	100.0	(159)
251~350 만원	28.4	41.1	8.3	5.3	25.1	8.0	100.0	(338)
351~500 만원	36.3	39.0	14.2	6.2	30.6	8.7	100.0	(611)
501~600 만원	58.5	40.9	26.3	6.2	48.9	9.9	100.0	(323)
601만원 이상	71.2	39.0	31.6	7.2	58.5	10.2	100.0	(569)
$x^2(df)$	259.217***(8)	24.359**(8)	149.363***(8)	38.223***(8)	181.126***(8)	29.990***(8)		
지역구분								
대도시	53.1	38.8	24.2	8.1	44.3	10.5	100.0	(817)
중소도시	45.8	38.6	17.5	4.9	39.0	9.3	100.0	(922)
읍면	38.7	41.4	15.3	6.1	31.0	8.0	100.0	(261)
$x^2(df)$	19.998***(4)	0.868(4)	17.172**(4)	12.608*(4)	17.527**(4)	3.3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시간지원 제도 중 유연근무제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모 재택근로와 시차출퇴근제는 10%를 약간 넘는 비율로 부의 이용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모의 재택근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유연근무제 모든 항목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높아졌으며,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3-20〉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유연근무제)

단위: %(명)

구분	모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모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부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계(수)	
전체	10.4	8.3	11.3	9.2	100.0	(2000)
성별						
남성	10.0	9.7	11.8	11.6	100.0	(1205)
여성	10.9	6.2	10.6	5.4	100.0	(795)
$x^2(df)$	1.873(2)	23.483***(2)	2.445(2)	34.950***(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2.0	8.0	10.7	7.8	100.0	(590)
유아부모	10.0	9.6	12.1	11.2	100.0	(677)
초등부모	9.3	7.4	11.1	8.3	100.0	(733)
$x^2(df)$	12.479*(4)	9.573*(4)	12.488*(4)	17.18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9	9.3	17.6	10.4	100.0	(998)
외벌이	4.4	7.0	4.5	8.0	100.0	(888)
해당없음	7.9	9.6	8.8	7.0	100.0	(114)
$x^2(df)$	133.543***(4)	11.981*(4)	139.263***(4)	13.811**(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7	8.8	5.7	6.9	100.0	(159)
251~350만원	4.4	5.6	3.6	7.7	100.0	(338)
351~500만원	6.9	6.9	7.5	7.2	100.0	(611)
501~600만원	8.7	5.3	10.5	6.8	100.0	(323)
601만원 이상	19.9	13.0	22.0	14.1	100.0	(569)
$x^2(df)$	124.970***(8)	40.727***(8)	139.910***(8)	43.176***(8)		
지역구분						

구분	모 유연 근무제 (재택근로)	부 유연 근무제 (재택근로)	모 유연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부 유연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계(수)	
대도시	13.8	9.3	13.8	11.4	100.0	(817)
중소도시	9.2	8.5	10.4	8.5	100.0	(922)
읍면	3.4	4.6	6.5	4.6	100.0	(261)
$x^2(df)$	26.832***(4)	13.191*(4)	13.476**(4)	17.247**(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는 50-70% 이상으로 절반 이상이 만족하였다. 이 중 모와 부의 시차출퇴근, 모 육아휴직, 모 근로시간 단축, 모 출산휴가 만족도는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부 출산휴가, 모 출산휴가는 각각 6%p, 4.6%p 상승하였으며, 모 육아휴직과 부 육아휴직, 모 시차출퇴근도 각각 9.4%p, 8.2%p, 6.5%p로 만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Ⅲ-3-2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만족도(2020년/2021년)

단위: %(명), 점

구분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만족 비율	5점 평균	계(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1. 모 출산휴가	67.5	3.8	100.0	(790)	72.1	3.9	100.0	(957)
	2. 부 출산휴가	47.8	3.3	100.0	(623)	53.8	3.4	100.0	(781)
	3. 모 근로시간 단축	68.9	3.8	100.0	(283)	70.4	3.8	100.0	(399)
	4. 부 근로시간 단축	59.6	3.8	100.0	(89)	64.6	3.8	100.0	(127)
	5. 모 육아휴직	62.3	3.6	100.0	(655)	71.7	3.9	100.0	(803)
	6. 부 육아휴직	55.5	3.6	100.0	(119)	63.7	3.7	100.0	(193)
	7.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	-	-	68.1	3.9	100.0	(207)
	8.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	-	-	-	60.2	3.7	100.0	(166)
	9.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67.8	3.8	100.0	(199)	74.3	3.9	100.0	(226)
	10.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73.2	3.9	100.0	(112)	73.2	3.9	100.0	(183)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00.

자녀돌봄 시간지원을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하였다. 모와 부 출산휴가, 모와 부 근로시간 단축, 모와 부 재택근무, 부 시차출퇴근제는 모두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의한 급여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모 시차출퇴근제는 '제도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Ⅲ-3-22〉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자녀돌봄 시간지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이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 (승진 시 불이익 등)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1. 모 출산휴가	27.0	2.7	31.1	14.9	12.2	8.1	4.1	100.0 (74)
2. 부 출산휴가	10.7	0.6	49.7	12.6	13.2	8.2	5.0	100.0 (159)
3. 모 근로시간 단축	17.6	5.9	32.4	8.8	20.6	8.8	5.9	100.0 (34)
4. 부 근로시간 단축	15.4	0.0	38.5	7.7	7.7	23.1	7.7	100.0 (13)
5. 모 육아휴직	32.0	4.0	25.3	20.0	13.3	2.7	2.7	100.0 (75)
6. 부 육아휴직	38.5	3.8	23.1	15.4	7.7	7.7	3.8	100.0 (26)
7. 모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18.2	9.1	54.5	0.0	9.1	0.0	9.1	100.0 (11)
8. 부 유연근무제 (재택근로)	26.7	0.0	33.3	20.0	13.3	6.7	0.0	100.0 (15)
9. 모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7.7	15.4	30.8	38.5	0.0	7.7	0.0	100.0 (13)
10. 부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25.0	6.3	31.3	18.8	6.3	12.5	0.0	100.0 (16)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나) 부모의 정책 효과성 인식

현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째아 기준으로는 영아부모의 53.9%가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를 선택하였다.

〈표 Ⅲ-3-2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1: 재택근로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계(수)	
전체	49.1	16.4	13.1	13.7	7.8	100.0	(2000)
성별							
남성	50.4	14.6	15.4	12.3	7.4	100.0	(1205)
여성	47.2	19.1	9.7	15.7	8.3	100.0	(795)
$x^2(df)$				23.368***(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53.9	14.9	14.2	11.5	5.4	100.0	(590)
유아부모	49.5	17.9	13.6	11.7	7.4	100.0	(677)
초등부모	44.9	16.2	11.7	17.2	10.0	100.0	(733)
$x^2(df)$				28.37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8	18.0	10.5	15.4	9.2	100.0	(998)
외벌이	52.3	14.3	15.7	11.1	6.6	100.0	(888)
해당없음	44.7	18.4	15.8	17.5	3.5	100.0	(114)
$x^2(df)$				32.211***(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9.1	18.2	13.8	11.3	7.5	100.0	(159)
251~350만원	51.5	11.5	20.1	13.3	3.6	100.0	(338)
351~500만원	52.0	16.5	11.1	12.4	7.9	100.0	(611)
501~600만원	48.6	18.6	13.6	11.1	8.0	100.0	(323)
601만원 이상	44.8	17.4	10.5	17.2	10.0	100.0	(569)
$x^2(df)$				47.232***(16)			
지역구분							
대도시	50.4	15.3	13.1	13.2	8.0	100.0	(817)
중소도시	47.9	16.5	12.4	14.9	8.4	100.0	(922)
읍면	49.0	19.5	15.7	10.7	5.0	100.0	(261)
$x^2(df)$				10.249(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현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4.2%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21.2%,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가 20.0%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Ⅲ-3-24〉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계(수)	
전체	19.0	24.2	21.2	20.0	15.8	100.0	(2000)
성별							
남성	17.3	26.1	19.3	20.9	16.3	100.0	(1205)
여성	21.4	21.1	24.0	18.5	15.0	100.0	(795)
$x^2(df)$				15.988**(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8.8	20.0	20.7	24.6	15.9	100.0	(590)
유아부모	20.2	25.7	22.3	17.3	14.5	100.0	(677)
초등부모	17.9	26.1	20.6	18.7	16.8	100.0	(733)
$x^2(df)$				18.155*(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2	24.2	21.5	20.7	15.2	100.0	(998)
외벌이	19.7	23.5	21.3	18.9	16.6	100.0	(888)
해당없음	19.3	28.1	17.5	21.1	14.0	100.0	(114)
$x^2(df)$				3.794(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0.1	24.5	19.5	19.5	16.4	100.0	(159)
251~350만원	21.3	24.6	18.9	20.4	14.8	100.0	(338)
351~500만원	18.5	24.7	21.6	18.2	17.0	100.0	(611)
501~600만원	18.0	24.1	25.1	20.1	12.7	100.0	(323)
601만원 이상	18.3	23.2	20.4	21.6	16.5	100.0	(569)
$x^2(df)$				10.165(16)			
지역구분							
대도시	18.7	23.7	22.0	19.7	15.8	100.0	(817)
중소도시	19.4	23.9	20.2	20.3	16.3	100.0	(922)
읍면	18.0	26.4	22.2	19.5	13.8	100.0	(261)
$x^2(df)$				2.64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현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이 49.1%로 가장 높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6.4%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Ⅲ-3-25〉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계(수)	
전체	49.1	16.4	13.1	13.7	7.8	100.0	(2000)
성별							
남성	50.4	14.6	15.4	12.3	7.4	100.0	(1205)
여성	47.2	19.1	9.7	15.7	8.3	100.0	(795)
$x^2(df)$				23.368***(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53.9	14.9	14.2	11.5	5.4	100.0	(590)
유아부모	49.5	17.9	13.6	11.7	7.4	100.0	(677)
초등부모	44.9	16.2	11.7	17.2	10.0	100.0	(733)
$x^2(df)$				28.37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8	18.0	10.5	15.4	9.2	100.0	(998)
외벌이	52.3	14.3	15.7	11.1	6.6	100.0	(888)
해당없음	44.7	18.4	15.8	17.5	3.5	100.0	(114)
$x^2(df)$				32.211***(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9.1	18.2	13.8	11.3	7.5	100.0	(159)
251~350만원	51.5	11.5	20.1	13.3	3.6	100.0	(338)
351~500만원	52.0	16.5	11.1	12.4	7.9	100.0	(611)
501~600만원	48.6	18.6	13.6	11.1	8.0	100.0	(323)
601만원 이상	44.8	17.4	10.5	17.2	10.0	100.0	(569)
$x^2(df)$				47.232***(16)			
지역구분							
대도시	50.4	15.3	13.1	13.2	8.0	100.0	(817)
중소도시	47.9	16.5	12.4	14.9	8.4	100.0	(922)
읍면	49.0	19.5	15.7	10.7	5.0	100.0	(261)
$x^2(df)$				10.249(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2) 전문가의 정책성과 평가

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의 수행 달성도는 '재택근무'가 73%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7점 척도, ⑤~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 를 합한 비율), 그 다음으로 '시차출근제'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68%, '육아휴직제도' 63% 순으로 긍정비율을 나타났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특히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정도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제도 개선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평가항목에 추가된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와 더불어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강화된 가정내 양육지원과 일부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Ⅲ-3-26〉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수행 달성도 인식 평가(2020년/2021년 조사)

단위: %(명), 점

정책과제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48.0	4.3	100.0	(100)	63.0	4.76	100.0	(10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6.0	4.2	100.0	(100)	58.0	4.55	100.0	(100)
(3) 배우자 출산휴가	60.0	4.6	100.0	(100)	68.0	4.95	100.0	(10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	-	-	-	73.0	4.98	100.0	(10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	-	-	-	68.0	4.83	100.0	(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 매우 잘 달성되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12.

'육아휴직제도'의 수행 달성도를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지원금이 확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 노력이 이루어지고 실제 남성의 이용률을 포함하여 전체 이용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그 이용기간에 비해 성평등한 육

아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측면에서 이용자 규모의 확대가 지닌 의미가 크다는 점을 높은 평가의 이유로서 지목하였다.

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성과평가 순위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로는 '육아휴직제도'가 63%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근제)'의 성과를 가장 높이 평가한 응답률은 4~12% 선으로 저조하였다.

〈표 Ⅲ-3-27〉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단위: %(명)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63.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9.0
(3) 배우자 출산휴가	12.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2.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4.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남성의 이용률 제고로 남성이 육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육아가 의미있고 가치있음을 인식하게 하며, 제도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대규모, 정규직 중심)이 여전히 제한적이나 다른 정책에 비해 개선 노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는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이나 사직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선택권을 보장하여 일-가정을 양립함과 동시에 영유아가 부모로 부터 안전한 양육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남녀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을 그 성과로 들었다.

반면에 자녀돌봄 지원 부문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지목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제도'와 '재택근무'가 공히 23%로 조사되었다.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기업(다양한 유형의 직장)의 상황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제도의 활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 및 직장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한 보완책도 요구된다는 점, 즉, 대체인력 지원이 없이 기존 인력이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여전히 낮고, 대기업 위주의 제도 사용이 지속되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재택근무'의 경우는 유연근무제 중 재택근무를 실시하려면 성과평가체계가 회사에 잘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업 중 인사시스템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활성화한 것으로 육아지원정책으로서의 재택근로는 여전히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코로나19 이후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하였다.

〈표 Ⅲ-3-28〉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단위: %(명)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3.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2.0
(3) 배우자 출산휴가	12.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23.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10.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 자녀돌봄 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자녀돌봄 시간지원 부문에서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은 과제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휴직제도'가 58.0%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0% 순이었다.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로서 ‘육아휴직제도’을 지목한 이유로는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남녀 모두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경우 합계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점과 영유아의 관점에서 생의 초기에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고, 장기간의 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제도 활용을 위한 직장내 문화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Ⅲ-3-29〉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단위: %(명)

정책과제	2021년 조사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58.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
(3) 배우자 출산휴가	9.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0.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3.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자녀돌봄 시간지원의 목표 달성도와 성과평가, 그리고 중점과제에 관한 인식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제도’는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과 동시에 향후 가장 중요시되는 과제로서 지목되었다. 반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미흡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식되나, 향후 그 중요도 인식은 육아휴직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녀연령 및 가구 여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순차적으로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직장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총괄 평가

본 연구의 부모조사 및 전문가 조사에서는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을 모두 포괄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큰 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을 질문하였다. 본 절에서는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응답한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가. 부모의 정책 효과성 인식

현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정하도록 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수당'이 26.6%로 그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와 '아동수당'을 선택한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첫째아 기준으로는 영아부모는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30.8%로 가장 높았고, 유아부모와 초등부모는 '아동수당'이 각각 29.5%,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는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8.0%로 가장 높았고, 외벌이는 '아동수당'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4-1〉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6.6	2.8	1.4	2.5	2.3	1.0	1.3	1.1	1.8	1.5
성별										
남성	28.7	2.4	1.6	1.8	2.3	1.2	1.5	1.2	1.7	0.7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여성	23.4	3.4	1.0	3.5	2.1	0.6	1.0	0.9	2.0	2.5
$x^2(df)$					62.913***(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24.7	3.9	2.4	3.1	2.7	0.3	0.5	0.8	0.8	1.9
유아부모	29.5	1.8	0.9	3.1	2.1	1.0	1.8	1.6	1.6	2.2
초등부모	25.4	2.9	1.0	1.5	2.0	1.4	1.5	0.7	2.7	0.4
$x^2(df)$					138.459***(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8	2.3	1.3	2.5	2.5	0.8	1.1	1.4	1.8	1.7
외벌이	30.3	3.7	1.1	2.4	2.0	1.1	1.7	0.8	1.9	1.2
해당없음	30.7	0.0	3.5	3.5	1.8	0.9	0.0	0.0	0.9	0.9
$x^2(df)$					55.288*(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2.1	1.3	2.5	5.7	1.3	0.0	0.6	0.0	2.5	1.3
251~350만원	29.6	3.3	0.3	2.4	2.7	0.3	2.7	0.9	1.8	1.2
351~500만원	26.7	2.5	1.3	2.3	1.6	1.8	0.8	1.5	2.0	1.8
501~600만원	27.9	4.0	1.2	2.2	1.5	0.0	1.9	1.2	0.9	1.2
601만원 이상	22.5	2.6	1.8	2.1	3.3	1.2	0.9	0.9	1.9	1.4
$x^2(df)$					89.741(72)					
지역구분										
대도시	25.3	3.5	1.8	2.2	3.4	1.3	1.6	1.7	1.7	1.2
중소도시	27.3	2.0	1.0	2.6	1.5	0.9	1.1	0.5	1.7	1.3
읍면	28.0	3.4	1.1	3.1	1.1	0.0	1.1	0.8	2.3	2.7
$x^2(df)$					55.662*(36)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계(수)	
전체	0.6	4.1	3.0	0.6	26.8	7.3	5.2	7.5	3.1	100.0	(2000)
성별											
남성	0.2	3.1	3.2	0.7	28.8	5.9	5.8	6.6	2.8	100.0	(1205)
여성	1.3	5.5	2.6	0.5	23.6	9.3	4.3	8.9	3.4	100.0	(795)
$x^2(df)$						62.913***(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0.7	0.8	2.9	0.8	30.8	7.8	6.9	6.1	1.9	100.0	(590)
유아부모	0.7	1.8	3.2	0.3	26.3	6.6	5.6	6.8	3.0	100.0	(677)
초등부모	0.4	8.7	2.7	0.7	23.9	7.4	3.4	9.3	4.1	100.0	(733)
$x^2(df)$						138.459***(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5.7	3.2	0.7	28.0	7.8	4.4	7.9	3.5	100.0	(998)
외벌이	0.7	2.5	2.5	0.5	25.5	6.9	5.7	6.9	2.7	100.0	(888)
해당없음	0.9	1.8	4.4	0.9	26.3	5.3	7.9	8.8	1.8	100.0	(114)
$x^2(df)$						55.288*(36)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0.6	0.6	1.3	0.6	26.4	8.2	7.5	6.3	1.3	100.0	(159)
251~350만원	0.9	2.7	2.1	0.6	27.2	5.9	7.4	6.8	1.5	100.0	(338)
351~500만원	0.5	4.3	3.3	0.7	26.4	6.2	4.7	8.5	3.3	100.0	(611)
501~600만원	0.3	5.3	2.5	0.3	29.1	8.0	3.4	6.2	2.8	100.0	(323)
601만원 이상	0.7	4.9	3.9	0.7	25.7	8.4	4.7	7.9	4.4	100.0	(569)
$x^2(df)$						89.741(72)					
지역구분						0.5					
대도시	0.5	3.1	4.0	0.6	25.7	8.0	4.7	7.3	2.2	100.0	(817)
중소도시	0.4	4.8	2.7	0.7	27.3	6.9	6.0	7.7	3.6	100.0	(922)
읍면	1.5	4.6	0.4	0.4	28.0	6.1	4.2	7.3	3.8	100.0	(261)
$x^2(df)$						55.662*(36)					

주: ① 아동수당 ②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③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④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⑦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⑧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⑨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⑩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⑪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⑫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⑮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⑰ 배우자 출산휴가 ⑱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⑲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현 정부의 전체 육아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4.3%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12.7%,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2.6%,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1.8%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들이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선택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전문가 조사 응답에서도 나타났듯이 시간지원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Ⅲ-4-2〉 전체 육아정책 성과가 가장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2	3.4	3.9	2.4	3.3	3.5	2.0	4.0	3.9	1.0
성별										
남성	1.2	3.6	4.2	2.1	3.7	3.8	2.3	3.7	4.5	0.9
여성	1.3	3.0	3.3	2.9	2.6	2.9	1.5	4.3	2.9	1.1
$x^2(df)$					25.474(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0.5	4.1	4.1	1.5	3.4	3.7	1.7	4.4	2.7	1.4
유아부모	1.8	4.0	4.1	3.5	3.0	3.5	1.3	3.8	3.5	0.9
초등부모	1.2	2.2	3.4	2.0	3.5	3.1	2.9	3.7	5.0	0.8
$x^2(df)$					54.036*(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	3.0	4.5	2.8	2.8	3.3	1.7	3.9	3.3	0.8
외벌이	1.2	3.6	3.4	2.1	4.1	3.6	2.4	4.2	4.7	1.4
해당없음	0.0	4.4	1.8	0.9	1.8	3.5	1.8	2.6	1.8	0.0
$x^2(df)$					37.094(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3	3.8	3.1	1.3	2.5	0.6	2.5	4.4	2.5	1.9
251~350만원	0.9	4.4	2.4	2.1	2.7	5.0	2.7	3.8	3.8	1.2
351~500만원	0.8	4.1	4.3	2.1	4.1	3.8	1.5	4.3	4.9	1.0
501~600만원	1.2	4.0	4.3	2.2	1.5	2.2	1.9	2.8	2.8	1.2
601만원 이상	1.8	1.4	4.2	3.3	4.0	3.7	2.1	4.2	3.7	0.5
$x^2(df)$					86.818(72)					
지역구분										
대도시	1.5	3.4	3.7	2.8	3.7	3.4	2.4	4.2	2.7	1.1
중소도시	1.2	3.1	4.1	2.2	3.6	3.5	2.0	3.8	5.2	1.2
읍면	0.4	3.8	3.4	1.9	1.1	3.4	0.8	3.8	2.7	0.0
$x^2(df)$					31.913(36)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계(수)	
전체	1.7	1.8	1.6	5.7	12.6	14.3	12.7	11.8	9.6	100.0	(2000)
성별											
남성	1.7	1.4	1.7	4.7	11.5	14.9	12.0	11.8	10.2	100.0	(1205)
여성	1.5	2.3	1.4	7.2	14.3	13.3	13.8	11.8	8.6	100.0	(795)
$x^2(df)$						25.474(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5	1.7	1.0	6.1	12.7	12.2	13.2	15.4	8.6	100.0	(590)
유아부모	1.3	1.6	1.0	5.9	12.7	16.2	13.3	8.6	9.7	100.0	(677)
초등부모	2.0	1.9	2.6	5.2	12.4	14.2	11.7	11.9	10.1	100.0	(733)
$x^2(df)$						54.036*(36)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	2.2	1.5	4.9	12.3	15.0	12.9	12.3	9.7	100.0	(998)
외벌이	1.8	1.5	1.6	6.5	12.8	12.5	12.5	10.6	9.6	100.0	(888)
해당없음	0.9	0.0	2.6	6.1	13.2	21.9	12.3	16.7	7.9	100.0	(114)
$x^2(df)$						37.094(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3.1	1.9	1.3	8.2	10.1	15.7	13.8	13.2	8.8	100.0	(159)
251~350 만원	2.4	1.2	2.1	5.3	15.7	13.9	11.2	11.8	7.4	100.0	(338)
351~500 만원	1.5	1.1	0.8	7.4	11.8	14.9	12.3	10.1	9.3	100.0	(611)
501~600 만원	0.6	1.9	3.4	5.9	13.3	14.9	15.2	12.4	8.4	100.0	(323)
601만원 이상	1.6	2.6	1.2	3.3	12.0	13.2	12.3	12.8	12.0	100.0	(569)
$x^2(df)$						86.818(72)					
지역구분											
대도시	1.8	1.6	1.6	5.1	13.0	13.7	12.1	12.4	9.8	100.0	(817)
중소도시	1.4	1.6	1.7	5.5	12.1	14.1	13.0	10.8	9.8	100.0	(922)
읍면	1.9	2.7	1.1	8.0	13.0	16.9	13.4	13.4	8.0	100.0	(261)
$x^2(df)$						31.913(36)					

주: ① 아동수당 ②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③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④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⑦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⑧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⑨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⑩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⑪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⑫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⑮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⑰ 배우자 출산휴가 ⑱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⑲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현 정부의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수당'이 17.2%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Ⅲ-4-3〉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7.2	2.5	1.6	1.4	2.6	1.4	1.0	1.1	5.0	0.9
성별										
남성	20.7	2.3	2.0	0.8	2.8	1.4	1.1	0.7	5.6	0.6
여성	11.8	2.8	0.9	2.1	2.3	1.3	0.8	1.6	4.0	1.4
$x^2(df)$					99.033***(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5.8	2.9	2.0	1.9	3.9	1.4	1.0	1.4	5.1	1.5
유아부모	19.1	2.4	1.8	1.6	1.6	1.8	1.3	1.0	4.4	0.4
초등부모	16.5	2.3	1.0	0.7	2.5	1.0	0.5	1.0	5.5	0.8
$x^2(df)$					72.752***(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5	1.5	1.7	1.2	3.2	1.4	1.0	1.2	5.2	1.4
외벌이	20.5	3.8	1.4	1.4	2.0	1.2	1.0	1.0	5.1	0.5
해당없음	22.8	0.9	1.8	2.6	1.8	1.8	0.0	0.9	2.6	0.0
$x^2(df)$					82.165***(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3.9	0.6	0.0	3.1	1.9	0.6	1.3	0.0	3.1	0.0
251~350만원	19.5	3.3	1.8	1.5	1.8	0.6	0.9	1.8	5.3	0.6
351~500만원	19.6	3.8	0.8	1.3	2.5	2.3	0.8	1.1	3.9	0.7
501~600만원	11.8	2.2	1.5	1.2	1.9	1.2	0.6	1.2	4.6	1.9
601만원 이상	14.2	1.4	2.6	0.9	3.9	1.1	1.2	0.9	6.7	1.1
$x^2(df)$					109.795**(72)					
지역구분										
대도시	19.1	2.3	1.3	1.6	2.4	1.2	1.0	1.3	5.6	1.0
중소도시	16.1	2.0	1.5	1.1	3.0	1.4	1.1	0.9	4.9	0.9
읍면	14.9	5.0	2.3	1.5	1.5	1.5	0.4	1.1	3.4	0.8
$x^2(df)$					31.525(36)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계(수)	
전체	0.7	4.9	2.9	3.8	25.9	8.8	6.9	7.5	4.3	100.0	(2000)
성별											
남성	0.5	3.2	2.3	2.3	27.5	7.9	7.9	6.2	4.1	100.0	(1205)
여성	0.9	7.4	3.8	6.0	23.5	10.2	5.3	9.4	4.5	100.0	(795)
$x^2(df)$						99.033***(18)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0	2.7	2.7	3.6	27.6	9.2	7.3	6.3	2.9	100.0	(590)
유아부모	0.4	3.4	2.8	3.7	27.5	10.0	6.6	5.9	4.1	100.0	(677)
초등부모	0.5	8.0	3.1	4.1	23.1	7.4	6.7	10.0	5.5	100.0	(733)
$x^2(df)$						72.752***(36)					

구분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0.5	6.9	3.2	3.9	24.8	10.1	5.5	8.8	4.8	100.0	(998)
외벌이	0.9	2.8	2.6	3.6	27.0	7.1	8.3	5.7	4.1	100.0	(888)
해당없음	0.0	3.5	2.6	4.4	26.3	10.5	7.0	9.6	.9	100.0	(114)
$x^2(df)$						82.165***(36)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0.6	2.5	2.5	2.5	28.9	10.1	6.3	6.3	5.7	100.0	(159)
251~350만원	0.9	3.3	2.4	4.1	26.3	6.5	10.1	7.1	2.4	100.0	(338)
351~500만원	0.5	5.2	2.1	4.4	26.2	8.3	6.1	6.4	3.9	100.0	(611)
501~600만원	1.5	7.4	3.7	3.1	26.0	11.5	6.5	6.8	5.3	100.0	(323)
601만원 이상	0.2	4.7	3.7	3.7	24.4	8.8	6.2	9.7	4.7	100.0	(569)
$x^2(df)$						109.795**(72)					
지역구분											
대도시	0.7	4.5	2.7	3.7	25.2	8.3	7.0	7.0	3.9	100.0	(817)
중소도시	0.5	5.3	2.8	3.5	26.5	8.8	6.3	8.7	4.9	100.0	(922)
읍면	0.8	4.6	3.8	5.4	26.1	10.3	8.4	5.0	3.1	100.0	(261)
$x^2(df)$						31.525(36)					

주: ① 아동수당 ②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③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④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⑦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⑧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⑨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⑩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⑪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⑫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⑭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⑮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⑰ 배우자 출산휴가 ⑱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⑲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전문가 정책 성과 평가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동수당'이 13.0%로 그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과거에 비해서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향상되었음,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었고, 중소기업의 육아

휴직지원금이 확대 되는 등 실천적인 정책이 제시되었기 때문, 최소한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는 안착되었다고 평가하고 이것이 민간으로 확산될 필요를 자극함, 다른 정책보다 육아휴직제도가 가장 육아에 확실하게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봄, 저출생문제의 해결이나 일가정양립을 위해 특정 시기(영유아기)에는 공적부문이 아닌 가정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맥락에서 육아휴직제도가 필요함, 현재 수준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하다고 평가됨,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에 비해 육아휴직제도는 이용자 수도 많고, 제도 개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영역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숙제가 남아 있지만, 제도적 개선 자체로만 본다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급여의 현실화로 인해 이용자의 소득보전 효과와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는 여성의 고용률제고와 일가정양립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증가하였음, 부부가 같이 자녀를 키우는 문화 마련,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강화로 부부중 육아가 가능한 사람이 편리하게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함,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육아휴직도 기본 권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짐, 남성의 육아휴직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매우 높아졌고,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할 수 있음, 공동육아책임(부모, 직장 공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 공공영역과 대기업에서의 육아휴직(고용노동부의 급여 현실화)이 자리잡아 가고 있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예방 가능하고, 영유아기 양육에서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되어 발달에 도움이 됨,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는 아직 확산이 문제이지만 젠더 이슈나 아동기 발달에서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등 중요한 사회문화로 자리잡음, 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급여확대등의 성과가 가장 크다고 봄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을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특정연령대까지 지속적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자 자율성이 높음, 대상과 연령의 확대로 정책효과를 늘려왔기 때문, 아동을 기준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부모,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서도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성과 측정이 간명하고 지급으로 정책집행 실적 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수당의 도입, 수혜 대상과 금액이

명료하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도 체감온도가 높았던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사용에 대해서 조금더 현장조사를 통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누구나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공평한 혜택으로 개별 가정에는 자녀양육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사회에는 양육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함, 현금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커보임, 아동수당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가정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충적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Ⅲ-4-4〉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단위: %(명)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13.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7.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5.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3.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2.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0.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2.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2.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6.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36.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0
	(3) 배우자 출산휴가	8.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4.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3.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가 14.0%,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해당자에게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임 다만 육아기 근로자가 재직하는 직장의 입장에서 보면 단축한 근무시간만큼 동료들의 업무과중이나 업무 연속성 불편 등 조직내의 조화로운 협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조직문화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 제도를 조직차원에서 서로 협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의 보조 대책을 수립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육아휴직이 확대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이 증가하지 않음, 근로가 일터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단축시간을 메워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짐, 근로가 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직장 분위기, 문화에 따라 이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시행률이 낮음, 단축근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곳 많음, 잘 활용하기도 어렵고 직장에서의 평가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 효과를 내기 어려움, 단축근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곳 많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인한 결손을 기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함, 단축제도 이용자가 부재하였을 경우 대체인력풀을 잘 갖추어 기존 기관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임, 부모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책인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보기 어려움,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안내,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음, 여전히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의 입장에서 직장 내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눈치를 봐야함 등을 제시하였다.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유연근무제 사용이 원활하나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많음,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함,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한 곳도 많아 코로나 종식후에도 사용이 용이할지 의문임,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 정책들에 비해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낮음,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택근로가 확대되긴 했지만 활용 격차가 크고, 제도적 지원이 미비함, 유연근무제 중 재택근무를 실시하려면 성과평가체계가 회사에 잘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

데, 기업 중 인사시스템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고 회사라는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것과 직에 대한 열의를 동등시하는 인식이 잔존, 직장에 따른 편차가 큼, 재택근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활성화한 것이며, 육아지원정책으로서의 재택근로는 여전히 정책 추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등을 제시하였다.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얻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의 금전의 수준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음, 고용 상태 및 직장의 여건에 따라 일부만이 누리는 특권이 되고 있으므로, 남성육아휴직의 경우, 공무원 등 일부 직종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공동육아를 위한 인식을 제고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남성휴직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공무원 및 학교 등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아직도 사기업 및 중소, 영세 업체, 자영업 등은 미흡함, 육아휴식제도의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경력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학교 등을 제외하고 제도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휴직 후 경력단절로 인한 승진 제한 등도 지속적인 문제임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Ⅲ-4-5〉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단위: %(명)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1.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2.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1.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9.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0.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6.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0.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9.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12.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
	(3) 배우자 출산휴가	7.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14.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6.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를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가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1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0.0%로 그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영아기가 일생에 제일 중요하고, 성장의 기반이 되므로 그 시기는 가정 양육이 중요함, 영아와 애착 대상간의 안정적 상호작용 확보가 매우 중요함, 육아휴직급여가 금전적 손실이 없게 된다면 출산율 제고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유아의 관점에서도 생의 초기에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차후 여러 육아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써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자녀양육의 부담때문이므로 스웨덴과 같이 남성 육아휴직도 의무화하고, 육아 휴직을 다녀오면 승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는 등 국가의 적극적 정책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및 해당 제도의 강화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출산율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봄, 실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직군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이 정착되어 있는 그룹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고 봄, 현재의 낮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 육아와 직업생활의 영위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함께 키우는 공동의 양육 책임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하며, 육아휴직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생활비이므로 육아휴직(휴가)의

대상과 재정지원 범위를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의 육아휴직 제도가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잘 정착 되면 육아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됨, 급여 현실화 및 인센티브 보장될 경우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기대됨,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최초 1-3년은 시설보육보다 가정보육(부모의)이 애착발달과 부모의 아동 이해 측면에서 더 중요함.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로 최초 2년은 부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설보육에서 오는 사고와 문제를 줄이고 아버지의 양육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음, 출산과 양육에서 남여의 성평등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이 출산당사자인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거부하게 하므로, 성평등이 보장되는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함, 그동안의 정책이 기관 중심에 치우쳐있었으며 이는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 발생.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영유아의 발달 뿐 아니라 가정의 가치 및 부모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함, 실제 출산 후 부모의 양육지원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육아휴직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등과 같은 양육 분담을 위한 남성의 휴직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등을 제시하였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을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가장 중요함, 보육교사의 비중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확대는 중요한 기본 요건이 될 것임,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육아지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여론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전환되면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육아지원 문제도 해결될 것임, 영유아들이 낮시간 동안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어린이집이자 보육교사이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영유아 발달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됨, 많은 아이를 함께 돌보아야 할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함, 보육의 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일해야 하는 부모들이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보육교사의 교직에 대한 사명감, 전문성 등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수준임 등을 제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육아휴직은 못쓰는

대상이 많고 이용기간이 짧으며, 노동시장에서 잠시 퇴장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더 중요하며 많은 부모가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함, 장기간의 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향후 가장 중요, 육아휴직에 비해 경력단절의 경험을 최소화하면서, 일가정양립을 위해 주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임신이나 출산기간보다는 육아의 기간이 훨씬 길고 더 다이나믹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잘 갖춰져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 자녀의 영유아기 시절에 주 양육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Ⅲ-4-6〉 전체 육아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단위: %(명)

구분	관련 국정과제	2021년 조사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6.0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0
	(2)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6.0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1.0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0.0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0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12.0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4.0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0.0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0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8.0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0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7.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0.0
	(3) 배우자 출산휴가	5.0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4.0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3.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Ⅳ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성과 평가

0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별 성과 평가
0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부문별 성과 평가

Ⅳ.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성과 평가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별 성과 평가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돌봄특별지원금 20만원), 긴급돌봄, 가족돌봄휴가의 성과에 대해 문헌분석에 근거해서 분석한다.

가.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돌봄특별지원금 20만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수당 지급액 월 평균 10만원은 본 연구의 2021년 부모 설문조사 결과인 2021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65.7만원의 약 15.2%, 2020년 부모 설문조사 결과인 2020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58.9만원의 약 17%에 해당한다.

2020년에는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게 기존의 아동수당에 추가하여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되었다(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에게는 아동돌봄특별지원금 20만원만 지급)(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2020:1; 보건복지부, 2020f: 1). 아동양육한시지원금 60만원은 월 평균으로는 5만원이므로 2020년 기준으로는 아동수당을 50% 증액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과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합치면 2020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58.9만원의 약 25.5%를 충당하는 금액이 된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2020년 취학 전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긴급돌봄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률은 2020년 상반기에는 10%(2.27), 28.4%(3.23), 55.1%(4.23), 72.7%(5.29)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

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20e: 2). 2020년 11월 이후에는 어린이집 휴원율에 따라 등원율이 변화하는 향상을 보이고 있다. 휴원율은 4.0%(’20.11.18.), 11.9%(11.23.), 80.8%,(12.11.), 92.9%(’21.1.4.)로 변화함에 따라 등원율은 88.5%(11.18.), 80.9%(11.23.), 59.8%(12.11.), 44.5%(‘21.1.4.)로 변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21i: 1).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원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부모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긴급돌봄 이용률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가족돌봄휴가

1)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수/이용가능성

2020년 4월 1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에 대해 실시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20a: 1). 해당 조사결과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주 9.3%, 근로자 61.6%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0a: 1).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맞벌이 4.5일, 외벌이 3.3일이었고,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이었다 (고용노동부, 2020a: 2). 2020년 3월에 실시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총 37,047명이 신청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하는 9만여 명의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42.6%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0a: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지원금으로, 2020년 도입 당시에는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을 지원하였다(고용노동부, 2020a: 3). 2020년 4.9부터는 가족돌봄비용 긴급비원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로 지원을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2020c: 1).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2020c: 2).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확대에 따라 총 12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

상하였다(고용노동부, 2020c: 2). 이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은 13만 2천명에 474억이 지원되었다(고용노동부, 2020b: 1).

2) 성별 가족돌봄휴가 이용률

고용노동부는 2020년 4월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여성 신청자가 69.0%(36,728명)이고, 남성 신청자는 31%(16,502명)으로 파악하였다(고용노동부, 2020c: 3).

3) 가족돌봄휴가 사각지대 현황

고용노동부는 2020년 4월 기준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9.1%(20,79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27.1%(14,402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용노동부, 2020c: 3).

2.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부문별 성과 평가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의 성과를 부모, 전문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가. 부모의 정책 이용률, 만족도 및 효과성 인식

1) 부모의 정책 이용률 및 만족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제도 이용률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아동양육한시지원은 50.4%가 이용하여 절반 이상이었다. 그 다음은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가 38.9%,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는 16.2% 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는 11.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와 부의

가족돌봄 휴가 이용률은 10% 이내로 낮은 편이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에서 긴급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긴급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2-1〉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제도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쿠폰 20만원)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유치원)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초등학교)	모 가족돌봄 휴가	부 가족돌봄 휴가	계(수)
전체	50.4	38.9	16.2	11.0	9.8	8.0	100.0 (2000)
성별							
남성	48.4	34.8	13.9	9.5	7.9	8.9	100.0 (1205)
여성	53.5	45.2	19.6	13.2	12.6	6.7	100.0 (795)
$x^2(df)$	8.463*(2)	36.320***(2)	32.212***(2)	13.502**(2)	12.140**(2)	7.979*(2)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46.6	43.6	2.7	1.9	8.1	7.6	100.0 (590)
유아부모	56.3	53.0	29.7	3.0	10.8	8.7	100.0 (677)
초등부모	48.0	22.1	14.5	25.8	10.1	7.6	100.0 (733)
$x^2(df)$	26.622***(4)	193.759***(4)	181.319***(4)	403.138***(4)	2.705(4)	0.80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5	47.2	21.0	17.5	15.5	10.0	100.0 (998)
외벌이	46.6	29.8	10.6	3.5	3.3	5.9	100.0 (888)
해당없음	52.6	36.8	16.7	12.3	9.6	7.0	100.0 (114)
$x^2(df)$	9.998*(4)	60.192***(4)	39.152***(4)	97.524***(4)	162.198***(4)	25.375***(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49.1	40.3	15.7	7.5	8.2	6.9	100.0 (159)
251-350만원	47.9	29.9	8.0	3.3	2.4	5.9	100.0 (338)
351-500만원	49.9	36.3	16.2	9.8	6.4	7.2	100.0 (611)
501-600만원	52.9	41.5	19.8	13.9	11.5	5.9	100.0 (323)
601만원 이상	51.3	45.2	19.0	16.2	17.2	11.6	100.0 (569)
$x^2(df)$	3.706(8)	28.596***(8)	27.411**(8)	47.443***(8)	128.209***(8)	41.534***(8)	
지역구분							
대도시	50.8	39.3	18.4	10.9	12.6	9.4	100.0 (817)
중소도시	50.8	38.5	15.1	11.1	7.3	6.4	100.0 (922)
읍면	47.9	39.1	13.0	11.1	9.6	9.2	100.0 (261)
$x^2(df)$	0.809(4)	1.260(4)	6.591(4)	0.749(4)	16.144**(4)	8.80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03명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이용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가 6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가 12.3% 순이었다.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8.4%), '주위에 가까이 있으므로'(4.2%), '비용지원이 되어서'(3.2%)도 적은 비중이지만 긴급돌봄 이용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초등부모가 영아, 유아 부모보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맞벌이보다 외벌이에서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아졌으며,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2-2〉 긴급돌봄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위에 가까이 있으므로	비용 지원이 되어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타	계(수)	
전체	69.5	12.3	4.2	3.2	8.4	2.5	100.0	(1003)
성별								
남성	61.3	14.9	5.5	4.5	10.8	3.0	100.0	(530)
여성	78.6	9.3	2.7	1.7	5.7	1.9	100.0	(473)
$x^2(df)$			36.778***(5)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66.7	14.8	5.3	3.4	7.6	2.3	100.0	(264)
유아부모	67.8	12.4	3.8	2.0	11.3	2.7	100.0	(444)
초등부모	74.6	9.8	3.7	4.7	4.7	2.4	100.0	(295)
$x^2(df)$			19.003*(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89.8	4.3	3.0	1.1	1.8	0.0	100.0	(626)
외벌이	31.8	28.0	6.0	5.7	21.1	7.5	100.0	(318)
해당없음	57.6	11.9	6.8	11.9	10.2	1.7	100.0	(59)
$x^2(df)$			376.071***(10)					

구분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위에 가까이 있으므로	비용 지원이 되어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타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3.9	19.7	5.3	3.9	14.5	2.6	100.0	(76)
251~350만원	38.3	23.3	7.5	5.0	21.7	4.2	100.0	(120)
351~500만원	61.4	16.0	3.4	5.1	10.6	3.4	100.0	(293)
501~600만원	83.7	6.7	1.7	1.1	3.9	2.8	100.0	(178)
601만원 이상	83.6	6.3	4.8	1.8	2.7	0.9		(336)
$x^2(df)$			139.607***(20)					
지역구분								
대도시	69.6	13.3	4.8	3.1	6.8	2.4	100.0	(414)
중소도시	69.5	11.3	3.3	3.1	10.0	2.8	100.0	(459)
읍면	69.2	12.3	5.4	3.8	7.7	1.5	100.0	(130)
$x^2(df)$			6.209(10)					

주: 긴급돌봄을 이용한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자녀를 긴급돌봄에 보내지 않은 997명을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를 조사하였다.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36.3%로 전년도 52.5%(김근진 외, 2020: 171)에 비해 낮아졌지만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그 다음은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가 31.3%,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어서'가 13.3% 순이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아 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영아, 초등부모보다 높았으며,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는 영아부모가 유아, 초등부모보다 높았다. 외벌이는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는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도시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과 '주위에 가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3〉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용신청을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공급부족)	주위에 가까이 없어서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기타	계(수)	
전체	36.3	31.3	3.7	2.5	13.3	12.8	100.0	(997)
성별								
남성	34.4	31.7	3.9	2.8	15.9	11.4	100.0	(675)
여성	40.4	30.4	3.4	1.9	8.1	15.8	100.0	(322)
$x^2(df)$			16.393**(5)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31.6	37.1	3.4	2.8	9.8	15.3	100.0	(326)
유아부모	42.1	24.9	3.0	2.1	17.2	10.7	100.0	(233)
초등부모	36.8	30.4	4.3	2.5	13.9	12.1	100.0	(438)
$x^2(df)$				20.212*(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2	21.8	7.0	2.4	17.2	12.4	100.0	(372)
외벌이	34.0	37.5	1.6	2.6	10.9	13.3	100.0	(570)
해당없음	40.0	30.9	3.6	1.8	12.7	10.9	100.0	(55)
$x^2(df)$				44.803***(10)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27.7	38.6	4.8	2.4	10.8	15.7	100.0	(83)
251~350만원	36.7	36.7	1.4	3.2	9.2	12.8	100.0	(218)
351~500만원	36.5	32.4	3.8	1.9	11.9	13.5	100.0	(318)
501~600만원	40.0	24.8	6.2	2.1	15.9	11.0	100.0	(145)
601만원 이상	36.5	26.2	3.9	3.0	18.5	12.0	100.0	(233)
$x^2(df)$				26.944(20)				
지역구분								
대도시	36.2	31.0	4.5	2.7	12.7	12.9	100.0	(403)
중소도시	37.8	30.0	3.2	1.7	14.9	12.3	100.0	(463)
읍면	31.3	36.6	3.1	4.6	9.9	14.5	100.0	(131)
$x^2(df)$				9.651(10)				

주: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만족 응답 비율은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이 7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이 69.3%로 나타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긴급돌봄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아동양육한시지

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쿠폰 20만원)이 68.0%로 나타났다. 모 가족돌봄휴가(65.1%)와 부 가족돌봄휴가(66.3%)는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2-4〉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쿠폰 20만원)	68.0	3.8	100.0 (1008)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74.9	4.0	100.0 (778)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69.3	3.8	100.0 (323)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67.7	3.8	100.0 (220)
5. 모 가족돌봄휴가	65.1	3.8	100.0 (195)
6. 부 가족돌봄휴가	66.3	3.8	100.0 (160)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쿠폰 20만원)을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원 금액 수준이 낮아서'가 69.0%로 가장 높았고, '지원 횟수가 적어서'가 21.4%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5〉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원 금액 수준이 낮아서	지원 대상 연령이 낮아서	지원 횟수가 적어서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계(수)
아동수당	69.0	7.1	21.4	2.4	100.0 (42)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불만족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어린이집(48.4%), 유치원(35.3%), 초등학교(35.0%) 모두 공통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의 낮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6〉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서비스 질/ 내용의 수준이 낮음	이용 방법/ 절차가 복잡함	이용 자격이 까다로움	주위에 가까이 없음 (접근성이 떨어짐)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오래 대기해야 함)	원하는 시간/ 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만족스러움	기타	계(수)
1,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48.4	6.5	12.9	3.2	0.0	9.7	3.2	9.7	6.5	100.0 (31)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35.3	11.8	5.9	17.6	5.9	5.9	5.9	5.9	5.9	100.0 (17)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35.0	5.0	10.0	0.0	5.0	25.0	15.0	0.0	5.0	100.0 (20)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모 가족돌봄휴가는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가 42.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부 가족돌봄휴가는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7〉 가족돌봄휴가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시간/ 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계(수)
1. 모 가족돌봄휴가	21.4	42.9	14.3	7.1	14.3	100.0 (14)
2. 부 가족돌봄휴가	33.3	16.7	25.0	0.0	25.0	100.0 (12)

주: 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을 음영 처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현금지원(아동양육한시지원금) 25.6%, 긴급돌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21.7%, 유연근로제(재택근로)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현금지원(아동양육한시지원금) 이 28.3%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긴급돌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 26.8%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는 긴급돌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 26.7%로 가장 높았으나, 외벌이는 현금지원(아동양육한시지원금)이 36.6%로 가장 높았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월 평균소득 250만원 이하인 경우 현금지원(아동양육한시지원금)이 50.3%로 가장 높았다.

〈표 Ⅳ-2-8〉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제도

단위: %(명)

구분	가족돌봄 휴가	육아 휴직	유연 근로제 (재택 근로)	유연 근로제 (시차 출퇴근)	긴급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현금지원 (아동양 육한시 지원금)	기타	계(수)	
전체	13.3	10.9	18.1	5.4	21.7	4.5	25.6	0.7	100.0	(2000)
성별										
남성	12.9	12.4	17.8	5.1	18.3	4.7	28.3	0.3	100.0	(1205)
여성	13.7	8.6	18.6	5.7	26.8	4.0	21.5	1.1	100.0	(795)
$x^2(df)$					36.955***(7)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11.5	13.4	19.7	4.4	20.7	3.7	25.8	0.8	100.0	(590)
유아부모	14.0	11.1	15.2	4.9	26.1	3.5	24.7	0.4	100.0	(677)
초등부모	13.9	8.7	19.5	6.5	18.4	5.9	26.3	0.7	100.0	(733)
$x^2(df)$					32.895**(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7	12.2	18.2	5.9	26.7	4.6	13.8	0.8	100.0	(998)
외벌이	8.9	9.8	18.5	5.3	16.3	4.2	36.6	0.5	100.0	(888)
해당없음	7.9	7.9	14.0	0.9	20.2	5.3	43.0	0.9	100.0	(114)
$x^2(df)$					73.874***(1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9.4	8.8	11.3	1.3	15.7	3.1	50.3	0.0	100.0	(159)
251~350만원	9.5	10.1	17.8	5.3	15.4	5.3	36.1	0.6	100.0	(338)
351~500만원	12.8	11.0	17.2	5.2	21.8	5.4	26.2	0.5	100.0	(611)
501~600만원	12.4	12.1	20.1	3.7	28.8	2.8	19.2	0.9	100.0	(323)
601만원 이상	17.6	11.2	20.0	7.6	23.0	4.2	15.5	0.9	100.0	(569)
$x^2(df)$					137.075***(28)					

구분	가족돌봄 휴가	육아 휴직	유연 근로제 (재택 근로)	유연 근로제 (시차 출퇴근)	긴급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현금지원 (아동양육한시 지원금)	기타	계(수)	
지역구분										
대도시	13.2	10.9	18.2	6.1	21.2	4.4	25.2	0.7	100.0	(817)
중소도시	12.4	11.3	18.8	5.0	21.6	4.8	25.6	0.7	100.0	(922)
읍면	16.5	9.6	15.3	4.2	23.8	3.4	26.8	0.4	100.0	(261)
$x^2(df)$					8.236(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초등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 비율은 15.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Ⅳ-2-9〉 (초등부모)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비율	5점 평균	계(수)	
초등학교 원격수업	15.8	2.6	100.0	(733)

주: 1) 만족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만족비율은 '만족', '매우 만족' 비율을 합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초등부모와의 면담조사에서 초등부모들은 원격교육 중 EBS에 대해서는 아이가 집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Zoom 수업에 대해서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초등부모A: 저희 아이도 1학년 때는 작년 1학기 때는 학교를 가지 않고 EBS로 수업 을 했구요. 2학기 때는 주 3회 등교를 했는데 사실 작년 1학기 때는 EBS로 그 어떤 학습효과도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는 1학년이었고 EBS를 틀어놓고 아이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학습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집이라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 거의 불가능했었구요. 2학기 때는 3 회 등교를 하고 2회는 EBS로 주 2회는 EBS로 수업을 했어요. 그 때는 이 정도로 수업을 하는 게 괜찮겠다 그렇게 만족을 했었는데 2학년 올라갔더니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을 때 저희 아이가 어느 정도 결손이 있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한 공백이 확실히 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첫째 아이도 있다 보니까 줌 수업을 보게 되면 줌 수업을 활용하는 교사 자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어떤 분은 정말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아이들을 줌 수업을 현장 수업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만약에 또 올해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그런 교사의 교육

> 같은 것들, 미디어를 활용한 줌이나 어떤 인터텟을 활용한 교사의 교육 부분에 좀 많은 지원이나 신경이나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모 면담에서는 원격수업이 교사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원격수업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 초등부모B: 줌 수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차만별이예요. 그 선생님에 따라. 그니까 기본적인 프레임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교사의 역량이 추가되어야 되지, 많은 아이들이, 이게 공교육이잖아교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수준 이상을,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갖춰서 배울 수 있는데 그냥 떡하니 그냥 수업을 준비하시는데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진짜 이런 인터텟 매체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뭐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구본을 하는데 선생님이 전혀 하지 못하고 저희 아이는 형이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아이가 다 가르쳐 줬어요. 니가 참 잘한다 하고 끝났어요. 그것도 좀 어이가 없었고. 그런 기본적인 틀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해 주셔야지 기본적인, 애들이 공교육을 받아야지 최소한의 것이 갖춰지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초등부모 중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불만족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격수업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학부모 부담 증가'가 21.9%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부담 증가' 19.5%,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연' 13.9%, '자녀의 미디어 의존 증가'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10〉 (초등부모)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명)

구분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부담 증가	원격수업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학부모 부담 증가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연	자녀의 미디어 의존 증가	계(수)	
초등학교 원격수업	36.1	19.5	21.9	13.9	8.6	100.0	(338)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초등부모 면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에 따라 학습결손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 초등부모C: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가 학습 결손이 우려된다 이렇 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랑 대화를 해 보니까 1학년,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시험을 잘 쳐야 된다든지 시험 칠 때 집중을 해서 내가 아는 걸 모두 적어야 된다든지 그런 중요도를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푸는 학습지 수준 아니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에 대한 걸 1학년 때 학습이 많이 못 된 것 같더라구요. 모르는,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반 정도 되고 학교 생활, 규율, 시험, 수행평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지금 2학년인데도 아직 그런 것들 적응하는 수준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해야 하는 것들을 2학년 1학기 때 학습도 하면서 학교 규율도 배우면서 규칙과 그런 걸 따라가는 거를 조금 1년 늦게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보육, 등원수업 등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영유아 부모 중 65.6%(영향 있음 35.4%, 상당한 영향 있음 30.2%)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영향 없음 2.5%, 거의 영향 없음 5.3%)는 7.7%에 불과하였다.

〈표 Ⅳ-2-11〉 (영유아 부모)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보육, 등원수업 등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단위: %(명)

구분	영향 없음	거의 영향 없음	약간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상당한 영향 있음	계(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2.5	5.3	26.6	35.4	30.2	100.0 (1606)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영유아 부모 면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교우관계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 영유아 부모A: 여럿이서 어울려 노는 경험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끔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는 표현을 첫째가, 둘째는 애초에 그런 경험이 좀 거의 없었고 애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코로나를 겪고 있으니까 첫째는 그런 표현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옛날처럼 친구들이랑 같이 뭐 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 영유아 부모B: 저도 바깥놀이 활동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을 만히 제한되고 있어서 그런 바깥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뿜어내야 될 에너지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나마 산책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또래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 엄마랑만 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서 짜증이 늘거나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구요. 그리고 또래 관계가 어린이집을 안 가면 친구를 못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친구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많아서 학교에 가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거기서 또래 관계와 친구 관계 그리고 선후배 관계들을 과연 아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초등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원격수업 확대가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초등 부모 중 67.7%(영향 있음 34.5%, 상당한 영향 있음 33.2%)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영향 없음 2.3%, 거의 영향 없음 5.7%)는 8.0%에 불과하였다.

〈표 Ⅳ-2-12〉 (초등 부모)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원격수업 확대가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단위: %(명)

구분	영향 없음	거의 영향 없음	약간 영향 있음	영향 있음	상당한 영향 있음	계(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감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	2.3	5.7	24.3	34.5	33.2	100.0 (733)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75.7%(필요함 38.4%, 매우 필요함 37.3%)에 달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필요 없음 1.7%, 거의 필요 없음 3.7%)은 5.4%에 불과하였다.

〈표 Ⅳ-2-13〉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필요 없음	거의 필요 없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양육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정책의 필요성	1.7	3.7	19.1	38.4	37.3	100.0 (2000)

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부모의 정책 효과성 인식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이 41.8%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이 24.7%로 그 뒤를 이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는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32.3%,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29.9%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외벌이는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51.4%,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19.7%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Ⅳ-2-1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유치원)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초등학교)	가족 돌봄 휴가	계(수)	
전체	41.8	24.7	7.2	9.3	17.0	100.0	(2000)
성별							
남성	45.0	23.3	7.0	8.0	16.7	100.0	(1205)
여성	37.0	26.8	7.5	11.2	17.5	100.0	(795)
$\chi^2(df)$			15.167**(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41.2	36.8	2.9	1.5	17.6	100.0	(590)
유아부모	41.4	28.5	13.7	3.1	13.3	100.0	(677)
초등부모	42.7	11.5	4.6	21.3	19.9	100.0	(733)
$\chi^2(df)$			341.97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3	29.9	8.0	12.4	17.4	100.0	(998)
외벌이	51.4	19.7	6.3	5.7	16.9	100.0	(888)
해당없음	50.9	18.4	7.0	9.6	14.0	100.0	(114)
$\chi^2(df)$			90.068***(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4.7	18.9	6.3	6.9	13.2	100.0	(159)
251~350만원	47.3	21.9	5.6	5.9	19.2	100.0	(338)
351~500만원	44.8	23.6	6.2	9.7	15.7	100.0	(611)
501~600만원	36.5	29.1	7.7	9.9	16.7	100.0	(323)
601만원 이상	34.6	26.7	9.1	11.2	18.3	100.0	(569)
$\chi^2(df)$			42.816***(16)				
지역구분							
대도시	41.9	25.5	8.2	8.7	15.8	100.0	(817)
중소도시	41.5	24.3	6.6	9.3	18.2	100.0	(922)
읍면	42.5	23.8	6.1	11.1	16.5	100.0	(261)
$\chi^2(df)$			5.18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1$, *** $p < .001$.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가족돌봄휴가'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15〉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단위: %(명)

구분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유치원)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초등학교)	가족 돌봄 휴가	계(수)	
전체	20.2	9.4	5.5	15.1	50.0	100.0	(2000)
성별							
남성	19.2	9.8	6.1	16.7	48.3	100.0	(1205)
여성	21.6	8.8	4.5	12.6	52.5	100.0	(795)
$x^2(df)$			11.008*(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22.4	10.7	3.4	16.4	47.1	100.0	(590)
유아부모	18.0	9.2	7.7	12.1	53.0	100.0	(677)
초등부모	20.3	8.6	5.0	16.6	49.4	100.0	(733)
$x^2(df)$			23.705**(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4	10.1	5.2	14.1	47.1	100.0	(998)
외벌이	16.9	8.7	5.5	16.0	52.9	100.0	(888)
해당없음	16.7	8.8	7.0	15.8	51.8	100.0	(114)
$x^2(df)$			16.883*(8)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15.1	6.3	8.2	10.7	59.7	100.0	(159)
251~350만원	18.9	10.7	4.7	18.6	47.0	100.0	(338)
351~500만원	18.3	9.3	5.6	16.0	50.7	100.0	(611)
501~600만원	20.7	10.2	4.3	12.4	52.3	100.0	(323)
601만원 이상	23.9	9.1	5.6	14.6	46.7	100.0	(569)
$x^2(df)$			25.181(16)				
지역구분							
대도시	20.3	10.2	6.1	15.8	47.6	100.0	(817)
중소도시	20.9	8.1	4.6	13.3	53.0	100.0	(922)
읍면	16.9	11.5	6.5	18.8	46.4	100.0	(261)
$x^2(df)$			15.37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질문한 결과,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이 36.6%로 가장 높았고, '가족돌봄휴가'가 25.1%로 그 뒤를 이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는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8.5%, '가족돌봄휴가' 27.4%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외벌이는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44.7%, '가족돌봄휴가' 23.0%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는 월 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는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51.6%, '가족돌봄휴가' 17.0%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601만원 이상은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9.5%, '가족돌봄휴가' 27.8%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Ⅳ-2-16〉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

단위: %(명)

구분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유치원)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초등학교)	가족 돌봄 휴가	계(수)	
전체	36.6	17.5	7.2	13.7	25.1	100.0	(2000)
성별							
남성	41.8	17.2	7.5	10.5	23.1	100.0	(1205)
여성	28.7	17.9	6.8	18.6	28.1	100.0	(795)
$x^2(df)$			51.072***(4)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38.0	26.8	3.2	3.9	28.1	100.0	(590)
유아부모	36.8	18.8	14.3	8.6	21.6	100.0	(677)
초등부모	35.3	8.7	3.8	26.3	25.8	100.0	(733)
$x^2(df)$			280.46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5	19.6	8.2	16.3	27.4	100.0	(998)
외벌이	44.7	15.8	5.7	10.8	23.0	100.0	(888)
해당없음	44.7	11.4	9.6	13.2	21.1	100.0	(114)
$x^2(df)$			62.519***(8)				

구분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유치원)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 (초등학교)	가족 돌봄 휴가	계(수)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1.6	15.7	8.2	7.5	17.0	100.0	(159)
251~350만원	42.3	16.0	5.0	10.9	25.7	100.0	(338)
351~500만원	37.8	17.0	7.7	14.2	23.2	100.0	(611)
501~600만원	33.4	16.4	6.5	16.7	26.9	100.0	(323)
601만원 이상	29.5	19.9	8.1	14.8	27.8	100.0	(569)
$x^2(df)$			44.111***(16)				
지역구분							
대도시	37.0	18.1	9.2	11.4	24.4	100.0	(817)
중소도시	37.3	17.4	6.0	14.3	25.1	100.0	(922)
읍면	33.0	15.7	5.4	18.8	27.2	100.0	(261)
$x^2(df)$			18.39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나. 전문가 정책 성과 평가

1) 정책 효과성 평가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의 긴급 육아지원의 정책 효과성은 대체로 서비스 부문이 높고, 현금지원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평가한 비율(⑤~⑦ '정책 효과성 매우 높음'을 합한 비율, 7점 척도)은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77.0%(5.39점, 7점 만점),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70%,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69% 순으로 높고,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의 해당 비율은 57.0%에 그쳤다.

〈표 Ⅳ-2-17〉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단위: %(명), 점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2021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아동양육한시지원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57.0	4.70	100.0	(100)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77.0	5.39	100.0	(100)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69.0	5.26	100.0	(100)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70.0	5.19	100.0	(100)
(5) 가족돌봄휴가	61.0	4.93	100.0	(100)

주: 1) 긍정비율은 '⑤', '⑥', '⑦' 정책 효과성 매우 높음'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2) 평균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중에서 가장 정책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과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44%, 가족돌봄휴가 23%, '아동양육한시지원금' 22%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앞서 다룬 정책 효과성과 비교하여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지원은 동일하게 가장 높은 효과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나, 현금지원과 휴가제도의 경우는 수요자 측면에서 그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평가되었다.

각 과제별로 정책 효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은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택근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예방한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초등학교의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은 초등학교가 문을 닫아 돌봐줄 사람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도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초등학교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비해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로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격수업 등 비대면 상황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 돌볼 수 있고, 특히 가정으로 파견된 돌봄인력의 경우는 믿을 수 있는 인력을 긴급하게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영아자녀의 경우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발생할 수 있는 등으로 인해 부모가 직접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은 여성의 경력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기관에 돌봄을 신청하는 것은 감염 우려 등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있으나, 특별지원금은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을지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표 Ⅳ-2-18〉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 과제

단위: %(명)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2021년 조사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2.0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44.0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6.0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5.0
(5) 가족돌봄휴가	23.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다른 한편 코로나19 대응의 긴급 육아지원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 과제로는 ‘가족돌봄휴가’ 39%, ‘아동양육한시지원금’ 3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9% 순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정책대상자가 매우 한정적 이어서 눈치 보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사용기간이 짧으며, 휴가사용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간의 한 돌봄휴가 제공이 효과성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현급에 비해 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현금지원의 목표가 모호하고 그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그 효과를 진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는 이용시간이 길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인 점 등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의 역할이 미흡하였다고 평가되었다.

〈표 Ⅳ-2-19〉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단위: %(명)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2021년 조사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34.0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4.0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0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9.0
(5) 가족돌봄휴가	39.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향후 중점과제

코로나19 대응의 긴급 육아지원 중에서 향후 중요한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과 '가족돌봄휴가'가 각각 38%와 34%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반면에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초등학생의 긴급돌봄에 비해서도 낮은 10%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해야 할 과제로 지목한 이유는 다음이 제기된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팬데믹 초기에는 자녀를 가정에서 돌봄을 했으나 장기화 될 경우와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에의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개선된 방역조치에 의한 안전한 일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기회 제공하고, 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 시에 휴가를 활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 Ⅳ-2-20〉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의 향후 중점과제

단위: %(명)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2021년 조사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10.0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38.0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0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4.0
(5) 가족돌봄휴가	34.0
계(수)	100.0(1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한편 이상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이외에 추가과제로는 가정내 양육시의 자녀돌봄 관련 지원, 구체적으로 '온택트 문화생활(온라인 인형극 관람, 온라인 체험 등) 바우처 지급'과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원, 서비스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코로나19 대응의 긴급 육아지원의 정책 효과성 및 수요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지원은 정책 효과성과 향후 중요도가 동시에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그 성과는 돌봄서비스 부문에 비해 낮았으나, 향후 중점과제로서 현금지원에 비해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그러므로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의 기본 방향은 돌봄서비스와 부모의 직접돌봄을 양축으로 하되, 아동가구 여건에 맞게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고려할만하다고 본다. 즉, 집단휴원으로 인한 자녀돌봄의 사각지대가 초래되지 않도록 안전한 긴급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녀를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경우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돌봄서비스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부모의 경우는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가정 내 양육 가구를 위한 양육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책 성과 평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부정비율(어려움+매우어려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아의 보호 및 관리'가 6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긴급보육 중인 원아의 부모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 요청' 60.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 보호 및 관리' 54.1%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21〉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원장)

단위: %(명), 점

관련 정책과제	① 어려움 없음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어려움	긍정 비율 (①+②)	부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1. 어린이집 소독과 방역 조치	13.5	9.8	27.1	34.6	15.0	23.3	49.6	100.0	(133)	2.72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 보호 및 관리	6.0	10.5	29.3	32.3	21.8	16.5	54.1	100.0	(133)	2.47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아의 보호 및 관리	6.0	9.8	21.1	35.3	27.8	15.8	63.2	100.0	(133)	2.31
4. 방역관련 물품(소독제 등) 구입을 위한 비용 확보	13.5	10.5	35.3	24.1	16.5	24.1	40.6	100.0	(133)	2.80
5.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원아)에 대한 부모 지원(놀이지도 안내, 온라인 교육자료 준비 등)	6.0	9.8	32.3	28.6	23.3	15.8	51.9	100.0	(133)	2.47
6. 긴급보육 중인 원아의 부모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 요청	6.8	11.3	21.8	23.3	36.8	18.0	60.2	100.0	(133)	2.28
7. 긴급보육 중인 원아의 부모에게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안내	11.3	16.5	36.8	25.6	9.8	27.8	35.3	100.0	(133)	2.9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질문하였다. 1순위 기준으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이 28.6%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 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가 22.6%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22〉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1/2)

단위: %(명)

구분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	보육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원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소독제, (입모양이 보이는) 아동용 마스크 등)	보육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전체	28.6	22.6	15.0	12.0	11.3	3.0
원장/교사 구분						
원장	28.6	22.6	15.0	12.0	11.3	3.0

구분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	보육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원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소독제, (입모양이 보이는) 아동용 마스크 등)	보육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32.5	22.5	10.0	7.5	17.5	5.0
민간	27.7	19.1	21.3	14.9	2.1	2.1
가정	26.1	26.1	13.0	13.0	15.2	2.2
$x^2(df)$			18.004(18)			
지역 구분						
대도시	32.3	25.8	19.4	9.7	6.5	1.6
중소도시	21.9	20.3	9.4	15.6	17.2	4.7
읍면	57.1	14.3	28.6	0.0	0.0	0.0
$x^2(df)$			17.953(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표 Ⅳ-2-23〉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2/2)

단위: %(명)

구분	각 연령별 코로나19 대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부모용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자료(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감염병 예방 관련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내실화	기타	계(수)	
전체	3.0	1.5	0.8	2.3	100.0	(133)
원장/교사 구분						
원장	3.0	1.5	0.8	2.3	100.0	(133)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2.5	2.5	0.0	0.0	100.0	(40)
민간	6.4	0.0	2.1	4.3	100.0	(47)
가정	0.0	2.2	0.0	2.2	100.0	(46)
$x^2(df)$			18.004(18)			
지역 구분						
대도시	3.2	0.0	0.0	1.6	100.0	(62)
중소도시	3.1	3.1	1.6	3.1	100.0	(64)
읍면	0.0	0.0	0.0	0.0	100.0	(7)
$x^2(df)$			17.953(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순위 기준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득 및 방역 지원'이 16.5%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 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가 15.8%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24〉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1/2)

단위: %(명)

구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보육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어린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원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보육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 (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부모용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자료 (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전체	16.5	15.8	15.0	12.8	11.3	8.3
원장/교사 구분						
원장	16.5	15.8	15.0	12.8	11.3	8.3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7.5	15.0	17.5	15.0	15.0	10.0
민간	19.1	10.6	12.8	17.0	8.5	8.5
가정	21.7	21.7	15.2	6.5	10.9	6.5
$x^2(df)$	11.380(18)					
지역 구분						
대도시	11.3	19.4	21.0	11.3	6.5	12.9
중소도시	23.4	14.1	10.9	10.9	15.6	4.7
읍면	0.0	0.0	0.0	42.9	14.3	0.0
$x^2(df)$	32.003(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표 Ⅳ-2-25〉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2/2)

단위: %(명)

구분	각 연령별 코로나19 대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소독제, (입모양이 보이는) 아동용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관련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내실화	기타	계(수)	
전체	6.8	6.0	3.0	4.5	100.0	(133)
원장/교사 구분						
원장	6.8	6.0	3.0	4.5	100.0	(133)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5.0	5.0	2.5	7.5	100.0	(40)
민간	8.5	8.5	4.3	2.1	100.0	(47)
가정	6.5	4.3	2.2	4.3	100.0	(46)
$x^2(df)$			11.380(18)			
지역 구분						
대도시	8.1	6.5	1.6	1.6	100.0	(62)
중소도시	4.7	3.1	4.7	7.8	100.0	(64)
읍면	14.3	28.6	0.0	0.0	100.0	(7)
$x^2(df)$			32.003(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 $p < .05$,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순위 기준으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 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38.3%, '가정 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원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30.1%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26〉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1/2)

단위: %(명)

구분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	보육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어린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원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보육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전체	39.8	38.3	30.1	24.1	19.5
원장/교사 구분					
원장	39.8	38.3	30.1	24.1	19.5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47.5	37.5	27.5	32.5	12.5
민간	36.2	29.8	34.0	19.1	21.3
가정	37.0	47.8	28.3	21.7	23.9
지역 구분					
대도시	38.7	45.2	40.3	17.7	12.9
중소도시	37.5	34.4	20.3	28.1	28.1
읍면	71.4	14.3	28.6	42.9	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표 Ⅳ-2-27〉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2/2)

단위: %(명)

구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소독제, (입모양이 보이는) 아동용 마스크 등)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부모용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자료(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각 연령별 코로나19 대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감염병 예방 관련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내실화	기타
전체	18.0	9.8	9.8	3.8	6.8
원장/교사 구분					
원장	18.0	9.8	9.8	3.8	6.8
설립유형					
국공립 및 법인 외	12.5	12.5	7.5	2.5	7.5
민간	23.4	8.5	14.9	6.4	6.4

구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소독제, (입모양이 보이는) 아동용 마스크 등)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부모용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자료(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각 연령별 코로나19 대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감염병 예방 관련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내실화	기타
가정	17.4	8.7	6.5	2.2	6.5
지역 구분					
대도시	16.1	12.9	11.3	1.6	3.2
중소도시	18.8	7.8	7.8	6.3	10.9
읍면	28.6	0.0	14.3	0.0	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조사」의 결과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긴급보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달리 2021년에는 등원하는 부모들의 수가 급증하여 사실상 긴급보육 상황이 아나라 일상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운영기준은 긴급보육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방역 문제도 더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장 A는 긴급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 한하여 등원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긴급보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정내 양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장A: 1년 이상 코로나 상황을 겪게 되면서 집에서의 학부모님들의 적응도라는 것이 이미 코로나에 적응이 됐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으로 대부분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소독과 위생을 한다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부분인데 이제 조금은 점점 더 책임 전가가 어린이집에만 국한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장C: 한 달에 한 번씩. 키트를 고가,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제대로 오 정말 좋다는 그런 코로나 키트를 지면이랑 또 물건이랑 그 다음에 동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정말 코로나 키트를 해가지고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고 가정에서 함께 한 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어린이집이랑 가정 부모참여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키즈노트 공지사항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1차, 2차, 3차, 4차를 해서 2월까지 7차 코로나 키트까지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부모님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되게 온라인으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구요.

교사C: (2020년 코로나19 인한 긴급보육으로) 저희 자체도 교육이나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들과의 교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하면서 그거는 긴급보육이라는 잣대 하에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는 잣대 하에 그게 시행이 되고 그걸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놀이키트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그랬는데 100% 등원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100% 등원을 하고 있고 긴급보육이라는 양, 두 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 등원인데도 그걸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원장A: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사유는 불문합니다라고 하면 물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긴급보육을 하는 거지만, 긴급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 없음이라고 나와 버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대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학부몸님들에 대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중략) 긴급보육의 주요 목적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이기 때문에 긴급보육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유 없음, 이용자에 대한 사유 없음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용부모의 방역기준이 권고 수준에 그쳐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휴원 등의 우려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원장 C는 일부 이용부모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이 야기되어도 해당 부모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속적인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용부모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원장C: 나라에서 강력히 권고합니다가 아니라 필수라는 자체를 해서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딱 묶어서 이동 자체를 어린이집에, 사실은 어린이집에 한 명이 걸리게 되면 거기 선생님, 저희 어린이집은 20명이니까 20가족이니까 20가족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에게도 계속 지속적으로 긴급보육 이용 사유서를 보내고 꼭 필요한 날만 체크해서 등원시켜 주세요 해서 계속 받고는 있으나 그냥 집에서 어머니는 계시고, 직장을 나가시거나 그렇진 않지만 계속 체크를 해서 보내시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중략) 그냥 어린이집을 바로 등원시키는 부모님들도 정말 현재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라에서 조금 더 어린이집에 모든 걸 책임을 넘기고 어린이집 너희들이 부모님을 설득해봐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거는 조금 긴급한 상황이니 나라에서 필수로 요거는 좀 묶어주셨으면 하는 정말 간곡한 바람입니다.

교사B: 또 요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도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확진자가 발생해 갖고 2주간, 요번 주 14일까지 2주간 저희가 폐쇄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놀이키트 보내고 요리활동도 보내고 계속 부모님들하고 키즈노트를 계속 주고받고 상황을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었어요(중략)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앞으로는 겨울이 되고 그래서 독감하고 코로나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거나 콧물이 나거나 열이 났을 때는 코로나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하고 저희 원에 등원을 시켜줬으면 하는 게 사실 제일 바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감기가 걸렸을 때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는 등원시켜 주세요 하는 거를 명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가 확진됐을 때는 그 동선이나 다 공개되면서 아이들이나 가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 쉬쉬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저희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한테 다 돌리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관련 물품지원의 강화와 가정내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자료 등의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원장 C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영아반의 경우는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하며, 등원하지 않는 아동들을 위한 대응이 개별 어린이집 또는 교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자료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제기하였다. 또한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 그리고 교육 실시에 관한 교사 대상 재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교사 A).

원장C: 영아 애들이 코로나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제일 안타까운 건 영아들이 계속 말도 못하는 친구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코로나 시대의 친구들이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는 걸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서 정말 얼굴에 막 이렇게 트러블 생기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지는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략)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건 저희 같은 경우는 0세 친구들이잖아요. 0에서부터 2세 친구들인데 제일 필요한 건 언어적으로 입모양을 보면서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발화를 해야 되고 단어를 따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하는데 마스크로 막혀 있어가지고 언어 전달이 잘 안되고 (중략) 0세 영아, 언어로 표현하고 입모양을 보면서 얘네들이 시각과 입으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보이는 마스크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사서 개별적으로 교사들한테 지원을 했으나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더라구요.

원장B: 두 번째 해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특별활동이 잠깐 허용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아이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없는 이런 시기인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큰 아쉬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C: 맞벌이 가구들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는 긴급보육을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긴급이든 어떻게 됐든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부모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그냥 어린이집에 정당하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훈육과 아동학대 이런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고 줌을 통해

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린이집 자체 내 있는 컨텐츠로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육아종이라든지 지원해주는 컨텐츠 갖고 하는데 작년에 지원해줬던 컨텐츠 똑같고 올해도 올라와 있는 컨텐츠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계속 간다면 이런 놀이 지원이라든지 훈육이나 아동학대라는 이런 부모교육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요런 거 교육자료들을 계속 컨텐츠를 마련해서 어린이집으로 배포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구요.

원장C: 부모를 위한 공통 부모교육자료, 코로나19로 가정에 있으니까 놀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내려 보내서 집에서 놀이를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원 자체에서 그냥 여기 저기 자료를, 그래서 원 자체에서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교사A: 작년부터 많이 생긴 게 랜선 교육이었잖아요. 랜선 보육, 또 줌 같은 걸로 많이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보유교사는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류들 정도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작년에 갑자기 생긴 코로나로 인해서 급급하게 줌으로 수업하는 방법도 배워야 했었고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배워야 됐었고 온갖 공모전에 지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몰랐었던, 스톱모션도 배웠어요 저희는. 그런 것들. 저희의 전문지식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다 보니 저희가 사실 쉽게 받으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2021년은 부모님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안되겠다는 마음이 크셔서 그런지 거의 100% 등원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저희는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소독, 교육, 놀이지원, 거기다 또 추가된 게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사B: 아이들이 현장학습도 못 가고 큰 아이들은 특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놀이가 없을까 항상 교사들하고 원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저희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오감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 전체에서. 영아반은 영아반대로 유아반은 유아반대로 각 반별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고충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중략) 아이들이 활동을 못해서 교사들이 모든 거를 아이디어를 짜내서 충족해 줘야 되는 상황이 사실 교사들한테는 힘든 상황이예요

그 밖에도 아동안전의 측면에서 긴급보육 시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검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원장 A는 등원하지 않는 아동이 학대 위험 등 성장의 어려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원장A: 2020년도를, 지금껏 저희는 한번도 나오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퇴소도 하지 않으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사실은, 어린이집은 늘 아동학대의 중심에 있지만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은 가정 내 아동학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니 그런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가정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었었던 부분이었고 또 아이들을 계속 돌보다 보면 1학기, 2학기 아동발달 뭘 행동평가표라든지 어쨌든 이 아이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발달평가표를 써서 나가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유치원 원장의 응답은 다음 표와 같다.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부정비율(어려움+매무 어려움)은 "가정 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부모 지원(놀이지도 안내, 온라인 교육자료 준비 등'이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직원 보호 및 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아의 보호 및 관리'가 각각 58.7%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28〉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의 어려움(원장)

단위: %(명), 점

세부 활동	① 전혀 어려움 없음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어려움	긍정 비율 (①+②)	부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1. 유치원 소독과 방역 조치	8.7	21.7	32.6	21.7	15.2	30.4	37.0	100.0 (46)	2.87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직원 보호 및 관리	2.2	15.2	23.9	30.4	28.3	17.4	58.7	100.0 (46)	2.33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아의 보호 및 관리	2.2	17.4	21.7	17.4	41.3	19.6	58.7	100.0 (46)	2.22
4. 방역관련 물품(소독제 등) 구입을 위한 비용 확보	8.7	21.7	28.3	30.4	10.9	30.4	41.3	100.0 (46)	2.87
5.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부모 지원(놀이지도 안내, 온라인 교육자료 준비 등)	4.3	6.5	15.2	28.3	45.7	10.9	73.9	100.0 (46)	1.96
6. 긴급돌봄 중인 유아의 부모에게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안내	4.3	13.0	34.8	32.6	15.2	17.4	47.8	100.0 (46)	2.5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은 1순위 기준으로 '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 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가 3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보호아동(등원하지 않는 유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이 17.4%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29〉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직원의 가족돌봄 휴가(어린 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유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소독제, 아동용 마스크 등)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부모용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자료(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각 연령별 코로나19 대비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타	계(수)
전체	34.8	17.4	15.2	13.0	6.5	4.3	4.3	2.2	2.2	100.0 (46)
원장/교사 구분										
원장	34.8	17.4	15.2	13.0	6.5	4.3	4.3	2.2	2.2	100.0 (46)
설립유형										
공립단설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
사립사인	32.6	16.3	16.3	14.0	7.0	4.7	4.7	2.3	2.3	100.0 (43)
사립법인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x^2(df)$					8.692(16)					
지역 구분										
대도시	38.1	14.3	4.8	23.8	9.5	4.8	0.0	4.8	0.0	100.0 (21)
중소도시	36.4	18.2	18.2	4.5	4.5	4.5	9.1	0.0	4.5	100.0 (22)
읍면	0.0	33.3	66.7	0.0	0.0	0.0	0.0	0.0	0.0	100.0 (3)
$x^2(df)$					17.239(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은 2순위 기준으로 '가정 내 보호아동(등원하지 않는 유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이 3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 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가 21.7%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30〉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2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유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 (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교직원의 가족돌봄 휴가 (어린 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소독제, 아동용 마스크 등)	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각 연령별 코로나19 대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감염병 예방 관련 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내실화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 (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부모용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자료 (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계(수)
전체	32.6	21.7	15.2	8.7	6.5	6.5	4.3	2.2	2.2	100.0 (46)
원장/교사 구분										
원장	32.6	21.7	15.2	8.7	6.5	6.5	4.3	2.2	2.2	100.0 (46)
설립유형										
공립단설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
사립사인	32.6	20.9	14.0	9.3	7.0	7.0	4.7	2.3	2.3	100.0 (43)
사립법인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100.0 (2)
$x^2(df)$					6.541(16)					
지역 구분										
대도시	38.1	14.3	14.3	9.5	9.5	9.5	0.0	4.8	0.0	100.0 (21)
중소도시	27.3	22.7	18.2	9.1	4.5	4.5	9.1	0.0	4.5	100.0 (22)
읍면	33.3	66.7	0.0	0.0	0.0	0.0	0.0	0.0	0.0	100.0 (3)
$x^2(df)$					10.294(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은 1+2순위 기준으로 '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 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가 5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보호아동(등원하지 않는 유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이 50.0%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31〉 코로나19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필요지원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직원의 가족돌봄 휴가 (어린 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가정내 보호 아동 (등원하지 않는 유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 (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소독제, 아동용 마스크 등)	긴급 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 (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	각 연령별 코로나19 대비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부모용 감염병 예방 안전 교육 자료 (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감염병 예방 관련 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내실화	기타
전체	56.5	50.0	28.3	21.7	13.0	8.7	8.7	6.5	4.3	2.2
원장/교사 구분										
원장	56.5	50.0	28.3	21.7	13.0	8.7	8.7	6.5	4.3	2.2
설립유형										
공립단설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립사인	53.5	48.8	27.9	23.3	14.0	9.3	9.3	7.0	4.7	2.3
사립법인	10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 구분										
대도시	52.4	52.4	38.1	14.3	14.3	14.3	14.3	0.0	0.0	0.0
중소도시	59.1	45.5	22.7	22.7	13.6	4.5	4.5	13.6	9.1	4.5
읍면	66.7	66.7	0.0	66.7	0.0	0.0	0.0	0.0	0.0	0.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코로나19가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에 미친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 중 긍정 비율(어느정도 영향을 미침+매우 영향을 미침)이 91.9%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의 유치원 원장 및 교사가 코로나19가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표 Ⅳ-2-32〉 코로나19로 인한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의 영향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⑤ 매우 영향을 미침	부정 비율 (①+②)	긍정 비율 (④+⑤)	계(수)	5점 평균
전체	1.5	3.5	3.0	28.3	63.6	5.1	91.9	100.0 (198)	4.49
원장/교사 구분									
원장	2.2	2.2	6.5	21.7	67.4	4.3	89.1	100.0 (46)	4.50
교사	1.3	3.9	2.0	30.3	62.5	5.3	92.8	100.0 (152)	4.49
$x^2(df)/T$					3.936(4)				0.1
설립유형									
공립단설	0.0	0.0	0.0	46.2	53.8	0.0	100.0	100.0 (13)	4.54
공립병설	0.0	1.1	0.0	18.9	80.0	1.1	98.9	100.0 (90)	4.78
사립사인	2.2	6.7	6.7	34.8	49.4	9.0	84.3	100.0 (89)	4.22
사립법인	16.7	0.0	0.0	33.3	50.0	16.7	83.3	100.0 (6)	4.00
$x^2(df)/F$					35.727(12)***				7.9***
지역 구분									
대도시	2.8	7.0	2.8	19.7	67.6	9.9	87.3	100.0 (71)	4.42
중소도시	0.8	1.7	3.3	32.2	62.0	2.5	94.2	100.0 (121)	4.53
읍면	0.0	0.0	0.0	50.0	50.0	0.0	100.0	100.0 (6)	4.50
$x^2(df)/F$					9.293(8)				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 $p < .001$.

코로나19가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원격교육 시행으로 인해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이 어려워졌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2%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의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이 코로나19가 놀이중심 누리과정 시행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표 Ⅳ-2-33〉 코로나19로 인해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에 미친 영향

단위: %(명)

구분	코로나19 방역 및 원격교육 시행으로 인해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이 어려워졌음	등원한 유아 수의 감소에 따라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이 용이해졌음	유아들의 접촉을 최소화함에 따라 유아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음	기타	계(수)	
전체	80.2	11.5	3.8	4.4	100.0	(182)
원장/교사 구분						
교사	70.7	7.3	12.2	9.8	100.0	(41)
원장	83.0	12.8	1.4	2.8	100.0	(141)
$x^2(df)$			14.462(3)**			
설립유형						
공립단설	84.6	15.4	0.0	0.0	100.0	(13)
공립병설	85.4	10.1	0.0	4.5	100.0	(89)
사립사인	74.7	10.7	9.3	5.3	100.0	(75)
사립법인	60.0	40.0	0.0	0.0	100.0	(5)
$x^2(df)$			15.684(9)			
지역 구분						
대도시	77.4	11.3	6.5	4.8	100.0	(62)
중소도시	80.7	12.3	2.6	4.4	100.0	(114)
읍면	100.0	0.0	0.0	0.0	100.0	(6)
$x^2(df)$			3.16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 $p < .01$.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 1순위에 대한 응답에서는 '원격수업과 등원수업 병행 시 교사의 교육활동 반복 및 업무과중'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격수업과 긴급돌봄 병행에 따른 부담' 28.8%, '놀이중심 교육활동 진행의 어려움' 17.2%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34〉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 (1순위)

단위: %(명)

구분	원격 수업과 등원 수업 병행 시 교사의 교육 활동 반복 및 업무 과중	원격 수업과 긴급 돌봄 병행에 따른 부담	놀이 중심 교육 활동 진행의 어려움	원격 수업의 계획 및 운영 방안 모색의 어려움	원격 수업에 활용할 학습 자료 및 컨텐츠 부족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 및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원격 수업을 위한 기기 및 시스템 환경 부족	원격 수업 실시 관련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부족	계(수)
전체	37.9	28.8	17.2	7.6	3.0	2.5	2.0	1.0	100.0 (198)
원장/교사 구분									
원장	45.7	15.2	15.2	10.9	4.3	4.3	4.3	0.0	100.0 (46)
교사	35.5	32.9	17.8	6.6	2.6	2.0	1.3	1.3	100.0 (152)
$x^2(df)$					9.124(7)				
설립유형									
공립단설	38.5	46.2	7.7	0.0	7.7	0.0	0.0	0.0	100.0 (13)
공립병설	38.9	40.0	12.2	5.6	2.2	1.1	0.0	0.0	100.0 (90)
사립사인	38.2	14.6	24.7	10.1	3.4	3.4	3.4	2.2	100.0 (89)
사립법인	16.7	33.3	0.0	16.7	0.0	16.7	16.7	0.0	100.0 (6)
$x^2(df)$					40.212(21)**				
지역 구분									
대도시	36.6	26.8	21.1	5.6	2.8	1.4	2.8	2.8	100.0 (71)
중소도시	37.2	30.6	15.7	8.3	3.3	3.3	1.7	0.0	100.0 (121)
읍면	66.7	16.7	0.0	16.7	0.0	0.0	0.0	0.0	100.0 (6)
$x^2(df)$					9.832(14)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 2순위에 대한 응답에서는 '원격수업과 등원수업 병행 시 교사의 교육활동 반복 및 업무과중'이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격수업과 긴급돌봄 병행에 따른 부담' 30.3%, '놀이중심 교육활동 진행의 어려움' 9.6%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35〉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 (2순위)

단위: %(명)

구분	원격 수업과 등원수업 병행 시 교사의 교육활동 반복 및 업무과중	원격 수업과 긴급 돌봄 병행에 따른 부담	놀이 중심 교육 활동 진행의 어려움	원격 수업에 활용할 학습 자료 및 컨텐츠 부족	원격 수업을 위한 기기 및 시스템 환경 부족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 및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원격 수업의 계획 및 운영 방안 모색의 어려움	원격 수업 실시 관련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부족	계(수)
전체	32.3	30.3	9.6	8.6	7.1	5.6	3.5	3.0	100.0 (198)
원장/교사 구분									
원장	17.4	37.0	6.5	13.0	15.2	6.5	0.0	4.3	100.0 (46)
교사	36.8	28.3	10.5	7.2	4.6	5.3	4.6	2.6	100.0 (152)
$x^2(df)$					15.172(7)*				
설립유형									
공립단설	38.5	23.1	7.7	15.4	0.0	7.7	0.0	7.7	100.0 (13)
공립병설	40.0	33.3	13.3	5.6	4.4	0.0	1.1	2.2	100.0 (90)
사립사인	22.5	30.3	5.6	10.1	11.2	10.1	6.7	3.4	100.0 (89)
사립법인	50.0	0.0	16.7	16.7	0.0	16.7	0.0	0.0	100.0 (6)
$x^2(df)$					33.129(21)*				
지역 구분									
대도시	29.6	29.6	9.9	12.7	8.5	4.2	4.2	1.4	100.0 (71)
중소도시	35.5	29.8	9.1	6.6	5.0	6.6	3.3	4.1	100.0 (121)
읍면	0.0	50.0	16.7	0.0	33.3	0.0	0.0	0.0	100.0 (6)
$x^2(df)$					15.301(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 조사」의 결과임.
* $p < .05$,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 1+2순위에 대한 응답에서는 '원격수업과 등원수업 병행 시 교사의 교육활동 반복 및 업무과중'이라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격수업과 긴급돌봄 병행에 따른 부담' 59.1%, '놀이중심 교육활동 진행의 어려움' 26.8%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36〉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 (1+2순위)

단위: %(명)

구분	원격수업과 등원수업 병행 시 교사의 교육활동 반복 및 업무과중	원격수업과 긴급돌봄 병행에 따른 부담	놀이 중심 교육 활동 진행의 어려움	원격 수업에 활용할 학습자료 및 컨텐츠 부족	원격 수업의 계획 및 운영 방안 모색의 어려움	원격 수업을 위한 기기 및 시스템 환경 부족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 및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원격 수업 실시 관련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부족
전체	70.2	59.1	26.8	11.6	11.1	9.1	8.1	4.0
원장/교사 구분								
원장	63.0	52.2	21.7	17.4	10.9	19.6	10.9	4.3
교사	72.4	61.2	28.3	9.9	11.2	5.9	7.2	3.9
설립유형								
공립단설	76.9	69.2	15.4	23.1	0.0	0.0	7.7	7.7
공립병설	78.9	73.3	25.6	7.8	6.7	4.4	1.1	2.2
사립사인	60.7	44.9	30.3	13.5	16.9	14.6	13.5	5.6
사립법인	66.7	33.3	16.7	16.7	16.7	16.7	33.3	0.0
지역 구분								
대도시	66.2	56.3	31.0	15.5	9.9	11.3	5.6	4.2
중소도시	72.7	60.3	24.8	9.9	11.6	6.6	9.9	4.1
읍면	66.7	66.7	16.7	0.0	16.7	33.3	0.0	0.0

V

육아정책 국정과제 종합평가

01 육아정책 세부 국정과제 평가
02 육아정책 국정과제 총괄 평가

Ⅴ. 육아정책 국정과제 종합평가

본 장에서는 내년도 2022년에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정부의 4년여에 걸친 육아정책 국정과제를 다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종합평가하고자 한다. 3장 및 4장의 성과평가는 2020년과 2021년의 정책 성과평가에 한정했다면 본 장의 성과평가는 다년도에 걸친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육아정책 세부 국정과제 평가

가.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국정과제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인 삶의 질 제고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에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이와 관련하여 본 연속과제의 2차 및 3차년도 전문가조사에서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로 나타났다(2차년도: 긍정비율 25.5%, 3차년도: 긍정비율 22.0%)(김근진 외, 2020: 112). 또한 3차년도 전문가 조사에서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

로'로 나타났다(전체 응답자의 33% 선택)(김근진 외, 2020: 117). 그 이유로 지적된 것은 삶의 질 제고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한다는 패러다임 자체는 옳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표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저출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으나,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은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삶의 질 제고라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사회적 공감대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강동수 외, 2020: 78).

저출산 정책이 삶의 질 제고 정책이 되면서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삶의 질 제고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을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할 경우 사실상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출산과 육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 뿐 아니라 주거, 고용 등 간접지원 정책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다분야의 정책들을 저출산 정책으로 패키징하는 경우는 일본의 사례가 거의 유일하지만, 일본은 저출산 대응 예산의 99%를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정책으로 편성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82). 독일과 프랑스 등도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으로 가족정책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국회예산정책처, 2021: 82)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쳐서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구분되는 저출산 정책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강동수 외, 2020: 78).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삶의 질 제고 정책의 핵심에는 성평등 정책이 포함된다. 저출산과 성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OECD 국가의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여성의 성평등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해져 출산

율이 반등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강동수 외, 2020: 93). 이는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해도 저출산 정책으로 명명된 이상 최종적인 성과(outcome)는 출산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 제고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급급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삶의 질 제고를 이루는 것이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고찰에 기반하고 있으나, 결국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것이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삶의 질 제고 정책의 목표인 것이다.

출산율 이외의 다른 성과지표는 저출산 정책에서는 모두 산출(outpu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출산율이 성과(outcome)가 아니라면 그 정책은 저출산 정책이 아닌 다른 사회보장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삶의 질 제고는 출산 및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출산 및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삶의 질이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 정책은 출산 및 육아를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또다른 이슈는 저출산 정책에서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과 관련한 논쟁인데 현금지원에 중심을 둘 것인가 서비스 지원에 중심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할 시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관계는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이 매우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서비스 지원 정책은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서비스 지원 정책이 실제로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효과가 없는가를 실증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들은 출산에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제도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는 부적으로 나오게 되며, 회귀분석을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표 Ⅴ-1-1〉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영유아보육법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LS 회귀분석 뿐 아니라 시군구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고정효과 모형, 고정효과에 추가하여 과거값을 통제하는 동적패널모형을 사용하였다. 동적패널모형은 고정효과 뿐 아니라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통제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할 수 있다.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의 2009-2019 시군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229개 시군구). 임신 후 출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독립변수인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0-5세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전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OLS와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과거값을 통제하는 동적패널모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확대가 합계출산율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가 출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표 Ⅴ-1-2〉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75***(.00171)	-.00286(.00223)	-.000007(.0034)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059(.00088)	-.00284**(.00106)	-.00085(.00119)
유치원공급률	-.0025(.00197)	-.00406(.00258)	-.00083(.00278)
재정자립도	-.00297***(.00073)	.00053(.00105)	-.00013(.00136)
사회복지예산비중	-.00974***(.0008)	-.00065(.00107)	.00181(.00134)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5***(.000009)	.00002**(.000007)	.00002***(.000004)

주: 1) 독립변수는 모두 전년도 값을 사용
2)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군구 및 연도더미 포함
**p 〈 .01, ***p 〈 .001.

〈표 Ⅴ-1-3〉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00998**(.00332)	.00874*(.0035)
국공립외어린이집 공급률	.00232(.00174)	.00252(.00176)
유치원공급률	.00173(.00277)	.00278(.00317)
재정자립도	-.0003(.00118)	.00142(.00128)
사회복지예산비중	-.0006(.0012)	-.00165(.00124)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2***(.000005)	.00002***(.000005)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0	.0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9198	.9750

주: 1) 독립변수는 모두 전년도 값을 사용
2)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dagger}p < .1$, $^{*}p < .05$, $^{**}p < .01$, $^{***}p < .001$.

저출산 대응 예산은 OECD 기준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과 간접지원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103). 2021년 저출산 대응 예산의 61.0%는 청년의 일자리 및 주거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56). 그러나 일자리 및 주거 지원으로 구성되는 간접지원 정책은 저출산 정책에서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기준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예산은 저출산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국회예산정책처, 2021: 52), 저출산 정책에 의해 주도되기 보다 국토교통부의 별도의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98). 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없으며(국회예산정책처, 2021: 94),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실제 계약 물량은 50.6%에 불과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감사원, 2021: 101).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김민영·황진영, 2016; 박진백·이재희, 2016; 이재희·박진백, 2020)는 주택매매가격 상승이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4.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증가한 주택매매가격지수 5.9의 3배에 가까운 증가분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한 주택매매가격은 저출산 추세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민영·황진영(2016)이 사용한 모형에 따라 시·도를 기준으로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주택 평균가격을 결합하여 주택매매가격을 구성하고, 청년실업률(15-29세 청년 실업률), 여성고용률(15-64세 여성 고용률), 지역내총생산(GRDP)을 통제변수로 하여, 주택매매가격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2003-2019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국가통계포털의 시·도 데이터(세종시 제외)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OLS, 고정효과모형, 동적 패널모형(시스템 GMM)에서 모두 전년도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4〉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주택매매가격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도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도별 추세 포함)
주택매매가격로그	−.16933**(.039)	−.11182*(.04535)	−.09991*(.04132)
청년실업률	−.04393***(.00932)	−.00249(.00401)	−.00423(.00255)
여성고용률	.00248(.00426)	−.00302(.00295)	−.00191(.00292)
지역내총생산로그	.00856(.02267)	−.07285(.08929)	.38151**(.10668)

주: 1) 독립변수는 모두 전년도 값을 사용
2)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군구 및 연도더미 포함
*p 〈 .05, **p 〈 .01, ***p 〈 .001.

〈표 Ⅴ-1-5〉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주택매매가격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주택매매가격로그	−.02601(.02527)	−.04839*(.01999)
청년실업률	−.00368*(.00176)	−.00333*(.00159)
여성고용률	.00246(.00221)	.00258(.00176)
지역내총생산로그	−.04263(.04673)	−.01444(.01379)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4	.0005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6412	.8008

주: 1) 독립변수는 모두 전년도 값을 사용
2)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p 〈 .05,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한 주택매매가격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2021년 기준으로 저출산 대응 예산의 주거 지원 예산이 저출산 대응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함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간접지원 예산이 저출산 대응 예산의 61.0%를 차지

한다는 것은 직접지원 예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접지원 예산의 증가를 가로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다분야의 정책들을 저출산 정책으로 패키징하는 경우는 일본의 사례가 거의 유일하지만, 일본은 저출산 대응 예산의 99%를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정책으로 편성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82). 독일과 프랑스 등도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으로 가족정책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국회예산정책처, 2021: 82)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쳐서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 및 일자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지만, 간접지원 정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과 구분되는 별도의 보편적 사회보장정책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직접지원 정책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정재훈, 2018)이 저출산 대응의 전문성과 관리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102).

2) 출산지원금 도입

국정과제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은 출산지원금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제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1). 중앙정부의 출산지원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으로 '첫 만남 꾸러미'(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으로 2022년부터 도입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39).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는 예전부터 도입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12-2019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수록되어 있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데이터 및 국가통계포털의 시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LS 및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지자체의 전년도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출산율의 과거값을 통제하는 동적패널모형에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김근진 외, 2020: 314).

〈표 Ⅴ-1-6〉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출산지원금의 영향(OLS, 고정효과모형)

변수	OLS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미포함)	고정효과모형 (시군구별 추세 포함)
출산지원금	.02884**(.01058)	.02282**(.00743)	.00543(.00509)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	-.00747***(.00166)	.00019(.00247)	.00088(.00448)
국공립외어린이집공급률	.0004(.0008)	-.00248*(.0011)	-.00219(.00173)
유치원공급률	-.00149(.00186)	-.00408(.00277)	.00297(.00373)
재정자립도	-.00224**(.00077)	.00211(.00159)	.00031(.00186)
사회복지예산비중	-.00816***(.00084)	0.00051(.00165)	-.0007(.00188)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5***(.00001)	.00002*(.000009)	.00003***(.000006)

주: 1) 독립변수는 모두 전년도 값을 사용
2)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군구 및 연도더미 포함
*p 〈 .05, **p 〈 .01, ***p 〈 .001.

〈표 Ⅴ-1-7〉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전년도 출산지원금의 영향(동적패널모형)

변수	차분 GMM	시스템 GMM
출산지원금	-.00377(.00638)	-.00428(.00657)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00877*(.00395)	.00717†(.00399)
국공립외어린이집 공급률	.00173(.00195)	.00191(.00185)
유치원공급률	-.00003(.00363)	.00114(.00387)
재정자립도	.00074(.00188)	.00178(.00188)
사회복지예산비중	0.0031(.00188)	-.00232(.00159)
가임기 여성 순이동자수	.00002**(.000006)	.00002**(.000006)
오차항의 AR(1) 검정 p-value	.0000	.0000
오차항의 AR(2) 검정 p-value	.9802	.8104

주: 1) 독립변수는 모두 전년도 값을 사용
2) 차분 GMM 및 시스템 GMM에서는 연도더미 포함
†p 〈 .1, *p 〈 .05, **p 〈 .01,

지자체 출산지원금 증가는 출산율을 유지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인구 유출을 막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감사원, 2021: 134). 이에 따라, 자역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김근진 외, 2020: 315).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은 서비스 및 시간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수행된다면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출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첫 만남 꾸러미로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 2021: 139). 이는 출산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 정책에 포함하였다는 의미이다.

3)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2021년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복지부, 2021f: 11).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021년 87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1년 275억원) 예산이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되며, 2022년 정부 예산안부터 적용된다(복지부, 2021f: 11).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 대응 예산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위기아동 발굴 및 현장조사 제고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찰청 가정폭력 연계, 방문조사 강화를 위한 비대상 삭제 및 수사의회 추가, 분기별 실시하는 정기조사 발굴 아동에 대한 현 차수 내 조치 완료 처리, 전·출입시 드림스타트 사업 연계 안내, 대상아동 발굴 사유에 대한 위기정보 설명, 대상아동 출입국 정보의 실시간 정보 등이 추가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81).

그러나 차수별(분기별) 입수아동(70만명) 대비 현장조사 선정 아동은 2.5%(약 2만명)에 불과하여 읍면동에서 조사 가능한 인원을 고려해 볼 때 방문조사 대상 아동을 확대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81).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아동확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전문가 조사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에서 2020년과 2021년 모두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국정과제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이고,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국정과제는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였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은 긍정비율이 2020년 47.0%에서 2021년 52.0%로 상승하였으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은 긍정비율이 2020년 19.0%에서 2021년 12.0%로 하락하였다.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로는 1순위, 2순위, 1+2순위 모두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각각 26.0%, 20%,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그 다음으로 높은 21.0%로 나타났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는 2020년 조사에 이어 2021년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저출산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하나 형식적인 합의 등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구성원들이 관, 학계 위주로 되어 현장의 실정에 대한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고 여겨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부족했음은 출산률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되지는 못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2021)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의 결정권과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고 심의 및 자문의 권한만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과적 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집행 및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복지부와 기재부 등 행정부처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방향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116-117).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집행 및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재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은 51.9%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16.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달성되지 않았다)은 54.%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1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해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을 포함하였으나 실제로 추진된 내용은 없다.

그 이유로는 해당 국정과제가 교육부 담당 국정과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육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에 관심이 있으나 해당 국정과제가 교육부 담당 국정과제이므로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나, 관할 부처의 상이함 등에 따라 발생하는 한계로 인해 실제로 추진된 성과는 없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정책을 포함하여 동일 연령 아동에 대한 출발선 평등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국정과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는 초등돌봄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이를 위해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이 추진되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초등돌봄을 확충하기 위한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등)을 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확대

하고,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6).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의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계획에서는 마을돌봄의 경우 2018-2021 동안 5.8만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6).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를 2018-2022 동안 9만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 15). 2021년 2학기 온종일 돌봄 시설 현황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정원은 1만3천명에 불과하다(교육부, 2021c).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이용자는 2018년 이후 1만2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데(교육부, 2021c; 보건복지부, 2018), 이를 합친 마을돌봄 확충은 원래 계획했던 5.8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학교돌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매년 700교실(교실당 20명 정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이용현원은 2019년 29만명에서 2020년 25.6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실당 인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교육부, 2021a: 298). 이에 따라 이용 정원 기준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Ⅴ-1-8〉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계획

단위: 만명

구분		2017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총계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24	1.4	1.4	1.4	1.4	1.4	7	31
	학교돌봄터	-	선도사업			1.5	1.5	3	3
마을돌봄		9	0.2	1.2	2.2	2.2	4.2	10	19
총계		33	1.6	2.6	3.6	5.1	7.1	20	53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p.6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지자체 주관 돌봄교실을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 11), 2021년에는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도입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b: 3). 학교돌봄터는 총 1,500실, 3만명의 이용자 확충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750실, 1,5000명 이용자 확충을 목표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b: 5). 그러나 2021년 2학기 기준 학교돌봄터 교실수는 전국 50개, 이용자 수는 961

명에 불과하다(교육부, 2021c). 이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 학교돌봄터 확충 목표의 6.4% 수준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표 Ⅴ-1-9〉 2021년 2학기 온종일 돌봄 시설 현황

구분		교실수/센터수	이용현원(초등돌봄교실)/ 이용정원(기타)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14,274	256,123
	학교돌봄터	50	961
마을돌봄	다함께돌봄센터	422	13,075
	지역아동센터	4,349	125,221 (초등학생 약 94,000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11	6515

자료: 교육부(2021c). 2021년 2학기 온종일 돌봄 시설 현황.

2021년 학교돌봄터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50개 교실 중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교실이 27개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는 재정자립도에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학교돌봄터 사업이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특정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Ⅴ-1-10〉 2021년 학교돌봄터 운영 현황

지자체	교실 수
서울특별시 중구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부산광역시 기장군	3
경기도 고양시	3
경기도 부천시	2
경기도 수원시	3
경기도 오산시	1
경기도 시흥시	1
경기도 성남시	2
경기도 하남시	3
충청남도 논산시	4
총계	50

자료: 교육부(2021c). 2021년 2학기 온종일 돌봄 시설 현황.

학교돌봄터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는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예산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표 Ⅴ-1-11〉 2021년 중앙부처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예산

구분	예산
초등돌봄교실(교육부)	3,215억원 - 초등돌봄 시설확충 210억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지원 3,005억원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복지부)	412억원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62억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99억원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1억원 -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운영지원, 특화 750실) 24억원 -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운영지원, 특화 750실) 운영비 15억원 -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운영지원, 특화 750실) 지원단 운영비 0.9억원
지역아동센터(복지부)	1,874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486억원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29억원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48억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99억원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0억원 - 경상경비 2억원

자료: 교육부(2021a). 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p.298.;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78-80.

학교돌봄터 사업의 학교-지자체 협력모델 사업비 분담 구조를 보면, 2021년과 2022년에 교육청에서 각각 시설비 225억원을 부담하고, 운영비는 지자체가 50%, 복지부와 교육청이 각각 25%씩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40). 학교돌봄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운영비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학교돌봄터를 운영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추세로 인한 초등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한 학교돌봄터 사업은 앞으로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초등돌봄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돌봄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50% 이상을 교육청에서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Ⅴ-1-12〉 학교-지자체 협력모델 사업비(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시설비	교육청 (지방비)	225억원 (30백만원×750실)	225억원 (30백만원×750실)	-	450억원
운영비	복지부 (국비)	22억 (35.5백만원×750실÷3×0.25)	132.4억 (35.5백만원×1,500실×0.25)	132.4억 (35.5백만원×1,500실×0.25)	286.8억원
	교육청 (지방비)	22억 (35.5백만원×750실÷3×0.25)	132.4억 (35.5백만원×1,500실×0.25)	132.4억 (35.5백만원×1,500실×0.25)	286.8억원
	지자체 (지방비)	44억 (35.3백만원×750실÷3×0.5)	264.8억 (35.5백만원×1,500실×0.5)	264.8억 (35.5백만원×1,500실×0.5)	573.6억원
	소계	88억	529.6억	529.6억	1,147.2억원
합계 (시설비+운영비)		313억	754.6억	529.6억	1,597.2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40.

마. 일·가정 양립 일상화

1) 육아휴직제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동이 출생한 당해연도에 부모가 얼마나 육아휴직을 하는지 파악하는 개념인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11.5%에서 2019년 21.6%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2019년 1.8%로 여성의 63.6%와 비교하면 여성의 1/3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정재훈 외, 2020: 109). 이는 자녀가 출생한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하는 아버지 비율이 100중 1.8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정재훈 외, 2020: 110).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여전히 성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을 추진하는데,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2022년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6).

2019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임금대체율 전체 평균은 45.6%이고, 중위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3분위(전체 5분위 기준) 임금대체율은 49.8%이다(감사원, 2021: 145). 육아휴직급여의 평균 임금대체율이 2006년 32.9%에서 2016년 28.7%까지 하락한 후 2019년 45.6%까지 상승한 것은 급여 상한액의 인상에 연동하여 증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계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은 평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50%를 밑도는 수준에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감사원, 2021: 146).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이후 최대 월 15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모 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2019년 10월 이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고, 하루 1시간 단축 허용과 함께 1시간 단축분 급여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접노무비 지원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2022년 이후 월 30만원(1~3호 인센티브 10만원 신설)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4).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기업에서 부모가 실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3) 일가정 양립 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별도의 재원 확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업급여의 재정 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적립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감사원, 2021: 147).

2. 육아정책 국정과제 총괄 평가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육아정책 국정과제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 국정과제의 성과를 분석한다.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 결과를 2020년 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 일상화,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은 2020년보다 긍정 비율이 높아졌으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2020년보다 긍정비율이 낮아졌다.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에서 2020년과 2021년 모두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국정과제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이고,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국정과제는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였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은 긍정비율이 2020년 47.0%에서 2021년 52.0%로 상승하였으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은 긍정비율이 2020년 19.0%에서 2021년 12.0%로 하락하였다.

〈표 Ⅴ-2-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2020년/2021년 조사)

단위: %(명), 점

관련 국정과제	2020년 조사				2021년 조사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긍정 비율	7점 평균	계(수)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39.0	4.1	100.0	(100)	33.0	3.98	100.0	(10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29.0	3.7	100.0	(100)	22.0	3.41	100.0	(10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2.0	4.0	100.0	(100)	36.0	3.92	100.0	(10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9.0	3.4	100.0	(100)	12.0	3.25	100.0	(10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45.0	4.2	100.0	(100)	38.0	4.03	100.0	(100)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33.0	4.0	100.0	(100)	41.0	4.21	100.0	(100)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5.0	3.6	100.0	(100)	32.0	3.86	100.0	(100)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30.0	3.8	100.0	(100)	43.0	4.13	100.0	(100)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36.0	4.0	100.0	(100)	48.0	4.15	100.0	(100)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47.0	4.3	100.0	(100)	52.0	4.51	100.0	(100)

주: 긍정비율은 '⑤', '⑥', '⑦' 매우 잘하고 있다'의 응답비율의 합산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2) 김근진 외(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76.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조사결과를 보면, 1순위 기준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이 19.0%였고,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가 18.0%로 그 뒤를 이었다. 2순위 및 1+2순위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각각 18.0%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Ⅴ-2-2〉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단위: %

관련 국정과제	1순위	2순위	1+2순위
(1) 일하며 키우기 행복한 나라	20.0	12.0	32.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18.0	8.0	26.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9.0	18.0	37.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3.0	6.0	9.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5.0	15.0	30.0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5.0	7.0	12.0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0	9.0	11.0

관련 국정과제	1순위	2순위	1+2순위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11.0	14.0	25.0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5.0	6.0	11.0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2.0	5.0	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국정과제 중 실행이 우수한 과제는 1순위, 2순위, 1+2순위 모두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이 각각 29.0%,19.0%,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아동지역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온종일돌봄 시스템은 잘 갖추어진 상태임, 정책의 "가시성" 면에서 가장 잘 된 과제, 다부처에서 추진 중이라 효율성은 낮으나 그만큼 실행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함, 다른 과제에 비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기 때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기관에서 돌봄에 대한 관심과 실행을 실천하고 있음, covid19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온종을 돌봄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음,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공동체 사업지원, 부처별 돌봄서비스 유형외에 각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틈새돌봄, 지역돌봄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Ⅴ-2-3〉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우수

단위: %

관련 국정과제	1순위	2순위	1+2순위
(1) 일하며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	5.0	9.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3.0	4.0	7.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3.0	11.0	14.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0	0.0	2.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5.0	15.0	30.0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22.0	19.0	41.0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2.0	4.0	6.0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5.0	14.0	19.0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15.0	9.0	24.0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29.0	19.0	48.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국정과제 중 실행이 미흡한 과제로는 1순위, 2순위, 1+2순위 모두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각각 26.0%, 20%,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순위 기준으로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그 다음으로 높은 21.0%로 나타났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저출산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하나 형식적인 합의 등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구성원들이 관, 학계 위주로 되어 현장의 실정에 대한 적극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고 여겨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부족했음은 출산률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으나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되지는 못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 조직구조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번번히 좌절되고 청와대의 의견대로 추진됨, 부처별 사업의 저출산 대책 포괄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의 문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복 사업들의 통합관리가 필요함,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없음, OECD 출생률 세계최저결과는 현행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되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등을 제시하였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을 2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업무 부처의 일관성 결여, 각 부처별 각자 저출산 대책이라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중복에다 효율도 낮은 정책을 추진, 차라리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각 부처별 저출산 대책 예산을 총괄하여 임팩트 있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일부분에 국한되고 있음,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지 않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미흡, 너무 많은 곳의 중복된 저출산정책,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각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을 하고 있음,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 강화가 필요함, 저출산문제에 작동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대책은 난제중 난제이나 그럼에도 강력한 신뢰를 주는 컨트롤타워 존재를 느낄수 없음 등을 제시하였다.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실제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 0.84명, 일회성 근시안적 대책 제공, 아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저출산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음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함,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세대에게 저출산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짐 등을 제시하였다.

성과가 미흡한 국정과제 1순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개선방안으로 관계 부처 합동 위원회 구성에 저출산, 보육 실무 현장 전문가 참여율도 높이고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상시적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관련기관 홍보활성화를 위한 포상계획 등 세부 추진 내용 마련, 현재의 위원회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불가, 출산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강력한 베네핏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베네핏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총론만 이야기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기술하지 못하고 있음,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 및 전체적인 로드맵의 수정이 필요함.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 필요함, 저고위 분과나 TF에서 이루어지고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적합한 반영이 필요함, 보건복지부에서 아이출생에서부터 종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부처간 업무 조정 협의 또는 상위기관 마련(예: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기구 마련), 현행 저출산 관련 계획 수립과 재정투입이 지자체, 부처별 시행에 따라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견됨으로 시행단계를 간략화하면서 중복되지 않은 컨토롤타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제시하였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을 1순위로 선택한 전문가들은 개선방안으로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영유아 양육 수당, 부모 양육 지원,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기관 질적 수준 향상, 경제적인 유인책 외에 요즘 세대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와 아이수만큼 세금 혜택이나 집을 구하기 쉽게 해주어야 함, 주택 문제의 해결, 주거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음, 현재 우리나라는 세명 출산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주거 구입에 혜택이 있으나 세명이 아니라 두명이라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봄,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 주거 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미래세대에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거, 일자리 등을 먼저 해결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음, 출산뿐만 아니라 이후 육아를 위해서도 확실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국가 주도로 양질의 유아교육, 보육기관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의 의미를 개인적 의미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출산과 육아의 즐거움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Ⅴ-2-4〉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행 미흡

단위: %

관련 국정과제	1순위	2순위	1+2순위
(1) 일하며 키우기 행복한 나라	4.0	14.0	18.0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21.0	11.0	32.0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12.0	12.0	24.0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26.0	20.0	46.0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16.0	8.0	24.0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2.0	5.0	7.0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9.0	9.0	18.0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4.0	6.0	10.0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2.0	12.0	14.0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구현	4.0	3.0	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VI

결론 및 정책 제언

0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0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0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0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05 육아정책 국정과제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가. 아동수당

본 연구의 2021년 부모 설문조사 결과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65.7만원으로 나타났고, 2020년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은 58.9만원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수당 지급액 월 평균 10만원(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2020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58.9만원의 약 17%, 2021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65.7만원의 약 15.2%에 해당한다. 2020년에는 기존의 아동수당에 추가하여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게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되었다(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에게는 아동돌봄특별지원금 20만원만 지급)(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2020:1; 보건복지부, 2020f: 1)는데, 아동양육한시지원금 60만원은 월 평균으로는 5만원이므로 2020년 기준으로는 아동수당을 50% 증액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동수당과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합치면 2020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58.9만원의 약 25.5%를 충당하는 금액이 되는데, 이러한 현금지원은 2020년 취학 전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수당 지급은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1). 지급연령은 현재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의해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OECD 32개국 중 15세 이상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9개국에 달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41).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합의 및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확

대 추진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42). 구체적으로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초등 고학년(만 12세 미만), 중학생(만 15세 미만), 고등학생(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2021년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부문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아동수당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수당에 대한 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연령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2017년 OECD 데이터(OECD family database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에서는 OECD 평균 GDP 대비 가족지원 정책 예산 비중이 2.34%(현금지원 1.16%, 서비스 지원 0.95%, 세제 지원 0.23%)이나, 한국은 1.30%(현금지원 0.15%, 서비스 지원 0.95%, 세제 지원 0.20%)에 불과하다. 한국은 서비스 지원 예산은 OECD 평균과 비슷하나, 현금지원 예산이 비중이 크게 부족하다. 아동수당이 2018년에 도입되었으나, 2019년 기준 GDP의 0.1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박선권, 2020: 4), 앞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나. 의료비 지원 정책

전문가 조사에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문의 수행 달성도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인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긍정비율은 8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3%, '아동수당' 80% 순으로 평가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지원사업의 포괄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첫 만남 꾸러미로 임신 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37). 이는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준다.

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가.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3~5세 교육과정의 유보(유아교육과 보육)일원화의 실현의 연장선에 있으며, 유아가 놀이권 보장의 현장적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파급효과의 측면에서 유아와 교사는 물론, 가정에서도 놀이 중심으로 교육 방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행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달성도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정책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연수 및 컨설팅', '누리과정 시범운영 및 자료 공유', '홍보자료(학부모 지원자료 등) 개발 및 보급', '누리과정 포털 및 운영' 등 관련 정책 모두에서 부정비율이 긍정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이 54.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놀이중심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만 3세가 48.9%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감축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연령이 낮은 만 3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는 전문가 조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로는 집 가까운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 수준이 높아져서 접근성이 제고되었으며,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사립기관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연하게 목표 달성이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실제 취원율은 아직 취원율 40%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91). 그러나 현재 저출산 추세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4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은 목표대로 달성하고 있으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5) 공보육 이용률은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의 공보육 이용률이 46% 이상으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이외의 시도는 25%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85). 공보육 이용률은 지자체의 정책 및 재정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공보육 이용률 확대는 총량의 측면 뿐 아니라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공보육 이용률 확충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3월에는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였고(교육부, 2019: 1), 2020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었다(교육부, 2020c: 1).

이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

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에듀파인 전담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이 75.6%로 나타나 대다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에듀파인 전담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에듀파인 전담 인력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라.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이 어린이집 재정여건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은 21.8%로 부정비율 37.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2020년 및 2021년의 누리과정 지원단가 상향조정 정도는 어린이집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단설 및 공립병설은 긍정비율이 각각 61.5%, 65.6%로 긍정비율이 높은 반면, 사립사인은 긍정비율이 36.0%, 부정비율 34.8%로 긍정비율과 부정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에서는 2020년과 2021년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유아 1인당 각각 2만원씩 인상된 것이 기관 재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금액 수준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에듀파인 적용과 같은 공공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과 병행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본 연구의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현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달성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이 43.2%로 긍정비율(달성되었다+매우 잘 달성되었다) 2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원장과 교사를 구분한 응답을 보면 원장은 긍정비율이

31.6%로 부정비율 26.3%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교사는 긍정비율이 21.8%로 부정비율 45.2%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보다 교사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을 응답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만0세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만0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비율이 부정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 전념',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정비율이 긍정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의 효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보다 교사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서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지원수준은 교사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 아동 비율 감축과 더불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바.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효과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조사에서 연장보육 실시로 기본반 담임교사의 초과근로 감소, 근무여건 개선, 오후 4시 이후 안정적인 보육 제공, 보육 준비 시간 증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원장은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는 부정응답이 높거나 긍정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장보육 실시의 성과에 대해 원장과 달리 교사의 체감도는 아직까지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장보육 운영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을 질문한 결과 '기본반 아동의 하원 시각을 오후 4시로 명시해야 함'이 3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원활하도록 정부에서 인력풀을 제공해야 함' 22.4%, '연장반 전담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등)' 13.7%, '연장보육료가 오후 4시(현재 오후 5시)부터 산정되어야 함'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본 연구의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정책은 '육아휴직제도'로 나타났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수행 달성도를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지원금이 확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 노력이 이루어지고 실제 남성의 이용률을 포함하여 전체 이용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체인력 지원이 없이 기존 인력이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내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녀연령 및 가구 여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순차적으로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직장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돌봄 시간지원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등에서 여전히 성별, 종사자 규모별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간지원 제도의 전체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정책 뿐 아니라 성별, 종사자 규모별에 따른 이용 편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4.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정책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정책은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44%, 가족돌봄휴가 23%, '아동양육한시지원금' 22%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은 정책 효과성과 향후 중요도가 동시에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그 성과는 긴급돌봄 지원에 비해 낮았으나, 향후 중점과제에서 현금지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육아 긴급 지원의 기본 방향은 기관의 긴급돌봄과 부모의 직접돌봄을 양축으로 하되, 아동 가구 여건에 맞게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고려할만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집단휴원으로 인한 자녀돌봄의 사각지대가 초래되지 않도록 안전한 기관 긴급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녀를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경우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돌봄서비스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부모의 경우는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가정내 양육 가구를 위한 양육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긴급돌봄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과의 면담에서 원장 및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긴급돌봄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유치원은 실당 인원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2021년에 들어서면서 휴원 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원아가 긴급보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긴급보육의 의미가 없고, 등원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놀이꾸러미 등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활동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부담이 높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학부모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방역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보육에서는 모두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 부모의 협조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현재 유보 이원화 체제에서는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방역에 관한 사항에서는 부모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고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 조사와는 다르게,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육아 지원 정책 중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이 41.8%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이 24.7%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 설문조사에서 아동양육한시지원의 효과성 평가가 높게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수당과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합치면 2020년 취학 전 월 평균 자녀양육 비용 58.9만원의 약 25.5%를 충당하는 금액이 된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2020년 취학 전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따라 부모 설문조사에서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의 평가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현금지원은 지원 금액 수준뿐 아니라 지원 횟수 역시 요구된다는 점을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5. 육아정책 국정과제

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강화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성과평가에서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는 2020년 조사에 이어 2021년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2021)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의 결정권과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고 심의 및 자문의 권한만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과적 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정책 집행 및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복지부와 기재부 등 행정부처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방향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116-117).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집행 및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재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나. 저출산 대책 예산 재편성

국정과제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과 관련하여, 2021년 기준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예산이 저출산 대응 예산의 61.0%를 차지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56).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합계출산율을 떨어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에서 주거 및 일자리 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간접지원 예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직접지원 예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접지원 예산의 증가를 가로막을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쳐서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 및 일자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간접지원 정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과 구분되는 별도의 보편적 사회보장정책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직접지원 정책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정재훈, 2018)이 저출산 대응의 전문성과 관리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102).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로드맵 제시

본 연구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의 달성 정도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이 3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함' 22.5%, '유아 담당교사의 양성과정(자격)을 일원화해야 함'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해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을 포함하였으나(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실제로 추진된 내용은 없다.

그 이유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당 국정과제가 교육부 담당 국정과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육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에 관심이 있으나 해당 국정과제가 교육부 담당 국정과제이므로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정책을 포함하여 동일 연령 아동에 대한 출발선 평등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온종일돌봄체계 재정분담 및 법제화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은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이유로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아동지역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온종일돌봄 시스템은 잘 갖추어진 상태이고, 정책의 "가시성" 면에서 가장 잘 된 과제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을 2022년까지 10만명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연간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은 양적으로는 학교돌봄인

초등돌봄교실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거리가 있는 돌봄기관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부모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가장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 근처에 마을돌봄 기관을 확충할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반면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는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휴교실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21년, 2022년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나(관계부처 합동, 2021b: 3), 2021년에는 불과 50개 교실, 961명만 확충되어(2021년 목표 750교실, 1,500명 이용) 이용자 수 기준으로 목표의 6.4%만 충족하여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다(교육부, 2021c). 그 이유로는 학교돌봄터 운영비를 지자체 50%, 복지부 25%, 교육청 25%로 분담하여(국회예산정책처, 2020: 40)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수행하기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운영비 분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자체의 운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20년에 국회에서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1년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온종일 돌봄체계 중 가장 많은 초등학생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아직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온종일 돌봄체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온종일 돌봄체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연계·협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마. 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확대

본 연구의 부모 조사 및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육아휴직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이 출생한 당해연도에 부모가 얼마나 육아휴직을 하는지 파악하는 개념인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11.5%에서 2019년 21.6%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2019년 1.8%로 여성의 63.6%와 비교하면 여성의 1/3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정재훈 외, 2020: 109).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을 추진하는데,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2022년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6).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22년 이후 최대 월 15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상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 이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고, 하루 1시간 단축 허용과 함께 1시간 단축분 급여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접노무비 지원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2022년 이후 월 30만원(1~3호 인센티브 10만원 신설)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14).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기업에서 부모가 실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감사원(2021). 감사보고서-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강동수 외(2020).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6-01.

고용노동부(2020a).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족돌봄휴가」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고용노동부(2020b). 보도자료: 가족돌봄비용, 13만 2천명에 474억 지원!.

고용노동부(2020c). 보도참고자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2021). 보도자료: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관계부처 합동(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20).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2021a).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관계부처 합동(2021b).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 - 학교돌봄터 사업 -.

교육부(2019). 보도자료: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의무도입 99.6%.

교육부(2020a). 202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교육부(2020b). 보도자료: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교육부(2020c). 보도자료: 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 3월부터「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전면 도입.

교육부(2020d). 보도자료: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교육부(2021a). 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교육부(2021b).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안).

교육부(2021c). 2021년 2학기 온종일 돌봄 시설 현황.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2020a). 보도자료: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2020b). 보도자료: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국가통계포털. 유연근무제 활용 형태(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인지도(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현황(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전체 육아휴직자 기업체 규모별 구성비(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국회예산정책처(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김근진·박창현·김희수(2020).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민영·황진영(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18-142.

김승권·김태완·김유경·신현웅·김연우(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 성과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설·유해미·김선화(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휘(2019). 초등 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민국 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박선권(2020).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 일 · 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이소영·황남희·장인수(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진백·이재희(2016).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0(3), 51-69.

보건복지부(2018). 지역아동센터 현황.

보건복지부(2019a). 보도자료: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2019b). 보도자료: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보건복지부(2020b). 보도자료: 어린이집 99% 안심등하원 자동알리미 설치, 약 3만명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보건복지부(2020c). 보도자료: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2020d). 보도자료: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보건복지부(2020e). 보도참고자료: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보건복지부(2020f).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21b). 2021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1c). 20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21d). 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1e). 보도자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시행계획 확정(2.22).

보건복지부(2021f). 보도자료: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보건복지부(2021g). 2021년 업무계획: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보건복지부(2021h). 202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1i).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2020). 보도자료: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2021년도 시간제 보육 사업안내.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아동권리보장원(2020).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현황.

여성가족부(2021a). 보도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여성가족부(2021b).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55).

여성가족부(2021c). 보도자료: 코로나 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2021d).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21e). 보도자료: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p 상향 – 코로나19 극복 위해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여성가족부(2021f).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영욱·김도형·하진욱·이경배·권형준·전혜지·임찬순(20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체계 개편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Ⅰ).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박진백(2020).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9(5), 765-776.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박성철·정연아·이지미·김보미·김진아(2020).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지역 돌봄 운영 지원 방안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업무 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분야별 시행계획.

정재훈(2018). 저출산 예산의 실체. 한국일보(2018.07.26.).

정재훈·김수완·김영미(201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서울여자대학교 산합혁력단.

정재훈·최성은·백지선(2020). 저출산·고령사회의 사회상 및 대응 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윤경·김나영·이혜민(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2019).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통계청(2020).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통계청(2021). 2020년 출생 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년 교육통계.

e-나라지표.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수.

[검색 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_2020년 달라지는 정책-교육돌봄 분야.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subList.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1, 2021년 3월 15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_주요정책, http://www.mohw.go.kr,

2021년 11월 3일 인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2&MENU_SITE_ID=FRONT&SEQ=16, 2021년 11월 3일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시간제보육 현황,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4.do, 2021년 11월 3일 인출

[관련 법령]

아동수당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9호, 2021. 12. 14.,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283호, 2020. 5. 1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Abstract

2018~2022 Childrearing Policy Analysis and Outcome Evaluation(Ⅳ) : Focusing on 2020~2021 policies

Keun Jin Kim, Haemi Yoo, Hye Joo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2020~2021 Korean childrearing policy's outcome and impacts on families and children, in terms of its policy performance goals and major indicies about overall childrearing environment.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oon government's national policy agenda of childrearing. This study classified the main three areas as cash assistance and medical support, ECEC, and parenting time support policies.

In addition, this study has analyzed COVID-19 policy response for childrearing and evaluated overall 4 years' outcome of Moon government's childrearing policies.

The evaluation of the childrearing policies's outcome is composed of 4 parts.

First, the self-evaluation result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or childrearing policies in 2020 are analyzed.

Second, the outcome analysis of parents and professional stakeholders including ECEC experts, directors and teacher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s, concerning 2020~2021 childrearing policies, were done based on the response results of online survey.

Third, in-depth interviews of parents, directors and teacher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s, elementary school care providers are analyzed to show the pros, cons, need for improvement and blind spot of childrearing policies.

Fourth, panel data analys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fertility and care policies using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are reported. The results have shown not only overall evaluation of childrearing policy but also insufficient and inadequate part and need to improve are suggested in particular process of policies.

Keyword: childrearing policy, policy analysis, outcome evaluation

부록

부록 1. 설문조사지(부모)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Ⅳ):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출생년도를 기입해 주세요. _____년

SQ3. 귀하의 혼인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SQ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명 수를 기입해 주세요.
만약, 자녀가 없으시다면 0을 기입하여 주세요. ____명

SQ5. 귀하의 자녀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	출생연도
첫째 자녀	_____년
둘째 자녀	_____년
셋째 자녀	_____년
넷째 자녀	_____년
다섯째 자녀	_____년

SQ6.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SQ6-1.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을 기입해주세요.

1) **sq6번 지역 파이핑** 동(_____)
2) **sq6번 지역 파이핑** 읍(_____)
3) **sq6번 지역 파이핑** 면(_____)

I. 연구통계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

문1-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문1-2. 귀하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 중 ⑤ 미취업

문2-1.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	아니오	수급경험 있음	모름
	1	2	3	4
기초생활수급 여부	1	2	3	4
법정차상위계층 여부	1	2	3	4

문2-2.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예	아니오	과거 그러함	모름
	1	2	3	4
다문화가족 여부	1	2	3	4
한부모가족 여부	1	2	3	4

문3-1. 귀 댁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부 ② 모 ③ 부의 형제 자매
④ 모의 형제자매 ⑤ 조부 ⑥ 조모
⑦ 외조부 ⑧ 외조모 ⑨ 그 외 친인척( )

문3-2.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일제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문3-3. 귀하의 배우자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 중 ⑤ 미취업

문3-4. 귀하의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일제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문4-1. 귀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1) 부 근로소득 _____만원
2) 모 근로소득 _____만원
3) 기타 가구 소득(기타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정부지원금 등) _____만원

문4-2. 귀 댁의 월 평균 자녀 양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 자녀양육비의 경우, 가족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비, 공과금 등은 제외하고, 자녀 고유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대략으로 말씀해주십시오.(해당 자녀 합산)

1) 취학 전(만 0~6세)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_____만원
2) 취학 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 양육비용 월 평균 _____만원

Ⅱ. 육아 서비스 및 지원 제도 만족도에 대한 질문

문5. 최근 2년 이내에 (2020~2021년) 영유아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에 대 이용 경험 유무와 그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1	2	1	2	3	4	5
2. 어린이집 이용	1	2	1	2	3	4	5
3. 유치원 이용	1	2	1	2	3	4	5
4. 시간제보육	1	2	1	2	3	4	5

문5-1.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SA]

구분	①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⑤ 비용이 부담됨 ⑥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⑦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⑧ 기타
1.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2. 어린이집 이용	
3. 유치원 이용	
4. 시간제보육	

문5-2.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시간이 2020년 3월부터 12시간(7:30~19:30)에서 7시간(9:00~1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보육시간은 12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되었으나, 기본보육시간 이외에 실시되는 연장보육(16:00~19:30)은 자격심사를 통해 이용가능하고, 시간당 1,000~3,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셨습니까?

① 예(문 5-2-1로 이동)　　② 아니오(문6으로 이동)

문5-2-1 연장보육을 이용하셨다면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해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문5-2-1-1.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③ 비용 부담이 낮아지므로
④ 기타 ( )

문5-2-1-2.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① 보육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기 어려워졌으므로
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므로
③ 비용 부담이 높아지므로
④ 기타 ( )

문6. 최근 2년 이내에 (2020~2021년)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용 경험 유무와 그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				
	있음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초등돌봄교실	1	2	1	2	3	4	5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1	2	1	2	3	4	5
3. 지역아동센터	1	2	1	2	3	4	5
4. 다함께돌봄센터	1	2	1	2	3	4	5

문6-1.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SA]

구분	①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⑤ 비용이 부담됨 ⑥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⑦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⑧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⑨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만족스러움 ⑩ 기타
1, 초등돌봄교실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3. 지역아동센터	
4. 다함께돌봄센터	

문6-2. 보건복지부에서는 초등학생에게 학교 밖에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약간 알고 있음	알고 있음
1	2	3	4	5

문7. 귀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무엇을 이용하셨습니까? 각 지원 제도 별로 이용 경험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비해당: 이용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

* 이용안함: 이용 자격요건은 되지만 이용하지 않음

구분		비해당	이용함	이용안함
현금 및 의료비 지원	1. 아동수당	1	2	3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2	3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	2	3
자녀돌봄 시간지원	4. 모 출산휴가	1	2	3
	5. 부 출산휴가	1	2	3
	6. 모 근로시간 단축	1	2	3
	7. 부 근로시간 단축	1	2	3
	8. 모 육아휴직	1	2	3
	9. 부 육아휴직	1	2	3
	10.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3
	11.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3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3
	13.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3

문7-1. 이용한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아동수당	1	2	3	4	5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2	3	4	5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	2	3	4	5
4. 모 출산휴가	1	2	3	4	5
5. 부 출산휴가	1	2	3	4	5
6. 모 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7. 부 근로시간 단축	1	2	3	4	5
8. 모 육아휴직	1	2	3	4	5
9. 부 육아휴직	1	2	3	4	5
10.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3	4	5
11.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1	2	3	4	5
12.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3	4	5
13.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	2	3	4	5

문7-2. 해당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문7-2-1. 아동수당

구분	① 현금지원 수준이 낮아서 ② 지원 대상 연령이 낮아서 ③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④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⑥ 기타
아동수당	

문7-2-2. 의료비 및 건강 지원

구분	① 지원 금액/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해서 ③ 지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④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⑤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⑥ 기타
1.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문7-3. 해당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①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이 낮아서 ② 이용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낮아서 ③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④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⑤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⑥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기타
1. 모 출산휴가	
2. 부 출산휴가	
3. 모 근로시간 단축	
4. 부 근로시간 단축	
5. 모 육아휴직	
6. 부 육아휴직	
7. 모 유연근무제(재택근로)	
8. 부 유연근무제(재택근로)	
9. 모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10. 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Ⅲ. 코로나19 긴급 육아 지원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

문8. 귀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 중 무엇을 이용하셨습니까? 각 지원 제도 별로 이용 경험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비해당: 이용 자격요건이 되지 않음

* 이용안함: 이용 자격요건은 되지만 이용하지 않음

	비해당	이용함	이용 안함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1	2	3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1	2	3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1	2	3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	2	3
5. 모 가족돌봄휴가	1	2	3
6. 부 가족돌봄휴가	1	2	3

문8-1. 긴급돌봄을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맞벌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2. 기관에서 감영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3. 주위에 가까이 있으므로
4. 비용 지원이 되어서
5.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6. 기타 ( )

문8-2. 긴급돌봄을 이용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2.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
3. 이용신청을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공급부족)
4. 주위에 가까이 없어서
5.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6. 기타 ( )

문9. 이용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1	2	3	4	5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1	2	3	4	5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1	2	3	4	5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	2	3	4	5
5. 모 가족돌봄휴가	1	2	3	4	5
6. 부 가족돌봄휴가	1	2	3	4	5

문9-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선택하여 응답해주십시오.

① 지원 금액 수준이 낮아서
② 지원 대상 연령이 낮아서
③ 지원 횟수가 적어서
④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⑤ 기타( )

문9-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① 서비스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 ② 이용방법/절차가 복잡함 ③ 이용자격이 까다로움 ④ 주위에 가까이 없음(접근성이 떨어짐) ⑤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오래 대기해야 함) ⑥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⑦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급식의 질이 낮음 ⑧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차량 운행이 불만족스러움 ⑨ 기타
1,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문9-3.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불만족하신 이유를 선택하여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①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직장에 눈치가 보여서) ② 제도 사용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염려되어서(승진 시 불이익 등) ③ 대체 인력 지원 등 시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④ 원하는 시간/시기에 이용하기 어려움 ⑤ 기타
1. 모 가족돌봄휴가	
2. 부 가족돌봄휴가	

문10.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에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가족돌봄휴가
2. 육아휴직
3. 유연근로제(재택근로)
4.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
5. 긴급돌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7. 현금지원(아동양육한시지원금 등)
8. 기타 ( )

문11. (초등부모)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문11-1. (초등부모) 원격수업 확대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
② 등교수업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부담 증가
③ 원격수업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학부모 부담 증가
④ 등교수업 감축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연
⑤ 자녀의 미디어 의존 증가

문12. (영유아 부모)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보육, 등원수업 및 대면활동의 감소가 아동발달에 어느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향 없음 ② 거의 영향 없음 ③ 약간 영향 있음
④ 영향 있음 ⑤ 상당한 영향 있음

문13. (초등부모)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축 및 원격수업 확대는 교육격차 확대 및 학습공백 발생에 어느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향 없음 ② 거의 영향 없음 ③ 약간 영향 있음
④ 영향 있음 ⑤ 상당한 영향 있음

문14.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기관보육 및 등교수업이 감축됨에 따라 가정양육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양육 시간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가정양육 부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 없음 ② 거의 필요 없음 ③ 약간 필요함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Ⅳ. 육아정책 성과에 대한 질문

문15-1.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문15-2.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문16-1.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정책	1.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문16-2.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작은 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정책	1.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문17-1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향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을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문17-2. 문재인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7.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확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V.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성과에 대한 질문

문18. 정부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5. 가족돌봄휴가

문19. 정부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은(육아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5. 가족돌봄휴가

문20. 정부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A]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5. 가족돌봄휴가

부록 2. 유치원교사용 설문지(원장 포함)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유치원교사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Ⅳ):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유치원 원장 및 교사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설문은 2021년 시점에서 바라본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SQ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유치원 원장 ☐ ② 유치원 교사

SQ2. 귀하가 재직 중인 유치원의 설립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공립단설 ☐ ② 공립초등학교병설

☐ ③ 사립사인 ☐ ④ 사립법인

Ⅰ.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요구

1. 다음은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현 정부 이후(2017년 5월 이후) 최근 2년(2020-2021)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 되었으면 5점으로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정책	정책과제						
〈유아 교육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⑨
	2.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①	②	③	④	⑤	⑨
	3.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⑨
	4.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교사자격 양성과정 일원화, 시설기준 격차 완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⑨

2. 다음은 2020년과 2021년에 정부에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및 사업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해주십시오.

※ 전혀 만족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만족하였으면 5점으로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해당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에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만족함	해당 사항 없음
1. 현장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⑨
2. 연수 및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⑨
3. 누리과정 시범운영 및 자료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⑨
4. 홍보자료(학부모 지원자료 등)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⑨
5. 누리과정 포털 개발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⑨

3.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놀이에 대한 이해 부족
□ ② 물리적 환경의 미비
□ ③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 ④ 문서 작성 관리(계획안, 평가 등)
□ ⑤ 놀이중심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 부족
□ ⑥ 추가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 ⑦ 학부모의 이해 부족(학습에 대한 요구 등)
□ ⑧ 기타(구체적으로:　　)

4.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교사 연수 강화
□ ②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 ③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 ④ 문서 등 행정관리 간소화
□ ⑤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 ⑥ 보조 인력 지원
□ ⑦ 놀이중심 누리과정 홍보 강화
□ ⑧ 누리과정포털(i-누리) 활성화
□ ⑨ 기타(구체적으로:　　)

4-1. (문4번에서 ③번에 응답한 경우)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연령**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표기하고(아래에 제시된 2021년 시·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참조), **제시안**(해당 연령에 적합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제안해주십시오.

※ 제시안(해당 연령에 적합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은 필수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위	**제시안(해당 연령에 적합한 교사 대 유아 비율)** **※ 작성 예시: 1순위(①) 제시안(1:2)**
1순위: (　　) 번	
2순위: (　　) 번	

2021년 시·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명)

시도	설립유형	① 만3세	② 만4세	③ 만5세
서울	공립	16	22	26
	사립	16~20	22~25	26~30
부산	공사립	18	26	28
대구	공사립	18	24	28
인천	공사립	18	23	26
광주	공사립	18	22	25
대전	공사립	15	22	26
울산	공사립	17	23	26
세종	공사립	15	20	24
경기	공사립	16	22	26
강원	공립	16	22	24
	사립	24	26	28
충북	공사립	15	20	23
충남	공사립	15	20	25
전북	공립	14	18	22
	사립	16	20	25
전남	공사립	15	20	23
경북	공사립	16~18	22	24~26
경남	공립	16	22	24
	사립	19	25	28
제주	공사립	20	22	26

5. (사립유치원 원장만 응답, SQ1=1 & {SQ2=3 or SQ2=3})

사립유치원에 도입된 **에듀파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에듀파인 사용 컨설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② 에듀파인 전담 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 ③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④ 기타(구체적으로:)

6. (사립유치원 원장만 응답, SQ1=1 & {SQ2=3 or SQ2=3})

2021년 1월 30일부터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영양교사의 채용
□ ②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련 인건비 부담
□ ③ 급식시설 확충
□ ④ 기타( )

Ⅱ. 코로나19 대응 운영 실태 및 지원요구

7. (SQ1 ① 유치원 원장만 응답)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의 **긴급돌봄 운영**과 관련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어려움 정도에 대한 평가는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 대비 해당 년도의 어려움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주십시오.

※ 어려움 정도는 1점~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큼)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지원사항	어려움 정도				
	전혀 어려움 없음	←	보통	→	매우 어려움
1. 유치원 소독과 방역 조치	①	②	③	④	⑤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직원 보호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아의 보호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4. 방역관련 물품(소독제 등) 구입을 위한 비용 확보	①	②	③	④	⑤
5.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부모 지원(놀이지도 안내, 온라인 교육자료 준비 등)	①	②	③	④	⑤
6. 긴급돌봄 중인 유아의 부모에게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안내	①	②	③	④	⑤

7-1. (SQ1 ① 유치원 원장만 응답) 위 사유 이외에 **긴급돌봄 운영 시의 어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십시오.

8. (SQ1 ① 유치원 원장만 응답) 코로나19 등 팬데믹(집단감염)으로 인한 휴원 기간에 긴급돌봄을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
□ ② 감염병 예방 관련 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내실화
□ ③ 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 ④ 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 ⑤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유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 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 ⑦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소독제, 아동용 마스크 등)
□ ⑧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부모용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자료(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 ⑨ 각 연령별 코로나19 대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 ⑩ 기타(구체적으로:)

9.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② 보통
□ ③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문6-1)
□ ④ 매우 영향을 미침(→문6-1)

9-1. 코로나19로 인해 놀이중심 누라과정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코로나19 방역 및 원격교육 시행으로 인해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이 어려웠음
□ ② 등원한 유아 수의 감소에 따라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놀이중심 누리과정 수행이 용이해졌음
□ ③ 유아들의 접촉을 최소화함에 따라 유아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음
□ ④ 기타(구체적으로:)

10.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원격수업의 계획 및 운영방안 모색의 어려움
□ ② 놀이중심 교육활동 진행의 어려움
□ ③ 원격수업과 등원수업 병행 시 교사의 교육활동 반복 및 업무과중
□ ④ 원격수업과 긴급돌봄 병행에 따른 부담
□ ⑤ 원격수업에 활용할 학습자료 및 컨텐츠 부족
□ ⑥ 원격수업 실시 관련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부족
□ ⑦ 원격수업을 위한 기기 및 시스템 환경 부족
□ ⑧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유아 및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 ⑨ 기타(구체적으로:)

응답자 배경 질문

배문 1. 귀하가 재직 중인 유치원은 어디에 **소재**합니까?

_____ 시(도) _____구(군) (지도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현)

배문 2. 귀하가 재직 중인 유치원의 **기관 규모**는 어떠합니까?

-총 원아 수 현원 _____명, 정원 ____명
-총 교직원 수 _____명 (교사_____명, 그 외_____명)

배문 3-1(SQ1에서 유치원 원장). 귀하의 **경력**은 어떠합니까?

-유치원 원장 경력 _____년 _____개월
-유치원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배문 3-2(SQ2에서 유치원 교사). 귀하의 **경력**은 어떠합니까?

-유치원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배문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전문대(2~3년) 졸업 □ ② 대학교(4년제) □ ③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5.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유아교육학 ☐ ② 아동(가족)학 ☐ ③ 아동(사회)복지학
☐ ④ 교육학 ☐ ⑤ 초등교육학 ☐ ⑥ 특수교육학
☐ ⑦ 가정(관리)학 ☐ ⑧ 보육학 ☐ ⑨ 기타( )

배문 6.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배문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 ② 남자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어린이집 보육교사용 설문지(원장 포함)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Ⅳ):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설문은 2021년 시점에서 바라본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SQ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어린이집 원장 ☐ ② 어린이집 보육교사

SQ2. 귀하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 ☐ ② 사회복지법인 ☐ ③ 법인·단체 ☐ ④ 민간
☐ ⑤ 가정 ☐ ⑥ 직장 ☐ ⑦ 협동

Ⅰ. 육아정책의 성과평가

1. 다음은 정부의 보육정책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현 정부 이후(2017년 5월 이후) 최근 2년(2020~2021년)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5점으로 1~5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

구분 (정책과제)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⑨
2.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교사자격 양성과정 일원화, 시설기준 격차 완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⑨
3. 보육서비스 질 제고(교사 처우개선 및 교육 지원, 대체/보조교사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⑨
4.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⑨
5.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①	②	③	④	⑤	⑨

〈보육교사 대상 조사〉

※ **이하 문 2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응답합니다.**

2. 다음은 2020년과 2021년에 정부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한 정책 및 사업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는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평가해주십시오.

※ 달성 정도는 1점~5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점수가 높을수록 달성 정도가 큼)

구분	개선 효과					잘 모르겠다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1. 연장보육 실시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연장보육 실시로 업무 부담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연장보육 실시로 초과근로 시간이 감소하였다 (주 40시간 근로 준수, 주당 52시간 초과 금지)	①	②	③	④	⑤	⑨
4. 연장보육 실시로 (기본반)보육준비 시간이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보조교사 지원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6. 보조교사 지원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7. 대체교사 지원으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⑨
8.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어린이집 원장 대상 조사〉

※ **이하 문 2번은 어린이집 원장이 응답합니다.**

2. 다음은 2020년과 2021년에 정부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한 정책 및 사업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는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평가해주십시오.

※ 달성 정도는 1점~5점 척도로 평가해주십시오(점수가 높을수록 달성 정도가 큼)

구분	개선 효과					잘 모르겠다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잘 달성 되었다	
1.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되어 어린이집 재정여건이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연장보육 실시로 기본반 담임교사의 초과근로가 (시간과 횟수) 감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연장보육 실시로 오후 4시 이후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가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5. 보조교사 지원으로 담임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6.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의 공백에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7.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Ⅱ. 긴급돌봄 운영 실태 및 지원요구

〈어린이집 원장 대상 조사〉

※ **이하 문 3,4번은 어린이집 원장만 응답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의 **긴급돌봄 운영**과 관련해 다음 각 항목별로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어려움 정도에 대한 평가는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평가해주십시오.

※ 어려움 정도는 1점~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큼)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지원사항	어려움 정도				
	어려움 없음	←	보통	→	매우 어려움
1. 어린이집 소독과 방역 조치	①	②	③	④	⑤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 보호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아의 보호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4. 방역관련 물품(소독제 등) 구입을 위한 비용 확보	①	②	③	④	⑤
5.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원아)에 대한 부모 지원(놀이 지도 안내, 온라인 교육자료 준비 등)	①	②	③	④	⑤
6. 긴급보육 중인 원아의 부모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 요청	①	②	③	④	⑤
7. 긴급보육 중인 원아의 부모에게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안내	①	②	③	④	⑤

3-1. 위 사유 이외에 **긴급돌봄 운영 시의 어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십시오.

4. 코로나19 등 팬데믹(집단감염)으로 인한 휴원 기간에 **긴급돌봄**을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긴급돌봄 운영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의 보완(현장 여건에 맞는 적용 보완 등)
□ ② 감염병 예방 관련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내실화
□ ③ 보육교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 ④ 보육교직원의 가족돌봄휴가(어린자녀를 둔 교사의 자녀돌봄 등)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 ⑤ 가정내 보호 아동(등원하지 않는 원아)을 위한 교육자료 등 지원(놀이 지도를 위한 부모 안내, 놀이 키트, 온라인 교육자료 등)
□ 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지원
□ ⑦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소독제, (입모양이 보이는) 아동용 마스크 등)
□ ⑧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가정에 배포할 수 있는 부모용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자료(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등)
□ ⑨ 각 연령별 코로나19 대비 교육프로그램 지원
□ ⑩ 기타(구체적으로:)

Ⅲ. 보육정책 관련 개선요구

5.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
□ ②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교육 강화
□ ③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 개선
□ ④ 놀이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실사례 중심으로(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제작·배포
□ ⑤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 놀이참여 활동 교육 및 놀이자료 제작·배포
□ ⑥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컨설팅 확대
□ ⑦ 지역사회 연계 강화(바깥놀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강화 등)
□ ⑧ 기타(구체적으로:)

6.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을 **교육의 질적 편차 없이 운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유아 담당교사의 양성과정(자격)을 일원화해야 함
□ ② 유아 담당교사의 처우 격차(급여수준 등)를 완화해야 함
□ ③ 유아반 시설 기준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야 함
□ ④ 유아 담당교사의 보수교육 및 연수 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 ⑤ 관할 행정부서를 일원화해야 함
□ ⑥ 누리과정 지원 관련 장학 또는 컨설팅을 공통으로 운영해야 함
□ ⑦ 기타(구체적으로:)

7.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중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야 함
□ ② 교사 보수교육 확대 등 보육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및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③ 대체교사/보조교사 등 지원인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④ 교사가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 ⑤ 교사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어야 함
□ ⑥ 문서 양식의 통합 등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⑦ 기타(구체적으로:)

7-1. (문 7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표기하고, **제시안**(해당 연령에 적합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제안해주십시오.

※ 제시안(해당 연령에 적합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필수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위	제시안(해당 연령에 적합한 교사 대 아동 비율) ※ 작성 예시: 1순위(①) 제시안(1:2)
1순위: ( ) 번	
2순위: ( ) 번	

번호	구분(반)	반별 정원	
		원칙 (교사 1명당 아동수)	탄력편성 가능인원
①	만 0세	3명	-
②	만 1세	5명	1명
③	만 2세	7명	2명
④	만 3세	15명	3명
⑤	4세 이상	20명 이상	3명

8.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에 따른 **연장보육**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보기〉 중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이 원활하도록 정부에서 인력풀을 제공해야 함
□ ② 연장반 전담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수당인상 및 지원 확대 등)
□ ③ 기본반 아동의 하원시각을 오후 4시로 명시해야 함
□ ④ 연장반에 전담교사 이외에 보조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 ⑤ 연장보육료가 오후 4시(현재 오후 5시)부터 산정되어야 함
□ ⑥ 연장반 교사의 근무시간 유연제를 시행하여야 함
□ ⑦ 연장반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⑧ 연장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개선되어야 함
□ ⑨ 연장보육 운영지침이 구체화되어야 함
□ ⑩ 기타(구체적으로:)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요도를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 ) 번	2순위: ( ) 번

□ ①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함(평가지표 내용 간소화 등)
□ ② 평가 항목에 대한 비율을 조정해야 함(서면평가, 관찰평가 비율 등)
□ ③ 어린이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함
□ ④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돼야 함
□ ⑤ 평가 결과가 실제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 ⑥ 평가 결과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함
□ ⑦ 평가자의 자질을 제고해야 함
□ ⑧ 기타( )

10. 귀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모두 작성해주십시오.

응답자 배경 질문

배문 1. 귀하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은 어디에 **소재**합니까?

_____ 시(도) _____구(군)

배문 2. 귀하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의 **기관 규모**는 어떠합니까?

-총 원아 수 현원 _____명, 정원 ____명
-총 교직원 수 _____명 (교사_____명, 그 외_____명)

배문 3-1(SQ1에서 어린이집 원장) 귀하의 **경력**은 어떠합니까?

-원장 경력 _____년 _____개월
-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배문 3-2(SQ2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귀하의 **경력**은 어떠합니까?

-보육교사 경력 _____년 _____개월

배문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전문대(2~3년제) 졸업
☐ ③ 대학교(4년제)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이상

배문 5.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유아교육학 ☐ ② 아동(가족)학 ☐ ③ 아동(사회)복지학
☐ ④ 교육학 ☐ ⑤ 초등교육학 ☐ ⑥ 특수교육학
☐ ⑦ 가정(관리)학 ☐ ⑧ 보육학 ☐ ⑨ 기타( )

배문 6.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배문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 ② 남자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전문가용 설문지

2020-2021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대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일반과제인 「2018-2022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 연구(Ⅳ): 2020-2021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중간점검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향후 제언을 위해 육아 관련 각 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설문은 2021년 시점에서 바라본 육아정책의 구성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은 현정부 육아정책의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의 개요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과제 개요

보 기	
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보건복지부) (100대 국정과제) ③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100대 국정과제 과제목표) ④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00대 국정과제 과제목표) 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교육부) (100대 국정과제)	⑥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성가족부)(100대 국정과제) ⑦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⑧ 일·가정 양립 일상화(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⑨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⑩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2. 정책과제 개요

범주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별 계획	2020년 육아정책 목록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보건복자부)(100대 국정과제) -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4대 복합·혁신과제)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관계부처 합동)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아동수당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100대 국정과제)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100대 국정과제)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교육부)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 (100대 국정과제)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00대 국정과제) -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4대 복합·혁신과제)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교육부)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관계부처 합동)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40%)

범주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별 계획	2020년 육아정책 목록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00대 국정과제)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00대 국정과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100대 국정과제)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100대 국정과제)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 내용)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4대 복합·혁신과제)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100대 국정과제) -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100대 국정과제) -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100대 국정과제 과제목표) -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4대 복합·혁신과제) - 일·가정 양립 일상화(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추진방향) -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Ⅰ. 육아정책의 성과 평가: 국정과제 및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1. 다음은 육아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정부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귀하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시는 성과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못하고 있으면 1점, 매우 잘하고 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하고 있다
1.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 시스템 구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현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중 실행이 가장 잘 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1-2순위로 응답해주십시오.

2-1. 현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2가지를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보 기	
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⑥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⑦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③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⑧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④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⑨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⑩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2-2. 현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잘 된 과제 2가지를 우선순위로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보 기	
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⑥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⑦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③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⑧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④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⑨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⑩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2-2-1. 정책 추진과 실행이 가장 잘 된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 [문2-2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이유 ( )
2. [문2-2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이유 ( )

2-3. 현 정부의 육아 관련 국정과제 중 실행이 가장 미흡한 과제 2가지를 우선순위로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보 기	
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⑥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⑦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③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⑧ 일·가정 양립 일상화
④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⑨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⑩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2-3-1. 가장 미흡한 과제로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 [문2-3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이유 ( )
2. [문2-3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이유 ( )

2-3-2. 가장 미흡하다고 선택하신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 [문2-3 선택한 과제 1순위 제시] 개선방안 ( )
2. [문2-3 선택한 과제 2순위 제시] 개선방안 ( )

3. 다음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먼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현 정부 이후(2017년 5월 이후) 최근 2년(2020-2021)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정책	정책과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4. 다음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현 정부 이후(2017년 5월 이후) 최근 2년(2020-2021)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정책	정책과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구분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정책	정책과제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5. 다음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세부 정책의 추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주요 목표 달성 평가는 현 정부 이후(2017년 5월 이후) 최근 2년(2020-2021)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전혀 달성되지 않았으면 1점, 매우 잘 달성되었으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달성 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잘 달성 되었다	잘 모르겠다
정책	정책과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3. 배우자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6. 현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 높음, 정책 효과 높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세부 육아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6-1. 문 6번에서 선택한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십시오.

정책 영역 구분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전체 육아정책	

7. 현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가장 큰(수요자 만족도 높음, 정책 효과 높음)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세부 육아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7-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7-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7-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7-4. 문7-1 ~ 문7-3번에서 각 영역별 선택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영역별로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십시오.

정책 영역 구분	성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선택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선택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선택 정책	

8. 현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수요자 만족도 낮음, 정책 효과 낮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육아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8-1. 문 8번에서 선택한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십시오.

정책 영역 구분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전체 육아정책	

9. 현 정부의 육아정책 중에서 성과가 미흡한(수요자 만족도 낮음, 정책 효과 낮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육아정책을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9-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9-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9-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9-4. 문9-1 ~ 문9-3번에서 각 영역별 선택 정책에 대해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영역별로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십시오.

정책 영역 구분	성과가 가장 미흡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이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선택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선택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선택 정책	

Ⅱ. 육아정책의 우선순위와 개선과제

10.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를 합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세부 육아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10-1. 문 10번에서 선택한 정책에 대해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십시오.

정책 범주 구분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이유
전체 육아정책	

11.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3개 정책범주(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에서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11-1.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아동수당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1-2.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
	3.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듀파인 도입 등)
	4.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어린이집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 확대 등)
	7.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구분 및 지원)
	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9.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10. 초등돌봄 확대(학교-지자체협력 온종일돌봄체제 구축)
	1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1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1-3.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정책범주	세부 육아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배우자 출산휴가
	4. 유연근무제 1: 재택근로
	5. 유연근무제 2: 시차출퇴근

11-4. 문11-1 ~ 문11-3번에서 각 영역별로 선택한 정책이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영역별로 해당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주십시오.

정책 범주 구분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이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2.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육아지원정책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가 있다면 각 정책 범주별로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이하 해당 란에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정책 범주 구분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기타(구체적으로:)	

Ⅲ.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13. 다음은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을 위해 추진한 정책입니다. 각 지원내용별로 정책 효과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작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정책 효과성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1점,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7점으로 1~7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정책 효과성 매우 낮음			보통			정책 효과성 매우 높음	잘 모르겠다
정책	세부정책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1	2	3	4	5	6	7	9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1	2	3	4	5	6	7	9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1	2	3	4	5	6	7	9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1	2	3	4	5	6	7	9
	가족돌봄휴가	1	2	3	4	5	6	7	9

14. 정부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은(수요자 효능감이 가장 큰) 육아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5. 가족돌봄휴가

14-1. 정책 효과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정책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 :)

15. 정부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에서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은(수요자 효능감이 낮은) 육아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5. 가족돌봄휴가

15-1. 정책 효과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한 정책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 :)

16. 정부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집중해야 할 육아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
1.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4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2.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어린이집)
3.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유치원)
4.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제공(초등학교)
5. 가족돌봄휴가

16-1.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이라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 :)

17. 위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팬데믹 상황에 원활하기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과제가 있다면, 각 정책 범주별로 자유롭게 제안해 주십시오.

※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이하 해당 란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정책 범주 구분	코로나19 대응 긴급 육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과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기타(구체적으로:)	

배문 1. 선생님의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사회복지 □ ② 정책/행정 □ ③ 유아교육/교육

□ ④ 보육 □ ⑤ 가족 □ ⑥ 아동

□ ⑦ 경제 □ ⑧ 기타( )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Ⅳ)
: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93330
9 791168 650046
ISBN 979-11-6865-004-6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